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6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제주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 제주지역 -

2006.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 제주지역 -

2006.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박찬식(제주대학교 연구교수)

공동연구자 : 강남규(전 돌소리노동상담소 소장)

문형만(전 제주대 강사)

오승국(전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대표)

장윤식(전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부장)

일러두기

1.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해방 이후부터 1993년 2월까지 제주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건 및 단체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류한 것이다.
2. 단, '제주4·3사건'은 이미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가 발간된 바 있으므로 생략했으며, 1960년 4·19혁명 이후 4·3해결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취급하여 정리하였다.
3. 사건 및 단체의 특성상 관련자료 미비로 본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한 사건 및 단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본 보고서가 연구진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건 및 단체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갖는 의미나 중요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사건명은 신문기사 또는 공안당국의 명명 수준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사전 등재 항목으로 적합하게 명명한다는 원칙에서 부여하였다.
5. 사건과 단체에 대한 기술은 가능한 원자료를 그대로 옮긴다는 원칙하에 기술되었으며, 원문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글자를 첨삭하였다.

● 입력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

- A1 사건명
- A2 사건 일시
- A3 사건 배경
- A4 사건 전개과정
- A5 사건 내용
- A6 관계 인물
- A7 관계 단체
- A8 관계 자료
- A9 관련 사건

<단체>

- O1 단체명
- O2 약칭
- O3 소속단체 또는 지부
-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 O5 존속기간
- O6 주요활동 지역
- O7 법적상태
- O8 조직체계
- O9 강령

- O10 결성과정
- O11 주요활동
- O12 주요활동가
- O13 관계단체
- O14 관계자료

머리말

제주지역의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시도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들은 단체별·개인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제주도내 민주화운동단체 현황 및 각 사건의 개요 또는 사건 일지와 같은 기초적인 정리 작업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있다.

본 기초조사연구는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사와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향후 이루어질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은 우선 민주화운동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별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한 관련단체의 생산 문건 등 기본자료 및 신문보도 기사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건개요, 사건일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제주도내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기존 연구물(간행물·논문 포함) 등을 파악, 정리하였다.

연대기별로 수집된 자료에 의거해 정리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정부 수립 이후 4·19항쟁까지

- 4·19항쟁에 참여한 제주대학생의 집회 및 모슬포 주민들의 집회·시위

- 4·19항쟁 직후 제주지역에서는 4·3진상규명운동이 처음으로 전개

→ 4·3진상규명운동은 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민주화운동으로 다름

- 7·29 선거에서 혁신계 정당인 한국사회당의 김성숙(항일운동가)이 자유당 출신의 현 오봉을 누르고 남제주군 민의원으로 당선

○ 유신 직전까지

- 일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3선개헌 반대운동'이 전개된 사례

○ 부마항쟁까지

- 대학생과 종교인·문화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동가들의 면모와 맹아적인 활동에 대해 서술

- 제주지역에 대한 권력자들의 토지투기 문제에 본격적으로 현장조사를 시도한 사례

다음으로 분야별로 수집된 자료에 의거해 정리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정치세력(정치권, 재야)의 민주화운동
 - 1992년 3·24총선, 무소속 출마자들의 국회의원 당선
- 청년학생운동
 - 1980년 봄 제주대학 중심의 학원자율화 요구 민주화운동
 - 1980년대 초 계몽적인 차원에서 대학생들 사이에 사회과학 독서그룹이 활성화됨
 - 1983년 제주대학생들의 자유항 반대 시위
 - 1984~1985년 학원자율화 운동
 - 1986년 11월 제주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경찰 연행 사건
 - 1986년 12월 민정당사 화염병 투척사건
 - 1987년 6월항쟁
- 민중운동(노동운동, 농민운동, 지역주민운동)
 - 정치권력에 유착된 자들의 토지투기 사례 : 서귀포시 대지사건(장영자 관련)
 - 1988년 탐동 공유수면매립 반대운동
 -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운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결성
 - 1991년 11월 양용찬씨 분신자살 사건
- 4·3진상규명운동
 -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권에서 제기된 4·3진상규명 촉구
 - 1989년 4·3연구소 창립
 - 1989년 제주일보 4·3취재반 연재 시작
 - 1990년 4·3공준위 조직, 제1회 추모제 개최
- 기타(문화예술운동, 교육민주화운동, 언론민주화운동, 여성운동 등)
 - 1980년 마당극단 '수놓음' 창단을 계기로 마당극 등의 문화운동이 전개됨
 - 제주지역 언론 탄압과 해직 언론인의 실태
 - 1989년 제주신문 분규사태, '제주신문 민주언론투쟁위원회' 결성 활동
 - 전교조 결성·활동, 제주여민회 결성·활동 등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연구팀은 1차 자료를 수집, 정리(D/B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신문자료로는 『제주신보』, 『제주신문』, 『제남신문』, 『한라일보』, 『제민일보』 등이 활용되었다. 민주화운동 단체 및 운동가가 소장한 1차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 신

문보도 기사를 먼저 추출한 뒤 연대기로 정리하면서 분야별로 묶어가면서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자료의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적 방법에 사회과학 이론과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본 기초조사연구는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지역운동사 자체는 물론 한국현대사 전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21세기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여긴다.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서 4·3 항쟁과 학살의 내용을 서술해야 할 것이었으나, 4·3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인권과 민주화가 억압된 상황이 4·3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4·3해결 운동을 민주화운동의 범주로 특별히 다루었다. 또한 지역 개발에 따른 토지투기 문제, 개발 반대 주민운동 등은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제주지역 운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본 연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한편 제주지역 출향 인사들이 일본과 서울 등지에서 다양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는데, 시간과 자료의 부족으로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에는 4·3과의 관련성 때문에 간첩단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는 조작 사건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많으므로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서술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구술 채록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콘텐츠로 확보하여야 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많은 1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짧은 연구 기간과 본 연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부족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많았음도 밝혀둔다. 모두 다 본 연구의 한계로 깊이 인식하고 내년 6월 항쟁 20주년 기념사업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음으로 양으로 자료를 제공하며 격려해 주신 제주지역의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전국을 달구었던 20년 전의 감동을 마음속에 담고 이 보고서를 이 땅 대한민국, 평화의 섬 제주도에 바친다.

목 차

일러두기	1
머 리 말	3
목 차	6
작업진행 경과	8
사건·단체 항목 목록(부문운동-연도-가나다순)	9
1. 사건항목목록	9
2. 단체 항목 목록	20
I. 사건 항목 기초조사	23
1. 연합운동	23
2. 청년·학생운동	101
3. 노동운동	152
4. 농민운동	172
5. 빈민운동	177
6. 언론운동	179
7. 종교운동	198
8. 교육운동	201
9. 학술운동	212
10. 문화·예술운동	214
11. 통일운동	227
12. 여성운동	239
13. 4·3 운동	244
14. 주민운동	260
15. 기타	272
II. 단체 항목 기초조사	273
1. 연합운동	273
2. 청년·학생운동	288
3. 노동운동	294
4. 농민운동	297
5. 빈민운동	301
6. 종교운동	302
7. 교육운동	303
8. 문화예술운동	309

9. 통일운동	324
10. 시민운동	326
11. 여성운동	328
12. 4·3 운동	330
● 참고문헌	333

작업진행 경과

1. 연구 참가자

- 연구책임자 : 박찬식(제주대 연구교수/제주4·3연구실장)
- 공동연구자 : 강남규(전 '돌소리' 노동상담소장)
문형만(전 제주대 강사)
오승국(전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대표)
장윤식(전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부장)
- 조사보조원 : 송지은(제주4·3연구소 연구원)
양다림(제주대 4학년 재학)
김화영(제주대 3학년 재학)

2. 추진 경과

- 2006년 4월 : 계약체결
- 1차 모임(4월 21일, 금)
 -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의 목표와 의의에 대한 인식공유.
 - 자료수집 대상 검토, 조사연구 방법에 대한 토론 및 역할분담.
- 2차 모임(6월 2일, 금) :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조사보조원 등 총 6인이 모여 각 분야의 조사 활동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토론 - 신문자료 및 잡지 자료 조사 인원보강 필요성 공유
 - 중간보고서 작성에 따른 각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점검.
- 3차 모임(7월 14일, 금) :
 - 각 분야의 조사 활동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토론.
 - 각 분야 연구 성과 수합 및 중간보고서 초안 검토
- 중간보고회(7월 28일, 금)
- 4차 모임(8월 4일, 금)
 - 중간보고회 지적사항 검토 및 역할 조정
 - 연구진 보강(문형만)
- 5차 모임(9월 22일, 금)
 - 진행사항 점검 - 수합자료 목록작성 합의
 - 사건항목·단체항목·사건일지 1차 수합
- 6차 모임(11월 3일, 금)
 - 1차 수합자료 목록 완료
 - 사건항목·단체항목·사건일지 2차 수합 및 점검, 최종보고서 검토

사건·단체 항목 목록

1.사건항목목록(부문운동-연도-가나다순)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계재면
1	연합	1986.07.31	탐동불법매립 반대 및 이익환수 투쟁	19
2	연합	1987.06.10	87년 6월 항쟁	26
3	연합	1987.07.11	경찰폭력에 의한 학생부상사건 규탄투쟁	28
4	연합	1987.09.06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결성대회 가두시위	32
5	연합	1987.10.1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서귀포시지부결성대회 가두시위	32
6	연합	1987.10.31	거국중립내각수립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국민대회	33
7	연합	1987.12.09	노태우후보 선거벽보 훼손	33
8	연합	1987.12.14	공정선거쟁취 범도민대회	34
9	연합	1987.12.21	공정선거감시활동보고회 및 부정선거규탄대회	34
10	연합	1988.04.25	제주MBC 개표연습방송 항의투쟁	35
11	연합	1988.08.19	제주지역 주민주체개발결정권 쟁취를 위한 철야농성	36
12	연합	1988.08.29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투쟁	38
13	연합	1989.05.18	이철규열사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1차 도민대회	45
14	연합	1989.05.27	이철규열사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3차 도민대회	46
15	연합	1989.08.10	전교조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	46
16	연합	1989.09.24	전교조 사수 및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한 도민대회	47
17	연합	1989.11.12	민중생존권쟁취와公安통치분쇄를 위한 도민대회	48
18	연합	1990.01.13	제주신문 폐업철회 촉구 도민대회	49
19	연합	1990.05.09	민자당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제1차 도민대회	50
20	연합	1990.05.18	민자당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제2차 도민대회	51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계재면
21	연합	1990.06.10	민중생존압살 민자당분쇄 및 6월항쟁계승 도민대회	51
22	연합	1990.08.0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투쟁	52
23	연합	1990.10.04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규탄투쟁	78
24	연합	1991.04.29	시위 학생 추락사건	80
25	연합	1991.05.04	백골단 전경해체 및 공안내각총사퇴 범국민촉구대회	82
26	연합	1991.05.09	노태우 민자당정권타도를 위한 제5차 도민대회	82
27	연합	1991.05.10	학생추락사건 책임자처벌 및 노태우민자당정권타도를 위한 제6차 도민대회	83
28	연합	1991.05.14	故강경대열사추모 및 폭력살인·강제추락 자행하는 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결의대회	83
29	연합	1991.05.18	제7차 도민대회 및 규탄농성	84
30	연합	1991.05.18	조천읍농민회 전우홍씨 뇌상사건	85
31	연합	1991.05.25	노태우정권 퇴진과 폭력경찰추방 제8차 도민대회	87
32	연합	1991.05.30	경찰폭력책임자처벌과 구속자 석방을 위한 무기한 농성	87
33	연합	1991.06.08	제9차 도민대회	88
34	연합	1991.11.07	양용찬열사 분신사건	88
35	연합	1991.11.08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 시민·학생결의대회	90
36	연합	1991.11.09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 시민·청년학생 2차 결의대회	90
37	연합	1991.11.11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 故양용찬열사 추모대회	91
38	연합	1991.12.19	특별악법 날치기 민자당규탄 성토대회	92
39	연합	1991.12.25	故양용찬열사 49재 추모대회	92
40	연합	1992.05.09	특별법완전철폐 및 민자당해체를 위한 다짐대회	93
41	연합	1992.05.19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도민대회	94
42	연합	1992.06.22	해직교사원상복직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제주본부 결성기자회견	94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계재면
43	연합	1992.11.04	故양용찬열사 1주기 추모제	95
44	연합	1992.11.21	6공비리 척결과 민주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96
45	연합	1992.12.06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필승결의대회	97
46	청년학생	1965.04.15	한일회담 반대 시위	102
47	청년학생	1967.06.15	6·3총선 규탄 시위	106
48	청년학생	1980.04.11	도내 대학 학칙 개정 요구 시위	109
49	청년학생	1986.04.10	제주대생 민주헌법 쟁취 시위	111
50	청년학생	1987.4.20	제주대학교 부당징계철회투쟁	112
51	청년학생	1987.05.18	광주항쟁 제7주기 추모제	112
52	청년학생	1987.09.09	제주전문대 학원자율정책토론회	113
53	청년학생	1987.09.14	학원민주화투쟁선포식 및 좌경용공조작규탄대회	113
54	청년학생	1987.09.21	제주대학교 어용총장퇴진투쟁	114
55	청년학생	1987.10.12	제주간호보건전문대 학원민주화쟁취투쟁	117
56	청년학생	1987.11.17	공명선거를 위한 제주청년학생 대동투쟁결의대회	118
57	청년학생	1987.11.25	제주청년학생공정선거감시단 발대식	119
58	청년학생	1987.11.26	노태우후보 유세방해 사건	119
59	청년학생	1987.12.07	제주대학교 조기방학 거부투쟁	120
60	청년학생	1987.12.22	제주지역청년학생 부정선거폭로 및 규탄대회	120
61	청년학생	1988.04.07	부정당선 집권분쇄 및 민중생존권압살 저지실천대회	121
62	청년학생	1988.04.12	부정집권분쇄와 민중생존권쟁취 투쟁위원회 발족식 및 실천대회	121
63	청년학생	1988.04.19	4·19민주혁명계승 실천대회	122
64	청년학생	1988.05.17	광주영령추모 및 5.18광주항쟁 계승대회	122
65	청년학생	1988.11.05	광주학살·5공비리주범처단 및 송악산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제주도민평화대행진	123
66	청년학생	1988.11.12	광주학살·5공비리주범처단 및 송악산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제2차 범도민평화대행진	124
67	청년학생	1989.03.21	민정당제주지구당 화염병피습	124
68	청년학생	1989.04.11	문익환목사 귀국환영 및 매국 노태우정권규탄대회	125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계재면
69	청년학생	1989.04.19	4·19혁명계승대회	125
70	청년학생	1989.04.28	노태우처단을 위한 1차 총궐기선포식 및 청년학생전진대회	126
71	청년학생	1989.05.17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총협준비위원회발대식 및 광주학살원흉처단과 이철규군 고문살인진상규명을 위한 촉구대회	126
72	청년학생	1989.06.09	이철규열사 사인진상규명과 노태우정권퇴진 가두시위	127
73	청년학생	1989.06.14	이철규열사 사인진상규명 및 평양축전 참가쟁취, 이승수학우 석방·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127
74	청년학생	1989.08.30	학원사수와 구속학우구출을 위한 총학생비상대책회의	128
75	청년학생	1989.11.03	공안통치분쇄를 위한 청년학도 구국투쟁선포식	128
76	청년학생	1990.04.02	4·3민중항쟁정신계승 및 반민중야합 분쇄투쟁결의대회	129
77	청년학생	1990.04.17	민자당 당사 화염병 피습	129
78	청년학생	1990.04.18	4월혁명계승대토론회 및 민자당분쇄투쟁을 위한 전진결의대회	130
79	청년학생	1990.04.19	4·19정신계승 민자당분쇄투쟁	130
80	청년학생	1990.04.23	제주전문대 학원자주화 쟁취 1차 진군식	131
81	청년학생	1990.05.01	현대중공업 폭력진압규탄과 세계노동절기념을 위한 청년학생진군대회	131
82	청년학생	1990.05.12	학원침탈 자행한 파쇼경찰규탄대회	132
83	청년학생	1990.05.24	노태우대통령 굴욕방일 규탄시위	132
84	청년학생	1990.05.28	전교조 합법성쟁취와 교육운동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133
85	청년학생	1990.09.20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청년학도결의대회	133
86	청년학생	1990.11.02	학생의 날 기념식 및 전대협 송갑석의장 구속·학원침탈 민자당타도를 위한 7천 아라인 결의대회	134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계재면
87	청년학생	1991.05.01	5·1 노동절기념 노동운동탄압분쇄와 강경대학우 살해 주범 노정권퇴진을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	134
88	청년학생	1991.05.15	조성만열사 3주기 추모 및 전쟁조장 민방위훈련거부와 폭력살인·공안통치 주범 미국·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135
89	청년학생	1991.05.17	광주민중항쟁계승과 폭력살인공안통치주범 미·노일당 타도를 위한 1만 2천 청년학도진군대회	135
90	청년학생	1991.07.09	전대협 김종식의장 구출과 조국통일선봉 전대협사수결 의대회	136
91	청년학생	1991.09.04	2학기 청년아라구국투쟁 선포식	136
92	청년학생	1991.09.17	제주교대 특별법반대집회 경찰난입사건	137
93	청년학생	1991.11.08	양용찬열사의 뜻 계승과 특별법저지·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138
94	청년학생	1991.11.14	故양용찬열사 뜻 계승 및 노정권타도를 위한 청년아라 결의대회	138
95	청년학생	1991.11.15	故양용찬 열사 뜻 계승을 위한 제2차 청년아라결의대 회	139
96	청년학생	1991.11.16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과 특별법제정강행하는 노정권 응징대회	140
97	청년학생	1991.12.05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 및 특별법날치기통과 민자당규 탄청년결의대회	140
98	청년학생	1991.12.06	특별법제정 강행하는 민자당정권타도와 방학중 투쟁승 리를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	141
99	청년학생	1991.12.19	특별법무효화선언과 강행통과주범응징을 위한 청년아 라결의대회	141
100	청년학생	1992.01.22	특별악법제정주범 민자당 응징을 위한 1만2천 청년학 도결의대회	142
101	청년학생	1992.02.22	범민주단일후보를 통한 총선승리다짐대회 및 남북합의 서 이행촉구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142
102	청년학생	1992.02.28	특별악법날치기통과주범 민자당응징과 김영삼처단을 위한 출정식	143
103	청년학생	1992.03.05	민자당심판과 총선승리를 위한 제주대학생위원회 출범 식 및 총선투쟁선포식	143
104	청년학생	1992.03.31	총선투쟁보고대회 및 민자당타도를 위한 4월투쟁선포 식	144
105	청년학생	1992.04.17	4·19혁명계승과 군부정선거·단체장선거연기·농정파 탄정권응징을 위한 진군대회	145
106	청년학생	1992.05.01	한라일보파업지지와 도민생존권 유린하는 민자당심판 을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145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게재면
107	청년학생	1992.05.07	제4기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출범식시위	146
108	청년학생	1992.05.18	5·18광주민중항쟁정신계승과 민자당전당대회파탄을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146
109	청년학생	1992.06.10	6·10항쟁계승과 지자제쟁취·악법철폐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147
110	청년학생	1992.08.11	전대협의원장구출 및 범민족대회탄압음모분쇄를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	147
111	청년학생	1992.08.19	범민족대회사수보고대회와 전대협의원장 및 구속학우구출을 위한 제총협진군대회	148
112	청년학생	1992.08.22	고광덕학우 불법강제연행규탄과 학생회사수 노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	148
113	청년학생	1992.09.18	지자제 연내실시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시민학생성토대회	149
114	청년학생	1992.09.29	제총협 구국투쟁선포식	149
115	청년학생	1992.11.06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 및 민자당재집권저지·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결의대회	150
116	청년학생	1992.12.29	관권타락 선거책임자처벌과 중립내각사퇴를 위한 규탄대회	150
117	노동	1967.07.13	이중희씨 비행정지 처분 총파업	154
118	노동	1970.04.30	전국 화학노조제주정지부 노임지급 요구 시위	154
119	노동	1987.08.19	87년 택시노동자 투쟁	155
120	노동	1987.11.17	새한병원 위장폐업철회투쟁	156
121	노동	1988.10.24	한영운수 노사분규 및 전국택시노련제주도지부 동조 파업	161
122	노동	1989.01.03	서귀포 선원노조 생존권 투쟁	162
123	노동	1991.12.10	제동흥산노조 감원계획철회요구 농성	163
124	노동	1992.03.26	전국택시노조제주지부 무기한 철야농성	164
125	노동	1992.05.04	오리엔탈호텔 노조파업투쟁	165
126	노동	1992.05.12	한라병원노조 투쟁	168
127	노동	1992.06.30	제주의료원 노동자 투쟁	170
128	농민	1990.09.07	수입개방 및 UR협상저지를 위한 제주지역농민대회	173
129	농민	1990.09.22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 도민결의대회	174
130	농민	1990.10.04	전면수입개방 및 UR협상저지농민대회	175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계재면
131	농민	1990.10.15	농산물수입개방과 UR협상저지결의대회	175
132	농민	1990.11.19	UR농산물협상거부를 위한 범국민가두서명운동 발대식	176
133	농민	1991.06.07	폭력경찰규탄과 특별법 및 골프장저지를 위한 제1차 제주농민대회	177
134	빈민	1989.06.30	제주지역 노점상 생존권투쟁	178
135	언론	1989.06.17	KBS노조제주지부지부장 방송민주화 요구 단식농성	182
136	언론	1989.11.09	제주신문 언론민주화 투쟁	182
137	언론	1989.12.22	제주신문 민주언론수호결의대회	190
138	언론	1990.05.01	KBS사태에 제주MBC노동조합 전면제작거부	190
139	언론	1990.07.13	방송악법저지를 위한 제주MBC노조 전면제작거부	191
140	언론	1992.01.20	한라일보 노조 투쟁	191
141	언론	1992.10.03	제주MBC노동조합 총파업	198
142	종교	1987.05.18	천주교제주교구사제단 단식기도	200
143	종교	1987.07.11	故이한열군 추도미사 및 민주화실현을 위한 구국기도회	200
144	종교	1987.11.21	민주쟁취를 위한 기도회 및 제주지역공명선거감시단 발대식	201
145	종교	1991.11.15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노회 특별법철회 성명	201
146	교육	1988.10.23	민주교육법쟁취 결의대회	203
147	교육	1988.12.08	민주교육법쟁취를 위한 제주교사협의회 철야농성	204
148	교육	1989.04.27	전국교직원노조건설 제주지역추진위원회 발대식	204
149	교육	1989.05.25	민주교사 부당징계규탄 농성	205
150	교육	1989.06.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결성식	206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게재면
151	교육	1989.08.02	전교조지지 및 부당징계저지를 위한 오현동문 결의대회	207
152	교육	1989.08.12	전교조탄압분쇄를 위한 제주일고 동문결성대회	207
153	교육	1989.08.28	교원선별임용반대 연수교사 입소거부 농성	208
154	교육	1990.04.02	참교육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대회 한라산출정식	208
155	교육	1990.04.16	사립학교법 위헌 쟁취와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철야농성	209
156	교육	1990.06.09	전교조창립 1주년기념 및 해직교사원상복직과 교육악법저지 제주교사결의대회	209
157	교육	1990.11.16	교육장악음모 교원종합대책안 철회와 교육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제주지역 교육주체 공동투쟁위원회결성식 및 결의대회	210
158	교육	1991.05.11	5·10 교육민주화선언 5주년 기념과 교육자치선언대회	211
159	교육	1991.05.24	민주화를 열망하는 제주교사 시국선언	211
160	교육	1992.06.13	전교조제주지부 결성 3주년 기념 제주교사대회	212
161	교육	1992.10.12	연행자석방과 해직교사원상복직 촉구 전교조 철야농성	212
162	교육	1992.11.06	교육개혁과 해직교사복직 제주지역 교사선언	213
163	학술	1988.10.28	제주대총장퇴진요구 교수 삭발단식농성	214
164	학술	1989.11.18	탐동문제해결을 위한 제주도내 교수성명	214
165	학술	1991.05.09	제주대학교 교수시국선언	215
166	문화예술	1987.08.22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창립 및 제1회 우리문화한마당	217
167	문화예술	1988.08.21	제2회 우리문화한마당	217
168	문화예술	1989.01.21	송악산군사기지철회와 주민주체결정권 쟁취를 위한 시민학생문화한마당	218
169	문화예술	1989.04.26	41주기 4·3추모제 예술작품 탄압사건	218
170	문화예술	1989.05.14	영화 '오! 꿈의 나라' 상영	220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게재면
171	문화예술	1989.11.08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221
172	문화예술	1990.10.00	제4회 우리문화한마당	222
173	문화예술	1990.11.30	전태일열사 20주기 추모와 UR협상 및 특조법 저지를 위한 집체극 「이제, 우리가 건설하리라」 공연	222
174	문화예술	1991.06.09	민주열사 추모와 구속자석방을 위한 노래한마당 「일어나라 열사여」 공연	223
175	문화예술	1991.07.00	5·6월 투쟁사진전	223
176	문화예술	1991.09.16	제주도개발특별법저지를 위한 연합공연 「새날을 향하여」 공연	224
177	문화예술	1991.11.09	제주도개발특별법저지를 위한 마당굿 「개발바람 오름너머」 공연	225
178	문화예술	1992.04.21	강요배의 역사그림 「제주민중항쟁사」 전시회	226
179	문화예술	1992.08.09	통일맞이 제주공연-‘한라에서 백두까지’	226
180	문화예술	1992.11.12	고 양용찬열사 추모 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6회 우리문화한마당	227
181	통일	1988.06.10	6.10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추진 범도민결의대회	229
182	통일	1988.06.14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식 시위	229
183	통일	1988.08.04	민족화해를 위한 탐라순례대행진	230
184	통일	1988.08.00	8·15 남북학생회담성사 결의대회	230
185	통일	1988.08.15	8·15 남북학생회담성사를 위한 범도민 촉구대회	230
186	통일	1989.06.20	평양축전참가성사를 위한 제주대학교비상학생총회	231
187	통일	1989.06.24	평양축전참가성사를 위한 통일대장정 한라산 출정식	232
188	통일	1989.06.30	통일운동탄압분쇄와 평양축전참가성사를 위한 출정식	232
189	통일	1989.08.13	8.15범민족축전제주도민대회 출정식 및 우리 땅 밟기 대행진	233
190	통일	1990.08.15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주지역범민족대회	234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계재면
191	통일	1990.11.01	북한영화 「소금」 상영	236
192	통일	1991.08.01	통일방안합의와 조국의 평화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 해외청년학생 통일대축전선봉대발대식	237
193	통일	1991.08.08	91년 탐라순례대행진	238
194	통일	1992.05.04	북한 량강도학생위원회와 서신교류 성공발표	238
195	통일	1992.07.16	통일대축전민족제대준비위발족 및 국가보안법철폐·양 심수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239
196	통일	1992.07.13	92년 제주지역 통일운동	239
197	여성	1989.03.08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항의시위	243
198	여성	1989.03.11	제2회 3·8제주여성대회	243
199	여성	1989.04.01	매춘관광규탄 서명운동	244
200	여성	1990.10.06	제1회 「여성영화제」	244
201	여성	1992.09.19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여성 한마당	245
202	4.3	1988.04.04	4·3위령제 및 진상규명촉구·계승대회	249
203	4.3	1988.07.22	4·3강연회	249
204	4.3	1989.04.01	41주기 4·3추모제	250
205	4.3	1989.04.03	4·3자주항쟁계승 및 구국선열추모제	253
206	4.3	1989.08.14	제1회 4·3 사적지순례 및 한길역사기행	253
207	4.3	1990.04.01	4·3 42주기 4월제	255
208	4.3	1990.09.22	원동마을 4·3무흔굿	257
209	4.3	1991.04.01	4·3제주민중항쟁 43주기 사월제	258
210	4.3	1991.07.27	4·3유적지 순례	258

연번	부문별	발생일	사 건 명	계재면
211	4.3	1992.04.01	제주4·3 44주기 ‘사월제’	259
212	4.3	1992.04.01	다량취굴 4·3희생자 유해발굴	260
213	주민	1988.07.18	조천 유원지조성사업 반대운동	264
214	주민	1989.08.23	서귀포시 대포동 내 고장 지키기 주민운동	264
215	주민	1990.12.30	금악리 한라레저골프장 건설 반대투쟁	265
216	주민	1991.06.04	북촌리 신성골프장 건설 반대투쟁	268
217	주민	1991.06.13	제주리조트골프장 건설반대운동	271
218	주민	1991.07.13	안덕지역 골프장건설 반대운동	273
219	기타	1991.06.06	최창윤수경 탈영 후 양심선언	275

2. 단체 항목 목록(부문별-가나다-연도순)

연번	부문	단체명	창립일	계재면
1	연합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87.07.20	284
2	연합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1987.09.06	285
3	연합	제주지역주민주체개발결정권쟁취공동대책위원회	1988.08.19	286
4	연합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1988.10.30	287
5	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03.18	289
6	연합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	1990.01.06	290
7	연합	특조법 및 UR협상저지 범도민운동본부 결성을 위한 대책위원회	1990.11.16	291
8	연합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	1991.06.07	292
9	연합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1991.09.07	292
10	연합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제주본부	1991.11.12	295
11	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	1992.10.09	296
12	청년학생	대정나라사랑청년회	1988.00.00	299
13	청년학생	안덕민주청년회	1988.07.02	299
14	청년학생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1989.03.30	300
15	청년학생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1989.10.29	300
16	청년학생	제주민주청년회	1990.09.09	302
17	청년학생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2.09.06	303
18	노동	제주노동상담소 돌소리	1988.00.00	305
19	노동	제주노동상담소 일하는 사람들	1991.03.23	306
20	농민	안덕면농민회	1989.07.29	308
21	농민	제주도농민회	1991.04.30	308
22	빈민	제주지역노점상연합회	1988.08.09	312

연번	부문	단체명	창립일	계재면
23	종교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제주연합회	0000.00.00	313
24	교육	제주교사협의회	1987.10.22	314
25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1989.06.11	315
26	교육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1989.08.10	317
27	교육	참교육실현을 위한 제주지역학부모회	1989.08.26	318
28	문화예술	극단 수놓음	1980.08.00	320
29	문화예술	노래패 숨비소리	1984.00.00	321
30	문화예술	놀이패 한라산	1987.08.00	322
31	문화예술	우리노래연구회	1987.08.00	325
32	문화예술	제주청년문학회	1987.08.00	326
33	문화예술	제주문화운동협의회	1987.08.20	327
34	문화예술	사진패 시각인식	1987.11.00	328
35	문화예술	그림패 보름코지	1988.03.00	329
36	문화예술	시각매체운동연구회	1990.09.00	330
37	문화예술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 건설 준비위원회	1991.00.00	331
38	문화예술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1991.12.21	332
39	문화예술	민요패 소리왓	1992.01.06	332
40	문화예술	노래빛 사월	1992.04.03	334
41	통일	8.15통일염원범민족축전 제주도추진본부	1989.07.28	335
42	통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제주도추진본부	1990.08.01	335
43	시민	한라시민학교	1988.05.11	337
44	시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1.02.08	338
45	여성	제주여민회	1987.11.29	339

연번	부문	단체명	창립일	계재면
46	4·3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	1989.00.00	341
47	4·3	제주4·3연구소	1989.05.10	341
48	4·3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1990.00.00	343

1. 사건 항목 기초조사

1. 연합운동

<개요>

1987년 8월 31일 발기인 대회를 치른 '민주쟁취 국민운동 제주본부(제주국본)는 9월 6일 제주YMCA 강당에서 결성대회를 가졌다. 제주국본은 이후 1987년 9월 26일 성산포에 동 제주지부를(성산포 천주교회), 10월 17일에는 서귀포지부를(서귀포 복자 천주교회), 10월 24일에는 대정에 서제주지부(모슬포 천주교회)를 결성한다. 제주국본의 지부 결성대회는 모두 성당에서 치러져 국본에 참여한 천주교 사제들의 역할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시의 시대 상황이 종교적 외피를 필요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제주국본은 조직 결성 의의를 1) 고립분산적이었던 운동 역량을 모아 체계적인 조직을 만든 점, 2) 양심적 차원의 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의 만남 속에서 과학성·이념성이 고조되었다는 점, 3)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에 대한 지원, 연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 4) 소수의 관념적 운동이 아니라 애국적 차원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주국본은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공정선거감시 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도내 민주단체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으로 떠올랐던 탐동 불법매립 반대운동, 새한병원 투쟁, 제주MBC 개표조작 사건, 모슬포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 운동 등에 적극 결합하였다. 당시 제주사회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관광개발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주민주체의 개발과 생존권 요구가 빚발치고 있었다. 제주국본은 '제주지역 주민주체 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 결성을 주도하고 개발문제와 연관된 주민운동에 적극 결합한다. 주민운동과 사회운동 조직의 결합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주 사회운동의 큰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주민운동에의 결합은 제주국본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였다.

제주국본은 "시민의식의 일상적인 향상과 지역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한라시민학교'를 개설하였으며 기관지 「제주의 소리」를 발행했다.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연합이 결성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제민협)' 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국본은 제민협 결성을 주도하고 1989년 3월 제민협이 결성되자 발전적으로 해체하였다. 제주국본은 6월 항쟁을 계기로 결성되어 제주 지역 최초의 공개적인 대중 정치투쟁조직으로 그 의의를 가진다.

전국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연대체로서 전민련이 결성 움직임에 같이하면서 제주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가 1989년 2월 구성되었고, 1989년 3월 18일 가톨릭회관에서 결성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하였다. 제민협의 결성 배경은 1) 6월항쟁 이후 조직화되기 시작한 부분별 조직들이 성숙하면서 지역문제를 풀어나갈 연대의 구심이 필요하고, 2) 지역 내에서 제기되는 투쟁을 담보할 상설 공투체의 필요성, 3) 전국적 조직 건설(전민련)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국적 관점에서 지역운동을 풀어나가고 담보해 나갈 지역단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른 것이었다. 제민협 참여단체는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

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준비위원회, 제주지역노점상연합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등 7개 단체였다. 제민협은 결성선언문에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결의문을 통해 제국주의 반대, 민족자주권 옹호, 분단독재권력인 매국집단 단죄와 민주사회 건설,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른 조국통일운동, 제주지역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등을 전국의 모든 민주세력 및 각계각층과 단결연대하여 힘있게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에 나타난 것처럼 제민협은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제주국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 온 지역주민운동과 결합하는 형태의 활동을 벌였다. 제주의 지역 특성상 계속적인 문제로 대두된 개발의 문제와 주민 생존권의 문제는 제민협의 주요한 ‘민중생존권 활동’이었다. 제민협 시기의 『제주의 소리』 13~27호는 송악산 군사기지 투쟁, 탐동매립 반대투쟁, 외지인 토지 소유, 농정파탄, 지하수 문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 제주도 개발과 관련된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

제민협은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민자당에 저항하는 운동은 물론 명지대생 강경대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음으로써 촉발된 1991년 5월 투쟁을 주도했다. 1991년 5월 투쟁 과정에서의 제민협을 뛰어 넘는 연대체가 구성되고,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결성된 ‘제주도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가 새로이 조직됨으로써 제민협은 새로운 상설연대체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 상설연대체 논의는 제민협의 해소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제민협은 지역민족민주운동의 단일대오를 형성했으며 지역연대 운동의 구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민협은 지역연대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했으며 이것이 제민협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으로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이 결성되고, 사회운동 흐름 역시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일한 명칭에서 시민운동의 대두 등 다양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단일대오라는 과제로 새로운 상설연대체를 제안, 제민협의 해소와 이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 결성은 ‘단일대오’ 방식의 기존 운동방식의 변화를 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운동이 제주도 전역을 들끓게 하면서 반대 운동을 주도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가 지역 운동의 구심으로 급부상하는 상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가 결합하지 않은 상설연대체는 처음부터 조직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범도민회)’의 조직 역사는 제주지역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코드 역할을 한다. 1991년 ‘제주도 개발특별법’ 반대운동은 제주지역에서 매우 큰 획을 긋는 주민운동이자 사회운동이었다. 당시 제주 사람들은 중앙정부 및 기업의 일방적 관광개발과 제주도민의 소외라는 틀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바라보았고, 이는 전도적인 반대투쟁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다. 4·3 이후 제주도 최대의 지역현안으로 제주도 전역이 들끓었던 만큼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반대하는 운동도 제주지역의 대표급 인사들과 지역조

직, 부문과 단체가 결집(총 32개 단체)되어 체계적인 투쟁조직을 갖춘 것이 '범도민회'의 출발로서 '범도민회'는 제주도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을 받으며 1991년 9월 결성되었다.

2년여의 걸친 특별법 반대 운동 기간 동안 연인원 1만 9천여 명의 도민들이 반대시위나 규탄대회에 참여했고 도민의 1/6에 달하는 8만여 명이 특별법 반대에 서명했을 정도로 '범도민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대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11월 7일에는 '서귀포 나라사랑 청년회' 회원인 양용찬이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였다. 특별법 반대운동에 나선 제주도민들의 수차례 도민대회, 서명운동, 단식투쟁, 상경투쟁 등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자당 정권은 몇몇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특별법이 통과되자 '범도민회'는 1992년 '제주도 개발특별법 철폐와 민주화 실천 범도민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개별 인사들과 지역조직, 부문과 단체가 결집했던 연대조직에서 단일조직으로 변화를 꾀했다.

이 시기에는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가 새로운 '민족민주 운동의 단일대오'라는 기치로 상설연대체를 제안했던 때로서 제주지역 사회운동진영 내부에서는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와 <범도민회>로 귀결된 민주역량의 상설적 협의기구로의 '범도민회' 확대·강화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결국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으로 개편하고 '범도민회'는 개별 단체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상설연대체 논의 아래 숨어있었던 NL과 PD의 노선 차이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철폐와 민주화 실천 범도민회'라는 1차 명칭 변경 이후 '범도민회'는 주력하는 사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명칭 변경 이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시행령·조례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특별법 반대 투쟁을 계속하였고, 제주도 내 외지인 토지소유 현황을 공개하는 등 제주도 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범도민회'는 1980년대 후반이후 주민운동의 활발하게 전개된 제주지역 운동특성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조직이다. 즉, 1988년의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송악산 군사기지 결사 반대 도민대책위', 1989년의 '탐동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회' 등 지역 내 대중적인 지역주민운동과 연대운동의 경험이 통합·계승되면서 발전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제주연합)'은 '제주지역 민족민주운동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인 '전선운동 조직'으로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의 발전적 해소와 함께 1992년 1월 건준위를 결성하고 1992년 10월 9일 창립하였다. 창립 당시의 가맹 조직은 '서귀포 나라사랑청년회', '제주민주청년회', '대정 나라사랑청년회 준비위' 등의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연합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등이었다. '제주연합'은 민중생존권 수호와 사회 전 영역의 민주개혁 실현, 반독재 민주역량을 총집결시켜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주권 쟁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자주적 민족통일, 민족민주세력의 통일단결 실현을 강령으로 하였다. '제주연합'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과 맥을 같이 하는 지역조직으로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하였다.

'제주연합'은 창립 직후인 1992년 대선에서 '민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공정선거감시단

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현안문제인 개발문제, 4·3 등의 연대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돕기 등 자주·민주·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또한, '제주연합'은 조작간첩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에도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다.

'제주연합'의 결성은 상설연대체 논란 속에 출발하였다. 당시 특별법 반대 투쟁의 열기로 제주지역의 대표적 인사와 거의 모든 조직들이 망라되어 있던 '범도민회'가 '제주연합'과 별도의 조직으로 가게 되면서 '제주연합'의 결성은 출발에서부터 한계를 가졌다. 또한, 전국의 '농민회' 조직들이 대부분 '전국연합' 소속 지역 연합 조직들에 가맹되어 있었던 데 반해 '제주도 농민회'는 '제주연합' 가맹단체가 아니었다.

A1[사건명] **탐동불법매립 반대 및 이익환수 투쟁**

A2[사건 일시] **1986.7.31~199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 1980.05.00. 제1차 탐동 매립완공(강경주 제주시장)
- 1982.12.10. 제2차 탐동매립 계획입안(22,400평/이군보 제주시장, 강경주 제주도부지사)
- 1984.09.15. 탐동공유수면매립동의서 작성(어촌계장 이신구 씨와 제주해양개발 백형수)
- 1985.01.10. 제주시도시기본계획 확정(탐동매립계획 입안 안됨)
- 1985.03.07.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확정(탐동매립지역 포함 안됨)
- 1985.04.25. 제2차 탐동매립계획 결정(22,400평에서 50,000평으로 확장)
- 1986.03.12. 제주시도시기본계획에 탐동매립계획 포함 안됨
- 1986.07.31. 제주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해당 공유수면 권리권자인 해녀, 횃집운영자 절대 반대, 전문가인 교수 2인 반대)
- 1986.08.10. 제주시 수협, 산지어촌계, 삼도동 잠수회원 300여명 청와대 등에 매립반대 진정서 발송
- 1986.12.05.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해당공유수면관리자 주민동의를 빠짐없이 받고, 환경영향평가 후에 매립면허 발부할 것을 건설부에 요청
- 1986.12.24. (주)제주해양개발과 (주)범양건영이 건설부로부터 탐동공유수면 매립 허가 취득(해당 공유수면관리자인 해녀, 횃집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면허 발부. 제주도지사·제주시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매립면허 발부)
- 1986.12.31. 공유수면매립법 개정(공공성 강화)
- 1987.06.19. 탐동공유수면 어업권자인 해녀들과 피해보상 합의와 동시에 매립에 따른 동의 이루어짐)
- 1987.07.10. 면허사업자 매립공사 착공
- 1987.08.00. 탐동 횃집운영자들 불법매립면허 취소투쟁 전개
- 1987.12.12. 탐동공유수면 인수·배수권자인 횃집운영자와 피해보상합의 및 매립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짐(이때 비로소 공유수면매립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져 매립면허가 발부되어야 함. 따라서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됨)

- 1988.03.08. 제주시 삼도동잠수회 '계약이행'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 1988.03.23. 제주대학교 탐동불법매립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1988.04.28.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합의
- 1988.06.21. 제주대학교 탐동불법매립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양시경) 불법매립면허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이규호(전건설부장관), 장병구(전제주도지사), 김창진(전제주시장), 백형수(제주해양개발 대표) 등을 제주지검에 고발
- 1988.07.23.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시민회관에서 탐동매립에 대한 범도민 토론회 개최
- 1988.10.12. 이신구 산지어촌계장 공문서위조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
- 1988.10.15. 제주시 용담잠수회 평민당사 농성 돌입
- 1988.11.17. 제주대학교 탐동불법매립공동대책위원회가 6월 21일 불법매립혐의로 고발한 건이 제주지검에서 불기소처분 됨
- 1988.11.28. 제주시 용담잠수회 어장피해보상 타결
- 1988.12.00. 장병구 전제주도지사 『여성중앙』 12월호 인터뷰(탐동매립에 대해 건설부와 청와대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다고 실토)
- 1988.12.16. 제주대학교 탐동불법매립공동대책위원회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
- 1989.02.16. 광주고검, 항고기각처분
- 1989.02.21. 탐동개발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 결성(제주도내 9개 단체 참여)
- 1989.03.06. <탐동개발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 '제주시 탐동공유수면매립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청원인 1,627명)
- 1989.03.09. 탐동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범양건영 불참으로 무산)
- 1989.03.12. 제주시민회관에서 '탐동불법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범도민결의대회' 개최
- 1989.04.21. 범도민 차원의 탐동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강보성의원만 참석. 나머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불참으로 간담회 무산)
- 1989.04.27. 장병구 전제주도지사 제주신문과 인터뷰(탐동매립 반대했으나 불가항력이 있음. 탐동매립은 건설부의 압력에 의해 무리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매립을 통한 개발이익은 마땅히 제주사회에 환원되어야 함)
- 1989.05.13. '탐동 국회청원 승리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400여명 참석)
- 1989.05.20. <탐동개발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 '건설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 1989.05.22. △탐동관련 해녀 40여명 불법면허 재수사, 관련자 구속처벌을 요구하며 제주지방검찰청 방문 농성 △양영수 신부, 고창훈 교수 국회청원인 대표로 상경, 문준식·김영선·최무룡·이원배 의원 보좌관 만나 도민 의사 전달 △김창진 전제주시장 제주신문 인터뷰(권리권자인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조치를 요구했으나 건설부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서둘러 매립면허를 발부했다. 이는 불법이다. 당시 상부기관, 고위층 권력의 압력이 있었다. 매립이익은

업자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로 찾아야 할 것이다)

- 1989.05.24. 국회 탐동청원심사소위원회 심의
- 1989.05.25. 국회 건설상임위원회 ‘탐동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발표(매립면허 취소 요구는 이유가 없으며, 개발이익환원요구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피면허자가 이미 개발이익 일부를 공사준공 후 제주시장 등과 합의하여 제주시로 환원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청원인들이 납득할만한 피면허자의 자진환원행위가 기대되므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 1989.06.05. 제주도정보고.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등 참가. 탐동개발이익환원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 1989.06.09. 제주대학교 교수 72명, 탐동개발이익의 제주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불법진상규명 요구, 관련자 처벌, 신법에 의한 이익환원 주장)
- 1989.06.10. 탐동개발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 제민협 사무실에서 ‘범도민협의회’ 구성에 따른 기자회견
- 1989.06.13. (가칭)<탐동문제협의회> 1차 회의(25명 참석/도지사·시장이 구성/탐동개발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 배제)
- 1989.08.07. 탐동문제협의회, 매립의 불법성 인정. 상업용지 중 50%를 매립지로 환원할 것을 결의하는 탐동문제협의회 결의문 발표
- 1989.08.31. 탐동개발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 탐동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의견서 발표
- 1989.09.18-20. 국회 재청원 서명운동
- 1989.09.23. 국회내무위 제주도 국정감사. 참고인, 증인채택 받아들여져 서경림 교수, 양시경, 강달인 씨 증언. 이때 공청회(1986.7.31) 조작, 동의서(1984.9.15) 조작, 공사비 조작 등 증인과 참고인에 의해 탐동매립은 불법매립임이 증명됨
- 1989.11.02. 이군보도지사 박희택 범양건영 회장과 ‘병문천 복개공사’ 단독합의
- 1989.11.03. 탐동개발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 도지사 규탄 성명서 발표
- 1989.11.08. 탐동단독합의 무효화선언 도민결의대회 개최. 탐동단독합의 무효화 투쟁을 위한 민정당사(고세진의원) 점거농성
- 1989.11.09. 민정당사에서 내몰림. 민주당제주지구당 점거 단식농성(탐동개발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 소속 4명)
- 1989.11.12. 평민당제주지구당 점거농성(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 1989.11.14. 공화당제주지구당사 점거농성(제민협 중앙상임위원장 오만식 등 6인)
- 1989.11.15. 탐동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 대표 서명준비모임(제주YWCA)
- 1989.11.19.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 결성. 민주당 단식농성 12일째, 평민당 농성 8일째, 공화당 단식농성 6일째 만에 농성해제
- 1990.02.17.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 협상대표 5인(임문철 신부, 양영수 신부, 고창훈

교수, 장응모 회장, 양승부 변호사), 범양건영(주) 박희택회장, 제주시장 전창수 3자간 잠정합의안 도출

1990.03.06.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 공동대표회의에서 잠정합의안 추인 거부

1990.07.04. 범도민회 항의단 제주시청 방문. 개발이익환원 이행보증과 도시설계문제를 동시에 진행할 것 요구.

1990.07.10. 제주시장 개발이익환원 이행보증과 도시설계문제를 별개로 추진한다는 기자회견 발표

1990.11.05. 멀치잡이 어민, 해녀, 입어권자 및 주민, 탐동문제해결범도민회, 교수, 학생 등 54인이 전국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부정고발센터 소속 변호사 10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건설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탐동 공유수면매립 무효확인 행정소송 청구

1990.11.15. '탐동공유수면 매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 개최(건설부 불참, 범양건영은 "주민동의와 보상절차 등 제주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주장. 경실련 박익제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탐동매립면허의 불법부당성 제기)

1990.11.23. 경실련(대표 변형운)과 탐동문제해결범도민회(공동대표 조영배 외), 탐동매립에 대한 면허 무효와 면허당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공히 건설부장관이었던 이규호, 제주도지사였던 장병구, 매립사업자(박태신, 박희택, 백형수), 해당 공유수면관리자인 해녀(강달인, 김봉해), 멀치잡이 어민 문용식, 탐동문제해결범도민회 공동대표 조성운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A5[사건 내용] 1989년 3월 12일 「탐동불법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범도민결의대회」가 시민·학생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민회관에서 있었다. <탐동불법개발이익환수투쟁도민대책위>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은 지금까지 개발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된 채 권리를 빼앗겨 왔다."고 전제, "범양건영(주)는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불법개발이익금을 제주사회로 환수시키고 △검찰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를 색출 처벌하며 △국회는 탐동매립면허과정의 모든 의혹을 파헤치라고 주장하고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 2백여 명은 대회가 끝난 뒤 하오4시30분께부터 시민회관~중앙로터리~동문로터리~탐동매립현장까지 가두평화행진을 하고 5시45분께 자진해산했다. 4월 21일 <도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출신 국회의원·제주도지사·제주시장은 탐동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개토론을 개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탐대위는 이날 상오 파라다이스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던 간담회가 강보성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들 및 지사·시장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성명을 발표, 이같이 요구하고 "제주도지사는 건설부에 매립면허조건변경을 요청하여 탐동매립 땅을 신법정신에 따라 90%이상 제주사회에 환원되도록 조치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양영수신부 등 제주시민 8천4백75명은 5월 13일 제주도 탐동공유

수면 매립개발이익을 제주사회로 환원해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건설부장관과 국회건설위원장, 평민당·민주당·공화당 등 야3당총재 앞으로 발송했다. 이들 진정서인들은 진정서에서 현재 공사중인 탐동공유수면매립지의 공공지비율 50.4%를 90%이상으로 면허조건을 변경해줄 것과 신법에 의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부정 한 수단을 자행한 관계자의 문책을 주장했다. 한편 양신부 등 제주도민 1천6백 28명은 「탐동공유수면매립」과 관련 지난 5월 2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국회 고세진의원의 제안으로 국회건설위에 회부돼 지난 5월 9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건설위에 회부돼 다뤄진다. 한편 「탐동국회청원 승리를 위한 범도민 결의 대회」가 5월 13일 하오 3시부터 시민·학생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탐동 매립공사장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회가 끝난 뒤 중앙로를 거쳐 시청 앞까지 가두행진한 뒤 하오6시께 해산했다. 6월 9일 탐동개발이익의 지역사회환원에 대한 의견과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제주대학교 교수 1백여 명은 「탐동개발이익의 제주사회환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대교무처장인 조문부 교수(행정학)등 1백여 명이 서명한 이날 성명에서 서명교수들은 “국회건설위와 검찰은 탐동매립개발사업이 면허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을 면밀히 재수사하여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할 것이며 부정한 수단을 쓴 자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서명교수들은 또 “제주해양개발과 (주)범양건영은 기업윤리를 지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130여억 원으로 책정됐던 공사비를 480억원으로 부풀리면서 제주도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명교수들은 이와 함께 “행정당국이 면허발급 시 필요한 경우 면허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다. 건설부와 제주도는 현시점에서 면허변경사유가 확실하므로 신법정신에 따라 면허조건을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적정이윤만 보장, 나머지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서명교수들은 또 개발이익의 환수방법과 관련 “사업자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분양완료 후 판매수익 가운데 돈으로 내놓거나 도민편의 시설제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히며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몇 채의 건물·다리(橋)보다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 당국자들은 탐동매립지에 대한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도민의견을 수렴,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서명교수들은 이상의 요구는 도민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일제 해결을 위한 사업자와 행정당국자들의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교수대표들은 탐동개발이익의 제주사회 환원과 관련 6월 9일 하오 3시30분 제주시내 오리엔탈호텔 커피숍에서 기자회견 가졌다. 이군보도지사는 6월 9일 "이익환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민간협의체구성을 발표했다. 이에 6월 10일 <도민대책위원회>는 제민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탐동불법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탐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탐동개발이익환수는 그동안 불법개발의 진상규명과 이익환수를 위해 꾸준하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온 탐동도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의 성과물”

이라고 전제, “범도민협의기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양심적 인사들로서 관계당국과 정치인을 제외한 언론·종교·건설업계 및 이해 당사자인 지역어민과 해녀들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온 도민의 관심 속에 도내 종교계·언론계·정계·학계대표 등 25명으로 “탐동문제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 13일 제주시내 파라다이스 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식출범 했다. 그러나 탐동문제협의회는 소속 위원 대부분이 탐동 매립 문제에 대한 지식이 빈약 한데다 협의체의 성격,역할 등이 불분명해 첫 날 회의부터 위원들 간에 시각차를 노정하며 표류했다. 탐동 문제협의회는 7월 14일 하오 파라다이스 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협의회운영의 구심체가 될 ‘8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탐동 문제협의회 8인 소위(위원장포함)는 7월 15일 구성된 이래 다섯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탐동개발이익과 관련한 8인 소위의 의견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개발 이익 환원은 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원 정도는 총 매립 면적 5만평 중 공공용지를 뺀 개발업자 귀속분(2만5천평)의 절반을 요구키로 했다" 고 밝혔다. 탐대위는 11월 3일 "탐동개발 이익 사회환원 일환으로 도지사와 범양 박희택회장 간에 합의한 병문천 복개공사는 도민의사와는 전혀 별개" 라고 전제하고 "범양건영에 놀아난 도지사를 규탄한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탐대위는 이 성명에서 "도민의 의사에 반한 이번의 합의는 도민의 이름으로 무효" 라고 선언하고 "제주도민을 계속 우롱하는 행위는 탐동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12일 이전 도지사 규탄집회와 범도민 도지사 퇴진서명 운동을 전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탐동단독합의무효화 선언 도민결의대회」가 11월 8일 하오 4시 시민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열렸다. 탐동도민대책위원회(위원장 고창훈 제주대교수 등 7인)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주도지사의 일방적 탐동이익환수결정을 비난하고, 병문천 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회가 끝난 뒤 탐대위 사무국장 양시경군(제주대 사회학 4)등 참석자 13명은 7시부터 민정당제주시지구당에서 농성을 벌이다 9일 상오2시까지 해산했다. 한편 9일 상오 10시부터 양시경군 등 시민학생 10명은 “국조권발동, 지사단독합의 철회, 11월 12일까지 탐대위,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으로 대책회의를 가질 것”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제주시지구당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점거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14일 하오 2시 오만식(제민협 중앙상임위원장) 등 재야단체회원 6명이 공화당도지부를 점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병문천 복개합의사항 백지화 및 도지사공개사과 매립면허조건변경, 국회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요구하는 한편 "도내 각계각층의 유력인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탐동문제해결을 위한 도민기구를 구성, 실추된 도민자존심 회복에 모범을 보일 것" 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도청 및 시청에서 탐동개발은 합법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도민의사를 무시한 이 같은 당국의 여론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며 강력 비난했다. 11월 19일, 제주대 교수

등 도내 학계, 종교계, 언론계, 농민 등을 비롯한 각계대표와 사회단체 대표 등 51명은 하오 4시30분 제주시내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탐동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탐동문제해결범도민회>를 구성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각계 51명을 범도민회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이중 조문부교수 등 7명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임(6명 추후선임)했는데, 범도민회는 앞으로 탐동문제협의회, 탐동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 제주시 등 행정기관, 시행업자인 범양건영 등의 의견을 종합, 탐동개발이익금 사회환원과 관련 단일안을 만들어 탐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탐동해결범도민회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성명을 발표 "제주시와 범양건영 간에 이루어진 병문천복개 합의를 철회하고 범도민회가 앞으로 제시하는 안을 수용할 것" 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 구성과 함께 그동안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제주시지구당들을 점거, 단식농성을 해온 시민학생 20여명은 이날로 단식농성을 해제하고 범도민회에 참여키로 했다. 1990년 4월 2일 제민협 민중생존권대책위원회(위원장 양영운) 및 제주대학교총학생회 (회장 허종훈) 등 8개 단체들은 2일 상오 범양건영과 제주시와의 「탐동개발이익환수 행정협약」 체결예정에 따른 성명을 발표, 탐동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시는 행정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2백억 원의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다음 2~3개월 동안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제주시의 일방적인 병문천 복개사업추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양건영이 시에 요구한 행정지원에 대해서도 시는 기존의 면허조건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성명은 탐동지역 잠수회 피해보상의 경우도 형평에 맞는 수준에서 행정협약 체결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탐동개발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 탐문협

A8[관계 자료]

“탐동이익 환수 결의대회 개최”, 『제주신문』 1989년 3월 13일자(제주연합001)

“탐동 개발이익 지역환원 성명”, 『제주신문』 1989년 4월 22일자(제주연합002)

“「탐동이익」 환원 각계에 진정서”, 『제주신문』 1989년 5월 13일자(제주연합003)

“「탐동 국회청원」 승리 결의대회”, 『제주신문』 1989년 5월 15일자(제주연합004)

“성명서 발표 ‘개발이익 환원’ 촉구”, 『제주신문』 1989년 6월 9일자(제주연합005)

“「탐동」 서명교수 기자회견 가져”, 『제주신문』 1989년 6월 10일자(제주연합006)

“출범 한달 「탐동문제협의회」 도단체 무얼하나”, 『제주신문』 1989년 7월 14일자(제주연합007)

“탐동문제 협의 8인소위 구성”, 『제주신문』 1989년 7월 15일자(제주연합008)

“「탐동위」 성명”, 『제주신문』 1989년 11월 3일자(제주연합009)

“「탐대위」 도민결의대회”, 『제주신문』 1989년 11월 9일자(제주연합010)

“재야단체회원 6명 공화당 도지부 점거”, 『제주신문』 1989년 11월 15일자(제주연합 011)

“「탐동환원」 단일안 만들자‘ 범도민회 구성”, 『제주신문』 1989년 11월 20일자(제주연합012)

“탐동문제 성명”, 『제주신문』 1990년 4월 3일자(제주연합013)

편집실, 1989 「탐동매립, 불법성이 더 중요」 『월간제주』 (6월호: 13-16)

편집실, 1989 「탐동문제, 국회청원에서 다시 도민의 손으로」 『월간제주』 (7월호: 48-53)

양시경, 1990 「탐동, 지금은 몇 시인가?」 『월간제주』 (6월호 143호: 30-31)

강덕환, 1990 「멀고먼 탐동길, 당국의 의지가 박약한 건 아닌가」 『월간제주』 (7·8월호: 34-35)

편집실, 1989 「뉴스와 화제」 『월간제주』 (12월호: 8-11)

강덕환, 1989 「물에 오른 ‘탐동’ 금의환향할 것인가?」 『월간제주』 (12월호: 35-3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87년 6월 항쟁**

A2[사건 일시] 1987.06.11~1987.06.2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7.06.10. 제주대총학생회,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축소조작규탄 및 4·13호헌철폐 민주개헌쟁취를 위한 범도민시국대토론회’ 개최 후 교내외 시위 전개

1987.06.21. 오후 1시, 제주대에서 ‘민주화투쟁 출정식’을 갖고 학내외 시위. 교수아파트 앞에서 경찰과 대치 / 오후 2시10분, 미리 시내에 내려왔던 학생들 중앙로 점거하고 시위 전개

1987.06.22. 학생 1천여 몇 도심지 점거하고 가두시위 전개 / 오후 11시40분부터 중앙성당 점거농성

1987.06.23. 오후 1시, 제주대 교내에서 ‘민주화출정식’ 후 교문밖 진출시도, 투석전 전개 / 오후 7시 제주시내 진출 가두시위 및 투석전 전개, 21명 연행 / 시위 시민학생들 오후 11시30분,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중앙성당 합류

1987.06.24. 오전 1시30분, 연행자 석방되자 농성해산

1987.06.26. 오후 8시, ‘평화대행진 제주대회’가 시민학생 등 1천3백여 명(경찰집계)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로터리에서 열림 / 서귀포 천주교복자교회 앞에서 1백여명 가두시위 전개

1987.06.29. ‘6·29선언’

A5[사건 내용] 1987년 6월 10일 하오 3시15분부터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제주대학생 2백

여 명(경찰추산)은 총학생회주관으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축소조작규탄 및 4.13호헌철폐 민주개헌쟁취를 위한 범도민시국대토론회’를 가진 뒤, ‘호헌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하오5시30분 교문 밖 3백여m 교수아파트 입구까지 진출해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이다 하오8시20분께 자진해산했다. 6월 21일, 제주대학생 5백여 명(경찰추산)이 제주시 중앙로터리와 광양로터리 등 도심에 진출 호헌철폐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학생들이 비폭력을 내세웠고 경찰도 강제진압을 억제하는 등 서로의 자제로 인하여 최루탄투척이나 투석전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제주대 학생들은 이날 하오1시께 교내에서 ‘민주화투쟁출정식’을 갖고 학생 2백여 명이 시가 진출을 위한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학생들이 제주대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사이에 미리 시내에 내려와 있던 학생 1백여 명이 하오2시10분께 종합시장입구에서 갑자기 거리에 뛰어들어 반정부구호를 외치면서 연좌농성을 벌여 이때부터 중앙로 차량통행이 막혔다. 하오3시께 3백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학생들은 중앙로터리에 진출 ‘민주헌법쟁취’, ‘호헌철폐’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국토론회를 벌였으며 인도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노래를 부르며 한때 탐동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은 하오4시50분께 남문로터리에서 대학에서 내려온 학생들과 합세 5백여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학생들은 이어 광양로터리에서 한때 경찰과 대치하며 민정당제주도지구당사 앞까지 진출했다가 하오7시께 자진해산했다. 6월 22일, 제주대학생 7백여 명은 22일 하오1시께 교내에서 ‘민주화행진진출정식’을 갖고 시가지에 진출했는데 하오3시께 광양로터리에 집결한 시위학생은 1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학생들은 이곳에서 세갈래 길로 나누어 가두시위를 전개하고 연좌 시국토론회를 벌였다. 이날 밤 11시40분께 학생 1백여 명이 중앙성당 구내에 들어가 농성에 돌입했다. 또 학생 2백여 명도 중앙성당 진입농성에 동조해 제주대 학생회관에 들어가 철야농성을 벌였다. 6월 23일, 제주대학생 7백여 명(경찰집계)은 제주시내도심지에서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 1백50여명은 이날 하오1시께 교내에서 ‘민주화출정식’을 갖고 교문을 나서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강제진압을 하자 돌을 던지며 대치했다. 하오7시께 시내에 진출한 시위학생들은 경찰이 중앙로에서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자 상가쪽으로 흩어지며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학생21명을 연행했다. 시위학생들은 밤10시30분께 중앙로지하상가공사장에 세워져있던 도로포장용 증기1대를 밀고 나오고 제주시 청소속 지프차량을 뒤집어 엎기도 했는데, 하오11시30분께 지난22일부터 학생 1백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중앙성당으로 가 합류했다. 시위학생들은 24일 새벽 1시30분께 학교와 성당측의 주선으로 연행학생들이 모두 풀려나오자 농성을 풀고 귀가했다. 10월 26일, ‘평화대행진 제주대회’가 26일 하오8시 학생시민 등 1천3백여 명(경찰집계)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로터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는 제주대학생들이 주도했는데 대회를 마친 후 태극기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내 중앙로 남문로를 따라 광양로터리까지 행진했다. 시위학생들은 경찰에 연행됐던 6

명이 풀려나오자 27일0시40분에 자진 해산했다. 한편 서귀포 시내에서도 이날 하오 천주교복자교회 앞에서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김정렬, 송형관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대생2백명 시위”, 『제주신문』 1987년 6월 11일자(제주연합020)

“제대생5백명 가두시위”, 『제주신문』 1987년 6월 22일자(제주연합021)

“제대생 이틀째 평화 시위”, 『제주신문』 1987년 6월 23일자(제주연합022)

“제주대생 격렬시위”, 『제주신문』 1987년 6월 24일자(제주연합023)

“평화대행진 제주대회”, 『제주신문』 1987년 6월 27일자(제주연합02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경찰폭력에 의한 학생부상사건 규탄투쟁**

A2[사건 일시] 1987.07.11~1987.07.26

A3[사건 배경] 1987년 7월 11일, 제주대학생들이 고(故) 이한열열사 추도식 및 규탄대회를 제주시내에서 개최하고 평화행진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폭력진압으로 일관했다. 이에 학생들은 장소를 바꿔가며 집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던진 보도블럭에 김윤삼(제주대 4)이 안면부를 맞고 실신해 긴급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제주대학교추진위원회>(위원장 송형관),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학생대책협의회>(대표 박성룡),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도민협의회>(대표 이지훈) 등이 대응에 나섰고, 이들 기구들은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A4[사건 전개과정]

1987.07.11. 제주대학생들이 ‘고(故) 이한열열사 추도 및 살인정권종식을 위한 규탄대회’ 과정에서 경찰폭력에 의해 김윤삼(제주대 4) 부상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까지 중앙성당에서 철야농성

1987.07.13.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도민협의회> 명의의 「7.11 고 이한열열사 추도 및 민주화실천 투쟁일지」, 「성명서」, 「투쟁속보」가 제주시내 일대에 배포됨

1987.07.14.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제주대학교추진위원회> 명의의 「청년학도·애국도민께 드리는 글」 배포

1987.07.16. 제주대 총학생회 항의문 발표 / <제주대학교 인권옹호위원회> 김태원(사학 4) 등 7명, 서울 KNCC 사무실에서 규탄농성 돌입

1987.07.17.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도민협의회> 위원 11명, 가톨릭회관 옥상 점거농성 돌입 /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학생대책협의회>, 중앙로에서 ‘폭력추방 및 살인정권종식을 위한 규탄대회’ 개최하고 가톨릭회관(중앙성당) 앞 연좌시위 전개 / <재경제주도민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결성 및 규탄성명서 발

표

- 1987.07.18.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연동교회 농성 돌입 / 서울 KNCC 농성학생, 「제주속보」 발간 배포
- 1987.07.19. 공동기자회견(연동교회)
- 1987.07.20.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1차 폭력추방을 위한 규탄대회' 개최 / 소식지 「민주제주」 창간호 발간, 이후 7월 26일까지 7호 발간
- 1987.07.21.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2차 폭력추방을 위한 규탄대회' 개최 / <폭력추방을 위한 제주도민 중재위원회> 결성 / 제주대학생의 서울 KNCC 사무실 농성에 <재경관악학우회> 8명 합류, 단식농성 돌입 / <폭력추방을 위한 제주도민 중재위원회> 결성
- 1987.7.22. '제3차 폭력추방을 위한 규탄대회' 개최 / 중앙성당 앞에 '공동대책위 지정 벽보판' 설치 / 서귀포 YMCA회원 30여명, 농성투쟁 지지성명서 발표·철야농성 돌입 / 서울KNCC 사무실 단식농성 참가자, 민주당중앙당사 점거 단식농성 돌입
- 1987.07.23.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민주당중앙당사 점거 단식농성 해제 /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 제주도청 관계자와 면담
- 1987.07.24. 민주당 진상조사단(단장 목요상) 내도 /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 제주경찰서장 면담
- 1987.07.25. <폭력추방을 위한 제주도민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제주도경찰국장 외 경찰 당국자와 <공대위> 대표 회담. 5개항의 협의사항 결정
- 1987.07.26. 연동교회에서 공동기자회견. 제주경찰서장의 공식사과문 및 협의문 낭독. 농성 해제

A5[사건 내용] 1987년 7월 11일, 제주대학생 150여명이 '고(故) 이한열열사 추도 및 살인정권종식을 위한 규탄대회' 개최를 위해 보성시장 앞길에 집결하여 시내 중심가로 평화대행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민화관 앞길까지 행진했을 때 시위대 뒤쪽에서 전경체포조의 무자비한 구타 및 연행이 자행됐다. 그리고 이를 만류하는 시민에게도 경찰은 폭행으로 목살했다. 저녁 7시 30분경 탐동 근처에 재집결한 학생들이 시민들의 호응 아래 행진을 시도했으나 골목마다 배치된 경찰의 폭력에 의해 해산됐다. 9시경 동문로터리 부근에 집결하던 중 체포조가 차에서 뛰어 내려 시위대를 연행했다. 이에 연행에 항의하던 시민들이 보도불력을 깨 경찰에게 던졌고, 흩어지는 시위대를 향해 전경 1명이 보도불력을 3M 안팎의 근거리에서 던졌다. 이때 김윤삼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실신했다. 경찰은 쓰러진 김윤삼을 연행하려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고 제주의료원으로 이송했다. 병원검사 결과 김윤삼은 오른쪽 눈 위 살점이 5×5cm, 깊이 3cm 정도 찢겨나가고, 눈 옆 뼈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과 시민들은 중앙성당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를 전개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민주인사들은 7월 13일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도민협의회>(대표 이지훈)를 결성하고 선전전을 펼치는가하면, 7월 17일 기습적으로 가톨릭회관 옥상점거농성에 돌입하면서 투쟁의 불씨를 키워나갔다. 학생들도 대책마련에 나서 제주대학생 김태원(사학 4) 등 7명의 학생이 서울 KNCC 사무실에서 규탄농성 돌입하면서 이 사건을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시켰다. 또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학생대책협의회>(대표 박성룡)를 구성해 중앙로에서 ‘폭력추방 및 살인정권종식을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가톨릭회관(중앙성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면서 옥상점거농성에 돌입한 농성단을 지지하고 엄호했다. 서울에서는 현기영, 현기영, 김광협 등 27명이 모여 <재경제주도민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결성하고 서울 KNCC 농성단을 격려방문 하는 등 지지와 지원에 들어갔다. 한편, 가톨릭회관 옥상점거농성에 돌입했던 시민들은 학생들과 합류해 농성장을 연동교회로 옮겼고,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학생대책협의회>,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학생대책협의회>,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제주대학교추진위원회> 등은 효율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7월 18일,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대위>는 7월 20일 ‘제1차 폭력추방을 위한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연일 규탄집회를 가졌고, 소식지 「민주제주」를 발간하는 등 도민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호응을 얻어나갔다. 한편, 서울 KNCC 농성단은 단식농성으로 변화시켰고, 여기에 <재경관악학우회> 8명이 합류하면서 연대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들은 7월 22일부터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또, 서귀포YMCA 회원 30여명이 지지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7월 21일, <폭력추방을 위한 제주도민 중재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중재위원은 제주도인권선교위원회 대표 모갑경 목사, 제주도교회사회선교협의회 대표 석준관 목사,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대표 홍충수 신부, 민주화를 위한 제주대학교교수협의회 대표 고장훈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도를 찾음으로써 민주당 단식농성은 해산하고, 공대위 측과 경찰, 행정당국이 접촉을 가지면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7월 25일, <폭력추방을 위한 제주도민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5개항의 협의사항을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1. 경찰측은 김윤삼양의 부상사건에 대해 학생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87년 8월 12일까지 조사키로 한다. 2. 경찰측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3. 경찰측은 김윤삼양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다. 4. 학생측은 7월 11일 사건 이후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 5. 경찰측은 7월 11일 사건 전반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한다” 등이었다. 이 합의문을 7월 26일, 공대위와 경찰 측이 농성장인 연동교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힘으로써 이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A6[관계 인물] 김윤삼, 현상종, 김태원, 오용욱, 김성대, 이지훈, 박성룡, 송형관, 정공철, 이야성, 현기영, 현길언, 모갑경, 석준관, 홍충수, 고장훈

A7[관계 단체]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학생대책협의회,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제주대학교추

진위 원회,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폭력추방을 위한 제주도민 중재위원회, 재경관악학우회

A8[관계 자료]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87 「민주제주」 (창간호~7호)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결성대회 가두시위**

A2[사건 일시] 1987.09.0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결성대회」가 1987년 9월 6일 하오 2시
제주시 제주YMCA회관강당에서 결성준비위원 50명과 재야인사·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김경수목사 등 11명의 공동대표를 확
정하고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대회참석자 2백여 명은 대회가 끝
난 뒤 가두로 진출, 옛 시청 앞까지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40여분 만에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A8[관계 자료]

“국민운제주본부결성”, 『제주신문』 1987년 9월 7일자(제주연합02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서귀포시지부결성대회 가두시위**

A2[사건 일시] 1987.10.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서귀포시지부결성대회」가 1987년 10월 17일
하오3시30분 각계인사, 시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교서귀복자교회
에서 열렸다. 이날 결성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혁명 이룩하여 민주주의 꽃피
우자”는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참석했던 시민 등 50
여명은 대회가 끝난 뒤 평화대행진을 갖기 위해 교회정문을 나서던 중 이를 저
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4명이 연행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연행자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며 교회정문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농성자들은 연행자들이 2
시간 만에 풀려나오자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서귀포시지부

A8[관계 자료]

“국민운 서귀지부 결성대회후 농성”, 『제주신문』 1987년 10월 19일자(제주연합02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거국중립내각수립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범도민대회¹⁾

A2[사건 일시] 1987.10.3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7.10.31. 오후3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주관으로 ‘거국중립내각수립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범도민대회’ 개최. 주제강연 및 성명서, 결의문 채택. 대회 후 가두시위 전개

A5[사건 내용]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는 1987년 10월31일 하오 3시 제주 YMCA회관에서 시민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국중립내각수립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운동제주본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거국중립내각수립과 양심수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제강연 및 성명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대회가 끝난 후 일부 시민과 학생 등이 가두로 진출, 북신로와 관덕정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시위현장에서 학생과 시민 등 32명을 연행, 29명을 1일 하오 돌려보냈으나, 나머지 시민 1명과 학생 2명은 계속 조사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A8[관계 자료]

“거국중립내각 수립 양심수석방을 촉구”, 『제주신문』 1987년 11월 2일자(제주연합02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노태우후보 선거벽보 훼손

A2[사건 일시] 1987.12.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7.12.09. 제주경찰서 붙잡힌 김경훈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공범수배

1987.12.10. 김경훈씨 구속 수감

1) 『제주신문』(1987.11.2)에는 ‘국민대회’라 표기됐으나, 국본제주본부 기관지 「제주의 소리」 제8호(1988.9.7)에는 ‘범도민대회’라 표기됨.

1987.12.11. 제주경찰서 제주대생 1명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A5[사건 내용] 1987년 12월 8일 김경훈, 김동식, 정모 등은 제주시 남문로터리 남측건물 벽에 붙여진 노태우 후보의 벽보에 낙서 벽보를 훼손했다. 김경훈은 현장에서 붙잡히고 정씨(23)와 김동식씨(23)는 달아났다. 제주경찰서는 김경훈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두 사람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2월 10일 김경훈씨가 구속수감됐다. 한편 12월 9일 밤 제주중앙여중 앞 벽보판에 붙여진 노태우 후보의 벽보에 붉은 매직으로 비방낙서 가한 제주대 학생 1명도 12월 11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6[관계 인물] 김경훈, 김동식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특정후보 벽보만 골라 훼손” 『제주신문』 1987년 12월 10일자(제주연합029)

“특정후보벽보훼손 첫 구속”, 『제주신문』 1987년 12월 11일자(제주연합030)

“특정후보벽보훼손 다시 1명입건”, 『제주신문』 1987년 12월 12일자(제주연합03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공정선거쟁취 범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87.12.1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민주쟁취국민운동공정선거감시 제주본부는 12월 14일 하오2시 제주시내 천주교제주중앙교회에서 도민학생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선거쟁취 범도민대회」를 열고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를 위해 공정선거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쟁취국민운동공정선거감시 제주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43년 분단조국의 통일에의 전진을 약속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하오3시40분께 제주시내 YMCA회관으로 옮겨 공정선거감시단교육을 실시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민주쟁취국민운동공정선거감시 제주본부

A8[관계 자료]

“공정선거쟁취대회”, 『제주신문』 1987년 12월 15일자(제주연합03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공정선거감시활동보고회 및 부정선거규탄대회**

A2[사건 일시] 1987.12.2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7년 12월 21일, 민주쟁취국민운동공정선거감시 제주본부주관으로 「공정선거감시활동보고회 및 부정선거규탄대회」가 하오2시30분 시민학생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광양성당에서 열렸다. 열린 이날 대회에서 13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정선거감시활동경과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은 “12.16선거는 불법·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주최측은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양김씨는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독재투쟁대열에 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민주쟁취국민운동공정선거감시 제주본부

A8[관계 자료]

“공정선거감시 보고회”, 『제주신문』 1987년 12월 22일자(제주연합03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MBC 개표연습방송 항의투쟁**

A2[사건 일시] 1988.04.25~1988.05.1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8.04.25. 시민학생 MBC제주문화방송 항의 가두시위 전개

1988.04.26. 개표장 주변 등에서 경찰과 대치, 투석전·화염병 공방

1988.04.29.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성명 발표

1988.05.06. 평화민주당제주시지구당사를 점거농성 돌입

1988.05.12. 구속자 4명 중 2명 기소유예 석방

1988.05.13. 농성 해제

A5[사건 내용] 4·26총선을 하루 앞둔 1988년 4월 25일 오후 5시경 MBC제주문화방송의 개표상황예행연습 상황이 전파를 타면서 시민학생들이 이를 ‘개표조작예행연습’이라 규정하고 시위를 벌였다. 연습방송이 나간지 4시간 뒤인 하오9시께부터 3백여 명으로 시작된 가두시위는 하오11시께에는 학생 이외의 일반시민과 야권 후보 지지자들이 가세하면서 1천여 명으로 불어났는데 시위대는 남문로, 중앙로, 동문로터리 등 주요시가지를 행진하면서 "투표도 없었는데 민정당후보당선이 웬 말이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항의 시위는 총선 당일인 26일에도 이어졌는데, 시민학생들은 26일 하오8시께 제주시지역 개표장소인 시민회관으로 진출,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화염병과 투석으로 맞서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

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학생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들 중 학생과 시민 4명은 집시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는 29일 상오 10시30분 본부사무실에서 임문철·양영수신부와 고창훈교수 등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MBC방송사고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진상규명과 언론의 책임 있고 공정한 보도를 요청했다. 또 학생과 시민 10여명이 5월 6일 하오5시부터 평화민주당제주시지구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제주MBC개표조작음모 진상과 관련자처벌’, ‘구속학생과 시민의 석방’, ‘사태대처에 미온적인 평민당 각성’ 등을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5월 12일 구속기소 된 4명의 시민학생 중 2명이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며, 5월 13일 평화민주당제주시지구당 점거농성은 해제됐다.

A6[관계 인물] 임문철, 양영수, 고창훈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MBC 총선 연습방송 항의”, 『제주신문』 1988년 4월 26일자(제주연합034)

“민정당원들 제주MBC서 농성”, 『제주신문』 1988년 4월 27일자(제주연합035)

“방송사고관련 성명”, 『제주신문』 1988년 4월 30일자(제주연합036)

“개표장 주변 시위 2명을 기소유예”, 『제주신문』 1988년 5월 12일자(제주연합037)

“학생등 8일째 농성”, 『제주신문』 1988년 5월 13일자(제주연합03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지역 주민주체개발결정권 쟁취를 위한 철야농성**

A2[사건 일시] 1988.08.19~1988.09.01

A3[사건 배경] 제주지역 개발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는 배제한 채 관과 재벌의 결탁 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에 따른 보상마저 외면하는 현실에 해당지역 주민과 민주단체, 학생이 공동대책을 마련하고자 벌인 투쟁이다.

A4[사건 전개과정](검토-사건전개과정이 문장으로 서술됨)

1988. 08.18. 공무원과 경찰 19일 집회참여주민들에게 위협과 폭언 등 방해

1988. 08.19. ‘제주지역주민주체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개대위) 결성
식 및 철야농성 돌입(광양성당)

1988.08.20. 제주대학교로 농성장 이동

1988.08.22. 제주대학생 교내에서 ‘제주지역주민주체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지지결의대회’ 개최 / 농성장 연동교회로 이동

1988.08.23. <개대위> 합동기자회견

1988.08.31 도청 점거 철야농성 돌입

1988.09.01 협상 타결

A5[사건 내용] 1988년 들어 제주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권 쟁취 투쟁을 한데 엮어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자 8월 19일 '제주지역주민주체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개대위) 결성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찰과 공무원은 집회 전날까지 19일의 집회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에게 “빨갱이”, “참석하면 재미없다”는 등 위협과 폭언을 가하는 등 집요한 방해공작을 펼쳤다. 이에 아랑곳 않고 8월 19일 오전 11시 광양성당에서 '제주지역주민주체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이 있었다. 이날 결성식에는 민주단체 인사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곳곳에서 생존권 싸움을 벌이던 한림, 서귀포, 신촌 지역의 주민들도 공무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참여했다. 경찰당국의 원천봉쇄 속에 모인 지역주민과 시민학생 130여명은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며 결의를 다지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제주도민 목줄라 죽이는 개발정책 결사반대', '불법면허 불법매립 온몸으로 거부한다!', '잠수도 사람이다 우리바다 돌려달라!', '제주도민 단결하여 개발결정권 쟁취하자!', '제주도민 단결했다 도당국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오후 7시, 도지사와의 면담이 있었으나, “올림픽 준비로 바쁘다. 오늘 반상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얼버무림으로써 주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주민 및 시민학생들은 곧바로 광양성당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8월 20일 농성장인 광양성당 내부사정으로 농성장을 제주대학교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농성단을 비호했지만 대학당국은 학교를 떠날 것을 요구했고, 농성참가자들에 대한 분열책동과 위협은 계속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투쟁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8월 22일 제주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주지역주민주체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지지결의대회'를 가져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날로 농성장은 다시 연동교회로 옮겨졌다. <개대위>는 농성장인 신제주 연동교회에서 8월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대책위원회>는 "도내 곳곳에서 해안매립과 항만·방파제축조공사, 하수처리장시설 등 각종개발로 자신들의 생활터전인 제1종공동어장이 황폐화함으로써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 "따라서 도당국은 24일까지 개발에 따른 어장 피해보상대책 등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 이후 도청항의방문과 당국자와의 협상도 해봤으나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8월 31일 도청을 점거해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다음날 새벽 협상이 타결되어 14일간의 투쟁은 막을 내렸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지역주민주체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A8[관계 자료]

“생존권위협…피해 보상하라”, 『제주신문』 1988년 8월 24일자(제주연합039)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1988 『제주의 소리』 (제8호: 3)(제주연합04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투쟁

A2[사건 일시] 1988.08.29~1989.03.03

A3[사건 배경] 송악산 일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송악산관광지구’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주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이 계획은 1987년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88년 5월 6일부로 돌연 송악산이 ‘국가주요시설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계획자체가 백지화되었다. 이때부터 송악산이 있는 대정읍 일대는 물론 제주도내에 “송악산 일대가 필리핀의 클라크 미공군기지의 대체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제주대학교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한 인하대 문정인 교수도 “제주도가 필리핀 클라크 미공군기지의 대체지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는 말을 서울의 모 장성으로부터 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욱이 미국상원이 ‘만일 미국과 필리핀이 필리핀 내 미군기지협정을 갱신하는데 실패할 경우 필리핀 주둔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1988.8.7)도 있었다. 이에 대정읍민과 제주도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저속퇴폐문화의 유입, 소음피해 등 지역주민의 생존권은 물론 미공군기지의 핵 배치로 한반도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에 처한다는 인식 아래 범도민적인 송악산군사기지 반대투쟁을 벌였다.

A4[사건 전개과정]

1988.08.29. 대정학우회 · 제주대학교총학생회 · 국민운동제주본부 ‘제주도 송악산 국가군사주요시설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1988.09.26. <모슬포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대책준비위원회>, 대정초등학교 교정에서 ‘모슬포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결의대회’ 개최.

1988.10.01.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988.10.11.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송악산군사기지 설치반대 제주대학교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비상학생총회’ 개최

1988.10.14. 재경제주도민회 등 서울지역 거주 제주도민 250여명이 <재경제주도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송악산군사기지설치 반대를 위한 재경제주도민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결의대회’ 개최(서울 마리스타수도원)

1988.10.15. <송악산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결성준비위원회> 회의 및 기자회견(광양성당)

1988.10.16.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 ‘모슬포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 쫓기대회’ 개최(대정초등학교, 2,000여명 참석)

1988.10.22. <제주도관광협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교통부 등에 모슬포지역 군사보호구역철회 진정서 제출

1988.10.30. <송악산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송악산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규탄대회’ 개최(제주북초등학교).

- 1988.11.04.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 현판식 개최(하모2 · 3리 사무소)
- 1988.11.16. 송악산군사기지철회를 위한 등반대회
- 1988.11.19-27. <송악산공군기지설치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평화주간’ 선포. 19일부터 23일까지 ‘송악산군사기지계획철회를 위한 평화대회’ 개최.
- 1988.11.29.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 안덕면대책위원회> 결성
- 1988.12.11.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 안덕면민 꺾기대회’ 개최(오후 2시, 안덕중학교)
- 1988.12.16. 송악산군사기지철회를 위한 제주청년학도 꺾기대회
- 1988.12.18.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송악산다목적핵기지 결사반대 및 선거공약 이행 촉구대회’ 개최
- 1988.12.24. <도민대책위원회>, ‘송악산 미핵기지철회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 운영
- 1989.01.18. 6개 반대대책위 공동성명 발표
- 1989.01.21-24. 재경제주학우회가 주관하고 제주문화운동협의회와 제주대학교씨클연연합회가 함께 한 ‘송악산군사기지철회와 주민주체결정권 쟁취를 위한 시민학생문화한마당’ 개최
- 1989.01.24. 6개 대책위 합동기자회견
- 1989.01.25-27. <도민대책위원회>, 반핵비디오 상영
- 1989.02.22. 6개 대책위 공동명의로 ‘철회요구서’와 ‘청원서’를 청와대, 국방부, 국회에 공식 발송하고 3월 20일까지 명확한 답변 요구
- 1989.02.27. 청년학생들, ‘송악산군사기지 완전철회와 노태우 선거공약불이행 규탄대회’ 개최하고 시내 일원에서 시위 전개
- 1989.03.03. 강영훈 국무총리, “군사보호구역으로 변경됐던 ‘송악산국민휴양지건설계획’을 원상복구하고 송악산군사기지를 전면 백지화 한다.”고 통보
- 1989.03.08. <도민대책위원회> 등 6개 대책위원회, 송악산군사기지 전면백지화에 따른 환영성명 발표

A5[사건 내용]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세간의 의혹과 신문보도 등에 근거해 1988년 8월 29일, 국민운동제주본부 · 제주대학교총학생회 · 제주대학교대정학우회가 ‘제주도 송악산 국가군사주요시설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9월 26일, <모슬포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 대책준비위원회>는 대정초등학교 교정에서 ‘모슬포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가파도, 마라도, 동일리 등 대정읍 23개 리 팻말을 앞세운 가운데 1천여 명 이상이 운집하여 개최됐다. 개회사(양영운 준비위원회위원장)에 이어 경과보고, 각계인사(모갑경 농어촌개발원장, 임문철 신부, 고창훈 교수)의 지지표명이 있었고, 국민운동제주본부와 제주지역민주단체 공동명의

의 성명과 제주지역 대학생연합성명서 등이 발표됐다. 결의대회 후 700여명은 '군비행장조감도' 공개를 요구하며 읍사무소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행진과정에서 '우리는 죽어도 대정을 지킨다', '안돼안돼 절대안돼 군비행장 절대안돼', '대정읍민 단결했다 군비행장 결사반대', '지역주민 우롱하는 보통사람 믿지말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10월 1일, 송악산이 위치한 해당지역인 대정읍에서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결성식은 대정읍 상하모리 6개 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1시 상모 2리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주민들은 이 지역에 군비행장 설치하는 데에 반대하며, 앞으로 이에 서명운동 등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구성된 임원은 위원장 우영진, 부위원장 허창옥 외 6개 이장, 사무국장 양영운 등이다. 10월 11일, 제주대학교총학생회는 '송악산군사기지 설치반대 제주대학교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했다. 11일 하오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대민주광장에서 열린 이날 비상총회에서 학생들은 "미군기지의 제주도송악산 주둔계획은 6천만 민중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10월 14일 <재경제주도민회> 등 서울지역 거주 제주도민 250여명이 <재경제주도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송악산군사기지설치 반대를 위한 재경제주도민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결의대회'를 서울 마리스타수도원에서 개최했다. 10월 15일, 하오3시 <송악산공군기지설치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결성준비위원회>(송준위)가 제주지역 종교·문화·여성계 등 20개 사회단체의 대표,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교 광양성당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송준위>는 지금까지 각계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반대운동을 범도민적으로 확산하는데 공동노력키로 하고 24일 도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범도민 규탄대회와 11월 중순께 평화대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송준위>는 이날부터 20만 명을 목표로 한 "송악산 공군기지설치 결사반대 범도민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송준위>는 성명을 통해 "송악산 군사기지화는 중장기적으로 공군과 해군을 포괄하는 대규모 미군기지화 전략의 1단계계획"이라 전제, '송악산 군사기지화의 즉각 철회', '제주도를 반전반핵의 평화지역으로 선포할 것' 등을 요구했다. 10월 16일,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 학생 등 2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정국민학교에서 '모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쫓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위원장의 대회사, 경과보고, 초청강연, 성명서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회는 각 마을별로 "송악산 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어깨띠와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반대 반대 결사반대 모슬포 군비행장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질서있게 입장, 쫓기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우영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모슬포지역 군비행장설치계획은 노태우대통령이 선거공약을 무시하고 2만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아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

회참가자들은 성명서와 결의문 등을 통해 "송악산 군비행장설치반대투쟁이 두 달이 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과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상의 뼈가 묻혀있는 우리의 땅과 바다를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각 사회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플래카드와 풍물패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한편 대회주최측은 앞으로 있을 국방부관계자가 군사기지를 기정사실화하는 설명회에는 절대 참석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10월 22일 <제주도관광협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모슬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철회를 진정했다. 1백30여 회원업체의 연명날인으로 된 이 진정서에서 제주도관광협회는 "모슬포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이 표면화되면서 송악산 지구관광사업자들은 실의에 빠져있다"면서 "관광과 군사기지화는 결코 양립될수 없으므로 제주도가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세계속의 선진관광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공군기지설치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진정했다. 10월 30일, <송악산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송악산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경 대정지역 주민, 도내18개 사회단체회원,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모갑경목사(제주도 농어촌개발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경과보고, 대회사, 각계입장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는 역사적으로 큰 피해를 받아온 송악산지역의 수난사를 밝히며 "지역주민들은 끝까지 송악산을 지킬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교육계와 여성계·종교계·학생대표들도 각각 성명서를 통해 "송악산지역에 대규모 군사기지설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계획이라며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결과 송악산지역에 2백만평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군기지가 설치될 계획이라는 것이 자명해졌으며, 장기적으로 화순항까지 해군병참기지화가 계획되고 있다"고 전제, "이 같은 계획은 최근 노대통령의 UN총회연설시 '군비축소 및 남북한 불가침 선언' 제의와는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가?"고 반문했다. 한편 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풍물패와 각종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안돼안돼 절대안돼 군사기지 절대안돼!', '조국통일 가로막는 군사기지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양국교까지 평화대행진을 벌인 후 하오6시께 자진해산했다. 11월 4일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 현판식이 대정읍 하모3리 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은 "한라산신 바다용왕님의 힘을 빌어 양키귀신 핵귀신을 몰아내자"는 내용의 축문을 낭독, 군비행장설치계획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11월 17일, <송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주간' 선포 및 사업계획을 밝혔다. <송악산공군기지설치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송악산군사기지만대투쟁을 하나로 결집하고, 투쟁을 단지 지역생존권 차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평화주간'을 선포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송악산 군사기지철폐를 위한 평화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사업을 벌였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월 17일 ; 평화대회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 △11월 19일 ; 「송악산 군사기지철폐를 위한 평화대회 개막식」이 19일 하오 대학생, 시민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송대위>와 <제주대학교투쟁연합>이 주최한 이날 개막식은 열림굿에 이어 공동대표 양영수신부의 개막선언에 이어 김재훈(한겨레사회연구소이사)씨의 '군사기지철폐와 한반도평화를 위하여'라는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날 양영수 공동대표는 개막선언에서 "평화대회는 학술·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송악산 군사기지설치문제의 부당성을 폭로하여 전도민적 반대의사를 재차 천명하고, 도민의 생존권투쟁차원을 넘어서 조국통일과 평화운동의 전국민적 확산을 불러일으키는데 개최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주제강연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송악산 군사기지설치계획은 조국통일에 엄청난 저해요소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송악산 군사기지설치계획을 도민의 결집된 힘으로 저지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제주대투쟁연합은 "광주학살 5공비리의 주범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한다"며 "송악산군사기지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노태우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막식이 끝난 뒤 제주대투쟁연합은 학생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이구속 노태우퇴진 및 제주도핵기지철폐를 위한 제주지역청년학도 총궐기기간" 선포식을 갖고 중앙로, 동문로 일대를 가두시위한 후 자진해산했다. 주요 행사로는 △11월 20일 : 「4·3의 밤」 기초강연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재일소설가). 토론(고창훈, 문무병) / 서울지역대책위, 「송악산군사기지결사반대 시민대회」 개최, △11월 21일 : 「반전반핵결의대회」 개최. 강연(최열), 원폭피해증언(한부상), △11월 22일 : 제주여인회 주최, 「에이즈추방 시민대회」 개최, △11월 23일 : 「군사기지철폐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범도민결의대회 및 평화대회 폐막식」 개최. 시민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내 관덕정 앞 광장에서 폐막식이 있었다. 이날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민중주체의 반핵·반전의 민족자주평화운동에서 이뤄지며 한반도의 핵무기 철폐, 남북상호간의 감군, 군축협상을 기초로 휴전협정을 상호불가침을 내용으로 한 평화협정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등의 「한라평화선언문」과 「군사기지철폐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제주대투쟁연합은 전·이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하오6시계부터 동문로에서 중앙로를 거쳐 광양로터리까지 평화와 통일기원 촛불대행진을 가진 후 군사기지철폐와 통일기원굿을 끝으로 하오8시계 자진해산했다. 11월 29일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 안덕면대책위원회>(위원장 양영석)가 결성되고 12월 11일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 안덕면민 궐기대회」가 오후 2시, 안덕중학교에서 개최됐다. 안덕면 관내 주민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송악산지역에 군사기

지가 설치되면 이웃한 안덕면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완전백지화 될 때까지 다른 단체와의 공동투쟁을 다짐했다. 특히 군사기지운영에 필요한 각종 군사물자를 수송할 군사항으로 화순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없고 어로작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생존권수호 차원에서 투쟁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초청연사로 나온 대정읍대책위원장은 "송악산 군사기지를 축소조정 설치하겠다."는 당국의 얘기는 "일단 기지를 설치해 놓고보겠다."는 속셈을 나타낸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18일 모슬포에서 전도민이 모여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산방정기 이어받아 군사기지 막아내자"는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12월 16일, 송악산군사기지철폐를 위한 제주청년학도 꺾기 대회가 열렸다. 또한 12월 18일, 도내 각처에서 열렸던 송악산군사기지철폐투쟁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대정국민학교운동장에서 '송악산다목적핵기지 결사반대 및 선거공약이행 촉구대회'가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989년 1월 21부터 24일까지 <재경제주학우회>가 주관하고 <제주문화운동협의회>와 <제주대학교싸클연합회>가 함께 한 '송악산군사기지철폐회와 주민주체결정권 쟁취를 위한 시민학생문화한마당'이 제주시민회관과 대정현지에서 펼쳐졌다. 1월 24일, 송악산 군사기지 완전철폐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지역주민대표, 학생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내 광양성당에서 있었다. <송악산군사기지결사반대 도민대책위>등 도내 6개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 주최측은 취지문을 통해 "송악산 군사기지는 미군기지가 아니다"는 미국의 반응과 '군기지를 축소조정하겠다.'는 정부당국 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각각 비난하고 "89년을 군사기지 완전철폐의 해로 선포,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민적 반대의지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6개 대책위는 공동성명서와 앞으로 활동계획을 통해 "전국적인 모든 민주단체와 반전반핵운동단체등과 연대,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만일 완전철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대통령 불신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도민대책위원회>는 반핵비디오 '그 날, 그 날 이후', '당신의 성천국 코리아' 등을 상영했다. 2월 22일, 6개 대책위 공동명의로 '철폐요구서'와 '청원서'를 청와대, 국방부, 국회에 공식 발송하고 3월 20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2월 27일 청년학생들은, '송악산군사기지 완전철폐와 노태우 선거공약불이행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시내 일원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27일 하오1시부터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있었다. 제주도내 4개대학 대책위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규탄문을 통해 "노정권은 송악산군사기지 설치계획에 대한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축소조정안을 발표하는 등 회유책동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전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미국은 그 어떤 간섭도 하지 말 것 △송악산군사기지 계획의 전면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3월 3일, 강영훈 국무총리, "군사보호구역으로

변경됐던 ‘송악산국민휴양지건설계획’을 원상복구하고 송악산군사기지를 전면 백지화 한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하오 강영훈총리가 공화당송악산기지 진상조사단에게 이날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이를 완전히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통보해옴으로써 밝혀졌다. 강총리는 이 회시에서 군사보호구역지정으로 변경됐던 송악산국민휴양지건설계획을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이 날짜로 현재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맡은 KDI(한국개발연구원)로 하여금,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도내 타지역에 대해 공군기지건설계획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안된 바도 없으며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강총리는 이날 제주도를 군대가 주둔치 않는 「평화의 도시」 선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월 8일 <도민대책위원회> 등 6개 대책위원회는 송악산군사기지 전면백지화에 따른 환영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송악산군사기지반대투쟁은 승리로 귀결되었다.

A6[관계 인물] 양영운, 모갑경, 임문철, 고창훈, 우영진, 허창욱, 양영수, 양영석

A7[관계 단체]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 송악산군사기지 설치 반대 제주대학교대책위원회,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 안덕면대책위원회, 송악산군사기지결사반대 도민대책위

A8[관계 자료]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1988 『제주의 소리』 (제8호: 11)(제주연합041)

“「송악산 시설」 반대결의 대회”, 『제주신문』 1988년 9월 27일자(제주연합042)

“군시설유치 반대 대정 대책위구성”, 『제주신문』 1988년 10월 3일자(제주연합043)

“군기지 설치반대 제대생 비상총회”, 『제주신문』 1988년 10월 12일자(제주연합044)

“도내 20개사회단체 주민 2천5백여명 반대위 결성”, 『제주신문』 1988년 10월 17일자(제주연합045)

“「송악산시설」 철회 관계기관에 진정”, 『제주신문』 1988년 10월 24일자(제주연합046)

“송악산기지설치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결성”, 『제주신문』 1988년 10월 31일자(제주연합047)

“「송악산」 시설반대 대책위원회 현판”, 『제주신문』 1988년 11월 5일자(제주연합048)

“송악산군사기지 철회”, 『제주신문』 1988년 11월 21일자(제주연합049)

“「군사기지철폐」등 결의”, 『제주신문』 1988년 11월 24일자(제주연합050)

“「송악산」 시설반대 쫓기”, 『제주신문』 1988년 12월 12일자(제주연합051)

“송악산기지반대 전국적 투쟁다짐”, 『제주신문』 1989년 1월 25일자(제주연합052)

“「송악산시설」 반대 공약불이행 규탄”, 『제주신문』 1989년 3월 1일자(제주연합053)

“당초대로 관광휴양지로 개발 제주를 「평화도시」 선포 검토”, 『제주신문』 1989년 3월 4일자(제주연합054)

“송악산대책위 성명”, 『제주신문』 1989년 3월 8일자(제주연합055)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1988 『제주의 소리』 (제8호: 11; 제9호: 3; 제10호: 3; 제11

호: 3)

편집부, 1989 「뉴스와 화제」 『월간제주』 (1월호: 10-12)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1989 『제주의 소리』 (제13호: 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이철규열사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1차 도민대회

회

A2[사건 일시] 1989.05.1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이철규열사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1차 도민대회」가 1989년 5월 18일 하오5시 학생·시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있었다. 제민협과 제총협이 공동주최한 이날 대회는 제1부 추모극·제문낭독·합동분향이 있었고, 제2부 계승대회에서는 이철규군 의문사 경과보고와 성명서채택 등이 있었다. 주최 측은 공동성명에서 “80년 5월 전두환·노태우 군사통치를 결사반대하고, 조국의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열망하며 온 국민과 함께 광주시민들은 항쟁했다”고 전제, “광주시민을 발포 진압토록 명령한 주범 처단, 진압작전을 허락한 미국의 공개사과 및 내정간섭중단, 공안합수부 즉각 해체, 이철규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날 하오 6시45분께부터 중앙로~남문로~광양로~민정당제주시지구당사 앞까지 평화대행진을 벌인 후 「독재자 노태우정권 퇴진요구」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를 벌이다 하오8시30분께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지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광주항쟁」 계승 1차 도민대회”, 『제주신문』 1989년 5월 19일자(제주연합05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이철규열사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3차 도민대회

회

A2[사건 일시] 1989.05.2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민협과 제총협은 1989년 5월 27일 하오7시 시민·학생 등 2백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탐동에서 「이철규군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3차 도민대회」를 가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민협·제총협 등 광주항쟁 계승대회”, 『제주신문』 1989년 5월 29일자(제주연합06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교조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

A2[사건 일시] 1989.08.1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도내 21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이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989년 8월 10일 하오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제주교대 학생회관에서 기습적으로 열렸다. 이날 <제주공대위>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현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행위는 참교육의 실현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로서 교육의 정상화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전제, "참교육실현은 비단 선생님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전국민이 함께 이루어야 할 역사적과제임을 통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홍보선전활동, 학부모와 학생의 조직적 역량결집, 전 제주도민과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전개 등 참교육사수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놀이패한라산의 노래극 "선생님 힘 내세요!" 공연도 가졌다. 이날 결성대회에서는 고창훈(제민협), 한석지(제대교수협의회), 김순희(제주여민회), 김학준(제청협), 김관후(학부모회준비위), 송시우(제대사범대학생회) 씨등 6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불법행위인 결성대회에 참가 할 경우 의법조치하겠다."는 제주경찰서장 명의의 경고문을 정문 앞에 내걸고 경찰병력 3백여 명을 동원,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관후 등 3명을 연행, 훈방했다.

A6[관계 인물] 고창훈(제민협), 한석지(제대교수협의회), 김순희(제주여민회), 김학준(제청협), 김관후(학부모회준비위), 송시우(제대사범대학생회)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전교조공동대책위 기습결성”, 『제주신문』 1989년 8월 11일자(제주연합061)

A9[관련 사건]

- A1[사건명] **전교조 사수 및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한 도민대회**
- A2[사건 일시] **1989.09.24**
- A3[사건 배경] ‘전교조탄압저지와 합법성쟁취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가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제주지역에서도 집회를 가졌다.
- A4[사건 전개과정]
- A5[사건 내용] ‘전교조탄압저지와 합법성쟁취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에 맞춰 제주지역에서는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지역공대위, 제주지역학부모회의 공동 주최로 탐동광장에서 ‘전교조 사수 및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한 도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집회예정 장소인 탐동은 물론이고 제주시내 주요지역에는 경찰병력이 대거 투입되어 도민대회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렸다. 이에 주최측과 시민학생들은 제주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와 홍보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19명의 시민과 학생이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시내에서의 집회가 불가능해지자 주최측은 대회장소를 제주교육대학으로 변경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과 학생들이 교육대학으로 속속 집결하였고 약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민대회를 강행했다. 제주교대에서 진행된 도민대회에서는 ‘전교조 탄압 등公安 통치에 대한 규탄’, ‘연행 시민학생석방’ 등의 구호와 성토가 이어졌다.
- A6[관계 인물]
- A7[관계 단체] 전교조제주지부, 전교조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제주지역학부모회의
- A8[관계 자료]
-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 『제주의 소리』 (10월호: 9)
- A9[관련 사건]

- A1[사건명] **민중생존권쟁취와公安통치분쇄를 위한 도민대회**
- A2[사건 일시] **1989.11.12**
- A3[사건 배경]
- A4[사건 전개과정]
- A5[사건 내용] 1989년 11월 12일 ‘민중생존권쟁취와公安통치분쇄를 위한 도민대회’가 2백50여명의 시민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교대에서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점상탄압중지’, "농축산물 수입개방 철폐", "전교조탄압 등 교육악법 철폐", "광주학살·5공비리 책임자처벌", 등을 촉구하는 한편 50만 도민단결로公安통치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탐동불법매립이역환수와 관련, 병문천 복개공사를 단독합의한 이군보 제주도지사를 규탄하며 지사퇴진 범도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날의 구호는 다음과 같다. 단독합의 배후조종 건설부는 각성하라! 단속없는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농민생존권 압살하는

수입개방 철회하라! 교육악법 철폐하여 전교조를 사수하자! 광주학살 5공비리 책임자를 처벌하라!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민중생존권쟁취와 공안통치분쇄를 위한 도민대회준비위원회 참가단체 : 제민협(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제주기청연합회), 제총협(제주대·제주교대·제주전문대·제주간호보건대 총학생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지역노점상연합회, 탐동불법개발 이익환수투쟁도민대책위원회, 대정읍농민회, 전교조제주공동대책위원회

A8[관계 자료]

“민중생존권 쟁취 재야단체등 결의”, 『제주신문』 1989년 11월 13일자(제주연합06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신문 폐업철회 촉구 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90.01.13

A3[사건 배경] 제주신문 언론민주화운동의 일환

A4[사건 전개과정]

1990.01.05. 제주신문사 폐업결정

1990.01.13. <제주신문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 ‘제주신문 폐업철회 촉구 도민대회’ 개최

A5[사건 내용] 1990년 1월 13일 하오3시, 제주신문폐업철회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제주도 민권기대회가 도내 각계인사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북교교정에서 열렸다. 매서운 겨울바람과 함께 간간이 눈발이 휘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참가도민들을 도민지인 제주신문은 한 사람에게 의해 결코 폐업시킬 수 없고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제주신문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회장 조문부 제주대교수)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종래 정치권행사나 이른바 관제행사를 제외한 민간단위행사로서는 최고인파인 도민 3천여 명이 모인 신기록을 남겼다. 이날 참가도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폐업이라는 폭거를 자행한 대주주들은 제주신문의 폐업신고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적자가 폐업의 진정한 이유라면 주식증자를 도민들에게 공모하거나 주식을 양도해 도민의 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 사직당국은 운전기도입의혹사건과 폐업에 대해 공정수사를 해 그 진상을 공개하고, 국회와 정부당국도 진상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 제주신문사태를 수습토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도민협 조문부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주신문경영진은 과거를 반성하고 법의 심판과 윤리적 판단에 따라 제주신문폐업신문을 철회하고 자율성에 바탕을 둔 제주신문을 존속시켜야 한다.”며 도민들 앞에 거듭나고자하는 제주신문사원들의 자세를 지지한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정열 제주도민협위원, 허종훈 90제주지역 총학생 협의회준비위원장, 권영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등이 제주신문폐업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또 김지훈 제주신문수호위원장과 홍훈기 제주신문노조위원장은 반드시 위장폐업을 철회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

A8[관계 자료]

“폐업폭거 즉각 철회‘ 쫓기”, 『제주신문』 1990년 1월 15일자(제주연합06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자당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제1차 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90.05.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0.05.07. 제민협, 전교조제주지부, 제총협 제주경찰서에 집회신고서 제출

1990.05.08. 제주경찰서 집회 불허 통고

1990.05.09. 집회 원천봉쇄.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 시위

A5[사건 내용] 1990년 5월 7일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지역총학생 회협의회는 9일 하오6시 제주시내 중앙로에서 「민자당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제1차 도민대회」를 갖기로 하고 제주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중앙로 현대약국 부근에서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2백명, 전교조제주지부 1백명, 제주지역대학총학생회협의회 5백명 등 8백명이 집회를 갖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서는 8일 하오, 집시법 5조1항, 12조1항에 의거, 폭력과 교통소통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불허한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제민협 등은 8일 제주시내에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민자당분쇄 주장과 함께 9일 하오6시를 기해 △일제히 경적 울리기 △손수건 흔들기 등 행동수칙을 전달하고,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8일 밤부터 철야농성을 하는 등 집회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또, 제주대학생들은 9일 각 단과대학별로 동맹휴업을 결의하기로 했다. 5월 9일 집회장소인 중앙로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자 하오6시20분께부터 제주시내 중앙로·동문로·남문로·광양로터리 일대에서 시민 학생 1천여 명이 「민자당 분쇄」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과 보도블록을 깨어 던지는 등 경찰에 맞서 치열한 심야시위를 벌였다. 저녁 8시께부터 남문로, 광양로터리부근으로 이동한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5백여 명의 전경대 병력을 동원, 시위대를 포위하고 최루탄과 페퍼포그를 쏘아 해산시켰다. 이어 시민과 학생들은 하오10시10분부터 다시 광양로터리를 점거, 「민자당분쇄

및 도민 기본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와 원천봉쇄 규탄대회」를 갖고 해산했다. 한편 일부 시위학생들이 밤 11시20분께 제주남문파출소를 습격 화염병 20여개를 던져 집기 등을 태웠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김상범군(제주대 식품공학3년) 장문선양(간전대방사선2년)등 4명을 연행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민중 기본권쟁취 결의대회”, 『제주신문』 1990년 5월 9일자(제주연합066)

“대학생등 재야단체 1천여명 어젯밤 격렬 시위”, 『제주신문』 1990년 5월 10일자(제주연합06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자당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제2차 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90.05.1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전교조제주지부·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는 5.18을 맞아 1990년 5월 18일 저녁 7시께 중앙로 및 탐동일대에서 ‘민자당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제2차도민 대회’를 개최하려했으나 5백여 명의 진압경찰의 원천봉쇄로 대회를 열지 못했다. 이에 시민학생들은 시내 곳곳에서 돌과 화염병을 경찰에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계속했다. 밤 9시께 시민학생들은 서문시장 앞으로 진출, 한때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시위대는 밤10시30분께 광양로터리에 집결,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격렬하게 맞서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광양로터리 도로를 점거하자 최루탄을 쏘아 또다시 해산시켰다. 그러나 밤11시10분께 다시 광양로터리에 재집결한 시위대는 진압경찰에 쫓기자 구제주일고 골목과 남문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김기완(제주대경제2), 한경수(제주대농대2), 이안천(23.고려속기학원생), 부윤신(제주대수학1), 장윤정(23), 김상철(26.무직), 김종훈(제주대생)씨 등 10여명을 연행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전교조제주지부·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5·18」 밤 격렬 시위”, 『제주신문』 1990년 5월 19일자(제주연합06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중생존압살 민자당분쇄 및 6월항쟁계승 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90.06.1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0년 6월 10일 하오7시 제주시 중앙로에서 예정된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전교조제주지부·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주관의 ‘민중생존압살 민자당분쇄 및 6월항쟁계승 도민대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되자 시내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산발시위로 번졌다. 시위대는 10일 하오 7시부터 제주시내동문로, 중앙로, 남문로 일대에서 시민학생 5백여 명이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과 보도블록을 깨어 던지는 등 진압경찰에 맞서 11일 새벽 1시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대학생과 시민22명을 연행했다. 10월 12일 제주지법 이인복 판사는 이 집회와 관련 연행된 김영난씨(제주보건대3)등 6명에 대해 선고유예로 석방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날 시위와 관련 화염병을 투척한 제주대 학생(제대영문2)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경찰서는 시위 중 연행된 제주대 학생 1명(제대 회계1)등 12명을 훈방 조치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6월항쟁계승 도민대회개최”, 『제주신문』 1990년 6월 10일자(제주연합069)

“「6월항쟁 계승」 산발 시위”, 『제주신문』 1990년 6월 12일자(제주연합070)

“6·10시위 관련 1명 영장 - 연행 19명중 18명 풀려나”, 『제주신문』 1990년 6월 13일자(제주연합07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투쟁**

A2[사건 일시] 1990.08.27 ~ 1992.03.27

A3[사건 배경] 그동안 정부가 계획하고 민간자본(주로 도외자본)이 투자해온 제주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 드러난 각종 인허가 조항 등의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 방지시킴으로써 민간자본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특정지구와 관광단지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제주도전역을 단일지역으로 통합해 대규모 단지화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정기도 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소식이 들려오자 도민들은 이 법을 그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을 잠식해 왔고, 도민생존의 기반을 침탈해 온 독점재벌을 위한 ‘특별한 법’이라 규정했다. 즉,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옥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본의 축수를 드리우는 본성을 지닌 독점재벌들이 반민중적 정권과

결탁하여,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를 자신들의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수탈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법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기도에 대항하여 제주도민들은 하나가 되어 범도민적 투쟁을 전개했다.

A4[사건 전개과정]

- 1989.00.00. 한국개발연구원(KDI)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특조법) 제정 제안
- 1990.03.08.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주도 종합개발의 기본방향」 중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특별법 제정방안 검토지시
- 1990.04.10. 국무총리실 「제주도 종합개발 추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함.
- 1990.04.23. 노태우대통령 제주도 순시. “특조법 제정을 검토” 지시.
- 1990.07.25. 특조법 제정을 위한 민자당 당정협의회 열림.
- 1990.08.08.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종합개발 지원위원회>에서 법제정 방향성 조정.
- 1990.08.27. 제민일보,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시안 최초 공개. 의원입법으로 1990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이 법안을 제주도와 관계당국은 이때까지 비공개로 추진. 7장 42개 조항으로 구성.
- 1990.08.30. 제주지역출신 국회의원 3명(강보성, 고세진, 이기빈) 서울에서 회동, 공조체제 다짐. 8.31 제주도 특조법 수정·보완, 건설부 및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시안을 만든 뒤 9월 11일 도민공청회에 부의할 계획 밝힘.
- 1990.09.01. 평화민주당 제주도지부, 특조법시안과 관련 '전면철회' 성명 발표.
- 1990.09.03. 제주도, 특조법 시안 확정 정부에 제출. 당초 시안보다 다소 늘어난 7장 45조 부칙 2조로 구성. 부칙 2조에 경과조치 규정 새로이 마련. / 고세진 의원 기자회견. “특조법은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통과는 문제없을 것”이라는 입장 밝힘.
- 1990.09.04. 건설부, 특조법시안을 국무총리실·재무부 등에 제출. /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특조법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제주도내 12개 농민단체, “법제정 유보” 촉구 성명발표. /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제민협) 등 제주도내 9개 단체 “법안 폐기” 요구 성명발표.
- 1990.09.05. 제주출신 국회의원, 도민공청회 주최.
- 1990.09.06. 건설부, 특조법 시안 전문 공개. / 홍영기 제주도지사 “특조법 국회 상정·통과 방침” 밝힘.
- 1990.09.10. 제민협,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제총협), 흥사단제주도지부 등 각계 사회단체 등 특조법 반대 성명 확산. / 홍영기 도지사 기자간담회. ‘농어민에 대한 대책, 외지자본의 참여, 개발이익환수, 도민의 참여 방안 등 문제부분을 민의수렴·보완 뜻’ 밝힘.
- 1990.09.11. 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 도민공청회 개최.

- 1990.09.12. 제주지역 9개 사회단체, '특조법 공청회에 대한 성명' 발표.
- 1990.09.13. 평민당 제주도지부, 특조법 저지 성명 발표.
- 1990.09.14. 강보성 국회의원, 특조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제주도, 대주민홍보 강화 및 의원입법추진으로 방향 급선회.
- 1990.10.08. 민자당 정책회의에 「특조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보고서」 제출.
- 1990.10.12. 전국구 김두윤의원(공화당) 기자간담회. 기존의 유보 입장에서 '법제정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힘. / 제주출신 국회의원 4명 회동.
- 1990.11.16. 제민협 등 제주도내 12개 단체, <특조법 및 UR협상저지 범도민운동본부 결성을 위한 대책위원회>(특조법 및 UR 대책위) 결성식 갖고 정부·여당에 공개 질의.
- 1990.11.23. 제주출신 국회의원 4명 '특조법 시안 백지화' 발표.
- 1990.12.19. 제주출신 4명의 국회의원 연명으로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조공문을 도내 각계에 발송.
- 1991.02.12. 제주출신 4명의 국회의원 주도하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특조법협의회) 발족 및 1차 회의.
- 1991.02.13. <특조법 및 UR 대책위>, <특조법협의회>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
- 1991.03.12.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 2차 모임 / 위원 3명 <특조법협의회>탈퇴.
- 1991.03.18. 노태우대통령 제주도청 업무보고, "조속한 입법조치" 지시.
- 1991.03.19. 홍영기 제주도지사 기자간담회.
- 1991.03.30. 제주도, 법안명칭을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개정 검토. / 제주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특조법 제정에 대한 도민의견 접수창구 마련.
- 1991.04.03. 도지사 기자회견. 의원입법 추진에 도행정 참여 천명. / 제주도가 주도한 반상회 의견수렴 결과 보도
- 1991.04.06. <특조법협의회>, 특조법시안 마련을 위한 법안 기초소위원회(특조법기초소위) 구성기로 협의. 12명 기초위원 위촉.
- 1991.04.08. <특조법기초소위> 위원 2명 탈퇴선언.
- 1991.04.27. <특조법기초소위>, 5월 13일까지 특조법 시안 확정기로 함.
- 1991.04.29. 제주시의회 의원 간담회.
- 1991.04.30. 북제주군의회 의원 간담회. / 제주도 3월 30일부터 시작한 도민의견 접수결과 164건 접수.
- 1991.05.02. <특조법기초소위>, 특조법 목적 조항 수정('세계적 관광지 조성'에서 '1차산업 보호 및 향토 문화전승·보전' 등으로)
- 1991.05.09. <특조법기초소위> 홍보책자 배부. 법의 기본방향·성격·기능 등을 내용으로 시도읍면동사무소, 시군의회 등에 배포.
- 1991.05.20. <특조법기초소위> 시안 공개. 총 8장 52조 부칙 1조로 구성(문제됐던 도민재산권 침해, 1차산업 보호육성 등 독소조항 여전)

- 1991.05.22. <특조법 및 UR 대책위>, ‘특별법 결사반대! 특별법 제정 지시한 노태우 퇴진!’ 성명 발표.
- 1991.05.24.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토론회’ 개최.
- 1991.05.24-25. <특조법기초소위>, 법안 일부 수정(개인사업자의 토지수용조항 폐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특례규정 삭제, 법제정 목적상의 지역산업과 자원 등의 보호육성을 농수축산업과 자원 등의 보호육성으로 변경 등)
- 1991.05.30. <특별법협의회>, 토지수용 조항 삭제.
- 1991.06.05. 제주도, 도민공청회 개최. 초청장을 발부한 302명만 입장 허용, 법제정에 반대하는 교수·재야·농어민 단체 등 초청대상에서 제외.
- 1991.06.07.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결성. 이 조직 산하에 ‘특별법 저지 대책회의’ 구성. ‘특별법 저지를 위한 5만인 서명운동’ 돌입 발표.
- 1991.06.08. <특별법협의회>, 5월 20일 초안 완성 이후 7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특별법 시안 최종확정(총 8장 52조 부칙 2조로 구성)
- 1991.06.10. <특별법기초소위> 긴급회의. 최종시안의 50조 2항(토지매수 불응시 2년 이하 징역), 21조 3항(개발지구안의 토지거래에 관한 처벌 규정) 등 독소조항 뒤늦게 삭제. /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특별법 입법 중단 촉구성명.
- 1991.06.20. 광역의원 선거.
- 1991.06.22.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기자회견. ‘5만인 서명운동’ 중간보고. / ‘특별법 저지를 위한 제주도민 걷기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
- 1991.06.26. 제주도 주관 ‘특별법 도민 토론회’ 개최.
- 1991.06.27.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특별법에 대한 도민공개토론회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성명 발표.
- 1991.06.28. 홍영기 제주도지사 ‘제주도개발특별법 관계기관대책회의’ 참석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추진현황 보고서」 제출.
- 1991.06.29. 제총협 소속 대학생 300여 명 특별법 반대 시위.
- 1991.06.30.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도민공개토론회에 대한 도지사의 왜곡보고서 제출을 규탄하며’ 성명 발표
- 1991.07.01. <제주도농민회>,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북촌리 골프장 대책위원회> 등 ‘특별법 제정반대 공동성명서’ 서명운동 추진합의.
- 1991.07.02. 공동성명서 추진 1차 준비소위 회의
- 1991.07.08. 공동성명서 추진 2차 준비소위 회의
- 1991.07.09.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특별법저지대책위원회> 특별법 자료집 『개발바람 오름 넘어-올바른 제주개발을 위하

여』 발간

- 1991.07.2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공동성명서」 각계인사 624명 연명으로 기자회견 및 도내 일간지 광고 게재
- 1991.07.26.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법제정 유보입장 밝힘.
- 1991.07.29. <반도민적 제주도개발특별법 입법저지를 위한 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 1991.07.31.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제주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기로 함.
- 1991.08.01. 노태우대통령, 도지사에게 특별법 대민홍보 지시.
- 1991.08.03. 특별법 소식지 「개발코지」 발간
- 1991.08.05.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결성.
- 1991.08.06.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제주도개발특별법 공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 발표. / 제주도의회 무소속 8명 법제정 반대 입장 정리.
- 1991.08.07.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제주도개발특별법 공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도내 일간지 광고.
- 1991.08.08. 제주출신 국회의원 주관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도민공청회’ 열림. 파행 운영.
- 1991.08.13.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8월 8일 제주도개발특별법 도민공청회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 발표.
- 1991.08.16. 민자당 나웅배 정책위원장, 대통령에게 “의원입법 정기국회 통과방침” 보고.
- 1991.08.19.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민자당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강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발표.
- 1991.08.20.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민자당 제주도지부 항의 방문.
- 1991.08.23. 민자당,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정회의 /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제주도개발특별법 강행방침 철회를 위한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 1991.08.24. 제주도의회 이영길의원, 제주도개발특별법 관련 도민 여론조사 실시.
- 1991.08.25.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한림읍 대책회의> 결성.
- 1991.08.26. 우근민도지사 특별법 연내 상정 방침 밝힘. /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도지사 방문 / ‘특별법 제정반대 10만인 서명운동 출정식’ 및 가두 서명운동 돌입.
- 1991.08.29.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당국, 특별법 법안 일부 수정(21조 3항, 22조 2항, 23조, 부칙 2조 삭제, 23개 조항은 수정보완)
- 1991.08.30.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제주도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즉각 실시하라!’ 성명 발표.
- 1991.08.31.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제주도의회 무소속동우회장 면담. 9월 4일까지 무소속동우회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
- 1991.09.02.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제주도의회 의장 면담. 특별법에 대한 도의회의 올

바른 입장표명 요구.

- 1991.09.04. 제주대학생 600여 명, 특별법 제정 반대시위.
- 1991.09.07.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범도민회) 결성대회.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특별법 제정 중단 촉구 성명 발표.
- 1991.09.11.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대정읍 대책회의 준비위원회> 결성.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회 개최.
- 1991.09.13.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조천읍 대책회의> 결성,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회 개최.
- 1991.09.1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안덕면 대책회의 준비위원회> 결성. / 제주대학생 300여 명 특별법 반대시위.
- 1991.09.15.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한경면 대책회의 준비위원회> 결성.
- 1991.09.15-16. <범도민회> 초청강연 개최
- 1991.09.16. 제주도의회 특별법 임시회의
- 1991.09.16-17. 특별법 제정반대 연합문예공연 “새날을 향하여” 공연.
- 1991.09.17. <범도민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제1차 범도민 쫓기대회 선포’ 기자회견. / 제총협, ‘특별법 제정 강행하는 노태우정권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2학기 제총협 투쟁선포식’ 개최.
- 1991.09.18. <범도민회> 공동대표 이재후 씨 구속. / <범도민회>, ‘특별법 저지투쟁을 탄압하는 폭력경찰을 규탄한다’ 성명 발표.
- 1991.09.19. <범도민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제1차 범도민 쫓기대회’ 개최.
- 1991.09.2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안덕면 대책회의> 결성. / <성산읍 대책회의 준비모임>, 특별법 반대 설명회 개최.
- 1991.09.27. <범도민회>, ‘9월 25일 반상회 때 도지사가 만들어 뿌린 제주도개발특별악법 찬양홍보물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제하의 성명 발표.
- 1991.10.03.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서귀포 대책회의> 결성 / 제주도개발특별법 정부안 공개(제민일보 보도)
- 1991.10.07. 제주도개발특별법 민자당안 공개(제민일보 보도)
- 1991.10.19.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한림읍 대책회의> 결성 보고대회
- 1991.10.21. ‘특별법에 대한 민자당 당정회의’ 열림
- 1991.10.22. ‘제주도개발특별악법 제정반대 제2차 범도민 쫓기대회’ 개최.
- 1991.10.28-29. 민주당 현지조사단 구성 및 현지조사.
- 1991.11.02-07. <범도민회>, 제2차 상경투쟁. 서울공대위 주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서울지역 쫓기대회’ 열림.
- 1991.11.04. 김대중 민주당 대표, ‘특별법 저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발표.
- 1991.11.07. 양용찬(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회원) 열사 ‘특별법 제정반대, 민자당 타도’ 유서 남기고 분신. / <범도민회>, <고 양용찬열사 분신 비상대책회의> 구성.

- 1991.11.08. <범도민회>, ‘고 양용찬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명 발표. / <비상대책회의> 해소, <특별법 반대 고 양용찬열사 장례위원회> 구성 / 전민련, 전농, 민자통, 공추련 등 7개 단체 “특별법 즉각 철회” 성명 발표. 민중당 성명 발표 / 민주당 조문단 급파.
- 1991.11.08-09.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열사추모 가두투쟁 전개.
- 1991.11.11. 양용찬 열사 장례식 / ‘특별법 반대 고 양용찬열사 추모대회’ 개최.
- 1991.11.15. ‘특별법 저지를 위한 범도민회 공동대표 단식농성’ 돌입. / 민주당 제주도지부, 특별법제정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문태무) 구성.
- 1991.11.17. ‘특별법 제정반대 부산지역 꺾기대회’ 열림.
- 1991.11.18. ‘특별법 제정 강행 민자당정권과 우근민지사 규탄’ 기자회견.
- 1991.11.19. 한림읍 지역 특별법 반대 시위 전개.
- 1991.11.20. ‘특별악법 제정반대 제3차 범도민꺾기대회 및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대회’ 개최.
- 1991.11.21. 민자당 특별법안 국회에 접수(의안번호 1421호)
- 1991.11.24.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한 서울지역 제2차 꺾기대회’ 서울 탑골공원에서 개최.
- 1991.11.26. <범도민회> 기자회견 / 재경 제주출신 각계 인사 238명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한 재경 제주도민의 입장’ 성명발표. / 국회 건설위원회 특별법안 날치기 통과.
- 1991.11.27. <범도민회>, “민자당정권 규탄” 성명발표. 제2차 상경투쟁에 돌입. /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특별법제정 강행하는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청년학생 제1차 실천대회’ 개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준)·전민련·전민련·전농 등 “특별법 날치기통과 무효” 성명발표.
- 1991.11.28. <범도민회>, 민자당 제주도지부 앞 항의시위 전개. / 제주대학생, ‘특별법제정 강행 노태우정권 타도와 연행학생 구출을 위한 청년 아라 진군대회’ 개최. / 서귀포대책회의, ‘특별법 날치기 통과 규탄 서귀포 지역 결의대회’ 개최.
- 1991.11.29. ‘특별악법 폐기를 위한 조천지역 실천대회’ 개최.
- 1991.11.30. <범도민회>, ‘특별악법 날치기 통과 규탄, 민자당 타도 범도민대회’ 개최.
- 1991.12.01. ‘특별악법 날치기통과 규탄 민자당 타도 대정읍 결의대회’ 개최.
- 1991.12.03. <범도민회>, ‘13대 국회에 보내는 범도민회의 긴급제안서’ 제출. 유인물 배포.
- 1991.12.05. 제주지역청년단체대표자회의, ‘제주지역청년꺾기대회’ 개최.
- 1991.12.06-07. 제총협 소속 학생들 제주시내 가두투쟁 전개.
- 1991.12.09. 서울공대위·경기공대위, ‘제주도개발특별법 날치기통과 규탄 및 특별악법 분쇄 결의대회’ 개최. / <성산읍대책위>, ‘특별악법 날치기통과 규탄 성산읍민대회’ 개최.

- 1991.12.10. 특별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범도민회 3차 상경투쟁 돌입.
- 1991.12.14. 범도민회 상경투쟁단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 <범도민회>, ‘특별법규탄대회’ 개최 후 대표단 12명 단식농성 돌입.
- 1991.12.17. 범도민회 · 서울지역공대위 · 경기지역공대위 소속 인사들 서울 여의도에서 ‘특별법 제정반대 및 법안 날치기통과 규탄 결의대회’ 개최.
- 1991.12.18. 제주도개발특별법 국회 본회의 민자당 단독 변칙처리.
- 1991.12.19. <범도민회>, 날치기통과 비난 성명. 제14대 총선서 심판결의 / 제총협 학생들, 날치기 특별법무효 주장하며 격렬 시위. 민자당북제주지구당사 화염병 피습.
- 1991.12.23. 민주당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특별대책위원장 박영숙 등 민주당의원 제주 방문, 민주당의 특별법 제정 저지를 위한 국회활동 보고회 및 범도민회와의 간담회 마련.
- 1991.12.25. <범도민회>, 제주교대 체육관 앞 광장에서 ‘양용찬열사 49재 추모대회’ 개최.
- 1991.12.27. 범도민회 대표자, 집행위, 실무자연석회의. ‘범도민회 추대 범민주단일후보’를 내세워 민자당 심판결의
- 1992.01.06. ‘범도민회 총선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민주당과의 상경교섭단(단장 모갑경 외 2인) 파견.
- 1992.02.01. 14대 총선투쟁에 따른 범도민회 기자회견
- 1992.02.13.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의 조직명칭을 <제주도개발특별법 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로 개칭
- 1992.02.14. ‘범도민회 추대 범민주단일후보’ 추대 결정. 강영지(범도민회 공동대표 겸 대변인) 선생 추대.
- 1992.03.07. 범도민회 후보 사퇴에 따른 기자회견

A5[사건 내용] 제주도를 개발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 외지인의 토지투기가 더해지면서 제주도민은 점점 소외되고 관광단지로 탈바꿈한 지역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중앙권력·재벌과 제주도민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보고서를 통해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특조법) 제정을 제안했다. 1990년 3월에서 4월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특별법 제정방안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무총리실 「제주도 종합개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홍영기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종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급기야 4월 23일 제주도 연두순시 자리에서 노태우대통령은 “도지사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제주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조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조법 제정을 위한 민자당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등 밀실에서 준비되던 이 법안은 제주도내 일간지 『제민일보』가 8월 27일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시안을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제주도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연내 통과하겠다

는 추진세력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민자당과 행정당국 등 추진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제주도내 민주단체 및 농민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제주출신 민자당 국회의원들은 도민공청회를 추진했고 9월 3일 제주도는 특조법 시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제주도내 12개 농민단체는 “특조법시안은 관광 위주의 개발이며, 외발적 투기촉진을 조장한다.”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제정 유보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제민협) 등 제주도내 9개 단체도 “특조법은 재벌에게 특혜를 부여할 뿐 도민을 위한 법이 아니므로 법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 평화민주당 제주도지부도 ‘전면철회’ 성명을 발표했고,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도 「특조법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률의 형평성 위배, 입법과정의 비공개, 상향식 개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제정 유보 또는 폐기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9월 5일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도민공청회’가 있었으나 토론자들 대부분은 ‘입법추진의 비공개성’, ‘관광위주의 개발’, ‘도민생존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9월 6일 이번에는 건설부에서 7장 31조 부칙으로 구성된 특조법 시안을 마련해 전문을 공개했다. 이를 9월 11일 도민공청회에 부의키로 했다. 홍영기 제주도지사는 “특조법은 지역개발에 이익을 주는 법이므로 반드시 국회에 상정·통과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추진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에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제총협), 흥사단제주도지부 등 각계 사회단체에서 특조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대 성명이 확산됐다. 하지만 도지사와 민자당 의원 등은 제정을 추진했고 9월 11일 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도민공청회가 개최됐다. 토론자들 대부분은 철회 혹은 전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구성 이후로 법제정을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1천 5백여 명이 참석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심지어 정보경찰을 장내에 투입하여 부하 경찰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놈들 잘 봐두라”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아무튼 이날의 공청회는 9시간 동안 열기 속에 진행됐다. 다음 날인 9월 12일 제민협 등 9개 사회단체는 ‘특조법 공청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력 동원 작태 규탄, 경찰의 장내배치 등 물리력 행사”를 비난했다. 9월 13일, 평민당 제주도지부도 ‘특조법 저지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주민 소외시킬 과잉개발, 정경유착의 특조법을 철회하고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법제정을 유보할 것” 등을 주장했다. 9월 14일 민자당 강보성 국회의원은 특조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88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찬성 34%, 반대 57%로 나타났고 폐기 주장도 26%로 나타나는 등 도민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5일과 11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대주민홍보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법 시안에 대한 수정보완과 국회의원들의 입법추진 주도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10월 8일 민자당 정책회의에서는 「특조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제주도

민의 개발참여 배제, 토지수용 등” 독소조항이 많은 기존의 건설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파문 일으켰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민자당이 법제정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제주도안」은 사실상 들러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월 12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4명은 회동을 갖고 “새롭고 통일된 시안을 만들어 각계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제주지역 민주단체 등 사회단체도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렀다. 11월 16일 제민협 등 12개 단체는 <특조법 및 UR협상저지 범도민운동본부 결성을 위한 대책위원회>(특조법 및 UR 대책위) 결성식 갖고 정부·여당에 공개 질의했다. 그 내용은 “도민이 반대하는 특조법 강행의도, 대통령 지시사항과 특조법 제주도시안·건설부안이 이와 다른 이유, 국토개발연구원이 특조법 제정을 추진하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이유’ 등 6개 항이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는 19일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조법 제정을 두고 도민사회의 여론이 진정되지 않자, 11월 23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4명은 급기야 ‘특조법 시안 백지화’ 방침을 발표했다. 즉, 제주도안, 건설부안, 의원보좌관 시안 등 모든 시안을 백지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8월 27일 『제민일보』에 시안이 공개된 후 3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연내 국회통과’라는 추진세력의 의도는 무산됐다. 하지만 그들의 특별법 제정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었다. 제주출신 4명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특조법협의기구(가칭)를 조직, 통일안을 작성하여 도민에게 공개·열람·여론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고, 그 후에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이들 제주출신 4명의 국회의원 연명으로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조공문을 도내 각계에 발송했다. 1991년 들어서도 특별법 문제는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었다. 1991년 2월 12일, 제주출신 4명의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특조법협의회) 발족 및 1차 회의가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위촉한 위원들은 학계 2인, 언론계 2인, 법조계 1인, 종교계 2인, 행정자문위 5인, 농수축산업 5인, 관광업 1인, 환경문화 1인, 여성계 1인 등이었다. 그러나 이날 위원들의 자격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2월 13일 <특조법 및 UR 대책위>는 <특조법협의회>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협의회는 국회의원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대표성 없는 기구이며, 제주도민 압살하는 특조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3월 12일, <특조법협의회> 2차 모임에서 위원에 선임된 고창훈(재야·제주대교수), 이용길(학계·제주전문대교수), 김순두(언론계·제주MBC심의위원) 등이 “협의회의 대표성 결여, 협의회의 성격, 지방의회 구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설득력 없음”을 들어 <특조법협의회>를 탈퇴해버렸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3월 18일 노태우대통령은 제주도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지사는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입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서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홍영기 제주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태우대통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지시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법 초안은 국회의원과 행정기

관, 협의회 등 모든 기관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특조법 제정에 대한 도민의견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이즈음에 법안명칭을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개정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4월 3일, 도지사는 또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법협의회>와 법 시안을 공동제정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의원입법 추진에 제주도도 참여할 뜻을 천명했다. 한편 제주도가 주도한 반상회 의견수렴 결과가 밝혀졌는데 ‘도민의견 수렴 후 제정’ 141건, ‘광역의회 구성 후로 유보’ 76건으로 나타났다. 월 6일, <특조법협의회>는 <특조법 시안 마련을 위한 법안 기초소위원회>(특조법기초소위)을 구성기로 협의하고 12명의 기초위원을 위촉했다. 하지만 4월 8일, <특조법기초소위> 위원으로 임명된 제주대 고창훈, 윤양수 교수가 탈퇴를 선언하는 등 도민공감대 형성은 요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법기초소위>는 5월 13일까지 특조법 시안을 확정기로 하고, 강보성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조법협의회>에서 시안 마련 후 국회상정할 뜻을 밝히는 등 도민의견과는 다른 길로 나아갔다. 런 가운데 도시군의의회에서도 속속 법제정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특조법기초소위>는 특조법 시안 중 몇몇 조항을 수정하고 5월 20일 시안을 공개했다. 총 8장 52조 부칙 1조로 구성된 이 시안에는 그동안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도민재산권 침해, 1차산업 보호육성 방안부재 등 독소조항이 여전했다. <특조법 및 UR 대책위>는 즉각 ‘특별법 결사 반대! 특별법 제정 지시한 노태우 퇴진!’ 등의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20일 공개된 시안에 대해 도민의 개발참여와 1차 산업에 대한 대책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 법제정의 중단 및 대폭 수정” 입장이 표명되기도 했다. <특조법기초소위>는 몇 차례 회의를 더 갖고 6월 8일, 총 8장 52조 부칙 2조로 구성된 특별법 시안을 최종확정했다. 5월 20일 초안이 완성된 이후 7차례 수정정보안을 거쳐 최종 시안을 확정했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6월 7일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가 결성되고 이 조직산하에 ‘특별법 저지 대책회의’를 구성해 ‘특별법 저지를 위한 5만인 서명운동’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6월 10일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는 특별법 입법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11일 제주대학교총학생회는 하오2시부터 2시간동안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6·10항쟁계승과 특별법저지 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아라 진군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하오4시께 특별법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주대교수아파트입구 서쪽 20m지점까지 진출, 대치중인 경찰에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가스차를 동원하는 등 한시간여동안 공방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학생이 다치기도 했다. 또, 광역의원선거 유세장에서도 투쟁은 계속됐다. 6월15일 제주시 제7선거구 합동유세가 열린 노형국교에서는 유세시작 전부터 30여명의 학생들이 “특별법제정 온몸으로 거부한다!”, “노형주민 하나 되어 특별법제정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세중에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한편 6월 20일 치러진 광역의원 선거에서 ‘특별법제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가 과반수 당선됨으로써 특별법 제정반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되기도 했다. 6월 22일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갖고 “5만인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16,200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도민의 여론에 어긋나게 도 당국에서 계속 특별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대중집회와 시위 농성 상경투쟁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앞으로 있을 공청회와 7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자회견 후 3백여 명의 시민학생은 6월22일 하오5시40분께 남문로~탑동까지 「50만 도민 총단결로 특별법을 막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걷기대회를 시도했다. 경찰은 1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 이들을 막아섰다가 결국 걷기대회를 허용했다. 6월 26일, 제주도가 주관한 ‘특별법 도민토론회’가 개최됐다. 1천여 명이 참석하여 8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회가 이러졌는데, 토론자들은 ‘1차 산업 대책, 자연환경보전, 지하수개발규제, 개발이익환수 확대, 지역주민 이주 대책, 도민참여방안’ 등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철회와 유보 입장을 많이 밝혔다. 토론 중에는 ‘민선지사 선출 후 논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공무원이 대거 동원되어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에 <제주지역 대책회의>는 ‘특별법에 대한 도민공개토론회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제주사회는 긴장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다. 6월 28일, 홍영기 제주도지사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추진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토론회 참석자 1천 명 중 반대는 1백 명뿐임, 일부 언론이 재야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있음” 등의 왜곡보고를 해 도민사회에 충격과 함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음날엔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 3백여 명이 「특별법 저지와 민족민주운동탄압분쇄 및 노태우방미 규탄을 위한 1만2천 청년학도 결의대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50만 도민이 반대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반도민적 악법이므로 특별법 5적 체포투쟁, 국회상경투쟁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제정음모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하오6시 중앙로에서 실천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시내곳곳으로 옮기며 산발적으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자정까지 계속됐고 시위과정에서 하오6시20분께 민자당 북제주지구당 사무실에 돌과 화염병 피습을 받기도 했다. 또, 이날 <제주지역 대책회의>는 ‘도민공개토론회에 대한 도지사의 왜곡보고서 제출을 규탄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도지사를 규탄했다.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제주도 당국과 중앙정부의 여론 조작 음모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7월 1일, <제주도농민회>,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북촌리 골프장 대책위원회> 등의 공동대표와 학계, 종교계 등 뜻있는 인사 20여 명이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반대 공동성명서’의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여 15명의 준비소위를 구성했다. 추진강행세력의 의도가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시급히 반대세력의 의지를 밝히고 그 세를 과시

해야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7월 22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공동성명서」가 각계인사 624명의 연명으로 기자회견 통해 밝히고 도내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각계인사 624명은 학계 36명, 종교계 19명, 언론계 193명, 의료계 14명, 문화계 21명, 노동계 60명, 여성계 8명, 교육계 18명, 재경 18명, 청년학생 6명, 농민단체 14명, 민주단체 11명, 관광업 4명, 정당 및 지방의원 16명, 서귀포시 15명, 북제주군 100명, 남제주군 8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 성명서를 통해 “도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입법추진을 강행한다면 상경투쟁 등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대처하겠다. 여론을 왜곡하는 도지사나 국회의원에게 도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도민 모두가 악법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재벌들에게 유익하고 1차산업 보호육성을 외면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법제정 유보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반도민적 제주도개발특별법 입법저지를 위한 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도 “민선도지사 선출 이후 도민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한 움직임이 드높아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정부와 민자당은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했고, 8월 1일 노태우대통령은 우근민 도지사에게 “천혜의 조건을 갖춘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수준 높게 발전시키라”는 당부와 함께 “특별법 대민 홍보”를 지시하는 등 제정의도를 더욱 노골화했다. 제주도내 민주단체 및 사회단체, 농민단체 그리고 각계인사 등은 8월 5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대표 19인을 선임했다.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조직사업과 홍보사업에 돌입했다. 8월 6일 제주도의회 무소속 8명도 법제정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8월 8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주관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도민공청회’가 열렸으나 사복경찰 투입, 공무원동원 등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범도민회 준비위원회>는 공청회 현장에서 ‘8월 8일 공청회 무산 선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 퇴장해버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청석 발언자 42명 중 단 4명만이 찬성발언을 하였고, 나머지 38명은 특별법의 독소조항과 관주도의 제정절차를 지적하면서 반대의사를 천명했다. 아무튼 도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커져갔다. 8월 16일, 민자당 나웅배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대표단 20여명은 8월20일 상오 민자당의 특별법제정 강행방침과 관련, 민자당제주도지부를 사전연락 후 방문했으나 강보성도지부장이 아무런 해명 없이 자리를 비우자 성명을 통해 “오늘 민자당 도지부의 처사는 반도민적 행위로 단정되므로 앞으로 강지부장의 대도민 자세에 일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준비위는 민자당제주도지부 앞으로 서한을 전달, 지금까지 특별법과 관련, 중앙당에 올린 각종 보고서와 의견서를 도민들에게 몇몇이 공개하고 제주출신 세 국회의원은 의원입법 할 때 「제주도개발특별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8월22일까지 공식표명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 “특별법은 자본과 토지가 열악한 제주도민에게는 제주도

땅을 대부분 차지한 특정재벌들이 돈벌이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적장치이다. △특별법 정기국회 제정방침 철회 △제주출신 민자당 국회의원 사퇴 등을 주장했다. 나웅배 민자당 정책위원장 주재로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정회의가 열리는 등 추진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이에 8월 23일, <범도민회 준비위원회>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강행방침 철회를 위한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범도민회 결성, 범도민 궐기대회” 등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또 8월 25일, 읍면 지역 대책회의로는 처음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한림읍 대책회의>가 결성되어 조직 확대를 꾀했다. 8월 26일에는 우근민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연내 상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범도민회 준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반대 10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을 중앙성당에서 갖고 가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9월 4일 제주대학생 6백여 명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를 위한 청년학생투쟁위원회」를 발족, 특별법 저지투쟁에 주력키로 결의했다. 발족식을 마친 학생들은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입구 5·16도로를 점거 “특별법 제정을 강요하는 민자당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와 같이 특별법 제정반대 운동은 각계로 확산되면서 9월 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범도민회) 결성대회에 이르게 된다. 이날 결성대회는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교대 체육관에서 열렸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은 특별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도민회 결성을 기점으로 대정읍, 조천읍, 안덕면, 한경면, 성산면, 서귀포 등 제주도내 읍면 대책위원회가 속속 결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등 학내외 문예단체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14개 문예단체 80여 명이 출연한 연합문예공연 “새날을 향하여”가 1,500여 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루면서 특별법 제정반대의 기치를 드높였다. 또, 9월 17일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는 하오2시 「특별법제정 강행저지를 위한 2학기 구국투쟁선포식」을 갖고 5백여 명이 하오4시께부터 제주교대 정문에서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려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학생들은 “제주도민 다죽이는 특별법을 파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리 준비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2시간 동안 경찰과 맞섰다. 이날 시위과정에서 학생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향했고, 학생들은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며 교대본관으로 들어가 농성을 했다. 한편 이날 경찰진입과 관련 제주교대 성주현 교무처장 등 교수 15명은 9월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교내진압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괴기물의 변상과 책임자문책 등을 요구했다. 반대 열기가 확산되면서 이를 억제하려는 공안당국의 움직임도 가시화됐는데 9월 18일, <범도민회> 공동대표이자 <북촌리 신성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대표인 이재후 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9월 19일, <범도민회>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제1차 범도민 궐기대회’를 탐동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의 집회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인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궐기대회 후 중앙로에서 광양로터리까지 평화대행진을 하는 동안 연도의 많은 시민들이 박수와 연호로 호응하는

등 제주도민의 특별법 제정반대의지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민자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더니 10월 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시안이 제민일보 보도로 공개됐다. 그리고 당정회의를 열고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반대움직임은 더욱 확산됐다. 천주교제주교구사제단은 10월 21일 「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제주교구사제단은 21일 광양성당 고승헌 신부를 비롯한 9명의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초청강연회 개최, 반대서명운동 확산 등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수시로 사제단회의를 거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아직 특별법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있으나, 현재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시간·절차상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행정당국이 공청회, 여론조사 등에서 명백히 나타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하고 법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특별법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 “개발이익도민 환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 농어민 생활개선방안, 지하수 오염 등 자연계 파괴 방지대책” 등을 분명히 제시한 뒤 도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범도민대회를 앞두고 제주도 등이 지역주민의 참여 방지를 위해 읍면에 동향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특히 일부 읍면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녀가 범도민대회에 참여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일선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10월 19일 도내 읍면에 따르면 제주도와 군 등 상급기관은 22일 제2차 범도민대회를 여는 것과 관련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부락별 참가예상자, 농민·학생 등 참가자 유형, 특별법반대 서명자 현황, 관내 대학생들의 벽보부착행위 등의 동태” 등 도민대회 개최와 관련된 지역동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특히 남제주군의 경우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자녀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설득하게 하는 한편 자녀들이 도민대회에 참가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도 감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읍면지역 공무원들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상명하달식 행정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주행정체제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범도민회>는 10월 22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제2차 범도민 쫓기대회」를 개최하며 반대투쟁 의지를 다졌다. 하오4시 제주시 탐동매립지광장에서 2천여 명이 운집한 이날 대회에는 10월 21일 정부와 민자당이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민자당안을 최종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법제정여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이날 쫓기대회에서 대회참석자들은 “2차 쫓기대회일로부터 특별법제정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결사투쟁 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또 대회참석자들은 이 같은 원칙하에 내달 2일 <특별법 제정반대 서울지역대책위>와 함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서울지역 쫓기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대대적인 상경투쟁, 제3차 범도민쫓기대회 개최, 민자당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모두 3부에 걸쳐 진행됐는데 1부는 1차 궐기대회이후의 경과보고, 특별악법 제정을 강행하는 민자당 규탄성명서 낭독, 평화대행진 출정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 이어 하오5시30분께 대회참석자들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극기, 범도민회기, 지역단체기와 50여개의 플래카드 깃발을 앞세우고 평화대행진을 시작했다. 대회장에서 중앙로 남문로를 거쳐 광양로터리까지 평화대행진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연도의 시민들에게 “돈과 권력, 법이 삼위일체가 된 교묘한 사기술이 바로 제주도개발특별악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행진을 마친 대회참가자들은 광양로터리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반대 투쟁의지를 다짐한 뒤 대회를 마쳤다. 이날 대회는 경찰과의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시민들도 이 같은 특별법 반대 비폭력시위를 지지하는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천주교제주교구사제단도 “평화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와 연대함은 물론 전국의 사제단과 함께 특별법 반대운동을 확산해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국회차원에서 「특별법 제정반대 실태조사단」을 구성, 문제를 해결할 것, 도의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민간기구의 발족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범도민회는 대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지사가 각 시·군·읍별로 궐기대회 참석지역 주민들의 동향파악을 비롯, 특별악법반대 범도민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노조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개발로 인한 모든 이익금은 외지인들이 고스란히 챙기고 있는데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우리경제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을 파괴시키면서까지 관광개발 중심으로 제주도개발을 치닫게 하는 법이므로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은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과 노동운동 탄압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려는 살인도구일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을 공공연히 보장,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현저히 낮추어온 물가폭등의 주범이 될 것이므로 특별악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2차 도민대회 전날인 21일 하오 6시부터 범도민회는 「특별법 제정반대 제등행렬」을 갖고 도민대회를 알리고, 제정반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특별법 반대 투쟁이 고조되자 10월 28일 민주당 중앙당은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제주에 파견하고 조사를 벌였다. 그들은 특별법 반대 당론화에 조사단원 모두 노력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11월 2일부터 <범도민회>는 제2차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11월 2일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특별법제정반대 서울지역 궐기대회」를 가졌다. 진데 이어 이날 하오8시30분부터 제주사회문제협의회·재경제주학우회·제주지역총학생협의회 등에서 30여명이 마포구 소재 민주당사 1층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범도민회와 연계, 11월 6일까지 예정된 이들 농성단은 ‘농성에 돌입하며’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당론화하고 제주도민의 특별법 제정반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1월 3일 제주지역에서는 범도민회 회원 등 15명이 하오7시부터 제주시내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특별법 저지를

위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김대중 민주당공동대표는 11월4일 하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 저지투쟁을 떠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하오 대표실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 범도민회의 한석지, 고창훈, 모갑경, 양동윤, 현기영 공동대표 등 10여명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 “특별법의 국회통과 저지활동을 전개하되 구체적인 저지 방법 등은 범도민회 측과 협의해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1월 6일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제주도민들의 반대여론 수렴을 회피하고 오히려 이를 무지의 소치로 매도하거나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도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민절대다수가 찬성할 때까지 특별법 제정은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민자당에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당내에 법제정 저지업무를 담당할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11월 7일,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회원 양용찬열사가 “나는 우리의 삶과 뼈를 갈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써, 생활의 보금자리으로써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특별법 저지, 제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로 시작되는 유서를 남기고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건물 옥상에서 분신 투신하여 사망했다. <범도민회>는 즉각 <고 양용찬열사 분신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11월 8일, <범도민회>는 ‘고 양용찬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양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민자당 정권이며, 특별법 제정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비상대책회의>를 해소하고 <특별법반대 고 양용찬열사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용찬열사 분신 소식에 전국의 단체에서 애도성명 및 특별법 반대 성명이 잇따랐다. 전민련, 전농, 민자통, 공추련 등 7개 단체가 “특별법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민중당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문단을 제주도에 급파했다. 또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등은 연일 열사추모 가두투쟁을 전개하며 ‘특별법 제정반대, 민자당 타도’를 외치는 등 연일 시위를 벌였다. 11월 11일, 양용찬열사의 장례식이 고향인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후 서귀포에서 <장례위원회>가 주최한 ‘특별법반대 고 양용찬열사 추모대회’가 개최됐다. 양용찬열사 장례 및 추모일정을 1차 마무리한 <범도민회>는 11월 15일부터 ‘특별법 저지를 위한 범도민회 공동대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투쟁의 불씨를 키워나갔다. 범도민회 대표단은 11월 15일 “좀더 강력한 투쟁으로 특별악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11월 20일까지 시한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범도민회는 하오5시 제주 시내 중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20일 탐동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범도민대회까지 정부와 민자당이 특별법제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단식농성은 1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밝히고 “단식농성 외에도 11월 17일 특별법저지 부산지역대책위원회의 1차 궐기대회 및 대전지역공해추방운동연합 집

회 등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단식농성에 돌입한 대표단은 김태석, 모갑경, 양동운, 홍인택, 한석지, 김창남씨 등인데 이들은 단식을 시작하며 성명을 발표했는데, “특별악법 저지를 위한 제주도민의 의지를 천명하고 고 양용찬열사의 분신 등 제주젊은이들의 희생을 막겠다.”고 농성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노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철회를 주장했다. 11월 17일엔 부산에서 궐기대회가 열리고, 읍면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한림읍에서 11월 19일 시위가 전개되고 제주문인협회에서 성명이 발표되는 등 특별법 제정반대의 함성은 제주도 곳곳에서 전국 경향각지로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한림지역대책회의(공동의장 김병권, 송명식)는 11월 19일 하오5시 한림시가지에서 「특별악법 제정반대」 평화적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법제정을 반대하는 한림읍민 40여명은 마스크를 착용, 고 양용찬씨 추모만장을 앞세우고 시가지 인도를 따라 비폭력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1시간동안 계속됐는데 특별법과 관련, 읍면지역에서는 최초의 특별법 제정반대시위였다. 이에 앞서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 50여명은 11월 19일 하오3시 제주도청을 방문,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문 앞에서 경찰과 40여분가량 대치하다가 하오3시40분께 학생대표 4명이 도지사실에서 우근민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고창덕(제총협사무국장), 강창권(제주대동아리연합회장), 김순화(제주간보대학생회장), 김승현(제주대농대학생회장) 군 등 제총협 대표들은 도지사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유보하도록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지사는 “특별법 제정 방침이나 철회는 도지사의 권한밖에 있는 사항이다. 다만 학생들의 특별법 제정철회 주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문인협회(회장 김병택) 회원 31명은 11월19일 상오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이들은 “도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특별법은 국회에 상정돼서도 안되고 더구나 통과 제정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11월 20일 민자당은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범도민회>는 예정대로 이날 「특별악법 제정반대 제3차 범도민궐기대회 및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대회」를 개최했다. 3천여 명 운집한 이날 집회 또한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어 특별법 제정반대 의지를 과시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11월 20일을 기해 범도민회는 민자당과의 결사항전을 위해 전국적 비상체계에 돌입,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결의했다. 노래공연 등 식전문화행사에 이어 하오3시께 시작된 이날 1부 대회는 2차 궐기대회 이후의 경과보고, 현정권과 민자당·도지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범도민회 입장발표, 천주교제주교구사제단과 민주당 박영숙 최고위원의 연대사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대사 발표에 이어 <놀이패 한라산>의 「열사 부활굿」이 10여분 간 행해진 뒤 위성곤 제주대총학생회장 등 제주대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9명은 특별법제정 저지의 의지를 다지며 삭발했다.출정선언을 끝으로 1부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하오5시30분께 대회장인 탐동광장을 출발, 동문로~중앙로~시민회관을 거쳐 광양로터리까지 평화대행진을 했다.

대회참석자들은 “열사의 뜻 이어받아 특별법을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대행진을 한 후 광양로터리에 집결, 민자당·특별법 화형식 등을 갖고 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대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교회와 사회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정부 여당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을 즉각 유보 또는 연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들은 성명에서 전도민이 환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개발법의 제정을 위해 함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간기구의 발족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자당은 당무회의를 거쳐 특별법안 국회에 접수키로 방침을 정하고 11월 21일, 제주출신 민자당 국회의원 강보성, 이기빈, 고세진의원 등 22인의 발의(의안번호 1421호)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제주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11월 22일, 제주대·제주교대·제주전문대교수 등 제주지역대학교수 77명은 정부와 민자당의 특별법 제정추진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으로 인해 제주도는 근 2년간 심한 대립과 혼란을 계속해 왔고 한 젊은이의 분신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근원적으로 민심이 수습되고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서명교수들은 “실질적 대안마련의 계기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이나 법의 제정은 지역주민의 현실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선점을 두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의 제정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는 주체가 돼야할 지역주민을 객체로 전도시켜 추진돼온 제1차 제주도개발의 과정과 결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유 있는 반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명교수들은 “특별법제정을 지시한 노태우대통령과 민자당 및 도당국은 일단 이 법안을 보류할 것과 제주도개발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다음은 서명교수 명단이다. 강경선 강덕수 강동언 강영길 강영봉 강지용 강창희 강태국 강태숙 강훈 고봉수 고부언 고성효 고양숙 고창훈 고충석 고한권 고호성 김규일 김덕수 김민호 김도현 김방희 김범희 김병택 김상조 김성봉 김영웅 김영춘 김은석 김재하 김종우 김종태 김진영 기태곤 김한림 김형길 김희열 문원석 변종민 변종철 박상수 박용봉 배종희 송상순 송성희 송상길, 안창범 양경주 양성호 양영수 양영오 양영철 오경중 오동현 오현도 유철인 윤양수 양양한 윤창훈 이경주 이동근 이상봉 이상철 이청규 조성운 조영배 정대연 정덕상 한석지 허명순 허정훈 현공남 현영진 현진오 현해남 홍양자) 서울에서는 11월 24일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한 서울지역 제2차 쫓겨대회」가 서울공대위와 전국의 민주단체들이 공동 주최하여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범도민회>가 정부 여당의 특별법 강행 기도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경 제주출신 각계 인사 238명이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한 재경 제주도민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입법보류를 요구했다. 범도민회는 11월 26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전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도민주체의 「제주도보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범도민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제2차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범도민회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제주도보존특별법」은 “제1차산업의 자생력 향상, 제1차산업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토지이용, 제주도 지하자원 및 자연자원의 탐구와 보호, 개발로 인해 희생당한 주민들이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제시, 유흥레저관광일변도에서 마을단위 문화역사순례관광으로 관광패턴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도민회는 이 같은 도민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도민대표성을 띤 민간기구로 하여금 ‘개발’과 ‘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도민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이 투표에서 나타난 도민의사를 민간기구에 정책대안으로 제시, 민선지사로서 하여금 정부와 국회에 제안토록 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11월 26일 오후 국회 건설위원회는 민자당의원들에 의해 특별법안이 기습 상정되어 30초 만에 단독처리 되었다. 이에 대해 범도민회는 “앞으로 도민의 결집된 힘을 모아 특별법안 상정저지궤기대회가 아닌 무효화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건설위의 날치기 통과는 제주도민을 경악케 했다. 11월 27일, <범도민회>는 “특별법을 불법 날치기 한 민자당정권의 비열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히 제2차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도 「특별법 제정 강행하는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청년학생 제1차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준)·전민련·전빈련·전농 등 전국의 민주단체가 공동으로 “국회 건설위에서 특별법 날치기 통과는 무효임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끝까지 특별법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11월 28일, <범도민회>는 ‘민자당정권의 특별법 날치기 통과 무효와 범법행위를 규탄’하는 민자당 제주도지부 앞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제주대학생들도 「특별법 제정 강행 노태우정권 타도와 연행학생 구출을 위한 청년 아라 진군대회」를 마치고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하오5시20분께 서사로로터리와 오라파출소 사이 3차선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작된 시민·학생들의 가두시위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이날 하오6시 6백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가 광양로터리 부근도로를 점거, 화염병과 보도블럭을 깨던지고 이에 맞선 경찰이 최루탄과 진압봉으로 강경진압에 나섬으로써 양측피해가 커졌다. 이날 시위는 제주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계속돼 밤늦게까지 계속됐다.또한 이날 민자당 북제주군당사와 제주지방검찰청이 화염병 피습을 받는 등 민자당의 날치기통과는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또 <서귀포대책회의>는 ‘특별법 날치기 통과 규탄 서귀포 지역 결의대회’를 가지고 시위를 벌였다. 전국적인 연대천명도 이어졌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1월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국회날치기통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현정부가 대다수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제단은 또 “개발이익의 마땅한 수혜자가 돼야 할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소수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고 선거자금을 조성키 위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국민 사과

와 이 법의 무효선언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등 전국 10개 재야단체도 11월28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건설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특별법 통과 전면 백지화, 현정권의 공개사과, 제주출신 국회의원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단체는 (가칭)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준비위원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농민총회연맹, 공해추방운동연합, 민족자주통일불교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 등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조천읍, 대정읍, 성산읍 등 읍면지역까지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북제주군 조천읍 주민·학생 2백여 명은 11월 29일 하오6시 조천국교에서 「특별법 폐기를 위한 조천지역 실천대회」를 갖고 특별법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어 대회참가자들은 하얀 마스크를 착용하고 촛불을 든채 도로1차선을 따라 조천만세동산까지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다시 함덕해수욕장으로 이동, 문화행사와 민자당 성토의 시간을 가진 후 자진해산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농민단체협의회는 11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스스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지난 11월 26일 건설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법제정을 강행하는 민자당의 비도덕적인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별법 국회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당국의 탄압 또한 강해져 11월 30일 <범도민회>가 주최한 「특별악법 날치기통과규탄, 민자당타도 범도민대회」를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이날 하오 4시 학생·시민 7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 중앙성당 사거리입구에서 집회를 가졌으나 20분 만에 무산됐다. 대회가 무산되자 일부 참가자들은 중앙성당 안으로 재집결, 특별법 무효화와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나머지 대회참가자들은 대회개최지였던 중앙성당 등 시내곳곳에서, 최루탄을 쏘며 강경진압에 나선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날 대회에 앞서 하오2시40분께 제주시 중앙성당 입구에서 양동운 범도민회 집행위원장 등 3명이 부상당했고, 양동철씨 등 시민·학생 20여명이 연행됐다. 범도민회는 이날 시민에게 배포한 「특별법 날치기 통과 민자당 규탄성명서」를 통해 “민자당 정권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저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맨몸으로 투쟁하던 재경제주도민과 학생 범도민회 상경투쟁단을 무차별 강제연행하는 폭력성을 드러냈다. 이에 범도민회는 노정권과 민자당타도를 위한 전도민적 항쟁을 일궈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결사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범도민회 공동대표단은 이날 하오5시 중앙성당에서 대회무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폭력저지로 대회를 계속하기가 불가능했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물리력을 동원, 강제진압 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경찰 청장의 공식적인 사과, 현장책임자 문책, 연행자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11월 30

일 제주도의회 이영길의원이 특별법제정 철회를 주장하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의원은 이날 상오10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개발특별법은 도민의 앞날에 밝은 희망보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도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법집행과정에서도 순탄치 못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의회,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당과 소속을 초월해 특별법 무효화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단식농성은 정기회가 열리는 12월2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농성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무소속동우회 의원들도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정부·여당과 도민들 간에 극한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유보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무소속동우회 의원들은 12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갈등을 빚고 있는 특별법문제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개발특별법에 대한 대국회건의문 하나도 채택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더 이상 도의회 전체차원에서 특별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민자당의원들은 중앙당의 정치적 거동에 따라 움직이는 행태를 뼈아프게 각성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11월 30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무소속의 이영길의원은 이날 「단식농성을 풀며 55만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역 최대의 현안인 특별법에 대해 도의회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자는 안건자체를 반대하고 대국회건의안조차 반대하는 민자당의원들은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특별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특별법이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민자당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하고 이를 통해 민의가 살아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제정반대·민자당 규탄집회 및 시위는 제주도내외에서 연일 이어졌다. 대정읍 지역 주민과 학생 3백여 명이 「특별악법 날치기통과 민자당 타도대회」를 열고 국회건설위를 통과한 제주도 개발특별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12월 1일 촛불시위를 벌였다. <대정대책위원회>(위원장 우영진)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특별법 제정 규탄 및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자당이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회참가 주민들은 이어 속에 촛불을 든 채 대정농협 네거리를 출발, 시계탑~오일시장 구간 도로를 따라 모슬포 시가지에서 평화대행진을 벌인 뒤 하오2시30분께 자진해산했다. <제주민주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공동대표 이영일 외 2명)는 12월 5일 하오 서귀포시 매일시장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재야·시민·학생 등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 및 특별법날치기통과 민자당규탄 청년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1, 2부의 행사를 마친 뒤 50여 분간 대치중인 경찰과 몸싸움 끝에 서귀포농협입구 네거리까지 평화적인 가두시위를 벌인 후 하오9시30분 자진해산했다. 또, 제주대생 3백여 명은 12월 6일 하오3시 교내 민주

광장에서 「특별법제정 강행하는 민자당정권 타도와 방학중 투쟁승리를 위한 청년아라 진군대회」를 갖고 특별법 국회날치기통과 등을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시내 광양로터리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시도, 원천봉쇄에 나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8백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 강경진압에 나섰으며 시위학생들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재경 제주도민·대학생등 3백여 명은 12월7일 하오2시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날치기통과 규탄 및 악법분쇄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민자당은 국회 본회의에의 특별법안 상정, 통과기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회>와 <서울·부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고희범 서울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민자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제주도를 자본가들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특별법 제정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또 투쟁선언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모든 민주운동 세력과 연대, 이 법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뒤 여성백인회관~민자당사~여의도 광장에 이르는 구간을 따라 가두행진을 하며 특별법의 날치기 통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주고 자진해산했다. 한편 이날 하오5시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생 4백여 명은 제주시 중앙성당 앞길을 점거하고 특별법반대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날 참석학생들은 ‘노태우정권 타도’, ‘특별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다 40분 만에 농성을 풀고 자진해산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20분후 서사라에 있는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 건물 앞에서 재집결한 뒤 도로를 점거하며 한국병원 앞까지 진출,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후 학생들은 7시 광양로터리일대를 점거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를 형성, 밤늦게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날 동원할 수 있는 전 경찰력으로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쏘며 초강경진압에 나서 강기석군(제주대행정학3)등 시위학생 6명을 연행했으며 이 와중에 연행학생들을 무차별 폭행,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날 제총협은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노태우정권과 민자당은 특별법 추진에 혈안이 돼있다.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성산지역대책회의> 주최 「특별악법 날치기 통과 성산읍민 규탄대회」가 12월 9일 하오5시 주민 학생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교 성산교회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특별법이 악법인바 제주도민의 자존심과 생사를 파괴하는 특별악법 저지투쟁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온갖 궤변과 감언이설 날치기로 통과된 특별법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즉각 철회·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대회가 끝난 후 “특별악법 강행하는 민자당은 물러가라”, “성산읍민 단결하여 특별악법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진출을 시도했으나 5백여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범도민회>는 12월 10일부터 3차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 소속 50여명은 12월 14일 하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특별법 강행처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명동성당 문화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범도민회의 이아성공동대표, 양동운집행위원장과 서울공동대위의 정운형위원장, 현기영자문위원, 재경대학생 등이 포함된 단식농성단은 성명을 통해 “만약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무기한 투쟁을 전국민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법안폐기를 민자당에 촉구했다. 제주지역에서도 범도민회 소속 단체회원 및 학생 9명이 12월 14일 하오부터 제주시내 기독교제주농어촌개발원에서 특별법 폐기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이날 하오2시부터 제주시내 주요거리에서 범도민회 주최, 「날치기특별악법 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시민학생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백만청년학도가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을 막아내고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을 제주지역학생들과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제주와 서울에서 단식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17일, 범도민회·서울지역공대위·경기지역공대위 소속 인사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특별법 제정반대 및 법안 날치기통과 규탄 결의대회’ 갖고 국회까지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연행되었다. 특별법 날치기총과가 예상된 12월 18일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소속 학생 2백여 명은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대입면접고사 응시생들에게 특별법 반대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하오2시에는 교내 민주광장에서 「특별법 무효화 선언과 강행통과주범 노태우정권 응징을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제주시내에 집결하여 “특별법 제정반대, 무효화”를 주장하며 진압에 나선 경찰에 맞서 시내 곳곳으로 이동하며 밤늦게까지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하오5시10분 제주시청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가두시위에 나서 “제주민중 다 죽이는 특별법을 박살내자”, “노태우정권 타도하여 사람답게 살아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사로 로터리까지 진출했다. 당초 학생들은 민자당 도지구당사가 있는 터미널 부근까지 나가려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막혀 1시간 후 광양로터리로 재집결한 후 중앙로로 향했다. 학생들은 3개조로 나눠 가두행진을 벌이다 하오6시50분께 제주시내 KAL호텔앞 도로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이후 시내 곳곳에서 격렬 시위를 벌였다. 이렇듯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를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전국 각지의 민주단체 및 인사들이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으나, 1991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여야 의원간에 극심한 심야대치 끝에 민자당의원들로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켜버렸다.

A6[관계 인물] 양용찬, 모갑경, 고창훈, 한석지, 현기영, 임문철, 양동운, 이재후, 한석, 김수열, 강영지, 김규중, 정원태, 장윤식, 고광성, 고광문, 현혜숙

A7[관계 단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公安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A8[관계 자료]

“특별법저지 주장”, 『제주신문』 1991년 6월 12일자(제주연합077)

“특별법 반대연호”, 『제주신문』 1991년 6월 18일자(제주연합078)

“특별법저지 걷기대회 남문로~탑동서 열려”, 『제주신문』 1991년 6월 23일자(제주연합079)

“특별법 제정음모 저지”, 『제주신문』 1991년 6월 30일자(제주연합80)

“특별법 관련 대중양보고내용 밝혀라”, 『제주신문』 1991년 8월 21일자(제주연합81)

“특별법 저지 투쟁 결의”, 『제주신문』 1991년 9월 5일자(제주연합82)

“특별법 제정 반대 내일 궐기대회”, 『제주신문』 1991년 9월 18일자(제주연합83)

“특별법반대 범도민 궐기대회”, 『제주신문』 1991년 9월 20일자(제주연합84)

“특별법설명회”, 『제주신문』 1991년 9월 26일자(제주연합85)

“특별법 반대 2차범도민대회 관련 ‘주민동향 파악’ 물의”, 『제주신문』 1991년 10월 20일자(제주연합86)

“특별법 철회때까지 투쟁”, 『제주신문』 1991년 10월 23일자(제주연합87)

“특별법 반대 당론으로”, 『제주신문』 1991년 11월 5일자(제주연합88)

“특별법 반대’ 당론 확정 입법추진 강력 저지”, 『제주신문』 1991년 11월 7일자(제주연합89)

“범도민회 대표단 단식농성 ‘부산지역 궐기대회에 참여’”, 『제주신문』 1991년 11월 16일자(제주연합090)

“특별법 반대 침묵시위”, 『제주신문』 1991년 11월 20일자(제주연합091)

“「특별법시국」 최악국면”, 『제주신문』 1991년 11월 21일자(제주연합092)

“특별법 반대 이유 있다”, 『제주신문』 1991년 11월 23일자(제주연합093)

“특별법 저지 투쟁기간 설정 오늘 하오 첫 번째 응징대회”, 『제주신문』 1991년 11월 27일자(제주연합094)

“특별법 강행 일단 유보속 「무효화투쟁」 가속화”, 『제주신문』 1991년 11월 29일자(제주연합095)

“특별법 날치기 규탄시위 강경진압”, 『제주신문』 1991년 12월 1일자(제주연합096)

“특별법제정 유보 촉구”, 『제주신문』 1991년 12월 4일자(제주연합097)

“도내곳곳서 특별법 ‘저지’”, 『제주신문』 1991년 12월 7일자(제주연합098)

“시위 진압 초강경”, 『제주신문』 1991년 12월 8일자(제주연합099)

“성산주민 「특별법」 규탄”, 『제주신문』 1991년 12월 10일자(제주연합100)

“특별법 반대 단식 집회”, 『제주신문』 1991년 12월 15일자(제주연합101)

“특별법 반대 격렬시위”, 『제주신문』 1991년 12월 19일자(제주연합102)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1 『제주의 소리』 ,(제26호: 3-4)

이영길의원 정책연구실, 1991 『제주개발과 쟁점 I』

제주도개발특별법 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 1992 『제주지역 제14대 총선거자료집』

제주도개발특별법 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 1993 『도민의 함성』 (특집호: 89)

편집실, 1992 「민주당, 특별법에 어떻게 대처했나」 『월간제주』 (1월호: 27-30)

편집부, 1991 「‘특조법협의회’ 과연 홀로 설 수 있을까」 『월간제주』 (4월호: 54-57)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1 『제주의 소리』 (제26호: 4)

이영길의원 정책연구실, 1991 『제주개발과 쟁점 I』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규탄투쟁**

A2[사건 일시] 1990.10.04~1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0.10.04. 윤석양 이병 보안사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

1990.10.07. 제주지역 민간인 사찰대상자 30여명 명단 공개

1990.10.10. 전교조제주지부는 규탄성명서 발표

1990.10.11. 제주지역 민간인 사찰대상자 공동기자회견 / 보안부대 정문 앞 항의시위

1990.10.13. 「보안사민간인 불법사찰규탄대회」 / 철야농성 돌입

1990.10.15. 철야농성 해제

A5[사건 내용] 1990년 10월 4일 보안사 소속 윤석양 이병이 양심선언을 통해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사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규탄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고 제주지역에서도 국회의원·교수·종교인·재야단체인사·학생 등 30여명이 보안사의 사찰대상자임이 밝혀졌다. 밝혀진 제주지역 인사는 △정계=강보성(민자당국회의원) △학계=고창훈(제주대교수) △종교계=임문철(천주교제주교구청), 양영수(동문성당), 모갑경(연동교회), 석준복(서귀감리교회) △전교조=이영길(제주지부장) △재야단체=고상호(제민협), 오옥만(), 양영운(), 오만식(), 김수훈(), 이영일(), 김미리(), 윤춘광(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이재홍(제주기독교장로회청년회연합회), 오근수(), 박상률(농민회), 김정렬(제민청), 양시경(탐동범도민회), 정공철(제주문화운동협의회), 강남규(노동상담소장), 김관후(YMCA), 이지훈(전대동서점주인), 김창수(전 한겨레신문서귀포지국장), 황인호(제주청솔인쇄소) △학생 및 시민=김영기, 김형정, 김효철, 강경식, 고성환, 김성열, 홍명환, 김경희, 송시우, 김명하 등이었다. 제주지역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교조제주지부는 10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는 군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 제주지역보안사 민간인사찰피해자들은 11일 하오4시15분께 제주시내 보안부대를 방문, 보안사 민간인사찰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서 전달과정에서 사찰피해자들은 보안부대를 방문하겠다는 사전통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보안부대정문 통과를 가로막는 경찰에 맞서 약 10여분간 시위를 벌였었다. 이에 앞서 사찰피해자들은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10월 13일,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평화민주당제주도지부·전교조제주지부·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제주교회사회선교협의회·제주지역사찰피해자 일동 등이 주최한 「보안사민간인 불법사찰규탄대회」가 하오4시 제주시내 카톨릭회관 지하 강당

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사찰규탄성명서」를 통해 보안사의 대민사찰업무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하오5시30분께부터 이 대회참가자 3백여명은 “해체 보안사”, “타도 민자당”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로 진출,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들은 하오8시 이후 중앙로, 광양로 일대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 벌였다. 한편 이날 시위과정에서 경찰은 고창훈(제주대학교수), 이영일(서귀포 나라사랑청년회 부회장), 양영식(평민당원), 오옥만(제민협), 이용중(전교조), 한석(제주민주청년준비위원장), 고창건(제주대 3)등 9명을 연행했다. 이에 참가단체 대표 20여명은 13일 자정부서 제민협과 전교조제주지부사무실에서 ‘평화대행진 폭력탄압을 규탄하고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제주경찰서는 10월 15일 보안사민간인사찰규탄대회 및 시위와 관련해 연행한 고창건씨(21·제주대축산과3)를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고창훈교수(제주대 행정학)등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김재호씨(전교조제주지부 사무국장)를 같은 혐의로 구류3일에 처했다. 철야농성에 돌입했던 재야단체 대표 20여명은 15일 하오 연행자들이 불구속입건으로 나오자 농성을 풀었다.

A6[관계 인물] 강보성, 고창훈, 임문철, 양영수, 모갑경, 석준복, 이영길, 고상호, 오옥만, 양영운, 오만식, 김수훈, 이영일, 김미리, 윤춘광, 이재홍, 오근수, 박상률, 김정렬, 양시경, 정공철, 강남규, 김관후, 이지훈, 김창수, 황인호, 김택진, 김영기, 김형정, 김효철, 강경식, 고성환, 김정열, 홍명환, 김경희, 송시우, 김명하

A7[관계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평화민주당제주도지부,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교회사회선교협의회

A8[관계 자료]

“보안사 민간인 대상 정치사찰 - 도내인사도 36명 포함”, 『제주신문』 1990년 10월 7일자(제주연합107)

“도내 사찰피해자들 시위 보안사해체 주장”, 『제주신문』 1990년 10월 12일자(제주연합108)

“민간인사찰중단 요구 - 어젯밤 격렬시위”, 『제주신문』 1990년 10월 14일자(제주연합109)

“보안사규탄시위관련 1명영장·7명입건”, 『제주신문』 1990년 10월 16일자(제주연합11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시위 학생 추락사건

A2[사건 일시] 1991.04.29~05.30

A3[사건 배경]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열사가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맞아

숨지자 제주지역의 민민단체 및 학생도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제주대 학생 2명이 제주시내 가두시위 중 경찰에 쫓기다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4[사건 전개과정]

1991.04.29. '강경대 학우 살해 응징과 노정권 처단을 위한 청년학도 전진대회' 과정에서 가두시위 중이던 제주대생 고규형(자연대 학생회장·화학4)과 김평국(제주대 전자공2)이 빌딩 옥상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추락, 부상

1991.04.00. <폭력경찰에 의한 강제추락사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991.05.06.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3인 철야농성 돌입. 진상규명 공개간담회 요청

1991.05.00.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10명 신민당 중앙당사 농성 돌입

1991.05.09. 신민당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후 귀경 / 제주대 교수 시국성명 발표 / 제5차 도민대회

1991.05.18. 시위 과정에서 조천읍농민회원 전우홍 뇌상사건 발생

1991.05.30. 제주경찰서 '실족에 의한 단순 안전사고' 수사결과 발표

A5[사건 내용]

강경대열사가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에 숨지자 제주지역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4월 29일, 제총협은 '강경대 학우 살해 응징과 노정권 처단을 위한 청년학도 전진대회'를 갖고 제주시내에서의 가두투쟁에 나섰다. 원천봉쇄 및 시위자 검거작전에 들어간 백골단은 시위학생들을 쫓았고 이에 밀린 학생들이 제주시 서광로 신성여중 입구에 위치한 미도빌딩 지하와 옥상으로 피신했는데 체포조는 건물내부에까지 진입하여 학생들을 검거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대생 고규형(자연대 학생회장·화학4)과 김평국(제주대 전자공2)이 빌딩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평국은 체포조를 피해 TV유선줄을 타고 내려오다 줄이 끊기는 바람에 추락하여 귀가 7cm 가량 찢기고 뒷머리를 부상당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고규형은 3층 옥상의 창문을 통해 옆쪽 옥탑으로 이동하는 도중 추락하여 12번 척추 압박골정상을 입어 3개월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한국병원에 입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민주청년연합준비위원회 등은 즉각 <폭력경찰에 의한 강제추락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건물 안으로의 진입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추락임이 확실하다며 △추락사건의 진상규명 △현장 지휘자 및 관련자 구속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대책 강구 △제주도경찰국장과 제주경찰서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5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3인은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진상규명 공개간담회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9일 만에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건물진입 자체를 부정하다가 지하실과 1층까지만 진입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많은 목격자들은 백골단의 건물 옥탑진입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연일 집회와 시위, 농성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수업거부를 결의했고, 제주대학교 김형욱 총장도 제주도경찰국

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해 ‘추락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과잉진압 자제’를 요청했다. 급기야 제총협 소속 10명의 학생들이 신민당 중앙당사 농성에 돌입했고, 5월 9일 신민당은 허경만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제주에 파견하여 조사를 벌였다. 또한 제주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요구사항 중에는 ‘제주대 고규형군의 추락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었다. 5월 9일은 전국적으로 ‘민자당 해체의 날’로 대대적인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제주지역도 중앙로에서 「노태우 민자당정권타도를 위한 제5차 도민대회」를 열었다. 이미 동맹휴업을 결의한 각 대학에서는 학교별로 출정식을 갖고 중앙로로 모여들었다. 1천 5백명의 시민학생들이 2시간 동안 중앙로를 점거해 도민대회를 열었고 대회는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5월 18일 시위 과정에서 조천읍농민회 회원 전우홍씨가 연행과정에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는 뇌상사건이 발생해 다시 한번 운동진영 및 시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5월 30일, 제주경찰서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3층까지의 진입은 시인했으나 ‘실족에 의한 단순 안전사고’로 결론지어버렸다.

A6[관계 인물] 고규형, 김평국, 한수섭

A7[관계 단체]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민주청년연합준비위원회

A8[관계 자료]

편집부, 1991 「이 시대의 질곡으로 그 매듭의 끝을 감춘 ‘제주의 5월」 『월간제주』 (6월호: 31-3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백골단 전경해체 및 공안내각총사퇴 범국민촉구대회

A2[사건 일시] 1991.05.0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잇따른 대학생 분신자살로 규탄시위 및 농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91년 5월 4일 제주도내에서도 「백골단 전경해체 및 공안내각총사퇴 범국민촉구대회」가 열렸다. 재야단체회원, 학생, 시민 등 5백여 명은 이날 하오6시 20분께 제주시 중앙로 에덴서점 앞 도로를 완전점거, “폭력경찰 물러가라!”, “백골단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백골단 해체’ 연좌 농성”, 『제주신문』 1991년 5월 5일자(제주연합11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노태우 민자당정권타도를 위한 제5차 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91.05.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5월 9일은 전국적으로 ‘민자당 해체의 날’로 정해 대대적인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제주지역도 중앙로에서 「노태우 민자당정권타도를 위한 제5차 도민대회」를 열었다. 이미 동맹휴업을 결의한 각 대학에서는 학교별로 출정식을 갖고 중앙로로 모여들었다. 1천 5백 명의 시민학생들이 2시간 동안 중앙로를 점거해 도민대회를 열었고 대회는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하오9시께 평화대행진을 막는 경찰과 시위대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이현의양(제주대 일문학 3)과 부경미양(제주대 사학 2)이 머리 부분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시국사태 갈수록 경색”, 『제주신문』 1991년 5월 10일자(제주연합113) 편집부, 1991 「이 시대의 질곡으로 그 매듭의 끝을 감춘 ‘제주의 5월」 『월간제주』 (6월호: 31-35)(검토-앞의 ‘시위학생추락사건’의 출처와 같음)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학생추락사건 책임자처벌 및 노태우민자당정권타도를 위한 제6차 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91.05.1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학생추락사건 책임 처벌 및 노태우민자당정권타도를 위한 제6차 도민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경찰은 1991년 5월 10일 하오6시 제주시 중앙로에서 9일에 이어 열릴 예정이던 재야 및 시민·학생들의 제6차 도민대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전경 등 1천여 명의 경찰력을 중앙로에 포진시켜 이 일대를 완전히 통제했다. 또 경찰은 가두방송을 통해 중앙로일대 상가철시를 권유하고 시위와 진압에 따른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줄 것을 계도했다. 이 같이 경찰의 조치에 시민학생 등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시내곳곳서 산발시위” 『제주신문』 1991년 5월 11일자(제주연합11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강경대열사추모 및 폭력살인·강제추락 자행하는 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1.05.1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강경대열사 민주국민장이 치러진 1991년 5월 14일 제민협·제총협 등 재야단체회원 및 대학생들은 이날 추모집회를 갖고 중앙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재야·학생 3백여명은 14일 하오2시께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故강경대열사추모 및 폭력살인·강제추락 자행하는 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 후 강군의 영정을 앞세우고 교문 밖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돼 하오 4시 30분께 교내에서 자진해산했다. 일부 시민학생들은 이날 저녁부터 제주시내로 진출하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도심 강군 추모집회 원천봉쇄 - 곳곳서 산발시위”, 『제주신문』 1991년 5월 15일자(제주연합11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7차 도민대회 및 규탄농성**

A2[사건 일시] 1991.05.18~1991.05.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5·18광주민중항쟁 11주년과 명지대생 강경대군 장례식이 겹친 1991년 5월 18일 제주도에서는 <폭력경찰에 의한 강제추락사건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제7차 도민대회」가 예정되었다. 이날 경찰은 1천여 명의 전경 및 경찰관을 동원, 시위 및 도민대회를 초기부터 진압한다는 방침아래 제주시 중앙로, 동

문로 일대를 봉쇄하는 한편 제주시 공무원 등 각계 공무원들도 대회예정 장소인 중앙로 일대에서 시위자제 계도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주최 측은 약 3백명이 하오6시 30분께부터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기습적으로 「제7차 도민대회」를 열었으나 경찰의 강력한 원천봉쇄로 대회 2분 만에 해산됐다. 또, 대회를 주도하던 양영운 제민협공동의장 등 수십 명을 연행했다. 이에 시민학생들은 시내 곳곳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한편 경찰에 연행된 재야단체대표 등 18명은 연행자들을 구타하고 폭언한 것에 대한 경찰서장의 사과, 연행자 전원석방 등을 요구하며 제주경찰서 보호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였다. 또, 제총협·제민협·전교조제주지부·제주민주청년회준비위원회·제주도농민회 등의 대표 10여명도 5월 19일 상오7시부터 제주시 중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5백여명 격렬 시위”, 『제주신문』 1991년 5월 19일자(제주연합117)

“시위연행자 18명 경찰서 단식농성”, 『제주신문』 1991년 5월 21일자(제주연합11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조천읍농민회 전우홍씨 뇌상사건**

A2[사건 일시] 1991.05.18~1991.06.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1.05.18. 「제7차 도민대회」 참가 중 전우홍씨 경찰에 의해 연행, 구류3일

1991.05.20. 두통과 구토증세로 병원 입원을 보여 경찰에 의해 시내 한국병

1991.05.21. <폭력경찰에 의한 강제추락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도농민회> 성명 발표 / <폭력경찰에 의한 전우홍 농민뇌상사건 제주도농민회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991.05.22. 제주도농민회 기자회견

1991.05.24. 공동기자회견

1991.06.07. 「폭력경찰규탄과 특별법 및 골프장저지를 위한 제1차 제주농민대회」 개최

1991.06.21. 제주도농민회 대표 및 전우홍씨, 제주도경찰국장, 제주경찰서장, 진압전경 등 검찰고발

A5[사건 내용] 경찰의 시위진압으로 인한 부상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991년 5월 18일 <폭력경찰에 의한 강제추락사건비상대책위원회>는 「7차 도민대회」를 열었다. 하오6시 30분께부터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대회를 열었으나 경찰의 강력한 원천봉쇄로 대회 2분 만에 해산됐다. 또, 대회를 주도하던 양영운 제민협공동의장 등 수십 명을 연행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하오9시45분께 제주시 중앙로 덕성의원 앞에서 연좌농성 중이던 전우홍씨(조천읍농민회 교육부장)가 시위진압경찰에 연행된 후 즉시에 넘겨져 구류 3일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전우홍씨는 5월20일 두통과 구토증세를 보여 경찰에 의해 시내 한국병원에 긴급 입원했다. <폭력경찰에 의한 강제추락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도농민회>는 5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5월 18일 시위자 연행과정에서 전우홍씨가 경찰의 방패(또는 헬멧)에 의해 머리를 구타당하여 뇌좌상 뇌출혈 뇌부종 증세로 현재 한국병원에 입원했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도경국장과 경찰서장의 구속’, ‘관련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했다. 또 “도경국장과 경찰서장에게 항의전화걸기, 제주시 중앙성당 교육관내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등 시민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다. 제주도농민회는 5월 21일 <폭력경찰에 의한 전우홍 농민뇌상사건 제주도농민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경국장과 제주경찰서장 구속,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농민회는 5월 22일 상오 제주시 중앙성당내 교육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무차별 폭력행사로 전씨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폭력적인 백골단을 양성한 현정권의 책임”이라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5월23일 당시 현장목격자, 전씨를 연행한 전경, 전씨를 조사했던 경찰의 신원파악에 들어갔다. 또 검찰은 경찰이 전씨가 지난 87년 6월항쟁 당시 뇌를 다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5월 19, 20일 이틀 동안 전씨를 구류하게 된 이유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한편 <폭력경찰에 의한 강제추락사건비상대책위원회>, <전우홍농민뇌상사건 제주도농민회비상대책위원회>, <5·18연행자가족모임>은 5월24일 상오 제주시대 중앙성당교육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제주대생 고규형군 추락사건 진상규명등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투쟁키로 했다. 5월25일 하오6시 제주시 중앙로 일대에서 8차도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상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이 발급한 전씨 진단서에 발병일이 경찰에 연행되기 전인 5월17일로 기록해 전씨 가족들과 「제주도농민회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재정정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했다. 또 <제주도농민회비상대책위원회> 회원 20여명은 사건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도농민회는 이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찰이 사건을 왜곡·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농민회는 「폭력경찰규탄과 특별법 및 골프장저지를 위한 제1차 제주농민대회」를 6월7일 하오2시 50분께 제주시 YMCA회관 앞에서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전우홍씨 뇌상사건이 20여일 지났는데도 경찰은 어떠한 입장이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을 왜곡·축소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좀처럼 진상이 밝혀지지 않자 제주도농민회의 백경호, 이태행, 양동철씨 등은 6월 21일 박우상 제주도경찰국장, 한수섭 제주경찰서장을 “지난 5·18 시위당시 평화시위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전투경찰 및 사복체포조를 투입시켜 과잉진압, 불법연행을 직접 명령하고 지휘감독하여 업무를 방기했다.”는 이유로 검

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공개수사와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전우홍씨(조천농민회)도 같은 날 “진압경찰의 폭력적인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오른 쪽 앞이마와 뒷머리를 강타당해 뇌좌상 등으로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아왔다.”며 한수섭 제주경찰서장과 확인미상의 사복체포조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6[관계 인물] 전우홍

A7[관계 단체] 제주도농민회, 조천읍농민회

A8[관계 자료]

“시위연행자 중태”, 『제주신문』 1991년 5월 22일자(제주연합119)

“농민 뇌상사건 관련 농민회 비대위 구성”, 『제주신문』 1991년 5월 23일자(제주연합120)

“시위농민 뇌상사건 지검, 진상규명 착수”, 『제주신문』 1991년 5월 24일자(제주연합121)

“고군 추락·전씨 뇌상 진상규명 공동투쟁”, 『제주신문』 1991년 5월 25일자(제주연합122)

“‘구타 은폐의도’ 반발”, 『제주신문』 1991년 5월 26일자(제주연합123)

“전씨 뇌상 진상규명 요구”, 『제주신문』 1991년 5월 31일자(제주연합12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노태우정권 퇴진과 폭력경찰추방 제8차 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91.05.2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생 추락사건에 이은 전우홍씨 뇌상사건으로 경찰폭력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폭력경찰에 의한 강제추락사건비상대책위원회>, <전우홍 농민뇌상사건 제주도농민회비상대책위원회>, <5·18연행자가족모임>이 공동주최한 「노태우정권 퇴진과 폭력경찰추방 제8차 도민대회」가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25일 하오6시께 제주시 중앙성당 앞길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중앙성당 앞길을 점거, 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폭력경찰에 의한 강제추락사건비상대책위원회, 전우홍농민뇌상사건 제주도농민회비상대책위원회, 5·18연행자가족모임

A8[관계 자료]

“재야·대학생 8차 집회”, 『제주신문』 1991년 5월 26일자(제주연합12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경찰폭력책임자처벌과 구속자 석방을 위한 무기한 농성**

A2[사건 일시] 1991.05.30~1991.06.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간부 10여명은 고규형 학생추락사건, 전우홍 농민뇌상사건 책임자 처벌과 구속자석방을 요구하며 1991년 5월 30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을 시작하며 제민협은 5월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질적인 경찰의 살인폭력을 근절시키고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기위해서”라고 농성이유를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전씨 88년 최루탄부상 뇌상사건과 상관없다”, 『제주신문』 1991년 6월 1일자(제주연합12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9차 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91.06.0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6·10항쟁계승·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대회」가 6월 8일 하오 전국 주요도시에서 강행된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이날 ‘제9차 도민대회’가 재야·학생·시민 등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 탐동로에서 열렸다.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는 당초 이날 하오5시 중앙로 집회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집회예정시각 20분 뒤에 장소를 제주시 탐동으로 정하고 약식집회를 가졌다. 이날 시위대들은 탐동로를 완전 검거 “제주도민 다죽이는 특별법을 막아내자”, “6월항쟁 계승하여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압에 나선 경찰과 대치했다. 이날 「제주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이번 광역의회선거를 민주실현의 발판으로 삼자”며 “해바라기성 후보들을 과감히 낙선시키자”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6개 중대 9백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제주시내 주요골목등지에 배치, 강력 대처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

A8[관계 자료]

“「6·10」 계승대회”, 『제주신문』 1991년 6월 9일자(제주연합12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양용찬열사 분신사건

A2[사건 일시] 1991.11.07

A3[사건 배경] 정부와 민자당이 추진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이 범도민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신 사망한 사건

A4[사건 전개과정]

1991.11.07. 양용찬열사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건물 옥상에서 분신 투신 사망

1991.11.11. 양용찬열사 장례식

A5[사건 내용] 1966년 남제주군 남원읍에서 태어난 양용찬열사는 1985년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여 인문대학학생회와 총학생회 산하 지역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2학년을 휴학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을 포기하고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그 곳에서도 <서귀포지역문제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장의 문제를 추적해 나갔다. 그러던 중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이 제주지역사회를 뒤흔들던 1991년 11월 7일 “나는 우리의 삶과 뼈를 값아 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써 생활의 보금자리로써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특별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 투신하여 사망했다. 양용찬 열사는 11월 7일 하오 7시40분께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 높이 14m의 4층에서 투신, 경찰 등에 의해 서귀포 의료원으로 긴급후송 됐으나 30분 뒤인 이날 하오8시10분께 숨졌다. 이날 양씨의 투신을 처음 목격한 인근건물 「한라장식」 대표 권영식씨(36)에 따르면 “아!” 하는 비명이 들려 밖에 나가보니 양씨가 불길에 휩싸인 채 신음 중이었으며 곧 이어 신원미상의 20대 청년 3~4명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았다고 했다. 서귀포의 료원 당직의사 최기종씨는 후송당시 양씨의 상처는 전신 90%의 3도 화상이었으며 사인은 급성호흡부전이었다고 밝혔다. 양용찬열사는 사건당일 하오 7시30분께 서귀포나사청사무실에 들러 원모씨 등 회원 3명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이 가져온 자료와 유인물 등을 서류봉투 속에 정리했다. 이어 양용찬열사는 회원들에게 “목욕하러 간다.”며 사무실을 빠져나와 곧바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이르러 입고 있던 야전복 상의와 작업복 바지를 벗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은채 석유를 온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 뒤 창문을 열고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열사의 장례는 11월 7일 구성된 대책위의 ‘도민장’과 유족들의 ‘가족장’을 놓고 협의를 거친 끝에 유족들의 요구대로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양용찬 열

사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교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서 추모집회 및 특별법 저지를 위한 집회가 이어졌다. 또한 11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공해추방운동연합,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제주도개발특별법저지 서울지역공동대책위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 “노태우정권 퇴진과 제주도개발 특별법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1월 8일 허경만 최고위원 정상용의원 등 진상조사단(대표 허경만의원)을 제주에 파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A8[관계 자료]

“분신자살 양씨 주변과 각계반응”, 『제주신문』 1991년 11월 9일자(제주연합128)

“분신자살 양씨 추모집회 이모저모”, 『제주신문』 1991년 11월 10일자(제주연합129)

“양씨 장례식 가족장으로”, 『제주신문』 1991년 11월 10일자(제주연합130)

“양씨추모대회 강제해산”, 『제주신문』 1991년 11월 10일자(제주연합131)

강덕환, 1992 「“특별법 저지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월간제주』 (11월호: 50-5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 시민·학생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1.11.0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학생 7백여 명이 서귀포시 1호광장에서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 시민·학생결의대회」를 가진 뒤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또 이날 시민·재야·학생들은 <故양용찬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학생들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서 “제주도민 다 죽이는 특별법을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집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민·학생들은 하오 4시50분께부터 동문로터리를 비롯한 서귀포시 주요도로 등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6시30분께 정리집회를 가진 후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도전역서 항의집회 계속 -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 시민·학생 결의대회”, 『제주신문』 1991년 11월 9일자(제주연합13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 시민·청년학생 2차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1.11.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시민·학생 등 7백여 명은 1991년 11월 9일 하오2시 서귀포시 1호광장에 진출,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 시민·청년학생 2차 결의대회」를 열려고 했으나 사과탄을 던지며 제지하는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하오3시10분께 동명백화점 앞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가졌다. 집회를 마친 대회 참가자들은 사물놀이패 등의 문화공연에 이어 시민분향의 시간을 가진 뒤 하오5시20분께 서귀포·남제주 민자당사 점거농성을 위해 당사 쪽으로 이동했으나 당사가 닫혀있어 다시 동명백화점 앞에 재집결, ‘민자당기 화형식’을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학생들은 “열사의 뜻 이어받아 특별법을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민을 압살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민자당 제주출신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도전역서 항의집회 계속 -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 시민·학생 결의대회”, 『제주신문』 1991년 11월 9일자(제주연합13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故양용찬열사 추모대회**

A2[사건 일시] 1991.11.1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1.11.07. 양용찬열사 분신사망

1991.11.11. 장례식 /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故양용찬열사 추모대회

A5[사건 내용] 1991년 11월 11일 하오 3시 서귀포시내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건물 앞 어린이놀이터에서 시민·학생 등 2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 고 양용찬열사 추모대회」가 <특별법반대 고 양용찬열사 장례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그대 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추모굿·노래공연 등 1부 행사와 유서낭독·추모사 등 2부 행사에 이어 하오5시30분께 대회 참가자들은 「열사의 넋을 따라」 촛불 시가행진을 벌였다. 제주대 사물놀이패, 나사청 회원들이 든 대형 태극기, 방승차량, 고인의 영정 및 “특별법저지”, “내 친구를 살려내라!” 등 30여 개의 만장을 앞세운 시가행진은 어린이놀이터를 출발, 서귀포시 보건소를 거쳐 동문로터리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켜들고 1호 광장까지 이어졌다. 시가행진을 마친 대회참가자들은 「열사여 부활하라」는 제4부 계승대회를 끝으로 하오8시

게 추모대회를 마쳤다. 이에 앞서 추모대회장에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공해추방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 등 명의의 성명서가 담긴 유인물이 뿌려졌는데, 이들 단체들은 “노태우정권과 민자당은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대정나라사랑청년회창립준비위원회·제주민주청년회 등 제주지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민자당은 특별악법제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열사의 닢 따라’ 촛불행진”, 『제주신문』 1991년 11월 12일자(제주연합13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특별악법 날치기 민자당규탄 성토대회**

A2[사건 일시] **1991.12.19**

A3[사건 배경] 1991년 12월 18일, 민자당의 제주도개발특별법 국회본회의 날치기통과에 대한 항의 규탄투쟁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12월 1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는 하오5시40분 제주시내 광양성당 입구 삼거리에서 시민·학생 등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악법 날치기 민자당규탄 성토대회」를 열고 “날치기 통과된 특별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회를 마친 시민학생 2백여 명은 이날 하오7시10분께 시내 제일교 네거리에 재집결,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중앙로터리까지 진출,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선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강경진압에 나선 경찰은 고창홍씨 등 시민학생 다수를 연행했고 이에 항의하는 도로주변 시민들을 향해 사과탄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시민학생들은 도남주유소 앞 도로를 점거하는 등 밤늦게까지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제주도내 재야단체 및 학생들은 앞으로 특별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도민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날치기 특별법 무효’ 격렬시위”, 『제주신문』 1991년 12월 20일자(제주연합13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양용찬열사 49재 추모대회**

A2[사건 일시] 1991.12.2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12월 25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국회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제주도내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용찬열사 49재 추모대회」가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 주최로 하오3시30분 제주교육대학에서 시민 학생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범도민회는 양열사의 뜻을 계승하여 특별법 무효화 및 폐기투쟁을 강력히 전개기로 결의하는 한편 추모사업회도 발족키로 했다. 이날 대회는 김태석, 홍인택 공동대표의 대회사, 추도사에 이어 양용찬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특별법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놀이패 한라산>의 추모곡, 가수 안치환씨의 노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회를 마치면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대회참가자들은 “특별법을 날치기처리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내년 총선투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회종료 후 제총협 소속 학생 2백여 명은 하오5시40분께 “열사의 뜻 이어받아 특별법을 폐기하고 민자당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인도를 따라 제주시 협동주유소 앞까지 촛불행진을 하면서 특별법무효화 및 폐기투쟁 의지를 다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

A8[관계 자료]

“고 양용찬씨 49재 추모대회”, 『제주신문』 1991년 12월 26일자(제주연합13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특별법완전철폐 및 민자당해체를 위한 다짐대회**

A2[사건 일시] 1992.05.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연합(건) 소속회원과 제주지역 대학생, 시민 등 4백여 명은 1992년 5월 9일 하오4시50분께부터 제주시 중앙로 에덴서림 앞 일부도로를 점거하고 특별법철폐 등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어 시위대들은 6시20분께 도로를 완전 점거한 뒤 당초 제주연합이 계획한 「특별법완전철폐 및 민자당해체를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연합(건)은 도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민자당 2년은 정치자금 만들기 위해 제주도를 팔아온 기간”이라고 규탄했다. 제주대총학생회도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속된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건)

A8[관계 자료]

“특별법 철폐’ 시위”, 『제주신문』 1992년 5월 10일자(제주연합13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도민대회**

A2[사건 일시] 199 2.05.1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주최의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도민대회」가 시민·학생 등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9일 하오5시30분께 제주도 중양로부근 고택수의원 앞 네거리에서 개최됐다. 1시간여 동안의 대회행사를 마친 시민학생 등은 가두행진을 시도하며 중양로터리로 진입하려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평화시위 보장을 촉구하며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시민학생들은 하오7시30분께 경찰의 묵인 하에 가두행진을 벌였다. 그런데 몸싸움 과정에서 시위학생 1명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수명이 부상을 당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A8[관계 자료]

“민자 전당대회 규탄”, 『제주신문』 1992년 5월 20일자(제주연합13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해직교사원상복직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제주본부
결성기자회견**

A2[사건 일시] 1992.06.2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교사범대학생회·제주교대총학생회·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가칭)·제주도농민회·전교조제주지부 등 5개 단체는 6월 22일 하오5시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에서 「해직교사 원상복직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제주본부」를 결성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는 중앙에서 결성된 이 사업을 제주지역에서 추진하기 위해 제주지역본부를 결성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널리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 사회단체와 개

인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이 서명운동을 착실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대학교사범대학생회·제주교대총학생회·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가칭)·제주도농민회·전교조제주지부

A8[관계 자료]

“전교조 제주지부 창립 3주년”, 『제주신문』 1992년 6월 13일자(제주연합14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양용찬열사 1주기 추모제**

A2[사건 일시] 1992.11.04~07

A3[사건 배경] 1년전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운동 과정에서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분신한 고 양용찬열사를 기리는 행사

A4[사건 전개과정]

1992.11.04. 오전 9시, <고 양용찬열사 1주기추모공동행사위원회>는 전교조제주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묘소참배 / 오후 5시, ‘故양용찬열사 1주기 추모제 및 추모의 밤’이 <제주지역청년단체협의회> 주최로 서귀포매일시장 옆 공터에서 개최

1992.11.05-06.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주최로 양용찬열사 추모공연 ‘산불’이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공연

1992.11.06. 오전 11시 30분, 가족·친지·시민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예리 공동묘지에서 추모비 제막식 거행

1992.11.07. <고 양용찬열사 1주기추모공동행사위원회> 주최로 제주시 탐동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故 양용찬열사 1주기 추모 및 정신계승대회」 개최

A5[사건 내용] 1992년 11월 5일 하오6시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대회 행사로 집체극인 「산불」이 제주대체육관에서 공연됐다. 제주대 소속 놀이패 「탐라민속문화연구회」, 「우리네」, 「노래빛 사월」과 제주전문대학소속 「새벽을 여는 사람들」 등 4개 단체 40명이 공동으로 공연한 「산불」은 회상을 통해 양씨가 분신하기 전까지의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는 등 4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산불」은 11월 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했다. 11월 7일 하오2시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대회」가 제주시 탐동에서 시민·대학생·재야단체회원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연합 등 도내 8개 재야단체로 구성된 공동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모두 3부로 나눠 행해졌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제문협 소속 <놀이패 한라산>의 부활굿, 제총협 추모 노래공연이 있었다. 2부에서 공동위원회는 대회를 통해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으로 진정한 제주도민의 법을 우리 손으

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원회는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 “중산간 대부분의 토지를 독점재벌이 소유한 마당에 특별법제정은 도민의 삶의 터전이 제주도를 그들에게 안겨주는 작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계승대회 2부에서 고 양용찬열사 약력소개 및 유서낭독, 추모사 등을 마친 후 공동위원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행정권과 독점재벌에 맞서 싸워나갈 것, 제주도개발특별법 폐기, 민자당재집권을 저지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부 행사를 끝낸 후 하오5시 고 양용찬열사 대형초상화와 각 단체깃발 등을 내세우고 “열사의 뜻 이어받아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남문로를 거쳐 광양로터리까지 평화대행진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양용찬열사추모 집체극 「산불」 공연”, 『제주신문』 1992년 11월 6일자(제주연합141)

“진정한 제주도민의 법, 우리손으로 만들자”, 『제주신문』 1992년 11월 8일자(제주연합142)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1992 『제주의 소리』 (복간호: 16-1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6공비리 척결과 민주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A2[사건 일시] 1992.11.21~1992.11.2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11월21일 하오2시 제총협, 제주연합 등 도내 재야단체는 「6공비리 척결과 민주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제주대 및 제주시 중앙로 등지에서 벌였다. 이날 서명운동을 통해 이들 단체는 “지자제 실시 등 민주주의 전면실현,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정의실현, 노동 3권 등 국민의 기본권보장, 해직교사복직 등 사회문화의 민주적 개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역대학생공정선거감시단 소속 학생 1백여 명은 11월28일 하오2시 제주시 중앙로 등지에서 가두집회 및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학생들은 “주한미군철수, 지자제 즉각실시,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기무사 해체, 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실시, 교육 경제 농업대개혁 실시, 농산물가격 보장”을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6공비리척결 서명운동”, 『제주신문』 1992년 11월 22일자(제주연합144)

“6공비리 척결’ 대학생 「공감단」”, 『제주신문』 1992년 11월 29일자(제주연합14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필승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2.12.0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12월 6일 하오 3시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제주본부>(상임공동대표 모갑경목사 등 6명)가 주최한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필승결의대회」가 제주대학교 2동 중강당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제주도농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등 소속회원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제 승리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욱 분투하여 반드시 민주승리 국민승리의 큰 기적을 창조하자”고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모갑경

A7[관계 단체]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제주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제주도농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A8[관계 자료]

“민주정부 수립 결의”, 『제주신문』 1992년 12월 7일자(제주연합146)

A9[관련 사건]

2. 청년·학생운동

1. 1960년대 학생운동

제주도내에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시작은 1960년 4·19혁명으로 촉발되었다. 제주대학교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4월 27일부터 3일간 관덕정 광장 집회를 중심으로 가두 시위에 나섰다. 제주대학생들은 '4월혁명완수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제주도의회의 해산을 요구했다. 5월 1일에는 관덕정 광장에서 4월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제주대학생 7인은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하여 10여 년 간 금기시되었던 4·3사건의 실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제주대학생 2명이 검거되는 등 탄압이 이루어져 제주지역 학생운동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제주지역 학생운동은 1965년 4월부터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개되면서 다시 점화되었다. 제주대학생을 중심으로 '대일굴욕외교반대 제주도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강력한 시위와 단식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제주상고, 제주제일고, 남주고, 신성여고 학생들이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거나 단식투쟁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1967년에는 '6·8총선' 결과에 대한 규탄 집회가 제주대학을 비롯해 각 중·고등학교에서 열렸다. 1969년에는 오현고등학교 교장의 사직을 둘러싼 학내 분규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사진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3선개헌' 반대의 움직임도 일어났다.

2. 1970~1986년

1970년대 이후 제주지역의 학생들은 유신독재와 긴급조치 상황이라는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체제에 순응하여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억압 상황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0년 봄이 되자, 제주도내 학원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3월 7일의 학원민주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4월 11일에는 제주대학생 1천여 명이 자율학칙의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제주실업전문학교생들도 4월 14일 학원자율화를 요구하고 무능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5월 17일 제주대학에서는 자율적 총학생회 조직을 위한 선거에 들어가 합동소건을 발표하는 모임을 가졌으나, 바로 다음날 휴교령이 내리면서 1980년 봄 제주지역의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다.

1980년 전후 학생·청년운동은 지역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이를 기초로 한 소그룹 또는 공개썸클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9년 말 청년·학생·문화인들로 구성된 사회문화운동단체 '수놓음'이 조직되었는데, 1980년대 전반기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면서 문화운동을 전개했다. 1980년대 초에는 '서부교회 학생회', '기청 제주노회' 등 일부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한 청년·학생들의 사회과학 서적 독서모임 등이

유행하였다. 방학기간에는 타 지역 대학 제주출신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 운동의 내용,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1983년 10월 '자유항 반대투쟁'이 있기 전까지는 주로 '문화행사'를 통한 의식 전파와 비공개 소그룹 중심의 운동 역량을 축적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1983년 10월 '자유항 반대투쟁'은 밖으로는 외지자본의 유입에 대한 반발로서 일으킨 경제투쟁으로 보이지만, 1980년대 초반 비합법 탄압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마당극을 통한 공감대 형성, 학내에서의 서클 활동, 외곽의 조직 등이 어우러져 일어난 반독재 목적의식을 뚜렷이 하였던 운동이었다. 1980년대 제주지역 청년·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향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투쟁으로서, 이후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자유항 반대투쟁 이후 이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임과 문화패 '수놓음'은 공안기관의 압력과 내적인 문제 등으로 해체되고, 1984년 초반부터 운동의 근거지가 본격적으로 학내로 정착하게 되었다. 1984년 말 학생회 부활과 학원자율화의 전국적 분위기 속에 제주대학에는 '학생활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학원자율화 촉구 서명 운동을 벌였다. '학생활동대책위원회'는 학도호국단과의 연계 속에 1,500여명의 학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활동 자유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당국에 '학칙 개정' '학생회 활동 자율 보장' '학생회 부활' '언론자율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결의하였다.

1985년 2월초 구성된 '총학생회부활준비위원회'는 4월 11일 '총학생회결성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5월 15일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제정하고, 5월 말 선거를 치른 결과 11년 만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부활하였다. 1985년 5월 14일에는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5·18 광주사태 진상규명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시위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1986년 12월 2일에는 총학생회장 선거 국면을 이용해 '민주화투쟁실천대회'를 개최하고 '학원탄압 중지' '민주제 개헌' '독재정권 타도' 슬로건을 내걸고 학내외 시위를 전개하지만 학생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1986년 3월 25일 '제주대 민주헌법쟁취 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4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집회 및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후 '제주대학교 민주화 투쟁위원회'가 5월 광주민중항쟁의 추모식과 진상규명 투쟁을 전개하고 아라축전의 일환으로 제주 시내 공간에서 열리는 아라가요제 참가를 통해 기습 가두시위투쟁을 시도했으나 지도부의 연행으로 무산되었다.

1986년 하반기에는 87 총학생회 후보 선전유인물을 빌미로 후보자와 참모들이 11월 13일 연행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4일부터 '연행학우 석방'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어 총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진압대의 학내 진입으로 농성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연행함으로써 전체 학생대중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예정대로 치러진 후 총학생회 선거 결과 연행된 후보가 옥중 당선되었지만, 총장실 점거 학생들과 연행된 학생들을 학교 당국이 제명 처분함으로써 투쟁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총학생회 중심으로 '제명처분 철회' '어용총장 퇴진' 투쟁을 전개함과 더불어 1986년 말 '장기집권음모 분쇄

투쟁위원회'라는 비합법 투위를 중심으로 학내 문제와 연관된 목적의식적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3. 1987~1990년

1987년 상반기 투쟁은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에서 운동그룹 구성원의 당선과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서클연합회, 여학생회, 그리고 인문대·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유대를 강화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실질적 지도역량은 비공개 소그룹에 집중되어 있었다.

4월 3일을 전후해서 기획된 4·3대자보를 빌미로 4월 15일에 여학생회장과 사회과학대 홍보부장의 연행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때는 바로 '4.13 호헌조치'가 발표된 직후였다. 이후 중간고사 거부를 통해 '연행학생들의 석방투쟁'과 '부당징계 철회투쟁' '어용총장 퇴진투쟁' '민주제 개헌 쟁취투쟁'을 이슈로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연행학생들이 석방됨으로써 5월 투쟁은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채 비공개 소그룹 중심의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당시 5월 행사에 대한 소그룹 간의 이견은 투쟁 과정에서 분열을 드러냄으로써 운동 주체들의 역량을 약화시켜 버렸다.

이후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되면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6월 민주화 투쟁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는 6월 항쟁을 이끌어갈 특정한 사회운동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6월 항쟁은 대학생들, 특히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7년 박종철 사망과 관련하여 1987년 3월 3일 '박종철 열사 49재 추모대회'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렸으며, 6월 10일에는 '민주헌법 쟁취 제주대학교 추진위원회' 주최로 교문 앞에서 투석전을 전개하였고, 6월 21일 제주지역 최초의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7월 11일에는 '고 이한열군 추모와 살인정권 종식을 위한 규탄대회'가 열리자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시민과 학생을 폭행, 당시 제주대 법학과 4학년 김운삼이 경찰이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눈 아래 뼈가 부서지고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주대학생 7명이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7월 16일부터 농성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6월 항쟁의 과정은 제주대학교의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여학생회, 서클연합회 등과 제주전문대학, 제주간호보건대학, 제주교육대학 등 학생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범위를 벗어난 통일운동 조직은 1987년 8월 31일 제주 동문성당에서 '민주쟁취국민운동 제주본부'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1987년 하반기에 들어서 학생운동은 학원 내 어용세력 척결과 대중성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민주화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10월 중순에 제주대학교 학생운동 그룹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중간고사 거부, 수업 거부를 결의하였다.

1988년의 제주대 학생운동은 4월 총선 국면에서의 '민정당 낙선' 투쟁과 6월 이후의 6·10, 8·15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투쟁', 하반기의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계획 철회투쟁'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투쟁'으로 진행되었다.

6·10 남북 청년학생회담 성사 투쟁으로부터 8·15 '남북국토종단 순례대행진과 청년학

생 회담' 성사투쟁의 전 과정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단과 각 대학 학생회 내에 반합법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투쟁을 지도하였다. 제주대학교에서는 대표자로서 당시 총여학생회장이 상경하여 지도를 수행하였고, 제주대 내에서는 '특별위원회'가 6월 14일 정식 발족하였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는 학내 집회와 시위 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두시위 투쟁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 제주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족화해를 위한 탐라순례대행진' 행사를 가졌다. 남북 청년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국토종단 순례대행진에 대해 노태우 정권의 입장은 '원천봉쇄' 방침으로 일관되어 있었으나,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순례대행진 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

10월 중순에 이르러 송악산 군사기지 철폐 투쟁이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개되자, 10월 말에 제주대와 제주교대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군사기지 철폐 투쟁을 지역대책위와 연대 아래 진행하였다. 송악산 군사기지 철폐투쟁은 대정·안덕 지역주민과 도내 사회단체 그리고 재경학우회와 재경도민회 제주지역 청년·학생들의 연대 아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 송악산 군사기지 철폐투쟁은 학생운동과 지역주민운동과의 결합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시 제주대 총학생회 산하 특별 기구 이던 지역조사위원회가 상설화되기도 하였다.

< 청년운동 조직의 결성 >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청년운동 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었다. 제주지역 민주 청년단체 중 가장 먼저 창립한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서귀 나사청)'는 1989년 10월 29일 자주·민주·통일을 기치로 서귀포 YMCA 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서귀 나사청'은 회원의 친목 도모와 단결을 위한 활동, 청소년의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사업, 서귀포 지역문제의 연구·조사 및 민생문제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서귀포 지역의 청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제주민주청년회'는 1991년 9월 9일, "청년의 정치·경제·사회적 제 권리를 옹호,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의 현안문제 극복과 지역 대중의 제권리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함"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대정나라사랑청년회(대정 나사청)'는 1992년 3월 14일 대정읍민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대정 나사청'은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투쟁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 받아 읍단위 지역 청년회로서는 처음으로 자주적 청년회의 깃발을 들었다. '대정 나사청'은 송악산이 있는 대정읍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투쟁 직후부터 청년회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중에 대정중학교 전교조 가입교사의 해직에 반대하고 지역의 참교육 실현을 위한 대정중학교 동문들의 모임을 조직한 것이 시발이 되어 준비위가 결성되고 이후 창립으로 이어졌다.

'서귀 나사청'과 '대정 나사청'은 모든 운동이 서울 중심이듯이,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시

중심으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시와 대정읍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었다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1992년 9월 6일 ‘서귀 나사청’, ‘제주민주청년회’, ‘대정 나사청’ 등 세 개의 청년운동단체가 모여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를 구성, 창립하게 되었다. 청년운동은 이 시기 전국적으로 반미·통일운동이 활발했던 흐름과 맞물려 있는데, 이는 청년운동에 참여하는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였던 NL 계열 출신들이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운동 조직들은 당시 민족민주 운동의 중심이었던 ‘제민협’, 후에 ‘제주연합’의 주요 가맹단체로 ‘제민협’이나 ‘제주연합’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하는 조직들이었다.

A1[사건명] **한일회담 반대 시위**

A2[사건 일시] **1965.04.15~1965.07.08**

A3[사건 배경] **대일 굴욕 외교 반대**

A4[사건의 전개과정]

1965.04.15 제주대학 학생 관덕정 광장에서 30분간 시위

1965.04.15 제대강당에서 한일회담성토대회 개최

1965.04.15 제상고생 교정에서 굴욕외교 반대 시위

1965.04.19 서귀포에서 제대 이농학부학생과 남주고교 학생 시가 데모

1965.06.23 제주대학 학생 한일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자 단식투쟁

1965.06.23 도내 중고등학교 일제히 임시휴교

1965.07.05 제주제일고 학생들 조기방학에 반발하며 4백여명 시위

1965.07.07 제주상고, 신성여고 한일협정 비준반대 단식돌입

1965.08.14 한일협정비준, 밤9시경 제주대학생 20여명은 대학교정에서 반대하는 야간 횃불 시위를 강행

A5[사건 내용] 「평화선을 사수하자」고 들고 일어난 일부 제주대학 학생들은 4월15일 상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뛰어나와 관덕정 앞 광장에서 30분 남짓 동안 연좌 「데모」를 벌였다. 약 2백명의 제주대학 학생들은 이날 상오10시30분 동 대학 강당에서 「한일회담성토대회」를 열고 평화선을 사수할 것을 다짐하고 강력한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시가로 뛰어나왔다. 태극기를 앞세운 학생들은 대학 정문 앞 네거리와 서문통 다리에서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의 저지를 받고 27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 관덕정앞 광장까지 진출한 70여명 학생들은 「연행학생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연좌데모에 들어갔다 수많은 시민이 연도에 모여들고 학생들은 3명의 대표학생들을 뽑아 연행 학생석방을 절충토록하고 약30분만에 학교로 돌아갔다. 대일굴욕외교반대 제주도 투위는 연행된 시위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였다. 고태선투위위원장은 제주대학 학생들의 4월 15일 시위가 지극히 평화적임을 강조하면서 연행된 학생을 전원 석방해야 하며 육지부 대학에서와 같이 시위학생을 제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장하였다. 제대학생에 뒤이어 제상고학생 6백여명이 시위하며 제지하는 경찰관과 투석으로 맞서 경찰

관2명과 상고학생 6~7명이 부상을 입은 불상사를 낳았다. 4월15일 12시20분경 교정에 모인 상고학생들은 ① 질서를 존중한다 ② 평화선을 사수하자 ③ 굴욕외교를 반대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낭독한 다음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와 관덕정쪽으로 가는 도중 서문교 서쪽에서 경찰의 저지선에 부딪쳐 밀치고 밀리는 두 차례에 걸친 승강이로 급기야 투석과 곤봉이 충돌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사태로 말미암아 서문통 노변상가 「한영상사」(주인 = 정순보, 35세 양품점) 유리문 수십장이 파손 피해를 입었다. 끝내는 경찰의 강력한 제지로 시위는 좌절되고 말았는데 9명의 학생이 연행되었으며 부상학생 가운데 오세보군(3년19세)은 후두부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정복 경찰관 강창준순경은 날아드는 돌맹이로 앞이마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15일 밤10시30분, 이날 시위현장에서 연행했던 제대학생 28명과 제상고학생 9명을 전원 석방했다. 박만영 경찰국장은 이들을 전원 귀가시킨 이유에 대하여 그 행위자체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나 첫 번이고해서 학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모두 불구속으로 입건했던 것이라고 경찰의 기본방침을 천명하고, 앞으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는 무조건 구속·입건하겠다고 강경책을 내걸었다. 경찰은 4월15일 낮 제상고 학생들이 시위 대열 속에 끼어들어 돌팔매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평순군(22세, 목공)에게 29일간 구류처분을 내리고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4·19의 날 서귀포에서는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교내에서 연 제대이농학부학생 60여명과 남주고교 학생을 포함한 1백여명이 시가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10여명을 연행했는데, 연행학생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서귀경찰서 앞에서 연좌시위를 했으며 이날 정오 서귀 5일 장터로 옮겨 연좌시위를 계속하였다. 도내경찰은 21일 밤부터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이 비상경계 태세는 한일회담조인과 조기방학반대를 둘러싼 시위 등 일련의 사태에 대비한 전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학 법과 3년생인 대표학생은 6월22일 저녁이면 「우리들의 행동방법 즉 시위아니면 단식투쟁 어느 하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보다 하루 앞선 6월21일 밤 수명의 학생들은 시위를 논의하다 경찰에 연행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문종철제주대학장은 6월23일 단식투쟁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호소하였다.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들고 일어난 일부학생들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동안 문학장은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있어서는 안 될일」이라고 못을 박고 「학생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의 「단식행동」이 금명간에 끝이 날것으로 안다고 말한 문학장은 단식투쟁 다음 제2의 사태로 발전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은 일련의 정치적 행동은 명백히 학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징계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민중당원 고태선씨 등 7명은 22일 밤8시25분경 시내 중앙극장에 모여 일장기 화형식을 갖는 한편 제2이완용을 규탄하는 매국표창장낭독 등을 가졌고, 경찰은 이들을 전원 연행하여 밤늦게까지 심문하고 일단 귀가조치를 취했다. 제주대학 단식

학생들은 단식 이틀째인 6월23일밤 11명이 단식에서 이탈함으로써 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탈학생들은 이날 밤사이에 그들 학부형들의 만류로 집으로 돌아갔다. 6월24일 상오 현재 3일째의 단식을 계속 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들 가족들의 만류를 받고 있다. 7월6일 아침 경찰의 저지를 받아 시위에 실패한 일고학생들은 다시 학교에 집결하여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시 시위에 돌입할 기세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교사들의 필사적인 만류로 해산되었다. 한·일협정반대와 조기방학의 취소를 요구하는 약2백여명의 학생들은 이날 하오 두번째의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자 교사들의 필사적인 만류를 받았다. 「쓰러진 선생의 몸을 밟고 넘어가라」는 스승의 목메인 호소에 시위학생들은 학교교정에 주저앉았으며 약 한시간만에 해산하였다. 이밖에도 제주상고학생들이 시위를 계획 웅성거렸으나 역시 교사들의 만류로 해산·앞당겨 실시된 여름방학에 반발한 학생들로 어수선한 등교 마지막 날을 넘겼다. 뒤늦게 일기 시작한 학생가의 회오리와 함께 모든 중고교는 7월7일부터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한편 7월6일 앞당긴 여름방학 실시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교문 밖으로 뛰쳐나온 시내 일고학생가운데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지목 경찰에 연행되었던 학생대표들은 이날하오 늦게 집으로 되돌아갔다. 다른 한편 제상고학생 10여명은 7월6일 하오부터 학교 구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미리 예고없이 내려진 방학조치에 따른 항의의 표시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7월7일 상오10시반 신성여고 1·2학년 60여명과 3학년학생 50명등 2백여명 가량이 본관 2층 복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48시간 예정이라는 이 단식은 시작하지 3시간인 낮12시반 현재 상당수가 지쳐 쓰러졌다. 그런데 7월6일 일고학생들의 시위를 고비로 제주도 학생가는 갑자기 긴장되었다. 7월7일 제주상고 신성여고 오고의 일부 학생들이 각기 그들의 학교에서 한·일협정비준반대를 선언하고 48시간의 단식에 들어갔으며 경찰은 새로운 사태발전에 대비하는 삼엄한 경비망을 펴고 있다. 단식 첫날밤 상당수의 학생들이 단식 투쟁에서 이탈하였으나 총수엔 거의 변화가 없다. 이들은 단식 장소로 찾아간 학부형들의 끈질긴 만류를 줄곧 받고 있다. 7월8일 상호 현재 상고17명, 오고40명이 신성여고는 약 2백명의 학생들이 학부형들의 만류 속에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 단식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만24시간을 넘긴 7월8일 상오 현재 기력을 잃고 드러눕고 있는데 그들이 내세운 48시간의 단식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신고 학생 2명이 졸도하여 학교당국의 응급치료를 받았다. 학생들의 반대시위는 한일협정비준을 무효화투쟁으로 이어졌고 제주대학은 무기휴학을 선포하여 무마시켰다.

A6 [관계 인물] 김의중, 오성춘, 서경린, 이재병, 정영부, 고석희, 고정언, 홍봉협, 고완봉, 고동훈, 오용수, 부봉하, 김희순, 김봉수, 백원지, 김승웅, 임찬진, 강원식, 신두완, 김량철, 김충희, 김근방, 김석환, 오경호, 김봉주, 홍승협, 박성중, 오세보, 강창준, 김평순, 고태선

A7 [관계 단체] 대일굴욕반대 제주도 투위

A8 [관계 자료]

- “제대생들 연좌데모”, 『제주신문』 1965년 4월 16일자(제주청년학생001)
“27명 연행”, 『제주신문』 1965년 4월 16일자(제주청년학생002)
“투석전도 빚어”, 『제주신문』 1965년 4월 16일자(제주청년학생003)
“데모학생 전원석방”, 『제주신문』 1965년 4월 17일자(제주청년학생004)
“29일간 구류처분”, 『제주신문』 1965년 4월 18일자(제주청년학생005)
“서귀포선 학생데모”, 『제주신문』 1965년 4월 20일자(제주청년학생006)
“단식 아니면 ‘데모?’”, 『제주신문』 1965년 6월 23일자(제주청년학생007)
“어제 제대도 방학”, 『제주신문』 1965년 6월 23일자(제주청년학생008)
“경찰 ‘비상경계’”, 『제주신문』 1965년 6월 23일자(제주청년학생009)
“구류물리친 ‘단식’”, 『제주신문』 1965년 6월 24일자(제주청년학생010)
“단식학생 징계회부?”, 『제주신문』 1965년 6월 24일자(제주청년학생11)
“입건여부고려-일장기화형한 민중당원 7명”, 『제주신문』 1965년 6월 24일자(제주청년학생012)
“11명 이탈 잔류9명”, 『제주신문』 1965년 6월 25일자(제주청년학생013)
“스승만류에 주춤”, 『제주신문』 1965년 7월 7일자(제주청년학생014)
“6일 하오 귀가”, 『제주신문』 1965년 7월 7일자(제주청년학생015)
“제상고생 단식”, 『제주신문』 1965년 7월 7일자(제주청년학생016)
“신고생도 단식”, 『제주신문』 1965년 7월 7일자(제주청년학생017)
“2백여 학생단식 계속”, 『제주신문』 1965년 7월 8일자(제주청년학생018)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 제주도, 2005, 『제주사연표』 II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6·3총선 규탄 시위**

A2 [사건 일시] 1967.06.15~1967.06.20

A3 [사건 배경] 6·3총선 부정

A4 [사건의 전개과정]

- 1967.06.15 제대 일부 학생들 운동장에 모여 선거무효 주장 결의문 채택
1967.06.16 제대생 1백여명이 모여 성토대회 갖고 10여분만에 해산
1967.06.16 오현 중고생들 동교 교정에서 성토대회를 개최
1967.06.16 제대 무기휴교
1967.06.16 도교위 중고교 재량하에 무기휴교 지시
1967.06.17 오현중고 하루 휴업
1967.06.19 5백여명의 대정중고등학생들 30분동안 시위 10시4분부터 가두시위 벌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하오1시께 해산
1967.06.19 낮 2시 30분경 5일시장앞 신민당 제2지구당 부위원 김재호씨 등 시위 벌이다 경찰제지로 좌절
1967. 6.19 하오 3시 30분 남주고 학생 운동장서 성토대회 개최

A5 [사건 내용]

「6·3총선규탄」의 물결은 제주까지 파급되어 대학과 일부고교는 시위와 성토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6월15일 낮 제대일부 학생들은 산발적으로 운동장에 모여 「6·8총선의 부정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 했으며 6월16일 상오엔 다시 1백 여명이 모여 성토대회를 갖고 「여야 정치인과 일반국민에게도 부정선거의 책임은 있다」고 결의 10분만에 해산했다. 또한 오현 중고생들은 6월16일 교정에서 성토대회를 갖고 가두시위를 벌이려 했으나 경찰기동대의 출동으로 이날 상오 11시 현재 학생들과 경찰과 대치하였다. 오현 중고생들은 이날 상오 첫 시간 수업을 마치고 교정에 집결 6·8총선거를 「권력과 금력에 의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부정선거의 원흉을 색출 처단하고 6·8선거를 묵살하고 공명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을 장기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성토대회는 9시50분에시작 15분만에 마치고 학생회간부들이 입실을 종용했으나 학생들은 이에 반대 「부정선거가 행정적 민주주의냐」 등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에 나서려 하자 무장된 경찰기동대가 출동 대치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제주대학은 긴급사태에 대비 무기휴교에 들어갔다. 또한 도교위는 6월15일하오 「긴급사태에대비 중고교장 재량하에 무기휴교를 단행토록」 긴급지시를 했다. 도교위는 이날 경향 각지를 비롯 전국에 파급되고 있는 시위사태에 대비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것인데 6월16일 상오 오현 중고생들의 성토대회로 각급학교는 방학을 앞당길 기세이다. 오고1년의 양태반(16)군은 구두발로 우측옆구리와 곤봉으로 왼쪽목을 맞아 심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또한 이날 12명의 시위주도학생들을 연행했는데 이날 밤 모두 훈방했다. 한편 오현중고생들은 1시경 교정으로 돌아가 연화 「연행한 학우들을 돌려보내라」고 외치다 「이날 중 훈방한다」는 말을 듣고 1시30분경 모두 해산했다. 6월19일 하오3시30분 남주고 2백여학생은 운동장에 모여 「6·8총선규탄」 성토대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성토대회에서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6·8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자인하라」고 주장했다. 이날의 성토대회에선 「휴업철폐」 「구속학생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시위에 나서려 했으나 교사들의 완강한 말류로 저지되었다. 6월19일 낮2시30분경 5일시장앞 노상에서 신민당 제2지구당부위원 김재호(36)씨의 15명의 신민당원들이 시위를 벌이려다 경찰의 제지로 좌절되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신민당원들은 「못살겠다 뭇처라」 「부정선거 규탄하자」는 등의 펼침막을 들고 나섰으나 약4분만에 경찰의 제지로 해산되었다. 경찰은 시위대원 중 7명을 연행하는 한편 주동자로 알려진 김재호씨외 2명을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제일고교생 약3백여명은 교내에서 성토대회를 가 진다음 거리로 나서려 했으나 교문밖에 경비망을 친 경찰기동대와 동교교사들의 만류로 2시간동안 연좌시위를 벌이다 해산했다. 이날 일고생들은 「막걸리한잔에 공명선거 취했구나」라고 쓴 펼침막을 앞세우고 「6·8총선은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같은날 상오 11시경 대정고생 1백50명은 선거부정규

탄 시위를 벌이기 위해 모슬포시내 모교회에 산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으나 미리 대기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시위학생들은 이날부터 대정고교가 3일간 휴교령이 내리자 전기교회로 집회장소를 정했다한다. 7월3일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제주대학생들이 6·8총선거탄시위와 성토대회를 벌였다. 이날아침 제대생 약3백여명은 경찰기동대가 교문주변을 경비하고 있는 가운데 동교강당에서 성토대회를 벌였다. 7월3일 아침 9시 서귀포에 있는 제대이농학부학생 약1백50명은 약 30분동안 교정에서 성토대회를 가진다음 시위하며 교문밖 약10미터지점까지 진출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교내로 철수·교실에서 농성하고 있다. 한편 시내에 있는 제주대학 법문학생 약3백여명은 7월3일 상오9시30분경 학교측에서 이날부터 실시하는 학기말 시험이 조기방학을 뜻하는 것이라고 반발 강당에서 성토대회를 열었다. 제대생들은 7월4일 상오 시위에 들어가 시내에까지 진출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약 1시간만에 해산되었다. 경찰은 이 시위진압에서 선두에 나섰던 주동학생 11명을 연행했다. 이날 상오9시30분경 동대학생 1백여명은 다른 학생들이 교실에서 학기말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단식투쟁을 벌이던 학생 6명과 합세 교정에서 화형식을 가진다음 교문을 나와 시내 서문통 오일시장 입구까지 진출했다. 시위학생들은 곧이어 출동한 경찰기동대의 제지로 주동학생이 연행되는가운데 일단 해산했으나 경찰이 철수한 기미를 알아차리자 서문오일시장 길목에 집결 남국민학교 앞길을 거쳐 남문통길로 빠져나오려다 이날상오10시30분 경찰의 저지로 해산되었다. 7월5일 제주경찰서는 7월4일의 일부제주대학생 가두시위를 선동한 주동학생 서저수(제대법과3) 김향진(영문과2)외 2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주동자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7월5일 서귀경찰서는 7월4일의 제대이농학부학생시위를 선동한 주모자 4명에 대해 제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 중 홍기영(축산과3명)군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손괴 혐의로 구속하고 오영수(농학과3년) 한두옥(좌동) 고유봉(축산학과3년)군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날 제주지법은 서귀경찰서가 구속을 신청한 주동학생 8명중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지검 이원형검사는 지난 7월초 서귀포 시내에서 6·8 부정선거규탄 데모를 벌인 학생데모주동학생 한두기(20가명=서귀읍) 고봉유(가명 21=서귀읍)군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9월1일 구속했다. 사건후 자취를 감추어 기소중지되었던 이들 학생은 지난7월4일 상오10시경 서귀포소재 성결교회 앞 노상에서 제대농대생 약 70여명을 규합 6·8부정선거규탄과 전면재선거를 요구코 데모를 벌인 주동혐의이다

A6 [관계 인물] 양태반, 김재호, 고영진, 오영환, 서저수, 김향진, 홍기영, 오영수, 한두옥, 고유봉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총선규탄 본도에도 파급”, 『제주신문』 1967년 6월 16일자(제주청년학생020)
 “제대 16일부터 무기휴교”, 『제주신문』 1967년 6월 16일자(제주청년학생021)
 “중고도 휴교지시”, 『제주신문』 1967년 6월 16일자(제주청년학생022)
 “오현중고 17일 하루 휴업”, 『제주신문』 1967년 6월 17일자(제주청년학생023)
 “교문나와 한때총돌-오중고생 하오 1시경 해산”, 『제주신문』 1967년 6월 17일자(제주청년학생024)
 “대정서 학생데모”, 『제주신문』 1967년 6월 19일자(제주청년학생025)
 “남주고서도 ‘성토’”, 『제주신문』 1967년 6월 20일자(제주청년학생026)
 “술렁대는 학창가-일고등3개교 데모하려다 좌절”, 『제주신문』 1967년 6월 21일자(제주청년학생027)
 “과잉제지로 부상”, 『제주신문』 1967년 6월 22일자(제주청년학생028)
 “각급학교 내주중엔 정상화”, 『제주신문』 1967년 6월 24일자(제주청년학생029)
 “또 술렁이는 학창”, 『제주신문』 1967년 7월 3일자(제주청년학생030)
 “제대생 계속 데모”, 『제주신문』 1967년 7월 4일자(제주청년학생031)
 “주동학생 구속영장신청”, 『제주신문』 1967년 7월 5일자(제주청년학생032)
 “데모주동했던 한군등2명 구속”, 『제주신문』 1967년 9월 5일자(제주청년학생033)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도내 대학 학칙개정요구 시위**

A2 [사건 일시] 1 1980.04.11~1980.05.08

A3 [사건 배경]

A4 [사건 전개과정]

1980.04.11 제대학생 1천여명이 상오9시30분부터 교정에 모여 학칙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1980.04.12 농성을 벌였던 제대학생들은 이날하오 교수와 학생대표간의 대화를 통해 학교측의 점진적인 시정약속을 받고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1980.05.08 실전대는 학생들의 학칙개정을 둘러싼 교내시위 및 농성이 장기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5월8일부터 무기한 휴강에 들어갔다

A5 [사건 내용] 제대학생 1천여명이 4월11일 상오9시30분부터 교정에 모여 학칙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가칭 「민주화 추진 학생평의회」라는 이름으로 교수회의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학칙개정을 감행했다고 주장, 학생공청회를 통해 이를 재개정하고 어용교수 및 무능교수 사퇴 학원자율화를 저해한 학장·학생과장·구소장 등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11시현재까지 대학도서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4월11일 학칙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제대학생들은 이날 하오 교수와 학생대표간의 대화를 통해 학교측의 점진적인

시정약속을 받고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대학측은 학원소요사태와 관련, 이날하오 1시 긴급교수회의를 열어 학생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타결점을 모색키로 결정하고 교수대표 10명을 인선했는데 이들 교수들은 하오 늦게 학생대표 15명과 만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해듣고 학교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학칙개정과 관련, 오는 4월14일 대의원총회소집을 약속했다. 한편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요구사항에서 밝혔던 확장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은 학원내의 구폐를 청산하고 비민주적 요인을 척결하는 뜻에서 지난3월6일 14개서클이 중심이 된 「학원민주화 준비서클연합회」(가칭)가 주최한 「학원 민주화를 위한 1차공청회」에서 학생활동에 관한 문제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학도호국단철폐·학생회부활, 대학내의 언론자유보장, 학칙개정, 기관원의 교내사찰금지” 등을 건의했으나 학교측은 이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4월8일 교수회의에서 학칙등을 개정했지만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해 개정학칙 등이 구체제의 틀에 벗어나지 못한채 부분적인 수정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은 농성을 벌여 가칭 「민주화추진 학생평의회」 이름으로 ① 학칙재개정 ② 어용·무능교수사퇴 ③ 확장·학생과장·학생지도연구소장퇴진 ④ 학원내 구잔재정산 ⑤ 제주도의 문제제기 및 의식화작업추진 ⑥ 학생복지시설확충 ⑦ 총학생회부활때까지 학원내의 선거거부 등 7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실업전문대학 각과대표학생과 학도호국단 간부 등 35명은 지난4월12일 대학도서관에서 모임을 갖고 학원자율화에 따른 현안문제는 대학당국과 대화를 통해 협의키로 하고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원의 자율화를 위해 학도호국단의 개편에 의한 학칙개정과 서클활동의 자율화를 보장해주고 대학운영에 있어 재단측의 간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줄것을 요구했다. 각과 대표학생을 통해 대학측에 전달된 건의사항은 ① 무능교수퇴진 ② 학생복지시설의 개선 ③ 실험실습실과 도서관 시설의 확충 ④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강화 ⑤ 대학캠퍼스의 조속이설 ⑥ 학생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축제의 조기개최 ⑦ 장학금의 수혜자 폭을 확대해 줄 것 등 모두 11개사항이다. 한편 실전대측은 4월14일 하오 관계과장의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개선점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실전대는 학생들의 학칙개정을 둘러싼 교내시위 및 농성이 장기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5월8일부터 무기한 휴강에 들어갔다. 이 학교학생 3백여명은 5월7일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된 학칙개정, 재단과 학교와의 분리, 직선에 의한 총학생장선거, 학교예산을 공개할 것” 등 10여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교내시위를 계속해왔는데 5월7일에 이어 5월8일에도 앞의 구호를 내걸고 농성이 계속됨에 따라 무기한

휴강에 들어간 것이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제대생 1천여명 농성 자율학칙 요구”, 『제주신문』 1980년 4월 11일자(제주청년학생 034)

“제대생들 학장퇴진요구를 철회”, 『제주신문』 1980년 4월 12일자(제주청년학생035)

“실업전문대들도 자율화건의”, 『제주신문』 1980년 4월 14일자(제주청년학생036)

“실전휴강-농성장기화따라”, 『제주신문』 1980년 5월 9일자(제주청년학생037)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제주대생 민주헌법 쟁취 시위**

A2 [사건 일시] 1986.04.10

A3 [사건 배경]

A4 [사건 전개과정]

1986.04.09 제주대생 교내 자유의 광장에서 시위

1986.04.13 시위관련 4명 구류처분

1986.05.14. 광주항쟁 6주기 추모기념 집회 및 시위

1986.05.27 제민투 주도 시위 및 시위학생 3명 연행됨

1986.05.28 도서관 농성 시위

1986.05.29 도서관 농성 해산

A5 [사건 내용] 제주대 학생 1백여명은 4월 19일 교내 자유의 광장에서 총학생회 발대식을 한 후 "민주헌법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이과정에서 제주대 민주헌법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영산(행정학과 4년), 현맹수(사회학과 4년), 홍순자(영문학과 4년), 양진혁(사학과 3년) 4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유언비어언유포)으로 구류처분(5일~20일)을 받았다. 또 5월13일 2백여명은 광주항쟁6주기 추모제를 개최하며 “군사독재타도와 민족통일을 위한 제주대학교민주화투쟁위원회(약칭 제민투, 위원장 고창후)의 발족식을 가진 뒤 “광주민중항쟁계승하여 민족민주화 투쟁에 총진군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이 과정에서 제민투 홍보담당부위원장 강성순(법학과 4년) 등 8명이 연행되었고 강양을 제외한 7명은 일단 풀려남. 제민투는 27일 제민투발간 「햇불」 2호와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글」 등의 유인물을 나눠주며 시위. 이 과정에서 제민투위원장 고창후(법학과 4년), 부위원장 김현실(수학교육 4년), 김영철(사회학과 4년)이 연행됨. 28일 제주대생들은 “연행학생 석방하라”, “민주헌법쟁취하자” 등을 주장하며 도서관에서 농성하

다 29일 자진해산하였다.

A6 [관계 인물] 김영철, 김영산, 현맹수, 홍순자, 양진혁, 고창후, 김현실
A7 [관계 단체] 군사독재타도와 민족통일을 위한 제주대학교민주화투쟁위원회

A8 [관계 자료]

“제대생 1백명 시위”, 『제주신문』 1986년 4월 10일자(제주청년학생038)

“시위관련 제대생 4명에 구류처분”, 『제주신문』 1986년 4월 14일자(제주청년학생039)

“제주대생 50명 시위”, 『제주신문』 1986년 5월 28일자(제주청년학생040)

“제주대생 2백명 시위벌여”, 『제주신문』 1986년 5월 14일자(제주청년학생041)

“제주대생 80여명 도서관점거 농성”, 『제주신문』 1986년 5월 29일자(제주청년학생
042)

“농성 제주대생 귀가”, 『제주신문』 1986년 5월 30일자(제주청년학생043)

A9 [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대학교 부당징계철회투쟁**

A2[사건 일시] 1987.04.20~2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7.04.20. 제주대학생 부당징계철회 등 요구 87학년도제1학기 중간시험 거부, 교내시
위

1987.04.23. 총장실 점거 철야농성 돌입

1987.04.25. 총장실 점거농성 풀고 해산

A5[사건 내용] 1987년 4월 20일 제주대학교학생 3천여 명은 부당징계철회 등을 요구
하며 87학년도제1학기 중간시험을 거부하고 하오4시까지 교내시위를 벌였다. 이
날 학생들은 8교시까지 대상인원 6천3백77명중 5백10명이 시험을 치러 8%의 저
조한 응시율을 보였다. 4월 23일 학생 1백여 명은 하오5시27분께 총장실을 점거,
“학생 부당징계철회” 등 4개항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중간고사 4일째
인 23일에는 총 대상학생 6천19명중 13.3%인 8백1명만이 응시, 나머지 학생은
시험을 거부했다. 한편 7월 25일 상오11시40분께 학생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하
겠다는 학교 측의 설득에 따라 학생들은 농성을 풀고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생 시험거부”, 『제주신문』 1987년 4월 21일자(제주청년학생044)

“총장실 점거 이틀째 농성”, 『제주신문』 1987년 4월 24일자(제주청년학생045)

“농성풀고해산 제대생70여명”, 『제주신문』 1987년 4월 25일자(제주청년학생04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광주항쟁 제7주기 추모제**
A2[사건 일시] 1987.05.1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7년 5월 18일 하오2시 제주대생 1백여 명은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광주항쟁 제7주기 추모제」를 갖고 “호헌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벌인 뒤 하오3시 10분께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생 교내시위”, 『제주신문』 1987년 5월 19일자(제주청년학생04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전문대 학원자율정책토론회**
A2[사건 일시] 1987.09.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전문대학생 3백여 명은 1987년 9월 9일 낮 12시20분께부터 “학원 자율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이어 12시50분께 운동장에서 「학원자율정책토론회」를 갖고 “문교 5원칙 폐지, 학교운영계획의 구체적 제시, 실험실습비 내역서공개, 장학제도대폭개선, 취업대책위원회 강화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학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오2시40분께 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교내시위·토론회”, 『제주신문』 1987년 9월 10일자(제주청년학생04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학원민주화투쟁선포식 및 좌경용공조작규탄대회**
A2[사건 일시] 1987.09.1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생 1백여 명은 9월 14일 하오1시께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학원민주화투쟁선포식 및 좌경용공조작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학원민주화를 위한 학생의 입장과 현 학원문제점등을 논의하고 공식건의문을 채택했다. 학교 측에 제시한 이 건의문에서 학생들은 “사회민주화의 초석이 될 학원의 진정한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대생 민주화 투쟁 - 선포식등 개최”, 『제주신문』 1987년 9월 15일자(제주청년학생 04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대학교 어용총장퇴진투쟁**

A2[사건 일시] 1987.09.21~1987. 11.1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7.09.21.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어용총장퇴진과 기성회비공개 및 문교5원칙 완전철폐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

1987.09.28. 「어용총장퇴진 및 문교5원칙 완전철폐를 위한 실천대회」 개최 후 총장실 점거농성 돌입

1987.09.30. 「어용총장추방을 위한 제3차 실천대회」 개최 / 제주대 교지편집위원회 학생 지지철야 농성 돌입

1987.10.02. 김두희총장 및 학처장 담화발표 / 총학생회 담화 발표

1987.10.05. 「어용총장추방을 위한 제5차 경과보고 및 실천대회」 개최 / 처국장실 점거

1987.10.19. 제주대 중간고사 거부투쟁 돌입

1987.10.20. 교내 시위

1987.10.22. 중간고사거부 4차 전체집회, 본부 학생과사무실, 이공대 학장실, 사무국장실 점거

1987.10.23. 「시험거부투쟁 평가 및 향후투쟁방향 모색을 위한 전체집회」 개최.

1987.10.24. 전체 교수회의 개최

1987.10.26. 수업거부 돌입

1987.10.28. 「어용총장 퇴진을 위한 출정식」 후 교문 밖 진출시도, 경찰과 투석전 전개

1987.10.29. 「어용총장 퇴진을 위한 제2차출정식」 후 교문 밖 진출시도, 경찰과 공방

1987.10.31. 전체교수회의 개최

1987.11.02.전체교수회의 5개항의 결의문 채택 / 총학생회, 「어용총장퇴진과 학원민주화를 위한 제2차 비상학생총회」 개최

1987.11.03. 제3차 비상학생총회

1987.11.10. 학생대표와 중재교수간의 학원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짐. 학원정상화

A5[사건 내용]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1987년 9월 21일 어용총장퇴진과 기성회비공개 및 문교5원칙 완전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총학생회는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학교당국이 민주학원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조치 없이 아직도 수동적으로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다.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학원탄압의 주범인 어용총장퇴진과 실험실습비 공개 및 문교5원칙의 완전철폐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만 제대인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9월 28일 학생 1백여 명은 야외음악당에서 「어용총장퇴진 및 문교5원칙 완전철폐를 위한 실천대회」를 가진 후 이중 20여명이 총장실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40여명의 학생들은 29일 상오8시 교문을 차단하고 동조농성을 벌이다 이날 상오 9시45분께 해산했다. 30일 제주대생 50여명은 이날 하오2시께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어용총장추방을 위한 제3차 실천대회」를 가졌다. 하오부터는 제주대학교교지편집위원회 학생 10여명이 지지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총장실점거 농성이 6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일 제주대 김총장은 담화를 발표 “일부 학생들이 총장퇴진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 농성하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총장의 퇴진문제에 대해서는 사인이 아닌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보아 금후 제도적 조치가 불원간 이루어질 때 해결될 사안이라고 확신한다. 학원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할 현시점에서 학생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이에 대처, 학원기능 정상화에 진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월 5일 하오3시30분께 학생 50여명이 본관2층 교무·학생처장실과 사무국장실을 점거하고 지지농성을 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하오1시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어용총장추방을 위한 제5차 경과보고 및 실천대회」를 갖고 교내시위를 벌인 뒤 처·국장실을 점거했다. 한편 이날 하오6시 본관 앞에서 김총장과 학생과의 면담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총장은“대학의 질서를 위해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10월 19일부터 실시된 2학기 중간고사를 거부했다. 제주대는 19일부터 24일까지 중간고사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이 김총장 퇴진과 학원민주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시험을 거부, 상오9시부터 실시된 1교시에 대상학생 2백63명중 23.1%인 61명만 이 응시했으며 2교시 9.1%, 3교시 18.8% 등 낮은 응시율을 보였다. 한편 제주대관계자는 학생들의 시험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10월 20일 하오2시20분께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후보단일화 및 공정선거를 위하여」 주제의 시국토론회를 벌인 뒤 “어용총장퇴진” 등을 주장하며 교내시위를 벌였다. 시험거부는 계속됐으며 사회과학대학인 경우에는 한명도 응시하지 않았다. 10월 21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학생 3명이 실신해 한국병원에 입원했다. 이와 함께 총장실을 점거한 학

생들은 지난 14일 총장실입구에서 총학생회와 복학생협의회 현판식을 갖고 24일
 째 농성을 계속했다. 10월 22일 하오3시께 학생들은 「중간고사거부 4차 전체집
 회」를 가진 뒤 본부 학생과사무실과 이공대학장실을 차례로 점거했다. 이날 학
 생들은 집회에서 교수협의회회장으로부터 현 학교상황에 대한 교수협의회 입장
 발표를 들은 뒤 하오4시 10분께 “어용총장퇴진”을 주장하며 본관학생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이어 이공대학장실을 점거했다. 또한 이날 밤 10시께에는 야간강좌무학
 생들에 의해 사무국장실도 점거됐다. 이날 집회에서 교수협의회회장은 “아직 전
 체 교수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학교 측에 학원안정을 위한 전체교수
 회의 개최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체교수협의회를 소집, 입장을 밝
 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식농성중인 학생 1명이 실신 병원으로 이송됐다. 23일
 하오2시 학생들은 「시험거부투쟁 평가 및 향후투쟁방향 모색을 위한 전체집
 회」를 가진 뒤 본관경리과·수업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로써 일부 학교업무가
 마비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학교 측은 24일 상오11시 전체교수회의를 개최. 학
 내소요에 따른 정상화방안과 시험거부에 관한 향후대책토의에 들어갔다. 한편 이
 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6일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갈 것을
 표명했다. 또한 이날 제주대교수협의회에서는 학원민주화 정상화를 위한 입장과
 견해를 발표하고 “총장은 공인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원정상화를
 위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학생들은 총장의 분명한 태도표명과 동시에 농
 성을 해제, 정상적인 학업에 임하며 전체교수회의에서도 사태를 풀려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협의회 독자적인 수습안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10월 26일부
 터 학생들은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이날 제주대생들은 학회별 또는 각 단과대학
 학년별연합회를 결성, 어용총장퇴진 때까지 수업을 거부키로 결의 첫날 75%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치 않았다. 10월 28일 학생 5백여명은 하오1시께 민주광장에
 서 「어용총장 퇴진을 위한 출정식」을 갖고 교문 밖 3백m 지점인 교수아파트
 입구까지 진출, 대기중인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투석전을 벌이다 하오4시30분께
 교내에서 자진해산했다. 이날 학생들은 이틀째 수업을 거부한 채 “어용총장퇴진”
 을 주장하며 총장관사까지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29일 저
 녍 학생들이 본관건물을 완전 점거함으로써 사실상 학교행정이 마비됐다. 한편
 이날도 제주대생 5백여 명은 「어용총장 퇴진을 위한 제2차출정식」을 갖고 교
 문 밖으로 진출, 대기중인 경찰과 3시간여 동안 최루탄에 맞서 화염병투척과 투
 석전을 벌였다. 10월 31일 교수 1백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교수회의에
 서 김총장은 “본인 한사람이 진정한 대학의 자율화·민주화를 실현하고 제주대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 본인은 총장직에 연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11월 2일 상오 제주대 교수들은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은 지금까지
 학원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
 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제주대의 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했다.”고 전제, “총장
 은 전체교수회의에서 밝힌 사퇴의지에 관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학·처장들도

장기화된 학원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하고, 학교당국은 학원사태관련 학생들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되며, 학생들도 더 이상의 학내문제를 구실로 학원정상화에 역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학생 5백여 명은 하오1시 「어용총장퇴진과 학원민주화를 위한 제2차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했다. 11월 4일 학생들은 총학생회 주최로 제3차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대학측에 제의한 교수결의문을 바탕으로 학원정상화를 위한 학생 및 교수대표 회의개최에 따른 답변을 들었다. 11월 10일 학생대표와 중재교수간의 학원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이뤄져 진통 44일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학원정상화를 위한 4개항의 합의사항은 이날상오11시20분께 시설과장실에서 중재교수 2명과 학생·학교대표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채택됐다. 이로써 9월 29일 학생들의 본관점거로 마비됐던 학교행정과 중간고사및 수업거부로 이어졌던 학사업무도 정상화됐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총장진등 요구”, 『제주신문』 1987년 9월 22일자(제주청년학생050)

“제대생들 농성”, 『제주신문』 1987년 9월 29일자(제주청년학생051)

“제대생 농성4일째 교지편집학생 지지”, 『제주신문』 1987년 10월 1일자(제주청년학생052)

“제대총장·학생회등 - 각각 담화발표”, 『제주신문』 1987년 10월 3일자(제주청년학생053)

“제대생 지지농성”, 『제주신문』 1987년 10월 6일자(제주청년학생054)

“제대생 시험거부”, 『제주신문』 1987년 10월 20일자(제주청년학생055)

“제대생 시국토론회”, 『제주신문』 1987년 10월 21일자(제주청년학생056)

“제대생 단식학생3명 실신”, 『제주신문』 1987년 10월 22일자(제주청년학생057)

“제대생들 일부 사무실등 점거” 『제주신문』 1987년 10월 23일자(제주청년학생058)

“제대생들 시험거부 평가회”, 『제주신문』 1987년 10월 24일자(제주청년학생059)

“제대생 수업거부”, 『제주신문』 1987년 10월 27일자(제주청년학생060)

“제대생들 경찰과 투석전”, 『제주신문』 1987년 10월 29일자(제주청년학생061)

“제대생들 29일저녁 본관건물 완전점거 - 사실상 학교행정 마비”, 『제주신문』 1987년 10월 30일자(제주청년학생062)

“제주대교수들, 학원정상화 촉구 - 5개항 결의문 채택”, 『제주신문』 1987년 11월 3일자(제주청년학생063)

“제대생들 비상학생총회”, 『제주신문』 1987년 11월 5일자(제주청년학생064)

“제주대‘사태’44일만에 정상화”, 『제주신문』 1987년 11월 11일자(제주청년학생06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간호보건전문대 학원민주화쟁취투쟁**

A2[사건 일시] 1987.10.12~000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7.10.12. 제주간호보건전문대 총학생회 「학원민주화실천대회」 개최

1987.12.14. 한라의료원 정문에서 연좌시위 / 이사장실 점거 철야농성 전개

A5[사건 내용] 1987년 10월 12일 제주간호보건전문대 학생 2백여 명은 대학운동장에서 「학원민주화실천대회」를 갖고 대학 측에 대해 “대학의 회계장부공개, 신설과 설립 및 증원반대” 등 5개항을 주장했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총학생회(회장 민애란) 간부 등 13명은 이날 밤 9시경 대학재단 이사장실을 점거, 무기한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14일 학생들은 상오11시30분경 가두로 진출하여 학교재단측이 운영하고 있는 한라의료원 정문에서 “학교당국의 회계장부공개, 부정부패온상 재단 법인퇴진, 이사장 퇴진” 등을 주장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한편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은 이날 낮12시15분경 최루탄과 사과탄을 터뜨려 강제해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강보영양(19의무행정과1년)과 김진금(간호학과2년) 김보희, 강은주양 등 시위학생 4명이 최루탄파편을 맞아 한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이날 병원구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 현관유리창 10여장이 깨졌는가 하면 병실 안으로 밀려든 최루탄가스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들이 큰 곤욕을 치렀다. 이날 현장에서 시위학생 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하오3시40분경 모두 풀려나 학교로 돌아가기도 했는데 학생들은 14일 하오6시부터 다시 학교이사장실에 들어가 철야 농성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간호대생들 농성”, 『제주신문』 1987년 10월 13일자(제주청년학생066)

“간호대생들 이사장 퇴진요구 한라의료원서 연좌시위 벌여 - 최루탄싸 해산”, 『제주신문』 1987년 10월 15일자(제주청년학생06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공명선거를 위한 제주청년학생 대동투쟁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87.11.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생 및 제주전문대생 1백50명은 1987년 11월 17일 하오1시30분경 제주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제주지구 서클연합회협의회> 주최로 「공명선거를 위한 제주청년학생 대동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제주도공정선거감시인단>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이날 학생들은 “미국과 군부독재 집단의 본질

폭로 선전, 투·개표 및 발표에서의 승리쟁취, 언론의 중립요구투쟁전개,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 종교인, 여성 등 4천만민중과 연대활동 전개”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공명선거 위한 청년학생 결의”, 『제주신문』 1987년 11월 18일자(제주청년학생06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청년학생공정선거감시단 발대식**

A2[사건 일시] 1987.10.2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제주교대·제주전문대학·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등 제주도내 4개 대학생 1백50여명은 1987년 11월 25일 하오4시30분께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중강당에서 「제주청년학생공정선거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땅에 민주화를 꽃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민주정부수립을 앞당기기 위해 공정선거를 치러낼 제주청년학생 공정선거감시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와 함께 “공정선거 보장, 부정선거 고발, 투개표감시, 언론의 공정한 보도, 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도내 4개대생 공정선거감시단발대”, 『제주신문』 1987년 11월 26일자(제주청년학생06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노태우후보 유세방해 사건**

A2[사건 일시] 1987.11.2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7년 11월 26일 하오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 유세장에서 대학생들이 최루가루를 뿌리며 구호를 외쳤다. 제주경찰서는 김모(20.경제2년), 김모(20.경영2년), 고모(19.물리2년)군 등 3명을 연행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노후보 유세장에서 최루가루뿌려 연행”, 『제주신문』 1987년 11월 27일자(제주청년학생07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대학교 조기방학 거부투쟁**

A2[사건 일시] 1987.12.0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생 2백여 명은 12월 7일 하오1시 민주광장에서 서클연합회주최로 서클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자주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공정선거감시운동에 총매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앞당겨진 기말고사를 대통령선거이후로 연기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도중 서클연합회장 김정렬(축산학과3년) 등 5명의 학생이 조기방학 거부투쟁을 위해 삭발했다.

A6[관계 인물] 김정렬

A7[관계 단체] 제주대학교서클연합회

A8[관계 자료]

“제대서클연 기말고사 연기결의”, 『제주신문』 1987년 12월 8일자(제주청년학생07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지역청년학생 부정선거폭로 및 규탄대회**

A2[사건 일시] 1987.12.2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생 2백여 명은 12월 22일 하오5시10분께 제주대 정문 앞 광장에서 「제주지역청년학생 부정선거폭로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선거무효화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학생들은 정문에서 88학년도 대입학력고사를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 및 마중 나온 학부모들에게 “수험생 및 학부모께 드리는 글” 등 3가지 유인물을 배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생일부 선거무효화 결의”, 『제주신문』 1987년 12월 23일자(제주청년학생07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부정당선 집권분쇄 및 민중생존권압살 저지실천대회**

A2[사건 일시] 1988.04.0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8년 4월 7일 하오 1시20분께 제주대생 4백여 명은 학생회관 1층에서 「부정당선 집권분쇄 및 민중생존권압살 저지실천대회」를 개최한 뒤 교내외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하오 3시20분께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교수아파트입구에서 경찰과 대치,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투석전을 펼쳤다. 학생들은 하오 5시10분께 교내로 들어와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부정당선 집권분쇄 제대생4백명 시위”, 『제주신문』 1988년 4월 8일자(제주청년학생 07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부정집권분쇄와 민중생존권쟁취 투쟁위원회 발족식 및 실천대회**

A2[사건 일시] 1988.04.1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8년 4월 12일 하오 1시30분, 제주대생 3백여 명은 교내민주광장에서 「부정집권분쇄와 민중생존권쟁취 투쟁위원회 발족식 및 실천대회」를 열고 교내와 교문 밖 대학진입로에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민주노조 탄압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문 밖 교수아파트입구까지 진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시위를 벌인 뒤 하오 6시40분께 교내에서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생 시위”, 『제주신문』 1988년 4월 13일자(제주청년학생07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19민주혁명계승 실천대회**

A2[사건 일시] 1988.04.1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8년 4월 19일 하오1시 제주대생 4백여 명은 교내민주광장에 모여 마당극공연에 이어 「4.19민주혁명계승 실천대회」를 교내시위를 벌였다. 이들 학생들은 "군부독재 타도하자" "민중생존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하오 3시께 교문 밖 교수아파트입구까지 진출했으나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서다 하오 4시30분쯤 교문에서 자진해산했다. 이들 학생 중 일부는 이날 하오 5시30분께 제주시내로 진출하여 제주시내 동문로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생 시위”, 『제주신문』 1988년 4월 20일자(제주청년학생07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광주영령추모 및 5.18광주항쟁 계승대회**

A2[사건 일시] 1988.05.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8년 5월 17일, 제주대학교학생 80여명은 하오2시 교내민주광장에서 「광주영령추모 및 5.18광주항쟁 계승대회」를 개최했다. 서클연합회. 여학생회. 단과대학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학생들은 "광주항쟁 계승의 청년 학생의 역사적 의무", "결의대회 및 실천대회" 등 2부로 나눠 진행했는데 대회 후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나서 대학진입로까지 진출하여 연좌농성을 벌이다 하오6시45분께 대학으로 돌아가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생들 5·18항쟁계승대회”, 『제주신문』 1988년 5월 18일자(제주청년학생07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광주학살·5공비리주범처단 및 송악산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제주**

도민평화대행진

A2[사건 일시] 1988.11.0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광주학살·5공비리주범처단 및 송악산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제주도민 평화대행진」이 1988년 11월 5일 하오3시 대학생 등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중앙로일대에서 있었다. 제주대투쟁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평화대행진은 하오1시께 제주대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버스편을 이용, 시민회관에 집결 하오2시50분께부터 "전이부부 구속하라", "송악산 군사기지 절대안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중앙로터리에서 5공비리 주범에 대한 화형식을 가지려던 학생들과 경찰이 심한 몸싸움을 벌여 학생 15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경찰에 의해 예정됐던 행사가 1차 봉쇄됐다. 그 후 학생 5백여 명은 하오4시께 남문로터리에 재집결, 5공비리 주범에 대한 기습화형식을 갖고 화염병, 보도블럭 등을 투척하며 경찰과 대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3개 중대를 투입하여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다. 그 후 학생과 기동경찰의 산발적 시위가 계속되다 하오7시께 경찰이 철수되자 학생시민 등 5백여 명이 중앙로터리에 재집결 학생과 재야단체에서 "광주학살 5공비리주범처단 및 군사기지철폐"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가졌는데, 일부 학생 등은 "전두환 처단"이란 혈서를 쓴 후 성조기소각식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하오9시께 광양로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후 자진해산했다. 한편 시위 중 연행됐던 학생 15명은 이날 자정께 모두 풀려났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전·이부부 구속」 요구 집회 시내중심가서 격렬한 시위”, 『제주신문』 1988년 11월 7일자(제주청년학생07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광주학살·5공비리주범처단 및 송악산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제2차 범도민평화대행진**

A2[사건 일시] 1988.11.1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광주학살·5공비리주범처단 및 송악산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제2차 범도민평화대행진」이 1988년 11월 12일 하오3시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가한 가

운데 제주시내 관덕정 앞 광장에서 있었다. 제주대투쟁연합이 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참가학생들은 "전이부부와 그 일족들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고 농가부채를 탕감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하오4시40분께 "전이부부구속" "송악산군사기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동문로~중앙로~광양로터리까지 평화대행진을 벌인 후 자진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6개 중대의 기동경찰을 시내중심가에 배치했으나 학생과의 몸싸움은 없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5공비리 주범처단 평화행진”, 『제주신문』 1988년 11월 14일자(제주청년학생07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정당제주시지구당 화염병피습**

A2[사건 일시] 1989.03.2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9년 3월 21일 0시께 제주시 이도2동 민정당제주시지구당 당사에 ‘제주대학교구국결사대’를 자칭한 일단이 화염병 10여개를 던져 화재가 발생, 1·2층 당사내부를 전소시키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20분만인 이날 새벽 0시20분께 진화됐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불타버린 민정지구당사”, 『제주신문』 1989년 3월 21일자(제주청년학생07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문익환목사 귀국환영 및 매국 노태우정권규탄대회**

A2[사건 일시] 1989.04.1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가 11일 하오3시 제주교대에서 가질예정이던 「문익환목사 귀국환영 및 매국 노태우정권규탄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 행사장 주변에 기동경찰 5개 중대를 배치하고 행사장 진입 대학생들을 차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 73명이 연행됐다가 하오11시께 전원 훈방됐다.

- A6[관계 인물]
- A7[관계 단체]
- A8[관계 자료]

“문목사 환영대회 경찰이 원천봉쇄”, 『제주신문』 1989년 4월 12일자(제주청년학생080)

-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19혁명계승대회**

A2[사건 일시] **1989.04.1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생 4백여 명은 19일 하오1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4·19혁명계승대회」 등을 갖고 하오3시께부터 가두행진을 벌여 아라국교 부근까지 진출했다. 이날 하오4시30분께 제1횡단도로와 맞닿는 오등동 입구도로 주변에 시위진압 전경을 수송하고 대기중이던 제주도청 소속 대형버스가 기습한 시위학생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전소됐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이명희양(제주대 법학과3년)등 4명을 연행했다.

- A6[관계 인물]
- A7[관계 단체]
- A8[관계 자료]

“「4·19」 학생시위 제대생4백여명”, 『제주신문』 1989년 4월 20일자(제주청년학생 081)

-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노태우처단을 위한 1차 총궐기선포식 및 청년학생전진대회**

A2[사건 일시] **1989.04.2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 「광민특위」는 28일 하오2시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광장에서 「노태우처단을 위한 1차 총궐기선포식 및 청년학생전진대회」를 가졌다. 대회가 끝난 후 학생 2백50여명은 이날 하오3시께부터 “광주학살 부정비리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수아파트 앞까지 진출, 대치중인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시위를 벌인 후 하오5시30분께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현장에서 경상대부학생회장 정영진군(22·회계학과3)을 연행했다.

- A6[관계 인물]
-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학생 3백명 청년학생 전진대회”, 『제주신문』 1989년 4월 29일자(제주청년학생 08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총협준비위원회발대식 및 광주학살원
흉처단과 이철규군 고문살인진상규명을 위한 촉구대회**

A2[사건 일시] 1989.05.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9년 5월 17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총협준비위원회발대식
및 광주학살원흉처단과 이철규군 고문살인진상규명을 위한 촉구대회」가 학생 3
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총협 주관으로 제주간호보건전문대 대강당에서 있었
다. 대회가 끝난 뒤 학생 2백여 명은 태극기와 ‘이철규동지 고문살인 노태우정권
끝장내자’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광양로~중앙로~관덕정까지 평화대행진을 벌인
후 하오 8시께 자진해산했다. 이날 학생들의 가두시위는 개정집시법 시행 후 처
음으로 정식집회허가를 받아 시가지에 진입한 것인데 경찰과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허가된 시위…화염병·최루탄없는 행진”, 『제주신문』 1989년 5월 18일자(제주청년학
생08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이철규열사 사인진상규명과 노태우정권퇴진 가두시위**

A2[사건 일시] 1989.06.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이철규열사 사인진상규명과 노태우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격
렬한 가두시위가 1989년 6월 9일 하오 제주시내 일원에서 있었다. 제주대광민특
위가 주관한 이날 가두시위는 하오6시30분께 2백여 명의 대학생들이 동문로에
집결, 원천봉쇄로 맞선 진압경찰과 1차접전 이후 해산됐다가 재집결, 하오8시까
지 동문로 조일약국 앞에 연좌, 비교적 평화시위양상을 띠었다. 그 후 연좌했던

대학생들이 「비폭력」을 외치며 중앙로터리 쪽으로 이동하는 중 진압경찰에 포위되면서 일대교통이 완전차단됐고 격렬양상으로 급전됐다. 이 때 경찰에 둘러싸인 학생 3백여 명은 ‘5공부활 결사저지’ 구호와 애국가등을 제창하며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여 한 때 시위학생이 5백여 명으로 크게 불어났다. 이후 하오8시 30분께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수세에 몰린 학생들은 관덕정 쪽으로 밀리면서 해산됐다가, 2백50여명이 남문로터리 일대에 재집결, 각목과 보도블록으로 진압경찰에 대항하며 시위를 벌인 후 하오11시께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학생 45명을 연행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도심서 격렬시위”, 『제주신문』 1989년 6월 10일자(제주청년학생08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이철규열사 사인진상규명 및 평양축전 참가쟁취, 이승수학우 석방 ·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A2[사건 일시] 1989.0614~1989.06.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교 총학생회회장등 7명의 학생은 14일부터 「이철규군사인진상 규명 및 평양축전 참가쟁취, 이승수학우 석방 ·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이철규군 사인규명 제주대생 단식농성”, 『제주신문』 1989년 6월 15일자(제주청년학생 08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학원사수와 구속학우구출을 위한 총학생비상대책회의

A2[사건 일시] 1989.08.3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 학생 3백50여명은 1989년 8월 30일 하오 1시께 교내 민주광장

에서 「학원사수와 구속학우구출을 위한 총학생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어 학생 2백여 명은 하오 3시께부터 교문 밖 진출을 시도하며 진압경찰에 돌, 화염병 등을 투척하는 등 격렬 시위를 벌이다 하오 6시께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구속학생 석방요구 제대생들 격렬 시위”, 『제주신문』 1989년 8월 31일자(제주청년학생08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공안통치분쇄를 위한 청년학도 구국투쟁선포식**

A2[사건 일시] 1989.11.0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총학생회의협의회는 1989년 11월 3일 하오 학생의 날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안통치분쇄를 위한 청년학도 구국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1만2천 청년학도 총궐기로 공안정국 파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1횡단도로 제주대 입구까지 진출, 노·부시대통령, 그레그대사, 안기부장 4인의 화형식을 가진 후 자진 해산했다. 한편 제총협에서는 이날 "구국투쟁선언문"을 통해 "반미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에 떨쳐나갈 것"을 선언하고 오는 12일 하오 중앙로 일대에서 "민중생존권쟁취와 공안통치분쇄를 위한 도민대회"를 가질 것을 결의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60주년 학생의날 구국투쟁 선포식”, 『제주신문』 1989년 11월 4일자(제주청년학생08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3민중항쟁정신계승 및 반민중야합 분쇄투쟁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0.04.0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0년 4월 2일 정오 제주교대생 1백여 명은 야외마당에서 4·3항쟁에

대한 주제강연과 「4·3민중항쟁정신계승 및 반민중야합 분쇄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교대학생들 4·3계승 결의”, 『제주신문』 1990년 4월 3일자(제주청년학생08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자당 당사 화염병 피습**

A2[사건 일시] 1990.04.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0년 4월 17일 새벽0시10분경 제주시 이도2동 민자당북제주지구당 건물에 강동현씨 (20·제주대 사회학 3년) 등이 화염병을 던져 당사 유리창 3장이 깨지고 벽이 그을렸다. 경찰은 강동현씨를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강모씨(22)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민자 북군당사에 화염병 투척 검거”, 『제주신문』 1990년 4월 18일자(제주청년학생 08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월혁명계승대토론회 및 민자당분쇄투쟁을 위한 전진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0.04.1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0년 4월 18일 정오 제대교육대학 야외마당에서 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혁명계승대토론회 및 민자당분쇄투쟁을 위한 전진결의대회」를 가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4·19정신 계승 제대 마라톤대회”, 『제주신문』 1990년 4월 19일자(제주청년학생09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19정신계승 민자당분쇄투쟁**

A2[사건 일시] 1990.04.1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 제대교대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생 5백여 명은 1990년 4월 19일 하오 4시30분 제대 교문 앞에서 「민자당을 분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하오 가두진출을 시도, 교수아파트 입구까지 진출했으나 진압에 나선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이다가 하오 6시30분 경 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5백여 대학생들 「민자당분쇄」 시위”, 『제주신문』 1990년 4월 20일자(제주청년학생 09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전문대 학원자주화 쟁취 1차 진군식**

A2[사건 일시] 1990.04.2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전문대학생 1천 5백여 명은 1990년 4월 23일 하오2시 교내에서 「학원자주화 쟁취 1차 진군식」을 갖고 산천단까지 가두시위를 했다. 학생들은 재단 수익용 자산환수 및 학장퇴진을 요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학원자주화 쟁취」 제주전문대생 시위”, 『제주신문』 1990년 4월 24일자(제주청년학생09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현대중공업 폭력진압규탄과 세계노동절기념을 위한 청년학생진군**

대회

A2[사건 일시] 1990.05.0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생 1천여 명은 1990년 5월 1일 하오1시 교내 중강당에서 「현대중공업 폭력진압규탄과 세계노동절기념을 위한 청년학생진군대회」를 갖고 하오3시 교문 앞에 집결, 교수아파트 입구에서 대기중이던 경찰과 맞서 돌과 화염병으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하오5시 자진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현장에서 조철현군을 연행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대학생 1천여명 교내시위”, 『제주신문』 1990년 5월 2일자(제주청년학생09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학원침탈 자행한 파쇼경찰규탄대회**

A2[사건 일시] 1990.05.1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경찰서는 1990년 5월 12일 새벽 5시 10분께 제주대 학생회관에 전경 등 병력 3백여 명을 전격투입, 학생회관 서클실과 총학생회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던 최승원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사무국장·제주대경영4)등 31명의 학생을 연행하고 신나 화염병 등 시위용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연행한 최씨 등 31명을 조사한 뒤 이날 하오5시께 훈방했다. 경찰은 이날 지난 9일 제주지검이 신청, 제주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임을 들어 제주대 학생회관을 수색, ‘4·3 시위’ 등 최근 시위와 관련된 제주대총학생회장 허종훈군(26·경제과4)을 검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제주대 학생회관에서 플래카드 39개, 걸개그림 3개, 신나8통, 화염병 16개, 최루가스 8개, 쇠파이프 6개, 솜뭉치 2마대 등 시위용품과 각종 책자 등을 압수했다. 한편 제주대총학생회에서는 경찰에 대해 학원침탈공개사과, 구속학우 즉각 석방, 압수수색영장의 근거제시를 요구하며 하오 2시 민주광장에서 「학원침탈 자행한 파쇼경찰규탄대회」를 가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경찰, 제대에 전경 전격투입”, 『제주신문』 1990년 5월 13일자(제주청년학생09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노태우대통령 굴욕방일 규탄시위**

A2[사건 일시] 1990.05.2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대학생 시민 2백여 명이 5월 24일 밤,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과 관련, 제주시내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저녁 7시30분께 중앙로 조일약국 앞에서 시위를 시작, 중앙로 일대·남문로·광양 일대로 이동하면서 “민자당 분쇄”, “굴욕적 방일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고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자정까지 시위를 계속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대학생등 2백여명 시위 「굴욕적 방일 규탄」, 『제주신문』 1990년 5월 25일자(제주청년학생09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교조 합법성쟁취와 교육운동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0.05.2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사범대학생회는 전교조결성 한돌을 맞아 1990년 5월 28일 하오2시 교내민주광장에서 학생, 해직교사 등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교조 합법성쟁취와 교육운동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제주교대총학생회도 이날 정오 교내 시청각실에서 2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전교조제주지부 김명선교사를 초청, 「전교조는 왜 우리의 희망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해직교사의 생활을 그린 비디오를 상영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대 사대학생회 사교육운동탄압 분쇄”, 『제주신문』 1990년 5월 29일자(제주청년학생09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청년학도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0.09.2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교 총학생회(회장 허종훈)는 20일 하오2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학생 3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청년학도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총학생회는 「민중운동탄압분쇄와 UR 특조법 저지를 위한 7천 아라인 투쟁결의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민자 장기집권음모 분쇄”, 『제주신문』 1990년 9월 21일자(제주청년학생09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학생의 날 기념식 및 전대협 송갑석의장 구속·학원침탈 민자당 타도를 위한 7천 아라인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0.11.0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 총학생회는 1990년 11월 2일 하오2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학생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의 날 기념식 및 전대협 송갑석의장 구속·학원침탈 민자당타도를 위한 7천 아라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61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총학생회는 이날 「학생운동의 사적고찰과 당면학생운동의 임무」에 관한 보고에 이어,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전면화 된 탄압을 규탄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 총학생회 학생의날 기념식”, 『제주신문』 1990년 11월 3일자(제주청년학생09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5·1 노동절기념 노동운동탄압분쇄와 강경대학우 살해주범 노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

A2[사건 일시] 1991.05.0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강제추락사고에 따른 도내 대학가 및 재야의 규탄 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대생 3백여 명은 1991년 5월 1일 하오2시 「5·1 노동절기념 노동운동탄압분쇄와 강경대학우 살해주범 노정권퇴진을 위한 청년아라 진군대회」를 가진 후 가두진출을 시도, 하오 4시 20분부터 교수아파트 입구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진압에 나선 경찰과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대생 또 격렬시위”, 『제주신문』 1991년 5월 2일자(제주청년학생09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조성만열사 3주기 추모 및 전쟁조장 민방위훈련거부와 폭력살인·공안통치 주범 미국·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1.05.1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 총학생회는 1991년 5월 15일 하오2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학생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성만열사 3주기 추모 및 전쟁조장 민방위훈련거부와 폭력살인·공안통치 주범 미국·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를 가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민방위훈련 거부 제대생 결의대회”, 『제주신문』 1991년 5월 16일자(제주청년학생10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광주민중항쟁계승과 폭력살인공안통치주범 미·노일당 타도를 위한 1만2천 청년학도진군대회**

A2[사건 일시] 1991.05.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5월 17일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생 5백여 명은 하오3시 간호보건전문대운동장에서 「광주민중항쟁계승과 폭력살인공안통치주범 미·노일당 타도를 위한 1만2천 청년학도진군대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장기집권·영구분단 음모에 혈안이 돼있는 민자당 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하오 4시 30분께 간호보건전문대 입구에서 가두진출 시위에 나섰으나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출을 봉쇄하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가두진출 봉쇄 간호대앞 시위”, 『제주신문』 1991년 5월 18일자(제주청년학생10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대협 김종식의장 구출과 조국통일선봉 전대협사수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1.07.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총학생회는 7월 9일 하오1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전대협간부들의 구속과 관련, 「전대협 김종식의장 구출과 조국통일선봉 전대협사수결의대회」를 학생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대생 2백여명 전대협사수 결의”, 『제주신문』 1991년 7월 10일자(제주청년학생10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2학기 청년아라구국투쟁 선포식**

A2[사건 일시] 1991.09.0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A9[관련 사건] 1991년 9월 4일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하오2시 교내에서 특별법 저지 등을 위한 「2학기 청년아라구국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집회를 마친 학생 6백여 명은 하오4시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5·16도로를 점거,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연좌농성에서 학생들은 “특별법 제정을 강요하는 민자당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대치한 후 1시간 만에 자진해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를 위한 청년학생투쟁위원회」(가칭)를 발족, 특별법 저지투쟁에 주력기로 결의했다.

A1[사건명] **제주교대 특별법반대집회 경찰난입사건**

A2[사건 일시] 1991.09.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9월 17일 하오5시50분께 제주교대에서 벌어진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대학 측의 학내진입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학캠퍼스에 난입해 강경진압에 나서는 바람에 제주대 양성봉군(27·제주대 통신공학4)이 돌에 맞아 눈각막이 파열되는 등 대학생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시내 영동병원 김동인안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경찰의 광잉진압 때문에 대학생과 경찰은 양측에서 모두 부상자가 속출, 모두 30여명이 부상했으며 제주교대 본관과 체육관 등 학내 건물유리창 20여장이 깨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경찰은 학원내에 사과탄과 돌맹이를 마구 던지며 난입하여 학교기물을 부수고 이를 항의하는 교수 등 교직원들에게 폭언·폭행함으로써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제총협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현재 전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별법 반대투쟁을 폭력으로 막아내려는 계획된 행위”라 주장했다.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범도민회는 “9월 19일 제주도개발특별악법 제정반대 제1차 범도민궐기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유발시켜 학생과 일반도민의 분열을 유도하고자하는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범도민회>는 9월 18일 성명을 발표, “경찰은 9월 17일 제주교대에서 있었던 제주지역청년학생들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특별법반대집회를 도민들의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원천봉쇄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돌맹이를 던져 30여명이상의 학생들을 다치게 하고 한 학생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진압경찰을 비난했다. 이어 범도민회는 성명에서 경찰당국은 “평화적 집회를 폭력으로 막은 사실, 신성한 교내에 무단 침탈하여 교수에게까지 폭행한 사실 등을 공개사과하고 부상당한 학생들과 기물파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교대 성주현 교무처장 등 교수 15명도 9월 19일 상오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17일 경찰의 교내진압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 파괴기물의 변상과 책임자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9월1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학생시위도중 일방적으로 경찰병력을 학내로 투입하면서 교수에 대한 폭행과 폭언, 공공기물에 대한 파괴 등을 자행한 경찰의 행위는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무차별한 만행이자 교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들은 “교무처장과 제주경찰서장은 학내진압 없이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정문과 수위실을 부수고 일시에 학내로 진입해 학교시설이 파괴당하고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교무처장이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욕설과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특별법 저지·격렬시위”, 『제주신문』 1991년 9월 18일자(제주청년학생103)

“경찰 교내진압 항의 기물파괴 변상 요구”, 『제주신문』 1991년 9월 20일자(제주청년학생10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양용찬열사의 뜻 계승과 특별법저지·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청년
아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1.11.0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11월 7일 양용찬열사가 분신사망하자 제주대총학생회는 학생회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7천 아라인게 드리는 투쟁격문」을 발표했다. 또, 11월 8일 하오1시 민주광장에서 「양용찬열사의 뜻 계승과 특별법저지·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은 “앞으로 특별법 저지를 위해 장기적이고 완강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결의하고, 특별법·제2차 제주종합개발계획 폐기, 민자당 제주출신의원사퇴를 요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도전역서 항의집회 계속”, 『제주신문』 1991년 11월 9일자(제주청년학생10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양용찬열사 뜻 계승 및 노정권타도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1.11.1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11월14일 오후5시 제주시중양로 현대약국 앞에서 제주대 총학생회 주최로 「故양용찬열사 뜻 계승 및 노정권타도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대회가 무산되자 대학생 2백여 명은 하오5시45분께 제주시 탐동로를 점거, 「특별법반대」와 경찰의 원천봉쇄를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5분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제주대학생 3백여 명은 이날 하오3시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집회 출정식을 가졌고 경찰은 6백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위예상 지역에 배치, 시내 주요 도로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30여명을 격리차원에서 연행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시위과정에서 서영희양(제주대 국문4) 등 6명을 붙잡아 연행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고 양열사 뜻 계승 결의대회」 무산 제주대생 3백여명 교내서 집회”, 『제주신문』
1991년 11월 15일자(제주청년학생10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양용찬 열사 뜻 계승을 위한 제2차 청년아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1.11.1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총학생회 소속 3백여 명은 1991년 11월15일 제주시 중앙성당에서 「故양용찬 열사 뜻 계승을 위한 제2차 청년아라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학생들은 “정치자금 조성계획 특별법을 막아내자”, “민자당을 타도하여 열사의 한을 풀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특별악법 폐기를 요구했다. 중앙성당에서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탐동로 등 제주시내 주요 거리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진압에 나선 경찰에 맞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학생들은 도민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정부와 민자당은 재벌에겐 돈벌이를, 정권에겐 안정을 가져다주는 개발특별악법을 제정하려 도민의 생명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특별법 저지 격렬시위”, 『제주신문』 1991년 11월 16일자(제주청년학생10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과 특별법제정강행하는 노정권응징대회**

A2[사건 일시] 1991.11.1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11월16일 하오3시 제주시 중앙성당에서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 회 주최로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과 특별법제정강행하는 노정권응징대회」가 열렸다. 학생 3백여 명은 중앙로터리로 진출해 “도민생존 말살하는 특별법을 저지하자”, “도민의사 무시하는 도지사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민들에게 유인물 7천여 장을 배포하며 시민회관 앞 도로를 거쳐 광양로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후 제주시 중앙로 덕성의원 앞길에 재집결 연좌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시위과정에서 경찰은 강제진압에 나서지 않아 학생들과의 정면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특별법 저지’ 3일째 시위”, 『제주신문』 1991년 11월 17일자(제주청년학생10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 및 특별법날치기통과 민자당규탄청년결의 대회**

A2[사건 일시] 1991.12.0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12월 5일 <제주지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공동대표 이영일, 한석)는 하오7시30분부터 서귀포시 매일시장내 어린이놀이터에서 재야·시민·학생 등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故양용찬열사 정신계승 및 특별법날치기통과 민자당규탄청년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1, 2부의 행사를 마친 뒤 50여분 간 대치중인 경찰과 몸싸움 끝에 경찰저지선을 뚫고 서귀포농협입구 네거리까지 평화적인 가두시위를 벌인 후 하오9시30분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지역청년단체협의회

A8[관계 자료]

“도내곳곳서 특별법 ‘저지’”, 『제주신문』 1991년 12월 7일자(검토-p77과 같은기사내용)(제주청년학생10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특별법제정 강행하는 민자당정권타도와 방학중 투쟁승리를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

A2[사건 일시] 1991.12.0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교 학생 3백여 명은 1991년 12월 6일 하오3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특별법제정 강행하는 민자당정권 타도와 방학중 투쟁승리를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를 갖고 특별법 국회 날치기통과 등을 규탄했다. 1시간 만에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이어 이날 하오5시30분부터 제주시내 광양로터리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시도, 원천봉쇄에 나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8백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 강경진압에 나섰으며 시위학생들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이에 맞서다 경찰검거를 피해 탐동로 등 시내 곳곳으로 이동하며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도내곳곳서 특별법 ‘저지’”, 『제주신문』 1991년 12월 7일자(검토-p77과 같은기사내용)(제주청년학생11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특별법무효화선언과 강행통과주범응징을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1.12.19

A3[사건 배경] 1991년 12월 18일, 민자당의 제주도개발특별법 국회본회의 날치기통과에 대한 항의 규탄투쟁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12월 19일 제주대학생회는 하오2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특별법무효화선언과 강행통과주범응징을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를 가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날치기 특별법 무효’ 격렬시위”, 『제주신문』 1991년 12월 20일자(검토-p91과동일)(제주청년학생11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특별악법제정주범 민자당 응징을 위한 1만2천 청년학도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2.01.2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상임의장 윤철수)는 1992년 1월 22일 하오2시 학생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대학교 중강당에서 「특별악법제정주범 민자당 응징을 위한 1만2천 청년학도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제주도 중앙로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 「도민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유인물을 통해 “이번 총선을 민자당 창당 2년을 심판하는 장으로 삼아 민주세력이 단결,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중앙로 주택은행 앞길에서 제일은행 앞까지 “특별악법 강행주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주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총선서 민자당심판 제총협학생들 결의”, 『제주신문』 1992년 1월 23일자(제주청년학생 11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범민주단일후보를 통한 총선승리다짐대회 및 남북합의서이행추구를 위한 청년아래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2.02.2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2월 22일 하오2시 제주대학교총학생회는 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범민주단일후보를 통한 총선승리다짐대회 및 남북합의서이행추구를 위한 청년아래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학생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범민주 단일후보추대는 우리 청년 아라인들의 꺾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후보추대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들은 또 “남북합의서 채택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합의서 이행의 첫걸음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제주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후보추대관련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이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범민주 단일후보 제대생 추대다짐”, 『제주신문』 1992년 2월 23일자(제주청년학생11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특별악법날치기통과주범 민자당응징과 김영삼처단을 위한 출정식**

A2[사건 일시] 1992.02.2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총학생회(회장 윤철수)는 1992년 2월 28일 낮12시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대학생 4백여 명이 참석할 가운데 「특별악법날치기통과주범 민자당응징과 김영삼처단을 위한 출정식」을 열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대학생들은 출정선언문에서 “민자당은 10초만에 특별악법을 날치기통과 시키고 온갖 금권관권 타락선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 3월 총선에서 범민주 단일후보추대를 쟁취해 92년을 ‘민주정부수립 원년의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하오2시부터 제주시 동문로터리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총협학생들 시위”, 『제주신문』 1992년 2월 29일자(제주청년학생11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자당심판과 총선승리를 위한 제주대학생위원회 출범식 및 총선 투쟁선포식**

A2[사건 일시] 1992.03.0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3월 5일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하오2시 제주대중강당에서 「민
자당심판과 총선승리를 위한 제주대학생위원회 출범식 및 총선투쟁선포식」을
갖고 “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날치기처리 된 특별악법철폐와 6공 학정에
대한 비리폭로규탄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회를 마친 4백
여 명의 학생들은 “민자당타도”, “민주정부수립”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문 밖 진
출을 시도했다. 학생들은 하오4시20분 제주대 정문과 교수아파트 사이 1백여m
도로에서 진압경찰에 막히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5·16도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도 이날 최루탄을 쏘며 시위학생에 강경하게 맞서 2시간여 동안 이 일대가
화염병과 최루가스로 뒤범벅됐다. 이날 시위학생과 진압경찰은 서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 속에 일부 학생과 경찰관이 다쳤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대학가 화염병 시위”, 『제주신문』 1992년 3월 6일자(제주청년학생11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총선투쟁보고대회 및 민자당 타도를 위한 4월투쟁선포식**

A2[사건 일시] 1992.03.3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3월 31일 제주대총학생회는 교내민주광장에서 「총선투쟁보고
대회 및 민자당 타도를 위한 4월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총선투쟁 과정 속에서 일정정도 오류를 드러냈지만 43년 전
선배영령들의 피로써 외친 함성을 잊지 않았기에 여소야대국회를 창출할 수 있
었다. 경제위기 운운하며 법을 어긴 지자제선거연기 철회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
고 민자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교내에서 집회를 마친 학생 3
백여명은 하오3시40분부터 “4·3정신 계승하여 민자당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문밖 진출을 시도, 최루탄을 쏘며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19혁명계승과 군부정선거·단체장선거연기·농정파탄정권응징**

을 위한 진군대회

A2[사건 일시] 1992.04.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소속대학생 3백여 명은 1992년 4월 17일 하오 1시 제주대학교 민주광장에서 「4·19혁명계승과 군부정선거·단체장선거연기·농정파탄정권응징을 위한 진군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계속 터지는 애국군인들의 양심선언에도 아랑곳없이 현 정권은 군부재자 투표에 대한 명백한 부정과 선거개입에 대한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하오3시 교문 밖 교수아파트입구 도로에서 군부재자투표 진상규명과 자치단체장선거 실시를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학생 문성은군(법학 3)을 연행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대생 3백여명 단체장선거 촉구”, 『제주신문』 1992년 4월 18일자(제주청년학생11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한라일보파업지지와 도민생존권 유린하는 민자당심판을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2.05.0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1992년 5월 1일 「한라일보파업지지와 도민생존권 유린하는 민자당심판을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를 교내에서 가진 뒤 제주 시청 부근 등 제주시내 일원에서 진압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현주양(20·영어교육과 3) 등 학생 7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2일 훈방조치됐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4기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출범식시위

A2[사건 일시] 1992.05.0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5월 7일 하오3시 제주지역 대학생 3백여 명은 제주대에서 「제4기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총협은 구국투쟁 결의문을 통해 “제총협 1만2천 청년학도는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며 “5월 9일 대대적인 집회를 통해 민자당을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출범식을 마친 뒤 제주시내 곳곳에서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이날 하오 6시 제주시 중앙로 현대약국 앞 도로를 점거하고 “제총협이 선봉에서 노정권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시내 곳곳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과 공방전을 폈다. 한편 이날 시위현장에서 경찰은 모두 50명을 연행, 이 가운데 37명을 훈방했다. 이 시위와 관련해 제주경찰서는 5월 8일 제대생 강원갑(22·국어교육4), 김유경(22·국문4), 심형석(21·축산3)씨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을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제주대생 홍성녀씨(21·식품공학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제주대생 변상우씨(21·기관공학2)등 8명을 7일에서 10일간 구류처분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민중 생존권 사수」 결의”, 『제주신문』 1992년 5월 8일자(제주청년학생117)

“제총협시위 관련 제대생3명 영장”, 『제주신문』 1992년 5월 9일자(제주청년학생11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5·18광주민중항쟁정신계승과 민자당전당대회파탄을 위한 청년아
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2.05.1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총학생회는 5월18일 하오 4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3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5·18광주민중항쟁정신계승과 민자당전당대회파탄을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은 계승선언문을 통해 “5·6월 투쟁의 광장에서 민자당재집권저지, 민주대개혁쟁취의 구호 높이 들어 민주정부수립의 토대를 반드시 구축하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학생들은 민자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5월 19일 각 학과별로 동맹파업과 함께 제주시 중앙로 일대에서 「민자당 전당대회 파탄을 위한 제1차 도민대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5·18항쟁 계승대회”, 『제주신문』 1992년 5월 19일자(제주청년학생11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6·10항쟁계승과 지자제쟁취·악법철폐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2.06.1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총학생회는 1992년 6월 10일 하오2시 교내 민주광장에서 학생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10항쟁계승과 지자제쟁취·악법철폐를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를 가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신문』 1992년 6월 11일자(제주청년학생12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대협의장구출 및 범민족대회탄압음모분쇄를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

A2[사건 일시] 1992.08.1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생 2백여 명은 8월11일 하오4시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전대협의장구출 및 범민족대회탄압음모분쇄를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를 가졌다. 이날 진군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제주 시내등지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을 통해 “당국의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92범민족대회」를 반드시 이뤄나갈 것”을 강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청년아라진군대회 제주대 민주광장서”, 『제주신문』 1992년 8월 12일자(제주청년학생

12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범민족대회사수보고대회와 전대협의장 및 구속학우구출을 위한 제총협진군대회**

A2[사건 일시] 1992.08.1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총학생회연합소속 대학생 2백여명은 8월19일 하오2시께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범민족대회사수보고대회와 전대협의장 및 구속학우구출을 위한 제총협진군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대협사수로 민주정부수립과 조국통일의 영광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은 하오4시30분부터 제주경찰서 부근에서 “폭력경찰 타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총협 진군대회”, 『제주신문』 1992년 8월 20일자(제주청년학생12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고광덕학우 불법강제연행규탄과 학생회사수 노정권퇴진을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

A2[사건 일시] 1992.08.2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생 3백여명은 8월 12일 하오 2시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고광덕학우 불법강제연행규탄과 학생회사수 노정권퇴진을 위한 청년아라진군대회」를 가졌다. 이날 진군대회에서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당국은 사전영장없이 학우를 구속하는 등 민주학생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나 학생회는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학생들은 또 집회를 마친뒤 하오3시30분께 교문 밖으로 진출, 이를 저지하려는 진압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화염병 및 투석전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어제 제총협 시위 또 최루탄·화염병”, 『제주신문』 1992년 8월 22일자(제주청년학생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지자체 연내실시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시민학생 성토대회**

A2[사건 일시] 1992.09.1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생 2백여 명은 9월 18일 하오5시께 교내에서 「지자체 연내실시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시민학생 성토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를 가진 학생들은 중앙로등 제주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을 통해 “지자체를 연내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민족민주진영에 대한 탄압도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생 성토대회”, 『제주신문』 1992년 9월 19일자(제주청년학생12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총협 구국투쟁선포식**

A2[사건 일시] 1992.09.2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총협 소속 학생 4백여 명은 9월 29일 하오2시 한라전문대 본관 옆 광장에서 「제총협 구국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현내각은 총사퇴하고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을 즉각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구국투쟁 결의문에서 “민주세력의 단결로 독재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교문 밖 진출을 시도,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진압경찰에 맞서 3시간여 동안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총협대학생 시위”, 『제주신문』 1992년 9월 30일자(제주청년학생12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 및 민자당재집권저지·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2.11.0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총협 소속 학생 3백여 명은 11월 6일 하오3시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 및 민자당 재집권저지·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학생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만큼 청년학생의 주도적 역할과 4천만 민중의 단결이 요구된 적은 없다. 이러한 시기에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단결을 무기로 민자당을 대선에서 심판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날치기로 통과된 특별악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총협결의대회”, 『제주신문』 1992년 11월 7일자(제주청년학생12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관권타락 선거책임자처벌과 중립내각사퇴를 위한 규탄대회**

A2[사건 일시] 1992.12.2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총협 소속 학생 2백여 명은 1992년 12월 29일 하오2시 제주대 법정대중강당에서 「관권타락 선거책임자처벌과 중립내각사퇴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중립내각 사퇴요구”, 『제주신문』 1992년 12월 30일자(제주청년학생127)

A9[관련 사건]

3. 노동운동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자주적인 노조 설립과 노동운동이 가능하였다. 노동조합 수가 늘어나고 노동쟁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자주적 노동운동이 쉽지 않았다. 지역·사업체·노동자·노동조합·조합원 모두 규모가 열악해서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던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노동조합 억제 정책에 의해 노사간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다.

1962년 발족한 ‘한국노총 제주지역협의회’는 특별할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해 왔다. 1970년대에는 1970년과 1979년에만 노동쟁의가 한 건씩 있었을 뿐이었다. 5공화국 때에도 노동조합운동은 관 주도 하에 협조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보니 노사간 갈등을 해결할 제도와 자율적 해결 능력이 미비하였다.

제주지역에서는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자기들의 권리를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겠다고 자각하면서 노동운동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1987년 10월 ‘새한병원노동조합’의 결성이 시발 역할을 했다. 새한병원에서는 1988년 7월부터 209일간 장기간 분규가 있었는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노동투쟁이었다. 새한병원 투쟁은 비록 병원이 일방적으로 폐업해 버림으로써 종결되었지만, 이후 한라병원노동조합의 결성 등 노조의 확산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1월 당시 69개 조직, 1988년 1월 82개 조직, 1989년 1월 103개 조직, 1992년 4월 165개 조직에 12,000여명의 조합원 조직으로 확산된 것만 보더라도 그 뜨거운 열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198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결성되었고, 1990년 7월 제주지역언론노조협의회가 결성되는 등 노조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포함한 노사분규 건수는 1987년 41건에서, 1988년 23건, 1989년 22건, 1990년 12건, 1991년 6건, 1992년 20건, 1993년 17건 등으로서, 1987~1989년에 노동운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중심인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이 거의 없고, 대규모 사업장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의 산업 특성은 노동운동의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은 노동운동의 불모지이며, 제주지역에서 노동운동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의아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제주지역에 노동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생산적 노동자가 거의 없다는 특성이 있을 뿐 노동운동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제주지역 노동운동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조직이 ‘제주지역 노동상담소 돌소리(돌소리)’이다. 노동상담소가 노동운동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지역은 그 특성상 별도의 노동운동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규모 개별 노동조합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면서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을 받고, 노동조합 사이의 친목을 다지기도 하였다. 때문에 노동상담소가 가지는 위치는 매우 크다. ‘돌소리’는 1988년 개소했으며 1997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결성의 산실 역할을 하였다.

‘돌소리’와 함께 노동 상담으로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조직이 ‘제주노동상담소 일하는

사람들’(일하는 사람들)’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1991년 3월 23일 개소하였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성과는 제주지역 노동문제에 대한 제반의 실태를 담은 『제주경제와 지역노동실태』의 발간이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은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1994년 초 해산하였다. ’일하는 사람들’의 해산은 당시 제주지역에서의 노동운동이 미약한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하는 사람들’은 해소했지만 ’돌소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제주지역 노동운동의 구심 역할을 하였다.

두 노동상담소의 활동 방식은 차이를 보이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노동실태 연구를 병행하여 활동했다면, ’돌소리’는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조직화 및 노동조합 일상활동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라는 운동원칙에 입각하였다면, ’돌소리’는 개소부터 해소까지 일관되게 운영했던 강남규 소장 개인의 풍부한 경험(인천에서의 민주노조 운동)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기본으로 하였다.

생산직 노동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노동운동 역시 그 힘이 미약하여 ’전노협’, ’업종회의’ 같은 별도의 노동운동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별 노동조합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상황에서 두 노동상담소는 제주지역 노동운동의 산실 역할을 하였다. 특히, ’돌소리’는 교육사업을 통해 일정정도 노동조합 간부도 양성하고, 특히 단위노조 간 연대활동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여 제주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A1 [사건명] 이중희씨 비행정지 처분 총파업

A2 [사건 일시] 1967.07.13 ~ 1967.07.14

A3 [사건 배경] 이중희씨 비행정지 처분

A4 [사건 전개과정]

1967.07.13 KAL 소속 조종사 39명 총파업 돌입

1967.07.14 조종사 요구 받아들여 오후 정상화

A5 [사건 내용] KAL소속 정·부(正副) 조종사 39명이 7월13일 총파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파업이유는 지난7월3일 계기고장을 일으킨 F27기를 무사히 김포공항에 착륙시킨 조종사 이중희씨를 비행정지처분하자 이에 반발. 「노후계기고장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착륙시킨 조종사를 표창하지는 못할 망정 비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조종사권익옹호를 부르짖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종사는 지난7월3일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하던 F27기(44인승)가 노후한 계기에 고장을 일으켰으나 위험을 모면 무사히 김포공항에 착륙했었다. 그런데 KAL제주지사는 「교통부에서 조사한 결과 노후계기고장을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착륙시킨 조종사를 비행정지시킨 것은 KAL측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원상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조종사에 대한 부당견책의 시정을 요구 7월13일 정·부조종사 39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 한때 항공교통의 마

비상태에 있던 KAL은 7월14일 오후 조정사들의 계속취업으로 정상화 되었다.

A6 [관계 인물] 이중희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조종사 총파업-이중희 비행정지처분에 반발”, 『제주신문』 1967년 7월 14일자(제주노동001)

“KAL 정상운항”, 『제주신문』 1967년 7월 15일자(제주노동00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전국 화학노조제주주정지부 노임지급 요구 시위**

A2 [사건 일시] 1970.04.30

A3 [사건 배경] 체불 임금 지급요구

A4 [사건 전개과정]

1970.04.30 하오 5시부터 밤 12시까지 전국화학노조제주주정지부 노임지급 요구 농성

1970.04.30 체불 노임 지급약속 받고 밤12시 해산

A5 [사건 내용] 전국화학노조제주주정지부(지부장 송두순, 34) 1백50여 노조원들은 밀린 노임지급을 요구 4월30일 하오5시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7시 동안 농성을 벌였다. 제주주정 노조원들은 체불된 지난 3·4월분 임금 2백63만6천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이날하오 5시부터 회사앞마당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농성7시간 만에 회사 측으로부터 1일안으로 체불노임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밤12시쯤 해산했다. 회사 측은 지난28일도 근로감독관이 합석한 자리에서 4월30일 하오5시까지 체불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6 [관계 인물] 송두순

A7 [관계 단체] 전국화학노조제주주정지부

A8 [관계 자료]

“노임달라 주공노조서 농성”, 『제주신문』 1970년 5월 1일자(제주노동003)

A9 [관련 사건]

A1[사건명] **87년 택시노동자 투쟁**

A2[사건 일시] 1989.08.19~1989.08.3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도내 15개 택시노동조합 조합장 15명이 1987년 8월 19일 상오부터 “완전월급제보장” 등 10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조합장들은 이날 상오10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부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요구조건을 사업주들이 들어줄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 농성에는 14개 개별택시 조합장과 13개 택시회사 조합원을 거느린 지역택시 노조 조합장이 동참함으로써 제주도내택시회사 전체 노조가 참여한 셈이다. 택시노조 조합장들은 현행 일당식 월급제를 지양, 완전월급제 보장을 비롯해 실수령액 기준 연3백%의 상여금지급,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퇴직금누진제 도입, 근로시간 엄수, 편파적 인사배제, 회사수입자로 공개 등 10개항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에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하오부터 전택시업계를 대표한 사업자측 5명, 노동자측 5명 등 모두 10명이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하오2시부터 9시까지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협의에서 노동자측은 당초 내건 10개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측에선 전적으로 난색을 나타내 협의회는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20일 하오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2일 상오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노동자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8월 21일 하오 7시부터 세번째 교섭에 들어간 사용자측 대표와 노조대표측은 22일 상오7시 20분께 극적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30개 택시업체 가운데 28개 업체 소속운전사 9백여 명이 22일의 노사합의사항에 대해 전면백지화를 주장하며 24일 상오 7시를 기해 승무거부에 들어갔다. 택시업계파업은 22일 노사합의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의 문안화 과정에서 “성실운행준수” 조항에 대한 합의를 놓고 노조대표들이 반발을 보이면서 비롯됐다. 당초 택시업계분규를 타개하기위해 노사교섭위원들은 지난 22일 상오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동안 근로자 1명에게 매월급여에 6만원씩 가산지급 하는 것을 비롯, 월급산출 기초로 월 7일 이상 근무로서 기본급의 전액지급 내년1월부터의 완전월급제 실시 등을 합의했다. 그 세부사항 작성을 위한 회동에서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가산지급하게 됨으로 이에 대해 사용자측 대표 및 30개회사 전종업원은 성실히 영업하여 1일 6만원(LPG값 제외)이상을 임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성실운행준수” 조항의 삽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완전한 월급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최저임금액을 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현재도 버는대로 사납을 하고있다.”고 주장, 22일상오의 합의사항을 백지화함과 동시에 분규직전에 주장했던 10개항이 관철될 때까지 운행중단키로 결의했다. 다시 1주일간 끌어오던 택시분규는 노사간의 교섭 끝에 “13일 만근시 1년 경력 운전사 기본급을 15만1천원으로 하고, 컴퓨터 미터기 부착시 잡경비 6천원 지급 및 6만원 이상의 사납금에 대한 분배는 5대5로 책정, 연말상여금은 체결된 기본급 기준 1백%”로 합의하면서 8월 30일 하오10시 타결돼 8월 31일 상오10시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도내 15개 택시노조 조합장들 농성에 돌입”, 『제주신문』 1987년 8월 19일자(제주노동004)

“택시노조 요구사항 관련 타협 별진전 없어”, 『제주신문』 1987년 8월 20일자(제주노동005)

“택시분규 타결”, 『제주신문』 1987년 8월 22일자(제주노동006)

“운전사 9백여명 승무거부”, 『제주신문』 1987년 8월 24일자(제주노동007)

“택시분규타결”, 『제주신문』 1987년 8월 31일자(제주노동00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새한병원 위장폐업철회투쟁**

A2[사건 일시] 1987.11.17~1988.05.09

A3[사건 배경] 제주도에서 최초로 민주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위장폐업이라는 비열한 방법으로 저지했던 병원측과 그와 결탁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해온 정보기관, 노동부 제주지방사무소 등에 맞서 새한병원 노동자와 제주지역 민주단체 그리고 학생 등이 209일이라는 장기간의 투쟁을 펼쳤다.

A4[사건 전개과정]

1987.10.20. 노동조합 결성대회. 30여명의 조합원 참석

1987.12.10. 11월 17일 이후 4차에 걸친 단체교섭 공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리본 패용 근무

1987.12.11. 1차 단체교섭

1987.12.31. 종무식 자리에서 이성종 병원장 “오늘 이후로 병원을 폐쇄한다”고 발표

1988.01.01. 근무표에 의해 조합원 출근(32명)하면서 출근 투쟁 시작.

1988.01.07. 노동부 근로감독관 방문하여 중재의사 밝힘

1988.02.05. <새한병원노동조합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새한병원공대위) 구성됨.

1988.02.08.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1988.02.09. 11개 단체가 참여한 <새한병원노동조합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988.02.17. 경찰에 의해 조합장 연행 시도

1988.02.19. 출근농성 중지 결정. <새한병원공대위> 주선으로 병원측과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

1988.02.26-27. 양일동안 병원장과 공대위측 중재위원간 두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사실상 병원측이 일방적인 입장 고수와 책임회피 의도가 명백하여 결

렬.

- 1988.02.29. 공대위에서 추진한 중재가 또다시 무효화됨.
- 1988.03.07.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 심문. 화해 권유.
- 1988.03.08. 부천제일병원 노조간부 2명 격려 방문
- 1988.03.09. 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병원장과 협상 자리를 가졌으나 성과 없음.
- 1988.03.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서 우송됨(각하 결정)
- 1988.03.12. '새한병원 위장폐업철회 촉구대회'(공대위 주최, 천주교 중앙성당, 150여명의 시민학생 참석). 집회 후 병원 앞까지 행진. / 전국병원노조협의회 의장, 부의장 지지방문
- 1988.03.14. 조합원 전체회의. 유인물 배포 및 모금운동 전개. 병원 앞 시위(약 20여명의 시민, 학생 동참)
- 1988.03.16. 「투쟁소식지 2호」 약 500여부 배포. 도지사 앞으로 '공익사업의 정상화와 87명 집단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강구를 요구하는 촉구서' 발송
- 1988.03.19. 위장폐업철회 촉구집회 가짐.
- 1988.03.24. 제주도청의 중재로 병원측과 협상. '새한병원 위장폐업철회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의 건'을 전국의 제 민주단체, 노동운동단체에 발송.
- 1988.03.26. '새한병원 위장폐업 철회를 위한 범도민 성토대회'
- 1988.03.29. 제주대학교에서 공대위가 주최 토론회 진행. 시내 대자보 부착 선전활동
- 1988.04.01. 도지사 항의방문
- 1988.04.02. 성토대회. 성토대회 후 가두시위
- 1988.04.09. 조합원 7명 사업장 점거 농성 돌입
- 1988.04.10. 경찰 난입으로 폭력적 진압, 연행
- 1988.04.11. <새한병원공대위> 중재로 1차 협상(노조측 3명, 병원측 1명, 공대위측 중재자 2명)
- 1988.04.17. 2차 협상. 병원측 결렬선언 후 퇴장. 문정량 조합장외 4명 국민운동제주본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돌입
- 1988.04.23. 단식농성 중단
- 1988.05.09. 새한병원위장폐업 규탄 및 보고대회

A5[사건 내용] 1988년 9월 6일 문정량 외 2명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8명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많은 준비를 통해 10월 20일, 3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새한병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하지만 이때부

터 병원측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됐다. 오죽했으면 10월 29일, 시청사회과 직원으로부터 조합장 앞으로 전화가 와서 “30일 우편으로 신고필증과 공문이 발송될 것이고 내일 도착할 것이다. 신고필증이 중간에 없어질 위험이 있으니 직접 찾으러 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연락이 있을 정도였다. 병원 측의 간부들은 갖은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해산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10월 31일, 병원장 내외와 기획실장, 간호과장 등이 조합장을 불러 모인 자리에서 원장의 부인이 “노동조합을 해산하지 않으면 폐업토록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11월 4일 병원측에 ‘노동조합설립 통지의 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자제 촉구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체교섭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부제주지방사무소와 병원 측은 ‘취업규칙’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그런 가운데 노조는 11월 17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건’을 공문 발송했다. 병원측의 방해도 노골화되어 조합원이 관리자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취업규칙 공개에 관한 건’, ‘노조 및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자제 촉구의 건’ 등의 공문을 병원장 앞으로 발송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11월 20일 병원측으로부터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회시’를 받았지만, 그 내용은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상호 충분한 시간을 두어 검토한 후에 체결하겠다. 조합이 성안한 협약서 및 조합원 구성내용과 집행부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였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고 병원 측은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일관했다. 4차에 걸친 단체교섭 촉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12월 10일부터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리본을 패용하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병원 측의 탄압도 점점 노골화됐다. 관리주임은 차트함 교체를 구실로 조합원의 옷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수차례 뺨을 때리는 폭력행사를 하고, 원장의 모친은 “병원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협박했다. 폭력과 협박 그리고 비아냥은 계속됐다. 노조가 흔들림이 없자 병원 측은 대화를 갖자고 했다. 12월 11일, 1차 단체교섭에 이어 12월 12일 2차 교섭을 가졌다. 그러나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병원측은 더 이상의 단체교섭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12월 31일, “종무식을 할 것이니 전 직원은 영양실로 모이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원장은 “1980년 개원 이래 많은 성장을 했는데, 농어촌의료보험관계도 있고, 고용 의사들이 모두 개원하기 위해 사표를 냈으므로 혼자서는 운영이 안되므로 오늘 이후로 병원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급작스런 소식을 접한 환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노조는 긴급 운영위를 소집하고 “부당폐업”으로 규정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휴업·폐업에 대한 질의서를 노동부, 시청에 제출’, ‘8시간 근무 엄수’, ‘각 기관에 진정서 제출’ 등을 결정했다. 이후 조합원을 긴급 소집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계속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를 했다. 논의결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만 빼고 계속해서 출근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1988년 1월 1일,

근무표에 의해 조합원 32명이 출근했다. 원장은 “야, 이것들 뭐하는 거야?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어?”라며 고함을 질렀다. 조합원이 “근무하러 왔다.”고 하자 “폐업했는데 무슨 말이냐. 근무 좋아하시네”라며 비웃었다. 잠시 후에는 관리주임이 술을 마시고 와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너희들 때문에 8년 근무한 것이 무산됐다. 성질이 돋구어지고 술에 취하며 나는 살인도 할 수 있다. 야! 너 나에게 살인 당해 볼래?”하면서 조합원을 협박하고 항아리를 깨며 술을 뒷병째 마시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조합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정보과 형사가 상황을 주시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으나 방영은 되지 않았고 제주신문사에 연락을 했으나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조합원들에게 온 우편물을 중간에 가져가 버리는 등 관리직원의 횡포도 이어졌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1월 13일 병원측과 협상을 했으나 별 진전 없이 끝났다. 대치가 장기화 되자, <국민운동제주본부> 등 11개 제주지역 단체는 2월 5일 준비소위원회를 거쳐 2월 9일, <새한병원노동조합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결성됐다. 노동조합은 출근농성 등을 꾸준히 펼쳤으나 병원측에서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월 17일에는 경찰이 조합장을 연행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출근농성을 중지하고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2월 19일, 공대위의 중재로 병원측과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됐다. 공대위의 중재가 본격화되자 노조는 몇 가지 요구안을 미리 만들었다. 그 내용은 △병원으로 개업, 전원 원직복직 노조인정을 기본으로 한다. △3월중으로 병원 문을 열고 결원된 의사는 4월말까지 채용한다. △휴업보상을 지불할 것(단, 3월에 문을 열 경우에는 이를 양보할 수 있으며 5월 초까지 미뤄질 역우 휴업 보상한다. △노조가입으로 인해 부당해고된 송모 조합원을 개원과 더불어 복귀시킨다. △단체협약 체결 △노조활동 보장 등이었다. 이후 몇 차례의 협상이 있었으나 병원측이 일방적인 입장 고수와 책임 회피 의도가 명백하여 결렬되고 말았다. 공대위측에서 진행한 중재가 무효화 되고 뚜렷한 대안도 강구되지 않고 며칠을 보내자 조합원들이 불안과 초조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에서 3월 2일 대중집회가 계획되고 전국병원노조협의회의 격려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새로운 기대와 활기를 띠었다. 3월 9일, 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협상을 가졌으나 병원장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노조측의 얘기에 묵묵부답인 채 40분정도 앉아 있다가 나가버렸다. 다음 날 병원측에서 또다시 체불임금을 받아가라는 내용증명을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진화를 했다. 조합원들은 “우리는 폐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병원장에게 ‘해고수당 지불증지’를 요구했다. 같은 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서’ 우송되었는데 결과는 ‘각하 결정’이었다.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계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와 학생 등이 결합하는 공동투쟁으로 발전해나갔다. 3월 12일 오후 5시 천주교 중앙성당에서는 공대위가 주최한 ‘새한병원 위장폐업철회 촉구대회’가 150여명의 시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집회가 끝나고 병원 앞까지 행

진을 했다. 또 전국병원노조협의회 의장, 부의장이 지지방문을 하러 제주도에 내려왔고, 노조원들과 더불어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가두 선전전 및 시위가 조직됐다. 3월 14일 오전 11시 조합원 전체회의를 갖고 저녁 6시에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된 유인물을 뿌리고 모금운동도 전개하며 병원 앞 시위를 전개했다. 집회 및 시위가 계속되자 3월 24일, 제주도청의 중재로 병원측과 협상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관계자들은 노조를 설득하려고 만 했다. 노동조합은 ‘새한병원 위장폐업철회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의 건’을 전국의 제 민주단체와 노동운동단체에 발송했다. 3월 26일 ‘새한병원 위장폐업 철회를 위한 범도민 성토대회’ 등 크고 작은 대중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거리행진, 유인물 배포 및 대자보 부착 등 선전이 강화됐으나 병원측은 변화가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새롭고 강력한 투쟁으로 돌입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4월 9일, 조합원 7명이 병원으로 들어가 병원을 점거하여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현수막을 내려뜨림과 동시에 유인물을 뿌리고 가두방송이 나갔다. 농성지지자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5시경 40-50명의 사복경찰이 순식간에 유리창과 바리케이트를 발로 차며 쳐들어와 농성을 강제 진압했다. 경찰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과 폭력을 쓰며 농성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연행된 사람은 조합원 9명, 학생 8명, 시민 1명 등 총 18명이었다. 이들 모두는 오후 10시경 석방됐다. 4월 11일부터 다시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던 협상은 17일 2차 협상에서 병원 측이 태도를 돌변하면서 결렬 선언 후 퇴장해버렸다. 이에 문정량 조합장의 4명의 조합원은 미리 계획한 대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공대위측의 협력을 받으면서 병원측과의 교섭을 진행하고 가열찬 홍보전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4월 18일, 조합원 부모님들이 찾아와 반강제적으로 단식농성중이던 조합원을 데려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공대위측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중재 역시 별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제민주세력들 역시 총선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 연대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하에서 단식투쟁은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상실해 갔고,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와 열기는 식어만 갔다. 결국 단식투쟁 7일째 되는 4월 23일 저녁 11시 조합회의를 통해 “현상황과 조건하에서 우리들의 단식투쟁은 소모전이다”고 판단, 일단은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향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그후 조합원들의 개인 사정 등으로 결집력이 약화되는 등 힘이 소진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내부정리를 하고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동안 투쟁을 1차 정리해 나가는 차원의 집회인 ‘새한병원 위장폐업 규탄 및 보고대회’를 5월 9일 투쟁을 마무리했다.

A6[관계 인물] 문정량, 김종희, 김금향, 강정임, 강정인, 이명희, 고일수, 고길량, 양정인,

문영희, 김선리, 이성종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한영운수 노사분규 및 전국택시노련제주도지부 동조파업**

A2[사건 일시] 1988.10.24~1988.11.26

A3[사건 배경] 근로조건 개선 및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택시노동자 투쟁

A4[사건 전개과정]

1988.00.00. 한영운수 사용자 측 한영운수 노조 부조합장 윤태주, 조합원 김성철 등 2명 해고

1988.00.00 조합원 해고에 항의하는 조합장 문대진 등 노조간부 4명 해고

1988.10.24. 한영운수노조 파업 돌입

1988.11.04. 전국택시노련제주도지부 '강력대처' 성명 발표

1988.11.18.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불법해고' 판정 21일까지 복직명령

1988.11.26. 전국택시노련제주도지부 동조파업

1988.11.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노조위원장 문대진을 제외한 5명 원직복직 통보

1988.12.01. 한영운수 대표 문영민 노조간부 5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제주경찰서에 고발

A5[사건 내용] 1988년 한영운수 사용자 측은 '근무태만과 불법쟁의를 일으켜 사납금을 일률적으로 줄여 납부토록 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한영운수노조 부조합장 윤태주와 조합원 김성철 등 2명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항의하자 조합장 문대진 등 노조간부 4명을 해고하면서 분규는 발단이 되었다. 이에 10월 24일부터 한영운수노조원 48명은 '부당해고 철회', '부당노동행위 금지', '유급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측은 회사측의 해고이유에 대해 '법정속도를 지켜 택시를 운행하는 준법운영 때문에 사납금이 자연 감소했다며, 그런 불분명한 사유로 노조간부를 해고시킨 것은 부당하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저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사측은 '불법쟁의'를 일으켰다며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측을 고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1월 4일 전국택시노련제주도지부(지부장 임항빈)는 '제주도내 택시업계 전조직력을 총동원 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1월 18일 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부당해고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한영운수 노조원들의 해고를 '불법해고'라 인정하고 21일까지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도록 했으나 회사측은 이에 불복했다. 이에 11월 26일, 전국택시노련제주도지부 소속 택시노동자들이 동조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개인택시를 제외한 제주도내 749대의 택시 중 425대가 파업에 동참한 대규모 연대파업이었다. 전국

택시노련제주도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주도한 화해조정 자리에서 해고노동자의 복직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오후부터 파업을 철회했다. 11월 30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위원장 문대진을 제외한 5명의 조합원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원직복직을 통보했다. 하지만 12월 1일, 한영운수 대표 문영민은 노조간부 5명을 '지난 11월 26-28일 회사 정문을 봉쇄하여 비조합원 13명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혐의로 제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6[관계 인물] 문대진, 윤태주, 김성철, 임황빈, 이영민

A7[관계 단체] 전국택시노련제주도지부, 한영운수노동조합

A8[관계 자료]

편집부, 1989 「뉴스와 화제」 『월간제주』 (1월호: 6-7)(제주노동00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서귀포 선원노조 생존권 투쟁

A2[사건 일시] 1989.01.03~1989.00.00

A3[사건 배경] 이익배분에서 일방적으로 선주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상황을 극복하여 선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투쟁이다.

A4[사건 전개과정]

1988.07.15. 서귀포 선주협회 결성

1988.09.00. 선주협회 선원협회 앞으로 이익배분에서 선주 몫을 더 받겠다는 공문 발송

1989.01.03. 선원협회 정기총회. 서귀포선원노조협의회 결성

1989.01.04-13. 집회 개최, 부합제, 여성노임지불, 선원공제가입 등 요구 농성. 이후 선주협회와 협의서 합의

1989.01.21. 선주협회 협의서를 파기

1989.02.08. 선원협회 임시총회

1989.03.09. 서귀포 선주협회 해체

1989.03.16. 서귀포 수협 앞 집회. 수협회의실 점거 농성

1989.03.20.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1명 구속. 서귀포시 1호광장에서 집회. 통일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A5[사건 내용] 서귀항 선원노조 추진협의회 소속 선원과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준비위원회 소속회원·제주대생 등 70여명은 1989년 3월 16일 하오1시30분께부터 서귀포 수협 위판장에서 선원부인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어민아 내 무보수 강제노동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건 뒤 연승어로작업 때 미끼 끼우기 등을 하는 어민부인들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선원공제가입여부를 공개할 것과 서귀포시·서귀포수협 등 관계당국은 선원편에 서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 등 5개 사항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가운데 제주대생 등 60여명은 이날하오 3시30분께, 나머지 선원등 10여명은 하오10시30분께 각각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이영재, 1989 「서귀항 사람들」 『월간제주』 (9·10월호: 15-17)(제주노동010)

“부녀자 임금착취 ‘즉시 중단’요구”, 『제주신문』 1989년 3월 17일자(제주노동01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동흥산노조 감원계획철회요구 농성**

A2[사건 일시] 1991.12.10~000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1.12.09. 한진그룹 감원계획 발표

1991.12.10. 제동흥산노조 무기한 농성돌입

A5[사건 내용] 1991년 12월10일 하오5시부터 제동흥산노조(위원장 김은상) 조합원 40여명이 제동목장 내 2층 사무실에서 회사 측의 감원계획철회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였다. 노조 측에 따르면 12월 9일 한진그룹 최기호이사가 내도하여, “연말까지 사육규모가 소 2천두에서 1천두로 줄이기로 결정됨에 따라 일부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목장 측에서는 제동흥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됨에 따라 더 이상 목장의 적자운명을 감당할 수 없어 사육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면서 만약 인원을 줄이게 된다면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현재 전출이 계획되고 있는 계열사가 경북울진군 소재 평해광업개발(주)이라 작업여건상 받아들이기 힘든 곳이라며, 감원은 물론 계열사전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편 첫 농성은 이틀간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시 12월17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을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동흥상노조 ‘감원 못한다’ 10일부터 무기한 농성”, 『제주신문』 1991년 12월 12일자 (제주노동01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국택시노조제주지부 무기한 철야농성

A2[사건 일시] 1992.03.26~1992.04.2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2.03.26. 전국택시노조제주지부 노조조합장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1992.04.08. 택시회사 대표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 신고

1992.04.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제시. 노사합의 해결

A5[사건 내용] 전국택시노조제주지부 소속 18개사 노조조합장들은 12차례에 걸친 노사간 92년 임금협상이 계속 결렬됨에 따라 3월 26일 하오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택시노조는 또 “사용자측이 무리한 협상안을 계속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30일부터 조합원 1천4백80명(택시 8백여대)이 일시에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회사노사 양측이 운송 수입금 및 상여금 지급제한규정 등의 쟁점사항에서 의견일치에 실패 계속 결렬되자 4월 8일 박덕구 대명택시운수사 대표 등 도내 16개 택시회사 대표들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제주도지부 산하 16개 노조를 상대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 신고를 했다. 이에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3일 △기본급 12.3%인상 △1일 운송수입금은 7만원으로 하고 초과시 노사가 5대5로 분배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놓고 노사합의를 거쳐 사건을 해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시 지역의보대표 선출 관심 시의원 선임 경우 의원 보궐선거”, 『제주신문』 1992년 3월 28일자(제주노동013)

“16개택시회사 대표 노동쟁의 발생신고”, 『제주신문』 1992년 4월 9일자(제주노동014)

“택시회사 쟁의발생 노사합의거쳐 해결”, 『제주신문』 1992년 4월 24일자(제주노동01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오리엔탈호텔 노조파업투쟁

A2[사건 일시] 1992.05.04~1992.12.00

A3[사건 배경] 오리엔탈호텔은 제주시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205개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180여명의 종업원을 운영하는 있는 특2급호텔이다. 호텔 소유주는 제주출신의 재일교포로서 전문경영인(총지배인)중심의 운영을 해야 하는 호텔사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독선적 운영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오다가 1992년 초에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A4[사건 전개과정]

1992.05.04. 노동조합 파업돌입 / 노조위원장이 회장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검찰에 고발

- 1992.05.11. 호텔측이 협상요청, 3개항합의 파업투쟁 승리
- 1992.00.00. 전보발령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출근투쟁을 벌인 교육선전부장 해고
- 1992.00.00. 문화부장을 대기발령 후 해고
- 1992.00.00. 식음료조리부 9명을 집단해고
- 1992.00.00. 한라일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민주당에 진상조사단 요청
- 1992.07.23. 민주당 제주지역 노조탄압실상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 파견
- 1992.00.00.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경영주 고소, 고발
- 1992.07.31. 호텔측 간부에 의한 노조위원장과 교육선전부장 집단폭행건으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주지검에 고소
- 1992.00.00. 사업자측 업무방해혐의로 노동조합을 경찰에 고발
- 1992.00.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 총19건(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3건, 부당해고구제신청 10건, 부당전직구제신청 4건, 부당징계구제신청 2건)을 접수
- 1992.00.00. 중노위에 재심신청서 8건(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5건, 부당노동해위 구제재심신청 2건, 부당징계구제신청 1건)을 접수
- 1992.00.00. 호텔측은 교선부장의 원직복직판정에 대해 재심신청
- 1992.11.23. 호텔측이 청구한 교선부장 재심신청에 대해 기각판정 / 노조측이 청구한 재심신청 8건 모두 기각판정
- 1992.11.25. 노동조합, '복직기금마련을 위한 한마당' 행사 개최

A5[사건 내용] 1992년 5월 4일 8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이 호텔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결렬되어 50여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91년 호텔경영의 전권을 위임받은 부회장이 부임하자마자 기존의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들을 주요직책에 발령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은 승진에서 제외시켜 조합원들은 물론 비조합원들에게조차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노조측에서는 인사권 남용에 대해 임금교섭과정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거론조차 못하게 하였다. 오리엔탈 호텔 사용주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법에도 보장된 사업장내에서의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진입을 적극 저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여성조합원이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했는가 하면 파업을 선포한 날 노조위원장이 회장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탈호텔 노조원 50여명은 호텔의 폭력적 탄압에 맞서 8일 동안 파업투쟁을 전개한다. 5월 11일 호텔측은 경영주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회장이 노조위원장폭행건으로 검찰에 대해 기소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노조측에 협상을 제기하여 3개항(1. 임금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맞긴다. 2. 부당한 인사는 하지 않는다. 3. 파업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을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 후 호텔측은 파업종료한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합의각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노조에 대한 노골

적이고 집요한 감정적 보복을 하기 시작한다. 그 실상을 보면 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트집을 잡아 입장캐서를 웨이트레스로 전보발령 하는가 하면, 노조 교육선전부장을 서전예고나 통보 없이 서울로 전보발령을 시켰으며, 노조조사통계부장을 타 부서로 전직시킴으로서 탄압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하였다. 그 후 호텔측은 전보발령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출근투쟁을 벌인 교육선전부장을 인사명령불복종이라는 미명하게 해고하였으며, 동시에 회장의 지시사항을 부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부장을 대기발령 후 해고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호텔측은 ‘갈비식당 폐쇄’란 명목으로 파업에 적극 가담한 식음료조리부 9명을 집단해고조치 해버렸다. 이러한 해고열풍속에서도 호텔측은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신청한 연차·월차휴가를 거부하는가 하면, 생리휴가를 신청한 조합원에게 “왜 생리가 다달이 틀리나?”는 등 성적폭력과 노조탈퇴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노조탈퇴를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아 중징계하고 가족들을 동원한 공작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호텔 전 간부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노조탈퇴공작을 벌였는데 인사권을 무기로 사소한 업무상의 실수를 징계하거나 입사를 알선해 준 소개자나 친인척을 가리지 않고 협박하고, 조합원들의 인간적인 약점을 잡아 노조탈퇴를 강요하여 많은 노조원들이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오리엔탈호텔 노동조합이 한라일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민주당에 진상조사단을 요청하자 민주당에서는 제주지역 노조탄압실상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노조측과 호텔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호텔측 대표인 총지배인은 모든 문제를 노조측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노조탄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여 조사단은 물론 관계자들을 우롱하였다. 오리엔탈호텔 노동조합은 대대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 총19건(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3건, 부당해고구제신청 10건, 부당전직구제신청 4건, 부당징계구제신청 2건)을 접수시켰으나 결과는 노조교선부장, 문화부장 원직복직 판정, 교선부장 전보발령건과 노조탈퇴행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집단 해고건, 부당징계, 부당전직등에 대해서 기각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호텔측에서는 교선부장과 문화부장에 대해 복직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다가 노조측의 거센 항의를 받고 한달여 후에 복직시켰으나, 호텔측은 교선부장에게 기존의 근로조건(격일제 야근)을 무시하고 야간 5일 근무 1일 휴무(월 25일 야간근무)로 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문화부장에 대해 원직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다.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호텔측에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제주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호텔측의 감정적 보복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여 한달여 만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되찾았다. 그리고 노조측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다시 중노위에 재심신청서 8건(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5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2건, 부당징계구제신청 1건)을 접수시켰으며, 호텔측은 교선부장의 원직복직판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노위는 11월 23일 호텔측이 청구한 교

선부장 재심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으며 노조측이 청구한 재심신청 8건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판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위원회의 편파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한편 노조측은 3개월에 걸친 경영주의 불법적 탄압행위의 구체적 증거를 수집, 확보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고소, 고발하였으며, 7월 31일 호텔측 간부에 의한 노조위원장과 교육선전부장 집단폭행건으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호텔측은 적반하장으로 노조측에서 고발장을 접수시키기도 전에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 후 회사측은 회장을 비롯한 간부 8명이 기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노조측에 협상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 각서를 교환하였다. “인원정리의 명목으로 해고시킨 해고자들 중 본인 의사를 물어 4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재입사시킨다. 부당 전직시킨 조합원에 대해 추후 협의하여 원직복직시킨다.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강요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징계회부 건을 백지화하고 대기발령 중인 부위원장을 복직시킨다. 노사 쌍방이 제기한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노사 쌍방은 중노위 재심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위 합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노동조합은 1992년 11월 25일 ‘복직기금마련을 위한 한마당 행사’를 10여개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 투쟁의지를 다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강남규, 1992 「제주지역노동사정」, 제주대학교지편집위원회, 『한라산』, 32호

“오리엔탈 노조 어제부터 정상근무”, 『제주신문』 1992년 5월 14일자(제주노동017)

“오리엔탈호텔 노조 강제근로사측 고발”, 『제주신문』 1992년 6월 28일자(제주노동01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한라병원노조 투쟁**

A2[사건 일시] 1992.05.12~000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2.05.12. 노조창립기념행사 참석 이유로 비노조원인 수습사원 4명 해고.

1992.05.28. 해고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전격해고. 병원측 구사대 난입

1992.05.29. 병원측 노조사무실 이전 요구

1992.00.00. 노조원 노조사무실 철야농성 돌입

1992.06.04. 새벽 3시경 쇠파이프와 곡괭이를 든 구사대 난입하여 폭력행사

1992.00.00. 병원측 무단침입하여 조합사무실을 폐쇄

- 1992.00.00. 노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접수 /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조합사무실 폐쇄에 따른 진정서 제출과 함께 단체협약 위반, 야간폭력행사와 관련해 고발장 접수
- 1992.07.0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해고 건을 '원직복직판정',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건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린다.
- 1992.00.00. 병원측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 1992.07.21. 노조측에 해고취소통보. 노조위원장과 부위원당에게 해고취소 후 강제휴직 명령
- 1992.00.00. 병원측,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제휴직상태인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또다시 해고
- 1992.00.00. 노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접수
- 1992.09.08. 단체교섭 시작
- 1992.10.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원직복직판정' 및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건 '부당노동행위' 판정
- 1992.10.10. 제주지검, 한라병원 김병찬원장을 노동조합법(복직명령 불이행)위반 혐의로 입건, 소환
- 1992.10.19.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원직복직 처리
- 1992.00.00. 병원측, 약속을 어기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 1992.11.18. 노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A5[사건 내용] 이전부터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던 사용자측은 1992년 5월 12일, 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비노조원인 수습사원 4명을 해고하면서 그 저의를 더욱 노골화했다. 이에 조합장을 중심으로 이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했고, 이를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전격 해고했다. 더욱이 해고당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15명이 대책을 논의하던 조합사무실에 쇠파이프를 든 병원측 구사대가 난입하여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조합원을 끌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후 병원측은 오후 6시 까지만 조합원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노조사무실 사용제한 통보를 노조측에 전달함으로써 합법적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급기야 병원측은 경비실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사무실 이전을 요구했으나, 노조측은 조합사무실 사수를 결의하여 비번인 조합원을 중심으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그러나 6월 4일 새벽 3시경 병원측은 쇠파이프와 곡괭이를 든 술 취한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사무실을 부수는 작태를 저지름으로써 노조탄압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병원측은 또다시 이전을 통보했고, 노조는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거부했다. 병원측은 계속적으로 독촉공문을 발송하더니, 마침내 조합원이 없는 야밤을 틈타 조합사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사무실 집기를 모르는 장소로 옮기고 조합사무실을 폐쇄시켰다. 노조측은 병원의 해고조치 및 조합사무실 폐쇄 등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제주지방노동사무

소에 '조합사무실 폐쇄에 따른 진정서' 제출과 함께 단체협약 위반, 야간폭력행사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7월 3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측이 접수한 구제신청에 대해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해고 건을 원직복직판정,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건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거나 7월 21일자로 취하함과 동시에 노조측에 해고취소통보를 한다. 또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 해고취소를 하고 강제휴직을 명령, 사실상 판정에 불복한다. 그 후 병원측은 유인물 배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휴직 상태인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또 다시 해고시키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인다. 병원측의 계속되는 횡포에 대해 노조측은 강력 항의함과 동시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강제휴직, 재징계방침, 노조사무실폐쇄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 결과 10월 5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판정을 받았으며 노조사무실 강제폐쇄건 역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는다. 한편 제주지검은 10월10일 한라병원 김병찬원장에 대해 노동조합법(복직명령 불이행)위반 혐의로 입건, 소환하여 위법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다. 그 후 병원측은 노조측과 협상을 벌여 맞고소한 것에 대해 서로 취하하고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하고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0월 19일자로 원직복직시킨다. 그러나 병원측은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노조측은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해고된 후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92년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회사측에 요구하여 9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측은 △근무 중 조합 활동 금지 △조합의 홍보활동(유인물 배포, 현수막게시) 회사 허가취득 후 게시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회사와 노조측이 동수로 참가하게 돼 있는 상벌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을 삭제하고 해고사유조항을 터무니없이 추가했다. 또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된 노조 사무실 제공 장소의 변경 등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협상은 결렬되어 노조측은 11월 1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하기에 이른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강남규, 1992 「제주지역노동사정」, 제주대학교지편집위원회, 『한라산』, 32호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의료원 노동자 투쟁**

A2[사건 일시] 1992.06.30~1992.1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 1992.02.07. 간호사 19명 공개채용
- 1992.06.30. 신규간호사 19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정규직으로 발령
- 1992.07.02. 신규간호사들 원장 방문 항의. 원장, 즉석에서 “정직발령자 10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9명은 7월 2일자로 해고”라고 통보
- 1992.00.00. 일부 간호사 각서 쓰고 임시직 발령받음. 3명은 해고
- 1992.00.00. 해고 간호사 및 신규간호사 일동, 보건사회부, 노동부, 제주도등 20여 군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 발송
- 1992.00.00. 민주당 진상조사단 조사
- 1992.08.01. 신규간호사 19명중 일용직 발령자 6명 정규직 발령, 기존 일용직 근무 28명도 정규직 발령. 그러나 해고자 3명 방치
- 1992.00.00. 민주당진상조사단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신규간호사중 정규직 발령을 냈던 10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고조치 및 견책징계
- 1992.00.00. 해고자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
- 1992.10.10. 해고자 중 오순주 간호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판정
- 1992.10.15. 오순주 간호사 출근 시작
- 1992.00.00. 병원측,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이후 병원측의 보복 계속됨.

A5[사건 내용] 병원측은 지방일간지(제민일보 1월 18일자)를 통해 공고하고 수습간호사모집을 하여 간호사 19명을 2월 7일자로 공개 채용했다. 그런데 수습기간 1개월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1992년 6월 30일이 돼서야 신규간호사 19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정규직으로 발령시켰다. 이에 신규간호사들은 19명 전원에 대해 발령하지 않는 이유를 병원측에 물었으나 병원측 관리부장은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근무하는 것 보면서 차차 정직발령을 하겠다.”라 하고, 수간호사, 간호감독들은 “동기보다 한 살 많으니까”, “활발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라는 등 일관성도 없고 전혀 타당성도 없는 이유를 들며 변명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확실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신규간호사들은 7월 2일 원장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원장은 “주동자가 누구냐? 당장 옷벗고 나가! OO년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름적어! 모두 끌어내”라고 온갖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정직발령 받은 10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9명은 7월 2일자로 해고”라고 즉석에서 통보했다. 그 후 병원측은 신규간호사 9명중 4명의 명단이 있는 블랙리스트를 보여주며 “나머지 5명은 잘못했다는 각서를 쓰면 원장이 선처키로 했다”고 회유했다. 결국 이들 5명과 리스트에 오른 4명중 1명은 각서를 쓰게 됐고, 나머지 3명은 거부하여 각서를 쓴 6명은 임시직으로 발령을 받고 3명은 해고되었다. 해고된 간호사를 포함한 신규간호사 일동은 보건사회부, 노동부, 제주도등 20여 군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등 해고 및 정규직 미발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고, 제주지역 노동탄압실태 조사를 위해 민주당 진상조사단(단장 김말룡의원)이 파견되어 제주도청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때, 제주의료원 원장은 발뺌하기에만 급급해하며 엉뚱하게도 공익기관인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의 수익실적 등 자기치적만을 내세우기에 바빴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정균환, 정상용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하자 일용직으로 발령된 6명에 대해서는 8월 1일자로 정규직 발령을 내겠으며, 해고된 3명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일임해주면 시간을 두고 발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 후 병원측은 8월 1일, 신규 간호사 19명중 일용직 발령을 받았던 6명에 대해 정규직 발령을 냈고, 기존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28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발령을 했으나 해고된 3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또 병원측은 진상조사단의 노조탄압진상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간호사중 정규직 발령을 냈던 10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고조치 및 견책징계를 내리는 작태를 자행한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2명 타병원에 취업하여 구제신청 포기)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해고자 중 오순주 간호사는 10월 10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고 10월 15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한다. 그러나 병원측은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정직발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해고된 후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은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정규직을 내줄 수 없다”고 하며 일용직으로 발령을 내린다.(오순주 간호사가 해고된 후 채용된 간호사 4명에게 1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발령함) 또한 원래 근무했던 수술실에 배치시키지 않고 매일매일 일손이 모자라는 부서의 업무를 땀질 하라는 식의 근무를 강요하는 치졸한 병원측의 보복이 계속되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강남규, 1992 「제주지역노동사정」, 제주대학교지편집위원회, 『한라산』, 32호

A9[관련 사건]

4. 농민운동

제주에서 농민운동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 사건은 안덕면 서광리 태풍 재해사건이다. 안덕면 서광리 사건은 1987년 여름 서부산업도로 부실공사로 집과 농토를 침수당한 서광리 농민 14가구가 제주도를 상대로 치열한 보상요구를 한 싸움으로 이 과정에서 농민 박상률씨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결국 농민들은 피해보상금 등 요구사항을 관철시켰고 이러한 승리의 경험은 이후 제주도 농민운동을 전개시켜 나가는 데 귀중한 힘이 되었다.

제주도 농민운동의 첫 지역 조직은 '대정읍 농민회'로서, 1989년 1월 31일 모슬포 이화예식장에서 결성대회를 가졌다. 1988년 8월 '대정읍 농민회 준비위원회'로 발족하였는데, 대정에서 먼저 농민회가 출발하게 된 것은 이 지역 기독교나 가톨릭 등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었고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운동이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9년 7월 '안덕면 농민회'가 결성되고 1990년에는 한경면, 성산읍, 조천읍, 조천읍에서 농민회 준비위원회가 차례로 결성되었다.

'제주도 농민회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각 지역 읍·면 농민회를 기반으로 1990년 9월 7일 '수입개방 저지 및 UR협상 저지를 위한 제주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준비위원회 산하에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및 UR협상 저지투쟁위원회' 구성했다. 이러한 준비활동 끝에 1991년 4월 30일 제주YMCA 강당에서 '제주도농민회'를 창립하였다.

제주도농민회는 준비위 시절부터 당시 제주지역의 가장 큰 이슈였던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투쟁에 매진했으며,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농가부채 해결, 농협개혁 운동, 감귤 문제 해결 등 농민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농민회는 청년학생들과 농활을 통한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제주지역 통일축전 등 민족문제와 관련한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제주도농민회는 1993년에 전국농민회총연맹에 가입,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A1[사건명] **수입개방 및 UR협상저지를 위한 제주지역농민대회**
- A2[사건 일시] 1990.09.07
- A3[사건 배경]
- A4[사건 전개과정]
- A5[사건 내용] 1990년 9월 7일 상오 11시 제주YMCA회관에서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수입개방 및 UR협상저지를 위한 제주지역농민대회'이 개최됐다. 대회사, 성명서발표 등의 순으로 이어진 1부 대회를 끝낸 도내 농민·대학생·재야단체 회원 등 3백여 명의 대회참가자들은 농협제주도지부까지의 평화대행진을 하기위해 가두진출을 시도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대회참가자들

은 하오 2시부터 YMCA앞마당에서 ‘평화대행진 원천봉쇄 및 불법연행규탄대회’를 열었으며, 같은 시간 중앙로 곳곳에서 1백여 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의 원천봉쇄를 규탄하는 기습가두시위를 4~5차례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A8[관계 자료]

“반농민·반도민적 악법 특조법 폐기하라”, 『제주신문』 1990년 9월 8일자(제주농민 001)

“UR협상 저지”, 『제주신문』 1990년 9월 8일자(제주농민00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 도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0.09.2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 도민결의대회」가 1990년 9월 22일 하오3시 제주도내 농민과 시민 등 2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내 YMCA회관에서 열렸다.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등 도내 20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날 대회는 강경선교수(제주대)의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의 배경과 현실」이라는 주제강연에 이어 결의문낭독, 평화의 행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농민회준비위 등 농민·시민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농산물의 과도한 수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생활을 파행적으로 만드는 농산물수입업체와 가공업체들의 비자국적인 사업양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문낭독을 마친 농민·시민들은 YMCA-동문로터리-중앙로-남문로터리-광양로터리까지 평화적인 시가행진을 벌인 후 하오5시 30분께 시청 앞에서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A8[관계 자료]

“「우리농산물 먹기」결의 과도한 수입통제 주장”, 『제주신문』 1990년 9월 23일(제주농민00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면수입개방 및 UR협상저지농민대회**

A2[사건 일시] 1990.10.0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대정읍농민회(회장 이권보) 주최 「전면수입개방 및 UR협상저지농민대회」가 10월 4일 하오2시 대정국민학교에서 지역농민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대회참가자들은 “대책 없이 UR협상에 임하는 현정권의 각성과 농민을 말살하는 농어촌종합발전대책 결사반대” 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대회에 앞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특조법은 관주도개발의 전형으로 국내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산업구조개편을 기도하는 법이며, 특조법이 제정되면 농어민은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도시나 관광지주변을 떠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대정읍농민회

A8[관계 자료]

“UR저지 농민대회 특조법제정도 반대”, 『제주신문』 1990년 10월 6일자(제주농민00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농산물수입개방과 UR협상저지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0.10.1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도내 20개 전 농협이 공동주최한 「농산물수입개방과 UR협상저지결의대회」가 1990년 10월 15일 상오10시 농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종합경기장내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 농민들은 “지난 8일 NTC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농민의 생존농업인 감귤을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편협적 처사에 대해 격분과 실망을 느낀다.”며 “정부는 제주감귤을 기필코 NTC에 포함시켜 UR협상에서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농산물 수출선진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UR농산물협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수입자유화 되는 양파, 맥주맥, 유채, 바나나, 파인애플 등 제주농업의 주종을 이루는 품목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한다는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농민들은 단위농협별로 조를 이뤄 ‘농민살길 가로막는 UR협상 중단하라’, ‘UR협상 타결전에 농민살길 보장하라’, ‘비교역적품목에서 감귤을 제외시킨 편협농정 규탄한다’ 등의 현수막을 앞세우고 서사로 관덕로 중앙로를 따라 시가지 평화행진을 벌여 하오1시 탑동광장에서 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타오른 「UR협상」 반대”, 『제주신문』 1990년 10월 16일자(제주농민00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UR농산물협상거부를 위한 범국민가두서명운동 발대식**

A2[사건 일시] 1990.11.1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0년 11월 19일 상오11시 구제주시청 앞마당에서 도내 농민 등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UR농산물협상거부를 위한 범국민가두서명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농업기술자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김두만),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위원장 허태준), 특조법 및 UR협상저지범도민운동본부결성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 세 단체가 UR농산물협상거부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벌이는 이번 가두서명운동은 오는 토요일까지 1차 3만명 서명을 목표로 도내전역에서 전개된다. 발대식을 끝낸 참가자들은 정오부터 제주시내 지하상가와 시회버스터미널 두 지역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가두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1월 30일 UR협상거부범국민서명운동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총 2만7천5백60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UR협상거부 범국민운동본부와 연대하여 GATT와 정부·국회에 공식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UR농산물협상 거부 범국민 가두서명 나서”, 『제주신문』 1990년 11월 20일자(제주농민006)

“UR협상거부 서명운동 2만7천5백여명 동참”, 『제주신문』 1990년 12월 1일자(제주농민00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폭력경찰규탄과 특별법 및 골프장저지를 위한 제1차 제주농민대회**

A2[사건 일시] 1991.06.0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6월 7일, 「폭력경찰규탄과 특별법 및 골프장저지를 위한 제1차 제주농민대회」가 제주도농민회 주최로 열렸다. 농민·학생·시민 등 1백여 명은 하

오2시50분께 제주시 YMCA회관 앞 도로를 점거하고 대회를 치렀다. 시종 연좌성을 벌인 참가자들은 “제주도민 다 죽이고 독점재벌만 살찌우는 특별법·골프장을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와 ‘전우홍씨 뇌상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주최 측은 투쟁선언 및 결의문을 통해 “전우홍씨 뇌상사건이 20여일 지났는데도 경찰은 어떠한 입장이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을 왜곡·축소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집회불허방침을 세우고 이날 전경 및 경찰관 등 6백여 명을 동원했으나, 주최측인 제주도농민회가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 차도점거행진을 포기했고 경찰도 차도진입만 차단했을 뿐 강제진압을 자제했다. 따라서 참가자와 진압에 나선 경찰간에 충돌 없이 하오5시께 대회는 평화적으로 끝났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도농민회

A8[관계 자료]

“특별법·골프장 저지”, 『제주신문』 1991년 6월 8일자(제주농민008)

A9[관련 사건]

5. 빈민운동

A1[사건명] **제주지역 노점상 생존권투쟁**

A2[사건 일시] **1989.06.30~1989.07.27**

A3[사건 배경] ‘민생치안확보와 공권력 확립’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노점상에 대해 전면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살리고 거리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노점상 단속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노점상연합회를 중심으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투쟁에 나서게 됐다.

A4[사건 전개과정]

1989.06.11. 정부에서 7월 11일부터 노점상 단속방침 발표

1989.06.25. 제주도 노점상단속 방침 발표

1989.06.30. 노점상연합회 비상총회

1989.07.16. 노점상연합회 간부 삭발 농성

1989.07.20. 노점상연합회 집회, ‘대책없는 노점단속 탄압저지 실천대회’ 개최, 연좌농성

1989.07.21. 강제철거 시작

1989.07.22. 노점상연합회 항의 시위

1989.07.23. 노점상연합회 대책회의

A5[사건 내용] 제주시의 노점상 단속방침이 발표되자 노점상연합회는 몇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 1989년 6월 30일 ‘대책 없는 노점단속규탄 단결투쟁을 위한 비상총회’를 갖고 시장면담을 요구했다. 제주시청이 이를 승인하여 면담을 가졌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이어 제주시 당국은 7월 21일 무조건 노점상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속 전날인 7월 20일 오현단 팔각정에 150여 명의 노점상들이 ‘대책없는 노점단속 탄압저지 실천대회’를 갖고 “제주시당국이 강제 철거를 한다면 600여 노점가족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 자리를 계속 사수하며 장사를 할 것,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 없는 무차별 노점단속을 계속할 경우, 우리 노점상은 모든 힘과 우리를 지원하는 모든 민주세력의 힘을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끝까지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날 제주 지역총학생회협의회도 집회에 참석하여 “대책 없이 노점상을 단속할 경우, 우리 청년학생들은 노점상들과 단결하여 지원·연대로써 조직적으로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일부 노점상들이 삭발로써 생존권투쟁을 결의하고 일터까지 평화행진을 위해 오현단을 나오는 순간 사복경찰의 저지를 받았으나 이를 뚫고 중앙로까지 진출했다. 이때 전경과 백골단 300여 명이 대열을 봉쇄해 몸싸움 속에 노점상들은 다시 오현로쪽으로 이동해 연좌농성을 벌이다 해산했다. 7월 21일 새벽 5시부터 전경, 백골단, 공무원 등 800여명이 전경차와 소방차를 동원해 노점 강제철거에 나섰다, 이미 전날 밤 노점상 100여명이 제

일은행 옆 리어커를 철수한 상태라 충돌은 없었다. 이때부터 전경들은 노점상 자리를 점거해버렸다. 7월 22일 오후 5시 경 노점상들은 제주은행 본점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갖고 전경과 충돌했다. 집회 참가자 150여명 중 87명이 연행되고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행된 노점상들은 이날 밤 10시 30분경 모두 훈방됐다. 7월 21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는 전회원이 장사를 중단하고 투쟁을 계속했다. 이 기간 시장과의 면담을 두 차례 가졌다. 7월 26일 하오 4시30분부터 시청 현관 앞에서 제주 시장과 공개 면담, 강제 철거에 따른 생계 대책 등을 촉구했다. 노점상들은 이 날 공개 면담에서 "지난 22일 하오 제주은행본점 앞에서 있었던 항의시위에서 노점상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경들에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고 주장하고 "병문천을 복개해 이주토록 하는 등의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 을 요구했다. 제주시장은 답변에서 21일 강제 단속 이후 노점상 대표들과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불구자 2명 실태조사 후 대책마련, 노점상 가족에 한 해 2명까지 취로사업알선, 전직희망자 취업알선, 점포임대 원할 경우 용자알선 등의 방안을 제시, 제주시가 제시한 오현로, 수영장 진입로 또는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장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당국은 여전히 간선도로변 노점은 절대금지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나, 노점상연합회는 오현로를 얻어내는 성과를 얻어내고 28일부터 오현로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지역노점상연합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강봉수, 1989 「더 이상 갈 곳 없고 떠밀릴 곳도 없는 노점상」 『월간제주』 (8월호: 37-39)

“제주시 노점상 전시장과 면담”, 『제주신문』 1989년 7월 27일자(제주빈민002)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 『제주의 소리』 (8월호: 4-5)

A9[관련 사건]

6. 언론운동

○ 신문

1961년 5·16 쿠데타로 군부는 포고 제11호에 따라 제주에서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 실적이 없는 일간지 2개, 주간지 9개, 일간 통신 2개를 폐간 처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다. 1962년 『제주신보』와 『제민일보』를 통합해 발행하기 시작한 『제주신문』은 오랜 기간 제주지역의 유일한 지방지였다. 1967년 8월 10일 『제남신문』이 창간되어 1980년까지 두 신문 체제가 유지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등장 이후 제주의 신문은 언론인 강제 해직, 제남신문 폐간, 제주신문의 경영진 교체 등이 단행되어 권력과 언론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제주지역에서는 두 차례 언론인 강제 해직이 있었는데, 8월 4일과 13일 제주신문 기자 5명이 해직되었다. 언론인 강제 해직에 앞서 각 언론사에서는 기자들 전원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었고 해직 절차는 이미 제출된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제주도내 2차 언론인 해직은 제남신문 폐간으로 일어났다. 신군부는 1도 1사 원칙으로 지방신문을 정비했는데, 제남신문은 11월 27일까지 발행하고 폐간되었다. 제남신문의 예고 없는 폐간으로 30명의 사원과 임원 전원이 해직되었다.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언론의 모습은 달라져 갔다. 중앙과 지방의 26개 언론사가 언론 민주화를 선언했다. 제주신문 편집국 기자 일동은 1987년 8월 11일 편집과 경영의 분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민주화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되면서 제주도내 일부 사회단체와 대학생 단체에서는 1988년 7월 22일 '5공 세력'인 김대성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광고거부·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제주신문이 정론지로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기자협회 제주신문분회에서는 7월 31일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제주신문 이사회는 8월 15일 김대성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임시 이사회에서 김대성 전사장의 복귀 활동을 하던 양주하 상무가 사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되자, 제주신문노동조합은 11월 11일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98%의 찬성을 얻어 13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제주신문 노조의 '5공 세력' 복귀 반대 투쟁은 지역사회 문제로 비화되어 재야단체, 언론노조, 학생단체와 독자들까지 가세했다. 결국 회사측은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폐업을 결정하고 사원 106명을 1990년 1월 5일자로 해고했다.

회사측이 폐업을 신고하자 제주신문 노조와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언론사 노조, 재야·사회단체들이 폐업 철회 결의에 참여했다. 1990년 1월 6일에는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가 구성되어 1월 13일 오후 3시 제주북교 운동장에서 '폐업철회 촉구 도민대회'를 열었다. 3,0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는 결의 사항이 채택되고 폐업 철회 10만 명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농성투쟁을 벌이면서 신문을 계속 발행하던 사원들은 1월 22일 지령 1만3,653호까지 발행하고 23일 한국전력에서 단전조치를 취하자 78일 동안의 철야 농성을 중단하고 25일

신문사를 떠났다. 이후 제주신문사에서 집단 퇴직한 사원 115명으로 구성된 제주참언론동지회가 주축이 되어 1990년 6월 2일 『제민일보』가 창간되었다. 제민일보 창간준비위원회는 자본 형태를 도민주와 사원주로 구성하기로 하고 주식을 공모하였다. 도민주 청약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였고, 도민 모금액은 예상액 15억 원보다 2억2,000만 원이 초과되어 새로운 신문에 대한 사회적인 호응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987년 신문 발행의 규제 조치가 완화된 후 제주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일간지 『한라일보』가 1989년 4월 22일 창간되었다. 신생지로서 기성지와 경쟁하게 된 한라일보는 보급과 광고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의 다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운영의 안정 기반을 다지지 못한 한라일보는 1992년 노사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의를 얻지 못했다. 한라일보노동조합은 1992년 4월 13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심화되면서 노사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법정으로 비화되고 집단 해고 등 극단적인 대응으로 치달았다. 노조원들은 매일 회사 현관에서 항의 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투쟁지 유인물을 만들어 도민에게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폈다.

투쟁 과정에서 노조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 상호 비방전으로 전개되자 회사측은 노조 간부 6명을 집단 해고했다. 7월 4일 노조원 가족들로 구성된 한라일보 정상화를 위한 가족협의회가 결성되어 회사측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라일보노동조합은 1993년 2월 25일 총회를 열고 1년여에 걸친 파업을 마감하고 일부 노조원이 복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자진 사퇴했다.

○ 방송

1980년 5월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언론 검열이 강화되고 방송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졌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청 3층에 군부대에서 파견한 언론 검열반을 상주시켜 매시간 방송되는 뉴스를 사전에 검열했다. 당시 주요 검열 대상 방송뉴스로는 낮 12시 라디오 뉴스와 저녁 5시 라디오 지방종합뉴스, 그리고 TV 저녁뉴스 등이었다. 신군부의 뉴스 검열을 받기 위해 방송 기자들은 뉴스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제주도청 3층까지 뛰어다녀야 하는 곤욕을 치렀다.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정치적 민주화운동과 자유언론 회복운동을 강제로 잠재우기 시작했다. 언론검열에 반대하는 기자들을 대거 검거하고 신군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1980년 8월 4일과 5일에 걸쳐 제주문화방송의 기자·PD 등 8명, KBS 제주방송총국의 기자 등 2명이 강제 해직되었다. 언론인 강제해직은 언론사로부터 기자 전원의 사직서를 받도록 한 두 이미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 뒤 1987년 6월 항쟁의 여파가 방송계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주에서도 1988년 5월 20일 KBS 제주방송총국 노동조합이, 1988년 9월 1일

제주문화방송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A1[사건명] **KBS노조제주지부지부장 방송민주화 요구 단식농성**
- A2[사건 일시] 1989.06.17~1989.06.00
- A3[사건 배경]
- A4[사건 전개과정]
- A5[사건 내용] KBS노조제주지부(지부장 김세균)는 1989년 6월 19일 하오 “국회 이철규군
변사사건 조사 특위의 활동상황 생방송, 이철규」 특집제작 20일 전국방영을 회사
측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KBS 노조지부 조합
원들은 19일부터 방송민주화를 주장하는 리본을 패용하고 있으며 김지부장은 이
와 관련 17일부터 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A6[관계 인물] 김세균
- A7[관계 단체]
- A8[관계 자료]
- “KBS 노조지부장 방송민주요구 단식”, 『제주신문』 1989년 6월 20일자(제주언론001)
- A9[관련 사건]

- A1[사건명] **제주신문 언론민주화 투쟁**
- A2[사건 일시] 1989.11.09~1990.01.25
- A3[사건 배경] 5공 청산 분위기 속에 대표적인 어용언론인이었던 김대성 제주신문사 사장
이 직원들에 의해 물러났으나, 1989년 공안통치 정국에 맞춰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주신문사 노동조합은 물론 간부사원까지 5공 언론으로의 회
귀 음모로 규정하여 이를 막기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
- A4[사건 전개과정]
- 1988.08.04. <제주신문 민주언론쟁취투쟁위원회>, “도민에게 드리는 글” 3천매 제작 배
포 / 국장급 간부 6명도 지지성명 발표
- 1988.08.07. <제주신문 민주언론쟁취투쟁위원회>는 8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대
성 사장 퇴진 등이 확약됨에 따라 농성 해제.
- 1988.08.15. 제주신문사 이사회에서 김대성 사장 퇴진 확정, 경영일선에서 물러남
- 1988.09.08. 제주신문노동조합 창립총회
- 1989.10.00. 양주하씨 김대성 복귀를 위해 편집국 기자 포섭 움직임 시작. 해당기자 양
심선언.
- 1989.11.09. 제주신문 이사회 개최하고 양주하 상무를 사장직무대행으로 결정. 이에 반
발하여 <제주신문 민주언론투쟁위원회>(위원장 김덕남 편집부국장) 양주
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 1989.11.11. 제주신문 논설위원실 민언투위 지지성명 발표, 한국기자협회 제주도지부 지지성명 발표, 오후 6시 제주신문노동조합(위원장 흥훈기) 임시비상총회를 소집하고 민주언론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승계하기로 결정(전체조합원 115명 중 98명 참석, 96명 찬성)
- 1989.11.13. 제주신문사 임원·논설위원·국장단이 노조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주신문 사태수습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병운 이사 겸 논설위원)를 발족, 한국기자협회(회장 노향기), 투쟁을 전폭 지지한다는 성명 발표, 노동조합 2차 투쟁결의대회 개최, '김대성 비리 고발센터' 운영, 노동조합과 양주하씨 대화, 서로의 입장만 확인
- 1989.11.14.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전교조제주지부 등 지지성명 발표
- 1989.11.16. 격려광고 및 격려방문 이어지기 시작
- 1989.11.19. 제주대 조문부 교수 등 제주도내 학계·종교계·문화계·민주단체 등 각계 대표 36명 지지성명 발표
- 1989.11.20. '5공회귀 결사반대 및 참언론 수호 결의대회' 개최, '양주하 퇴진 및 김대성 복귀반대' 재천명,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 지지성명 발표
- 1989.11.24. 편집·광고·영업국 부장 10여명이 '우리의 결의'를 발표하고 철야농성 합류
- 1989.12.04. <제주신문 사태수습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성명 발표, 제주신문 지·보급 소장 81명 성명 발표
- 1989.12.05. 양주하씨 명의로 제주도노동위원회에 노조측을 상대로 한 사용자측 쟁의발생신고서 제출
- 1989.12.07. 제주도노동위원회, 사용자측 쟁의발생신고서 부적격 판정, 노동조합 조합원 비상총회 개최, 주장 관철 재결의
- 1989.12.08. 이사회 개최. 대안 없이 종료. 양주하씨 '제주신문사 폐업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요구
- 1989.12.11. 제주신문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 '폐업음모 분쇄에 나서며' 성명 발표, 이사회가 26명의 주주에게 임시주총 소집통지서 발송
- 1989.12.12. 제주신문노동조합 사법적 대응 결의. 흥훈기 외 사원 126명의 연서로 김대성·양주하씨를 '탈세·업무상 자금횡령 및 배임유용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
- 1989.12.13. 제주지검, 김대성·양주하씨를 입건 조사하기로 결정, 제주신문사 간부 및 사원들로 구성된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지훈 논설위원) 출범
- 1989.12.18.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제주지역 언론4사 노조 연대투쟁 결의대회 개최, 제주지역 한겨레신문지사·지국협의회 성명 발표, 미협 제주도지부 회원 성명 발표, 제주대학교 교수 93명 성명 발표,

제주도내 전현직 언론인 200여명 성명 발표, 기타 전국 각 지역 신문사 노조 등에서 잇달아 성명 발표

1989.12.19.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도민의 대변지, 제주신문 수호 투쟁에 전도민의 궤기를 호소하면서'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기구' 구성을 최초로 제안

1989.12.22. 전국언노련 주최 '제주신문 민주언론수호궤기대회' 제주신문사 강당에서 개최(300여명 참석)

1989.12.23. 제주신문노동조합 부영주, 고수근 조합원 제명

1989.12.26. ,제주신문사 임시주주총회 개최(오전 10시, 파라다이스 회관), 제주신문사원들 주주총회장 앞에서 침묵 시위, 주주총회 김대성을 대표이사 사장 선출, 사원들 비상총회 개최

1989.12.27. 제주신문사측 김대성 대표이사 명의로 전 사원들에게 해고예정통지서 발송

1989.12.29. <제주신문 폐업의결 철회촉구 도민회 준비모임> 개최

1990.01.04. '제주신문 폐업저지를 위한 사원 및 사원가족 결의대회' 개최

1990.01.05. 사측, 양주하씨 명의로 신문제조업 폐업신고서를 제주세무서에 제출. 전력수급계약해지신청서 및 전화가입계약해지청구서 제출, 제주신문노동조합,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성명 발표

1990.01.06.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 결성대회 개최(오전 10시, 가톨릭회관)

1990.01.08. 제주신문노동조합 전날 회사측이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양주하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

1990.01.09. <제주신문 폐업철회를 위한 제주지역 노조협의회>(공동대표 박선길 제주도 선원노조위원장 외 9명) 결성대회를 갖고 연대투쟁 결의

1990.01.00. 제주신문사원 131명 연서로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1990.01.13.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신문 폐업철회 촉구 도민대회' 개최(북초등학교)

1990.01.23. 단전조치 취해짐. 호외 외부 인쇄소에 의해 제작. 제주신문 지령 13,653호로 종간.

1990.01.25. 제주신문노동조합,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농성 중이던 제주신문사 사옥에서 철수(새신문 창간작업으로 투쟁방향 선회),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 상임위원회 열고 해체 의결

1990.01.29. <제주참언론동지회> 결성식 및 현판식(구 제주감귤협동조합 제주시지소)

A5[사건 내용] 1988년 8월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대성 전 사장이 양주하 상무를 앞세워 1989년 10월부터 복귀음모를 드러내고, 11월 9일 제주신문 이사회에서 양주하 상무가 사장직무대행으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하여 <제주신문 민주언론투쟁위원회>(위원장 김덕남 편집부국장)는 '이사회 결정 철회와 양주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양주하는 1988년 김대성 사장 퇴진 때 같이 물러나야 할 인물이었으나 “김대성과는 안전하게 인연을 끊었다”라는 공언으로 겨우 퇴진을 면했었다. <제주신문 민주언론투쟁위원회>가 농성에 돌입하자 김평진 회장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결정을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나 양주하와 개별면담 후 이를 번복, 양주하에게 전권을 이임한다는 구두약속을 하고 떠나버렸다. 1989년 11월 11일, 제주신문 논설위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신문사 간부들도 민언투위의 싸움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고, 한국기자협회 제주도지부도 ‘공안통치를 틈탄 5공언론으로의 회귀 움직임에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6시 제주신문노동조합(위원장 홍훈기)은 임시비상총회를 소집하고 민주언론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전체조합원 115명 중 98명 참석, 96명 찬성) 제주신문노동조합은 이 투쟁의 성격을 ‘양주하 퇴진=5공 회귀 분쇄=민주언론쟁취’로 규정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는데 주요 주장은 “위기상황 조성한 양주하 퇴진, 김평진 회장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정상화 방안 강구할 것, 조합원 및 비조합원 간부에 대한 와해·포섭공작을 중단할 것, 이사회와 비조합원 간부사원들은 정상경영에 앞장설 것” 등이었다.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즉각 쟁의대책위가 구성되어 투쟁방향과 조합원 조직화를 논의하는 등 전열정비에 나섰고, 쟁의특보를 발간·배포하고 양주하의 출근을 저지하며 계속적인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실질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11월 13일, 제주신문사 임원·논설위원·국장단이 노조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주신문 사태수습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병운 이사 겸 논설위원)를 발족시키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반 여건조성과 사태추이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투쟁대열이 확대됐다. 또, 한국기자협회(회장 노향기)도 ‘투쟁을 전폭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전국적인 연대투쟁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날 2차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김대성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날 노동조합과 양주하씨가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나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만 확인했지만 대화의 창구는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11월 14일,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전교조제주지부 등 제주도내 민주단체에서 지지성명이 발표되는 것을 시작으로 각계에서 지지성명이 이어지고 격려광고 및 격려방문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특히 11월 19일, 제주대교수 등 제주도내 학계·종교계·문화계·민주단체 등 각계 대표 36명이 지지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전도민적 공감대확산을 기했다. 11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이 투쟁을 ‘제주도민의 정론지로 바로 서기 위한 민주언론 사수투쟁’이라 전제하며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이 같은 내외적 투쟁 분위기 속에 사원들이 속속 철야농성에 합류했다. 한편, 12월 8일로 사태수습을 위한 이사회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신문 사태수습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 성명을 발표하고 이사회가 사태해결을 위한 슬기로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날 제주신문 지·

보급소장 81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8일의 이사회를 예의 주시하며 김대성 사장의 복귀 불가선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2월 5일 제주신문사측은 양주하씨 명의로 제주도노동위원회에 노조측을 상대로 한 사용자측 쟁의발생신고서가 제출되어 사용자측이 제신문사투쟁을 노동쟁의로 규정하려 했으나 이틀 후 부적격판정이 내려졌다. 12월 8일의 이사회는 <제주신문 사태수습 비상대책위원회>의 바람과는 달리 아무런 대책을 내오지 못했다. 오히려 양주하씨가 “제주신문사의 폐업결정을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해 달라”고 건의함으로써, 김대성사장 복귀가 안되면 폐업도 불사한다는 음모만 확인한 꼴이 돼버렸다. 따라서 12월 11일, 제주신문노동조합은 투쟁결의대회 자리에서 ‘폐업음모 분쇄에 나서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 성명에서 8일의 이사회가 아무 대안 없이 끝난데 유감을 표하고 ‘김대성의 사장 복귀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오는 26일 임시주총을 개최 법인체해산 결의라는 극악한 방법으로 폐업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26명의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투쟁형태가 요구됐다. 12월 12일 제주신문노동조합은 사법적 대응을 결의하고 흥훈기 외 사원 126명의 연서로 김대성·양주하씨를 ‘탈세·업무상 자금횡령 및 배임유용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주지검은 김대성·양주하씨를 입건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제주도경에 특별수사반을 구성토록 했다. 하지만 김대성, 양주하는 끝내 출석을 거부했고,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 폐업음모가 드러나자 12월 13일, 제주신문의 논설위원·국장단·부국장단, 부장단을 포함한 전사원은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지훈 논설위원)를 출범시켰다. 그들이 밝힌 출범 이유는 “현 상황을 참언론에의 도전뿐만 아니라 사원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사태로 인식, 폐업기도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12월 18일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폐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폐업을 주도하는 측에 있으며, 주식을 도민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제주지역 언론4사 노조는 ‘연대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사태를 제주지역 언론민주화를 위한 언론노동운동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여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제주지역 한겨레신문지사·지국협의회, 미협 제주도지부 회원, 제주대학교 교수 93명, 제주도내 전현직 언론인 200여명, 전국 각 지역 신문사 노조 등에서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폐업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는 12월 19일 ‘도민의 대변지, 제주신문 수호투쟁에 전도민의 곁기를 호소하면서’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기구’ 구성을 최초로 제안했다. 1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제주신문 민주언론수호곁기대회’가 제주신문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언노련 중앙위원 및 전국언론사 노조대표 30여명을 비롯 제주도내 4개 언론사 노조원 등 300여명이 대회장인 강당을 가득 메운 채 투쟁결의를 드높였다. 그리고 12월 23일 제주신문노동조합은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해온 부영주, 고

수근 두 조합원을 제명했다. 12월 26일 오전 10시, 제주신문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가 파라다이스 회관에서 개최됐다. 제주신문 사원 100여명은 미리 출정식을 갖고 오전 9시 40분부터 총회장 입구에서 1시간동안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언론해방’이란 노란 머리띠를 하고 ‘50만 도민은 주총회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45년 역사가 한 두 사람에 의해 좌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잇달아 열린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석상에서 일부 소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성 측근과 김평진 회장은 김대성을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이들은 새 경영진들의 출근을 저지할 경우 1월 5일 폐업계를 제출하고 법인체 청산절차를 밟기로 전격 의결하고 이를 위해 3억 6천만 원의 증자도 결정했다. 폐업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신문 사원들은 이날 오후와 다음날 연이어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제주신문 사수와 폐업저지투쟁전개’를 재천명했다. 노동조합은 양주하를 고의적 임금체불(1989.11.9-12.26일분 임금 등)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조치한다. 더욱이 농성기간동안 점심·저녁으로 더운밥을 먹여준 사원부인회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원 130여명에게 연말 가계비조로 각 60만원씩 8천만 원을 전달하며 투쟁을 독려했다. 이제 이 투쟁의 성격은 민주언론쟁취투쟁에서 전사원의 생계가 달린 폐업의결철회 촉구투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한편 김대성은 대표이사 명의로 12월 27일자로 전 사원들에게 “사원들과의 근로계약이 폐업신고일로부터 해지될 예정”이라는 ‘해고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 12월 29일, 광양성당에서는 11월 19일 성명을 발표했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가칭)<제주신문 폐업의결 철회촉구 도민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운동과 토론회, 사법 대응, 도민주 공모 등 폐업저지활동전개를 결의하고 만일 김대성이 취임할 경우 광고거부·신문불매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이 준비모임은 후에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로 발전한다. 김대성은 ‘폐업이 자신의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제주도민 사회 및 언론계의 지적에 대해 ‘경영적자’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노조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즉, “부채 및 적자폭이 10억을 상회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경영상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됐다면 이는 사용자측이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조작한 것이다. 그 이유는 ”본사는 광고실적 92%를 달성했는데, 양주하씨가 지사장으로 있는 서울지사는 65%로 떨어졌다. 약 10억 가까이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연감’발간을 폐업 후로 연기한 사실, 만일 적자라면 왜 도민주·사원주 공모를 통한 증자를 외면하는가?” 등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폐업예정일을 하루 앞둔 1990년 1월 4일, ‘제주신문 폐업저지를 위한 사원 및 사원가족 결의대회’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홍훈기 노조위원장은 “57일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투쟁은 50만 제주도민의 진정한 대변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5공을 청산하고 참언론을 하자는 의로운 투쟁입니다. 따라서 인간이기를 거부하며 폐업을 자행하려는 경영

주는 역사와 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국면에 닥치더라도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우리의 뜻을 관철키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라 밝혔다. 계속되는 사원들의 출근저지투쟁에 막혀 끝내 김대성의 복귀공작이 좌절되자 1990년 1월 5일, 양주하씨 명의로 '신문제조업 폐업신고서'를 제주세무서에 제출했다. 이 폐업신고는 상법상의 법인체 해산이 아닌 부가세법상의 영업중단 의사표시로 사실상 전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위장폐업의 한 수단으로 알려져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또한 그들은 전력수급계약해지신청서 및 전화가입계약해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각각 제출하고 사원식당 및 주방용구도 은닉해버렸다. 이날 제주신문노동조합과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참언론을 구현하려는 사원들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폐업을 감행한 김대성·김평진과 이사회는 폐업신고를 즉각 철회하고 사원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대성·김평진과 폐업결정 주주들은 언론경영의 의사가 없는 것이 드러난 이상 언론의 사유화를 포기하고 소유주식을 즉각 도민에게 매각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1월 6일 오전 10시, 제주시 가톨릭회관에서는 각계 인사 102명을 위원으로 한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 결성대회가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 조문부(제주대) 교수를 회장, 양승부(변호사), 오성찬(소설가)씨를 부회장 그리고 김병택(제주대) 교수를 사무처장으로 선출하고 '50만 도민전체의 결집된 지혜와 힘을 모아 폐업저지에 총매진 할 것'을 결의했다. <도민협의회>는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 보름만에 6만명을 돌파하는 경이적인 호응을 기록했다. 1월 9일 <제주신문 폐업철회를 위한 제주지역 노조협의회>(공동대표 박선길 제주도선원노조위원장 외 9명)가 결성대회를 갖고 연대투쟁 결의하는 등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제주지역 사회의 분위기는 성숙되어갔다. 또, 1월 13일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신문 폐업철회 촉구 도민대회'는 대회장소인 북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1월 5일 사측의 요청으로 한전 제주지사는 수차례 인입선 동력을 차단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사원들이 몸으로 막아왔었다. 하지만 경영자측의 계속된 독촉압력으로 1월 23일 미명을 기해 제주신문사에 단전조치가 취해졌다. 이 단전조치로 사실상 신문제작이 불가능해져 1월 23일자 호외도 외부 인쇄소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렇듯 제주신문은 지령 13,653호로 종간되었다. 제주신문노동조합과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이틀동안 촛불로 밤을 지낸 후 25일 사옥에서 철수했다. 그들은 25일 사옥 마당에서 '참언론출정식'을 갖고 "우리 사원 일동은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가든 참언론의 기본 윤리를 지키는데 충실할 것이다. 제주신문사 사옥을 떠나는 것이 민주언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쟁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신문 창간작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사옥을 떠나자 1월 25일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체를 의결했다. 제주신문사 사옥을

떠난 사원들은 1월 29일, 옛 제주감귤협동조합 제주시지소 자리에서 <제주참언론동지회> 결성식 및 헌판식을 갖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신문사 투쟁은 마무리 됐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 <제주신문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제주참언론동지회>

A8[관계 자료]

“도민에 드리는글 3천매 제작배포”, 『제주신문』 1988년 8월 5일자(제주언론002)

“제주신문민언투 농성풀어”, 『제주신문』 1988년 8월 8일자(제주언론003)

“제주신문사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채택”, 『제주신문』 1988년 8월 16일자(제주언론004)

“반언론적 작태 철회하라”, 『제주신문』 1989년 12월 27일자(제주언론005)

“폐업음모 맞서 단호투쟁”, 『제주신문』 1989년 12월 27일자(제주언론006)

“제주신문사태 일지”, 『제주신문』 1989년 12월 27일자(제주언론007)

함승보, 1990 「제주신문사태,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월간제주』 (2·3월 합본호: 38-48)(검토-연도검토)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신문 민주언론수호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89.12.22

A3[사건 배경] 제주신문 언론민주화 투쟁의 일환

A4[사건 전개과정]

1989.12.22.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이 주최한 ‘제주신문 언론민주화투쟁’에 따른 연대투쟁으로 대회를 개최

A5[사건 내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주최 ‘제주신문 민주언론수호결의대회’가 1989년 12월 22일 하오 5시 위원장을 비롯한 연맹집행부와 전국 22개 언론사 노조대표 30여명, 도내 4개 언론사 노조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신문사 대강당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권영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주신문의 투쟁은 청산돼야할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려는 것" 이라고 전제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제주신문은 온 국민이 바라는 민주화와 5공청산, 언론계의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위원장은 "전국의 언론동지는 이같은 의지를 담은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가 돼 끊임없는 투쟁으로 참언론을 이뤄나가자" 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흥훈기 제주신문 노조위원장은 투쟁경과보고를 통해 "제주신문의 투쟁은 온 도민과 5공잔당과의 투쟁이며, 나아가 전국의 양심세력과 부도덕한 자본주와 권력과의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전국단위노조를 대표해 고희범 한겨레신문노조위원장 등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김대성은 복귀 음모를 즉각 포기하라"

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오욕의 언론사 청산하자-전국언노년 제주신문민주언론수호결의”, 『제주신문』 1989년 12월 23일자(제주언론00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KBS사태에 제주MBC노동조합 전면제작거부**

A2[사건 일시] 1990.05.0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MBC노동조합은 1990년 5월 1일 상오10시 「KBS사태에 따른 사원비상총회」를 갖고 지방프로그램 전면제작거부를 결의했다. 이날 제작거부는 총조합원 1백23명 가운데 96명이 투표, 찬성 86표 반대 9표등으로 결의됐다. 또 노동조합은 이날 「KBS공권력 재투입을 규탄하는 전면제작거부에 돌입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 공권력투입책임자 처벌과 연행 KBS사원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KBS 사태관련 - 제주MBC 노조 프로제작을 거부”, 『제주신문』 1990년 5월 2일자(제주언론01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방송악법저지를 위한 제주MBC노조 전면제작거부**

A2[사건 일시] 1990.07.13~199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방송관계법안에 항의, MBC노조가 1990년 7월 13일 상오 6시부터 무기한 전면 제작거부에 돌입한데 이어 제주 MBC노동조합(조합장 김영철)은 13일 상오 6시를 기해 지방프로그램 전면제작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제주MBC노조는 「방송악법저지투쟁 비상총회」를 열고 조합원 1백21명의 만장일치로 제작거부를 결의했다. 이번 제작거부는 지난6일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문공위에서 전격 통과되자7 MBC노동조합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해 무기한 제작거부

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MBC노조는 전면제작거부에 나서며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방송악법 철폐 △구속언론노동자 석방 △방송재장악 음모 즉각 중단 등을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MBC도 제작거부”, 『제주신문』 1990년 7월 14일자(제주언론01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한라일보 노조 투쟁**

A2[사건 일시] 1992.01.20~1992.00.00

A3[사건 배경] 1989년 4월 22일 ‘정론직필’과 ‘복지추구’를 사시로 내걸고 창간한 한라일보는 경영주의 편집권 침해와 사원에 대한 열악한 임금구조 등 조합원의 분노가 폭발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편집권 독립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A4[사건 전개과정]

1992.01.20. 제1차 단체교섭. 이후 14차례 교섭

1992.04.01. 한라일보 노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도에 쟁의발생 신고. 철야농성 돌입

1992.04.04. 한국기자협회 한라일보분회 노조 측이 주장하는 편집국 독립과 임금인상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는 성명서 발표

1992.04.05. 한국기자협회 제주지부 지지성명 발표

1992.04.13. 제주지역 언론노조협의회 지지성명 발표. 한라일보 노조 전면파업 돌입

1992.04.17. 사측에서 ‘노조위원장과 사무장이 퇴사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조건 제시. 조합원 총회 거부.

1992.04.22. 한국기자협회 한라일보분회 사측에 협조하는 20명 제명처분

A5[사건 내용] 한라일보 경영주 강영석은 제주도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안마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여론조사결과가 맘에 들지 않자 제작중인 운전기를 멈추게 하고 편집 방향을 바꾸는 등 편집권 침해가 극에 달했다. 여기에서 사원복지에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자신의 세과시를 위해 언론사를 활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사진조작 등 언론사주로서 금도를 넘는 행동을 일삼았다. 노조는 ‘편집권 독립, 사내 민주화,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내걸고 사측과 교섭을 시도했으나, 14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경영주는 단 3차례만 참석했고, 노조의 대표성을 전혀 인정치 않을 뿐 아니라 “회사 문을 닫겠다”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1991년 4월 1일 노조는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때부터 제주지역의 언론노조 및기자협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성명과 격려방문이 줄을 이었다. 4월 5일 한국기자협회 제주지부는 ‘언

론 종사자들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본주들은 각성하고 직원들의 생존권을 전폭 수용하라'는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한라일보 노동조합(위원장 고창일)은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따른 냉각기간이 4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앞서 4월 9일 하오 62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참가자의 84%인 5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 70여명은 4월 13일 상오 제주도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내고 파업에 돌입했다. 한라일보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성명을 발표, "이번 파업은 언론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을 확립하고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전제 "책임있는 언론상의 구현을 위해 민주언론동지의 뜻을 모아 반드시 우리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한라일보노조는 "편집권 독립, 사내 민주화,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라일보사(대표 강영석) 사용자측은 "임금협상 결렬로 정상업무가 불가능해 제작국과 편집국을 폐쇄한다."는 '부분직장폐쇄신고서'를 제주도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한편 노동부에 고창일 노조위원장 등 5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또 한라일보 사용자측은 "제주경찰서에 공권력 투입과 특수경비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뒤 "신문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내부나 외부 제작을 통해 비노조원이 제작한 4면 신문을 계속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13일 제주지역 언론노조협의회는 「우리의 입장」을 통해 "한라일보 노조가 내세운 '언론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언론상 되찾기 운동임을 확신하며,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4월 15일 '한라노조 파업은 참언론을 향한 정당한 투쟁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될 수도 없는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국 1만 7천여 동지들과 함께 한라일보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에 뜨거운 동지애로, 굳건한 연대로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준), 경기일보노조, 제주도개발특별법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 경인매일노조 기협분회 등 언론단체 및 민주단체의 지지 성명이 속속 발표되고 지지방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측의 입장도 완강했다. 강영석 한라일보사장은 4월 14일 고창일 한라일보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제주지법에 업무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했다. 강사장은 "조합원들은 현관 입구에서 신청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판필름 등 신문제작에 필요한 물건 반입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조합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외에 장기농성을 하거나 회사의 허락 없이 양초나 전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의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가처분신청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서 문제 삼은 "냉각기간중의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신문제작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날 하오2시 제주지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질신문 후 가처분여부를 결정키로 했었으나 서로의 사실 진술이 달라

4월 21일 재차 대질신문을 한 후 가처분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4월 15일 한라일보사를 상대로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이 파업효과를 악화시키려고 제작국 운전부 박모차장을 지난 4월 13일 하오1시부터 재판부에서 재판업무에 종사케 했다. 이는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또 이날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동안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영석 한라일보발행인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라일보 사용자측은 “같은 회사의 직원을 부서 이동시킨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노조측의 입장에 맞섰다. 제주도내외 단체의 한라일보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도 잇따랐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건)은 4월 15일 한라일보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연합은 이 성명에서 “편집권의 독립은 언론의 생명이며 올바른 지역사회여론을 조성하는 첫째 관건이다. 따라서 한라일보노동조합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또 제주연합은 “한라일보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님을 경영주는 명심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새롭게 만들어지지 못할 때 도민은 한라일보를 단연코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한라일보노조의 임금인상요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한라일보사태를 있게 한 근본원인이 아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히며 “한라일보경영주의 구시대적 발상인 농성현장에 대한 공권력투입요청에 대해 조소를 금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공권력행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이에 아랑곳없이 4월 15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사무실과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곳을 전면 폐쇄한다.”는 내용의 직장폐쇄변경신고서를 냈다. 노동조합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라일보노조는 4월 15일 5천여부의 「투쟁속보」 2호를 도민들에게 배포, “앞으로 좋은 신문을 위해 정당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노조는 투쟁속보에서 “노조원들은 현재 4년 경력기자가 사원 최고수준임금인 49만원, 제작국 남자사원 35만원, 심지어 모여성사원의 경우 27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저임금과 살인적인 물가인상이라는 고삐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노조원들은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파업에 돌입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는 또 “많은 고민 끝에 파업이라는 극한 방법을 거치면서까지 좋은 신문을 만들려는 노조원들의 의지를 꺾고자 경영주는 직장폐쇄와 더불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파업기간동안에도 간부와 비조합원을 동원, 4면 신문발간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정보와 기사를 접하고 싶어 하는 독자를 우롱하고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작태임이 분명하다.”고 회사측을 비난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철폐 및 민주화실천범도민회>는 4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편집권 독립을 통한 민주언론의 쟁취와 사내 민주화·생존권을 쟁취해 내기위한 한라일보 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

지한다.”고 천명했다. 범도민회는 성명에서 “한라일보 경영주는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자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도민간 갈등을 유발 시킨 인물이며, 직장폐쇄를 감행했을 뿐 아니라 공권력 투입을 당당하게 요청한 그는 스스로 세간의 웃음을 사고 있다.”고 한라일보 경영주를 비난했다. 또 제주 민주청년단체협의회건설준비위원회는 한라일보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경영주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한라일보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밝혀진 경영자측의 비민주적인 행위들을 본다면, 편집권이 회사경영주의 전유물로 존재하며, 도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영욕을 위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해결해 나가기는 커녕 희생만을 강요하고, 직장폐쇄가 해결의 실마리인 것처럼 반인륜적 작태만을 일삼는 것은 마땅히 규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업 10일째인 4월 22일 한라일보노조는 투쟁속보 4호를 발간, “구독료 무료라는 미명하에 간부들과 비조합원들을 동원, 이름만 신문일 뿐 사실상 소식지를 번칙 발행하고 있는 사측의 태도는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기회에 노조를 완전 파괴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측은 단체협상을 타결지어 신문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편집국 기자들 중 일부가 승진·승급을 노려 사측에 서서 비굴한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협회 한라일보분회 운영위원회는 4월21일 긴급회의를 열어 기자 14명을 기협에서 제명했다.”고 밝혔다. 한라일보는 창간 3주년일인 4월 22일 한라일보 대강당에서 사측이 마련한 ‘창간 3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한편 이날 「한라일보 참언론쟁취 대동제」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주최로 권영길위원장을 비롯한 제주도내 조합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오6시30분부터 1층 로비에서 열렸다. 노조는 4월 24일 투쟁속보 5호를 발간하고 “사측은 지난 4월 22일 발간한 신문 사설을 통해 노조를 비난, 자신들의 입지강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민주언론을 갈망하며 파업까지 갈수밖에 없었던 현 사태를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이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굴욕을 참고 견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도 사측이 사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한라노조는 「언론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19일째인 5월 1일 노조는 성명을 내고 “언론의 생명인 편집권 독립과 사내 민주화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며, 생존권을 무시하는 사측의 폭거에 맞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연대투쟁 움직임도 더욱 가시화됐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5월 1일 「한라일보파업지지와 도민생존권 유린하는 민자당심판을 위한 청년아라결의대회」를 교내에서 가진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5월 2일 한라일보 대표이사 강영석씨가 연월차 유급휴가 미지급분 대체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제주지검과 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한라일보는 한라일보노동조합 고창일 위원장등 노조간부 6명을 해고한데 이어 5월 6일 상오 6시부터 「해고자들의 출입제한」을 이유로 현관정문을 폐쇄,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아 노조원들의 심한 반발을 샀다. 노조는 현관이 폐쇄되자 이날 상오9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들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내는 한편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 “24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꾀했으나 사측은 노조원 6명을 집단으로 부당해고 하는 데에 이르렀다.”며 “합법적인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강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편 사측도 이날 해고자들의 출입제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발표, “해고자들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권보호 차원에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날 회사 측은 취재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라노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가하면 이 회사에 들어가려던 모 방송 카메라 기자 등 취재기자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파업 한달 째를 맞은 한라일보노동조합은 5월 13일 한라노보 파업투쟁 특집판을 발간하고 “편집권을 유린한 신문사를 사유물화한 강역석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도내 전역에 5만여부 배포된 한라노보에서 노조는 “사측이 불법 대체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체협약 타결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라도 회사와 협상자리를 마련, 신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타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랑곳없이 한라일보사는 5월 26일 노동조합원인 김정두, 문상호, 여운성씨 등 편집국 기자 3명을 해고했다. 이유는 업무방해 및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활동 중에 노조 간부를 집단해고한데 이어 또다시 부당해고 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이라면서 제주지검과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강사장을 고발하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6월 4일 회사는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기에 이른다. 이날 조합원들의 침묵시위 과정에서 이 회사간부 등 70여명이 노조원등을 기습, 폭력을 가해 노조원 1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6월 5일 한라일보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회사가 조합간부 등 9명의 부당해고만 철회한다면 임금부문은 대폭 양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지난 6월 4일 조합사무실을 폐쇄시킨 것과 관련, 이를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사무실 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을 6월 9일 제주지법에 냈다. 한편 <제주도개발특별법철폐 및 민주화실천범도민회>는 9일 한라일보사측의 폭력행위와 노조사무실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라일보노조는 7월 4일 한라일보사 강영석 사장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라일보사 강영석사장은 파업기간에는 사원을 신규채용 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집국 기자 8명을 비롯해 광고국 4명, 판매국 4명, 제작국 3명 등 모두 19명을 신규채용했다는 것이었다. 또 이날 구성된 가족협의회는 사태해결을 위한 4개항의 결의문을 통해 “한라일보경영주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15일 한라일보노동조합 조합원 9명이 신청한 부당노

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인 모두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는 이날 “신청인들이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에 참여하면서 노사간에 벌어진 상황을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규정을 적용, 노동조합 핵심간부 9명을 쟁의행위기간 중에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월 10일 노동조합법위반등의 혐의로 한라일보 강영석 사장을 입건하고 이날 소환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강씨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거부해 이같이 입건했다. 한편 국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반(반장 장석화)은 10월15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광주지방노동청 이종수청장을 출석시켜 제주노동사무소 소관인 한라일보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회노동위는 이날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한 한라일보 강영석사장이 신병을 이유로 출석지 않자 법정시일인 오는 10월23일, 24일까지 노동부국정감사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또, 국정감사반은 이자리에 출석한 한라일보 고창일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한라일보사건과 관계된 증언을 청취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파업기간 중 신규사원을 채용, 대체근로시킨 이유 등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노동위원회는 10월 31일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 기간동안 증인출석을 거부한 한라일보 강영석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국회노동위는 이날 민자·민주·국민 등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강사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처리했다.

A6[관계 인물] 고창일(한라일보 노조위원장), 강영석(한라일보사장)

A7[관계 단체] 한라일보노동조합

A8[관계 자료]

“한라일보 노동조합 쟁의행위 돌입결정”, 『제주신문』 1992년 4월 11일자(제주언론012)

“한라일보 노조파업”, 『제주신문』 1992년 4월 14일자(제주언론013)

“업무방해'노조간부등 6명 고발 장기농성 금지등 가처분 신청도”, 『제주신문』 1992년 4월 15일자(제주언론014)

“한라일보 노조 쟁의행위 기간 의무위반 고발”, 『제주신문』 1992년 4월 16일자(제주언론015)

“한라일보노조 투쟁 제주연합 지지성명”, 『제주신문』 1992년 4월 16일자(제주언론016)

“한라일보사 노조사무실등 제외 전면직장폐쇄 신고”, 『제주신문』 1992년 4월 17일자(제주언론017)

“한라일보노조 저임해소투쟁 천명 투쟁속보2호 배포”, 『제주신문』 1992년 4월 17일자(제주언론018)

“한라일보노조 파업 범도민회 지지성명”, 『제주신문』 1992년 4월 21일자(제주언론019)

“제청협 건준위 한라일보노조 지지”, 『제주신문』 1992년 4월 22일자(제주언론020)

“한라일보 창간3주 참언론쟁취 대동제”, 『제주신문』 1992년 4월 23일자(제주언론021)

“한라노조 투쟁속보”, 『제주신문』 1992년 4월 23일자(제주언론022)

『제주신문』 1992년 4월 24일자(제주언론023)

“한라일보 노동조합 투쟁속보5호 발간”, 『제주신문』 1992년 4월 25일자(제주언론024)
 “준법투쟁계속 다짐 한라일보노조 성명”, 『제주신문』 1992년 5월 2일자(제주언론025)
 “제주대생 1백여명 한라일보 파업지지”, 『제주신문』 1992년 5월 3일자(제주언론026)
 “한라일보노조 연월차수당 체불 노동부등에 고발”, 『제주신문』 1992년 5월 3일자(제주언론027)
 “한라일보 노조간부 6명해고·출입통제”, 『제주신문』 1992년 5월 7일자(제주언론028)
 “한라노보 특집판 강사장퇴진 촉구”, 『제주신문』 1992년 5월 14일자(제주언론029)
 “한라일보 가처분신청 업무방해금지등 수용”, 『제주신문』 1992년 5월 22일자(제주언론030)
 “불법대체근로 시켰다 한라노조 사장등 고발”, 『제주신문』 1992년 5월 22일자(제주언론031)
 “한라노조 투쟁속보 방화관련 의문제시 부당대체근로 고발”, 『제주신문』 1992년 5월 23일자(제주언론032)
 “한라일보사 노조소속 기자3명 추가해고”, 『제주신문』 1992년 5월 27일자(제주언론033)
 “한라일보노조 성명 부당해고 철회 조건 임금부문 대폭양보”, 『제주신문』 1992년 6월 6일자(제주언론034)
 “한라일보노조 조합사무실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 『제주신문』 1992년 6월 10일자(제주언론035)
 “한라일보 노조 사장 고발”, 『제주신문』 1992년 7월 5일자(제주언론036)
 “한라일보 해직자 9명 모두 원직복직 시켜라”, 『제주신문』 1992년 7월 16일자(제주언론037)
 “한라일보 강사장 소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제주신문』 1992년 10월 11일자(제주언론038)
 “한라일보 사건 제주지검 기소”, 『제주신문』 1992년 10월 15일자(제주언론039)
 “국회 한라일보사건 감사 착수”, 『제주신문』 1992년 10월 16일자(제주언론040)
 “국회, 강사장 고발 의결”, 『제주신문』 1992년 11월 1일자(제주언론041)
 “국회 노동위 대검에 강사장 고발장 접수”, 『제주신문』 1992년 11월 4일자(제주언론042)
 편집실, 1992 「전면파업 돌입한 한라일보 사태」 『월간제주』 (4월호: 16-2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MBC노동조합 총파업**
 A2[사건 일시] 1992.10.0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MBC노동조합(위원장 하승훈)은 1992년 10월 2일 서울MBC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며 10월3일 새벽5시부터 송신요원을 제외한 제주MBC노조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MBC노동조합은 이날 파업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백10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가, 50명이 찬성, 13명이 반대함으로써 파업돌입을 가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서울MBC 오늘새벽 파업돌입”, 『제주신문』 1992년 10월 3일자(제주언론044)

“MBC 투쟁지지 재야단체 등 성명”, 『제주신문』 1992년 10월 6일자(제주언론045)

“KBS 파업결의”, 『제주신문』 1992년 10월 10일자(제주언론046)

A9[관련 사건]

7. 종교운동

A1[사건명] **천주교제주교구사제단 단식기도**

A2[사건 일시] 1987.05.18~1987.05.2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7.05.18. 오후 8시, 제주중앙천주교회에서 ‘광주사태 7주기추모미사 및 민주화를 위한 구국기도회’ 가짐

1987.05.18. 오후 9시 30분, 가톨릭대학연합회 학생 1백여 명은 1시간동안 중앙성당 앞뜰에서 직선제개헌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

1987.05.18. 오후 11시, 천주교제주교구사제단 12명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민주회복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기도 돌입

1987.05.23. 오후 7시 30분, 단식기도 해제

A5[사건 내용]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정의평화위원장 홍충수신부 등 12명의 사제들이 1989년 5월 18일 하오11시부터 제주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이날 신부들은 하오8시부터 제주중앙천주교회에서 ‘광주사태 7주기추모미사 및 민주화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진 뒤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민주회복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하오9시30분께 구국기도회가 끝난 후 천주교제주교구 가톨릭대학연합회 학생 1백여 명은 1시간동안 중앙성당 앞뜰에서 직선제개헌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다 하오10시30분께 자진해산했다. 호헌철폐와 민주개헌을 간구하는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갔던 천주교제주교구단식사제단 12명은 단식 6일 만인 23일 하오7시30분 단식을 해제했다. 이들 사제단은 ‘단식을 끝내며’ 라는 성명에서 자신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단식기도를 마친다면서 직선제개헌 등 5개항을 요구했다.

A6[관계 인물] 홍충수

A7[관계 단체]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A8[관계 자료]

“천주교제주교구 신부12명단식”, 『제주신문』 1987년 5월 19일자(제주종교001)

“천주교 제주사제단 6일만에 단식끝내”, 『제주신문』 1987년 5월 25일자(제주종교00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故이한열군 추도미사 및 민주화실현을 위한 구국기도회**

A2[사건 일시] 1987.07.1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천주교 중앙성당에서는 1987년 7월 11일 하오8시 「故이한열군 추도미사 및 민주화실현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대생 격렬시위 이한열군 추모 화염병과 최루탄 공방 벌여”, 『제주신문』 1987년 7월 13일자(제주종교00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주쟁취를 위한 기도회 및 제주지역공명선거감시단발대식

A2[사건 일시] 1987.11.2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민주쟁취기독교공동위원회제주본부(공동대표 모갑경목사)는 1987년 11월 21일 하오2시 제주시내 연동교회에서 「민주쟁취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제주지역공명선거감시단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민주쟁취기독교공동위원회 제주본부는 정부행정기관과 경찰공무원은 본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공전선거감시단발대식에 따른 취지문을 발표했다.

A6[관계 인물] 모갑경

A7[관계 단체] 민주쟁취기독교공동위원회제주본부

A8[관계 자료]

“공명선거감시단발대”, 『제주신문』 1987년 11월 23일자(제주종교00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노회 특별법철회 성명

A2[사건 일시] 1991.11.1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11월 15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노회는 제62회 정기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채택한 성명을 발표, “지금의 아픔과 분열을 묻어두고 개발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범도민회 대표단 단식농성 ‘부산지역 쫓겨대회에 참여’”, 『제주신문』 1991년 11월 16
일자(제주종교005)

A9[관련 사건]

8. 교육운동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시절에 있었다. 당시 자유로워진 공간 속에서 제주도내 각급 학교 교사들은 전국적인 교원 노조 설립 움직임에 따라 교사조합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960년 6월 29일 문교부장관이 교원노조 해체 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해 제주시 교사조합회원 130여 명이 항의시위를 하였다. 그 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결국 8월 13일 제주도 교원노조연맹을 결성하였다. 그 뒤 눈에 띄는 움직임으로는 1961년 1월 27일 제주도내 각급 학교 교사들이 법정 수당 증액 요구 궤기대회를 개최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움직임도 5·16 쿠데타 이후 사라졌다.

그 뒤 1987년 10월 '제주교사협의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11월 22일 '제주교사협의회'가 창립되었는데,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교원 노동조합 설립운동에 힘입어 제주 지역에서도 교원노조 설립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1989년 5월 14일 '제주지역 교원노조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가 현직 교사와 미발령교사, 그리고 사범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6월 11일에는 제주지역 교원 노조가 결성되었다. 교원노조는 '참교육'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교육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원노조 설립운동에 대해서 문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학교에서부터 해고시키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비추어 교원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을 사회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전교조 제주지부 역시 창립 3일 만인 6월 14일 사무국장 이용중 교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15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

그 뒤 1990년대 들어와서는 해직 교사들이 중심이 된 제주 지역 교원노조가 재야단체 가운데 하나로 계속 존속하는 가운데 교원노조 설립운동은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그 뒤 제주 지역 교원노조는 각종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특별법 반대운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7월에 합법적인 전교조 제주지부가 출범하였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 선거에 이영길 지부장을 제주지역 사회운동 진영의 민주후보로 내세워 광역의원에 당선시켰다.

A1[사건명]	민주교육법쟁취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88.10.2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민주교육법쟁취 결의대회」가 1988년 10월 23일 하오 제주교사협의회 주최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YMCA강당에서 있었다. 이 결의대회에서 참석교사들을 "우리는 제주 4천교사와 함께 민주교육법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광양로 제주교사협의회 사무실까지 도보행진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민주교육법 쟁취 제주교사협 결의”, 『제주신문』 1988년 10월 25일자(제주교육00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주교육법쟁취를 위한 제주교사협의회 철야농성**

A2[사건 일시] 1988.12.0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교사협의회에서는 1988년 12월 8일 저녁부터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무실에서 민주교육법쟁취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였다. 교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등 7개항을 요구했다. 한편 교사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교사 8백명을 포함 4천8백 명의 서명을 받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민주교육법쟁취 제주교사협 농성”, 『제주신문』 1988년 12월 9일자(제주교육00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국교직원노조건설 제주지역추진위원회 발대식**

A2[사건 일시] 1989.04.2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제주교사협의회에서는 1989년 4월 27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조건설 제주지역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노조결성에 따른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들은 『4·19이후 안타까운 교육현실을 극복하자 몸부림쳐 온 개별적 노력을 한데모아 30만 교사의 단결된 힘으로 참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이 시대의 교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전제 △참교육실천을 위한 교직원 노조결성을 즉각 보장하라 △교사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는 등 6개항을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교사협의회

A8[관계 자료]

“교원노조 설립움직임 활발”, 『제주신문』 1989년 5월 3일자(제주교육00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주교사 부당징계규탄 농성

A2[사건 일시] 1989.05.25~1989.05.2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교사협의회 교사 20여명은 1989년 5월 25일 하오7시부터 5시간동안 이용중(제주중앙교)·이영길(신성여교) 두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이를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다. 27일까지 계속 농성을 벌일 것을 결의한 교원노조건설 제주준비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 규탄 농성에 들어가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교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교직원 노조건설 탄압책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 등 4개항을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이영길, 이용중

A7[관계 단체] 제주교사협의회, 교원노조건설 제주지역준비위원회

A8[관계 자료]

“전교조 제주준비위원회, 교원노조 결성 탄압 규탄 성명”, 『제주신문』 1989년 5월 24일자(제주교육004)

“징계대상교사 제주가 타지보다 상대적 큰폭, 비노조 교사들도 비판”, 『제주신문』 1989년 5월 24일자(제주교육005)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원노조 관련 교사 검찰에 고발조치”, 『제주신문』 1989년 5월 25일자(제주교육006)

“노조 관련 이교사 검찰 임의동행 거부”, 『제주신문』 1989년 5월 26일자(제주교육007)

“교사협 소속 20여명 징계조치규탄 농성”, 『제주신문』 1989년 5월 26일자(제주교육008)

“검찰, 27일 교원 노조 관련 이교사 구인집행”, 『제주신문』 1989년 5월 27일자(제주교육00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결성식

A2[사건 일시] 1989.06.1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9.05.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

1989.0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1989.06.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결성식

A5[사건 내용] 식민지 반공·분단교육에 찌들인 이 땅에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들의 열렬한 의지의 결집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노력이 1989년 5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에 이어, 6월 11일 마침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결성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6월 11일 제주대학교 민주광장에서 2백여 명의 교사와 학생,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결성식에서 교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교육현실은 과도한 중앙집중화로 인해 한반도의 교육모순이 제주지역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이에 교육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다.”고 결성의의를 밝혔다. 또, “전교조의 합법성을 위한 투쟁, 교직원의 노동3권확보를 위한 전교조 사수” 등 7개항을 결의했다. 이날 결성식은 대회장소인 제주대가 경찰의 사전 봉쇄로 막힐 것으로 판단하여 행사 전날 밤 미리 가서 밤을 새우거나, 행사 당일 새벽에 숲길을 뚫고 행사장에 도착한 교사와 시민학생들에 의해 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지부장 이영길, 부지부장 김창후, 사무국장 이용중이다. 한편 전교조제주지부 사무국장 이용중 교사는 결성대회와 관련하여 6월 14일 구속된 뒤,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일 파면됐으며, 7월 7일 오후 10시 20분경 제주경찰서 소속 형사와 전·의경 67명이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을 급습하여, 가입교사 명부와 책자 30여점, 유인물 31점 및 각종 자료를 압수해갔다.

A6[관계 인물] 이영길, 김창후, 이용중

A7[관계 단체] 전교조제주지부

A8[관계 자료]

“교원 노조 찬반 갈등 심화, 결성대회 앞뒤 각계 지지, 반대 논란 팽배”, 『제주신문』

1989년 5월 27일자(제주교육010)

“제주 준비위 30여명 참석 교원 노조 결성 선포”, 『제주신문』 1989년 5월 29일자(제주교육011)

“이용중씨 상경 민주당서 농성”, 『제주신문』 1989년 6월 2일자(제주교육012)

“제주서도 교원노조 결성”, 『제주신문』 1989년 6월 12일자(제주교육013)

“참교육엔 공감 방법은 이견”, 『제주신문』 1989년 6월 13일자(제주교육014)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 『제주의 소리』 (7월호: 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교조지지 및 부당징계저지를 위한 오현동문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89.08.02

A3[사건 배경] 전교조지지를 위한 오현고등학교 동문들의 결의대회

A4[사건 전개과정]

1989.08.02. '전교조지지 및 부당징계저지를 위한 오현동문 결의대회' 개최

A5[사건 내용] 오현고등학교 재직교사 및 동문들이 전교조와 관련 징계를 당하자 이를 저지하고 전교조지지 확산을 꾀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가졌다. 1989년 8월 2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100여명의 동문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오현동문대책위>와 <오현을 사랑하는 김창후선생님의 부당징계를 반대하는 졸업생 모임>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김창후 교사에 대한 징계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김창후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전교조 지지 확산일로, 강경징계 맞서 교수, 학생, 동문 등 지지 성명”, 『제주신문』
1989년 8월 3일자(제주교육01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교조탄압분쇄를 위한 제주일고 동문결성대회

A2[사건 일시] 1989.08.1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전교조 관련 제주일고 동문탄압 분쇄를 위한 '전교조탄압분쇄를 위한 제주일고 동문결성대회'가 1989년 8월 12일 하오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대에 열렸다. 이들은 동문 교사인 김규중, 김수열 두 교사에 대한 당국의 징계를 규탄하고 교원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다짐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전교조 탄압 대처 일고 동문 결성대회”, 『제주신문』 1989년 8월 3일자(제주교육01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교원선별임용반대 연수교사 입소거부 농성

A2[사건 일시] 1989.08.2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9년 9월 1일자 신규임용예정교사 2백10명(중등 1백90명. 초등 20명)은

8월 28일부터 4일간 탐라교육원에서 연수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고희권씨(제대 국어교육과 89년 졸)가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이를 항의하며 입소 거부했다. 이들 9월 신규발령 예정 교사들은 29일 상오 9시 제주대 입구에 집결, 탐라교육원에 입소하기로 했으나 이 중 2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대상자들은 고씨의 임용대상제외를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고씨의 즉각적인 임용을 촉구했다. 이들 예비교사들은 이날 ‘부당한 선별임용을 반대하는 9월발령임용예정교사일동’으로 발표된 성명을 통해 "정규사범교육을 이수한 임용대기자에게 명백한 이유 없이 임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범교육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신규임용교사의 교육에 대한 신념을 옳아매려는 의도"라며 선별임용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한 후 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교육위원회로 돌아와 농성을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교원 선별임용반대 연수교육 입소거부 농성”, 『제주신문』 1989년 8월 29일자(제주교육 01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참교육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대회 한라산출정식**

A2[사건 일시] 1990.04.02~1990.04.0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0.04.02. 전교조 제주시내에서 ‘참교육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대회’ 개최

1990.04.03. ‘한라산출정식’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

A5[사건 내용] 1990년 4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제주시내에서 「참교육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교조 기본대원(대장 장용수·전서울월계중교사)과 제주도지부(지부장 이영길·전신성여고교사) 회원 등 전교조소속 18명은 제주시 전농로 사거리 입구에서 전교조깃발 사용문제로 경찰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날 예정된 「한라산출정식」을 진행하기 위해 백록담에 오르려던 전교조 회원들은 3일 상오 성판악에 도착했으나, 폭우와 안개등으로 한라산 입산 금지조치가 내려지자 산천단에서 한라산출정식을 갖기로 하고 성판악을 출발, 산천단으로 행진하다 출발 5분만에 전경과 사복경찰에 의해 대기중인 버스에 태워져 연행됐다. 이날 전교조기본대원 5명과 제주도지부조합원 등 2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연행되었는데, 전교조 기본대는 성명을 통해 회원들의 연행에 대해 경찰서장이 사과할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A6[관계 인물] 장용수, 이영길

A7[관계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A8[관계 자료]

“전교조 참교육 실현 다짐 걷기대회”, 『제주신문』 1990년 4월 3일자(제주교육019)

“전교조 회원 걷기대회 시위 혐의로 22명 연행”, 『제주신문』 1990년 4월 4일자(제주교육02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사립학교법 위헌 쟁취와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철야농성

A2[사건 일시] 1990.04.16~199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영길)는 사립학교법 위헌 쟁취와 지난 2월 해직된 이성만교사(전 오현중)의 복직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전교조 사립학교법 위헌 쟁취와 복직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 『제주신문』 1990년 4월 17일자(제주교육02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교조창립 1주년기념 및 해직교사원상복직과 교육악법저지 제주 교사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0.06.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전교조제주지부는 9일 하오5시30분 제주교대 시청각실에서 조합원, 학생, 민주단체회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창립 1주년기념 및 해직교사원상복직과 교육악법저지 제주교사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제주지부는 「강정은교육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15명 해직교사 전원복직, 교총 강제가입중단, 제주지역교육현안 조속해결” 등을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전교조제주지부

A8[관계 자료]

“전교조 1주년 제주지부 기념식, 15명 해직교사 전원복직 등 주장”, 『제주신문』 1990년

6월 10일자(제주교육02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교육장악음모 교원종합대책안 철회와 교육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제주지역 교육주체 공동투쟁위원회결성식 및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0.11.1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전교조제주지부 미발령 교사협의회 제주대사범대 학생회 제주교대학생회가 주최한 「교육장악음모 교원종합대책안 철회와 교육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제주지역 교육주체 공동투쟁위원회결성식 및 결의대회」가 1990년 11월 16일 하오 1시 제주교대 교정에서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결의대회를 주최한 4개 단체들은 이날 제주지역 교육주체 공동투쟁위원회의 결성선언문을 통해 “현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원천봉쇄와 교원공개 임용제 실시 등을 통해 입체적이고 무차별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교육독점 음모를 분쇄하고 완전발령 쟁취 투쟁을 위해 미발령교사, 사대, 교대, 임용 제외자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결연히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결성식 및 결의대회를 끝낸 참가자들은 하오3시 교대를 출발, 광양로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4시30분 다시 도교위에 재집결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이다 4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자진 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전교조제주지부, 미발령교사협의회, 제주대사범대학생회, 제주교대학생회

A8[관계 자료]

“교육운동탄압 분쇄 투쟁결의 전교조·미발령교사 등 어제 투쟁위 결성식”, 『제주신문』

1990년 11월 17일자(제주교육02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5·10 교육민주화선언 5주년 기념과 교육자치선언대회**

A2[사건 일시] 1991.05.1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전교조제주지부는 1991년 5월 11일 「5·10 교육민주화선언 5주년 기념과 교육자치선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발표된 「교육자치선언」을 통해 전교조제주지부는 △현행교육자치법 철회와 민주적인 교육자치법제정 △학교자치

를 실현할 수 있는 교무회의의 의결 기구화 △전교조의 합법성 인정과 1천 5백여 해직교사의 원상복직 등을 요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해직교사 복직요구 - 전교조 교육자치선언”, 『제주신문』 1991년 5월 12일자(제주교육 02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주화를 열망하는 제주교사 시국선언**

A2[사건 일시] 1991.05.2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1.05.24. 제주도내 현직교사 88명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 발표

1991.05.30. 제주지역 해직교사 일동 지지성명 발표

A5[사건 내용] 1991년 5월 24일 제주도내 초·중·고 현직교사 88명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제주교사 일동’이라는 명의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 “고규형군 추락사건과 전우홍씨 뇌상사건의 책임자처벌, 1천6백여 해직교사 복직, 「5·18」 시위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5월 25일 시국선언에 서명한 현직교사들에 대한 가담경위, 가담정도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명단공개교사들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해직교사 일동은 5월 30일 “도내 현직교사 88명에 의해 발표된 시국선언은 민주화의 열망과 우리 현실에 대한 분노와 우려의 입장에서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도내 교사 88명 시국선언”, 『제주신문』 1991년 5월 26일자(제주교육025)

“도내 해직 교사들 교사시국선언 지지”, 『제주신문』 1991년 5월 31일자(제주교육02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교조제주지부 결성 3주년 기념 제주교사대회**

A2[사건 일시] 1992.06.1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6월 13일 전교조제주지부는 결성 3주년을 기념하는 ‘제주교사대회’를 열고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제주교사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전교조제주지부 창립3주년 6월13일 제주대서”, 『제주신문』 1992년 6월 13일자(제주교육02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연행자석방과 해직교사원상복직 촉구 전교조 철야농성**

A2[사건 일시] 1992.10.12~1992.1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전교조제주지부는 1992년 10월 12일 「연행자석방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10월12일 서울시내 10개 경찰서에서 연행해간 3백54명의 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 날 연행교사석방과 함께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주장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전교조 제주지부 ‘해직교사 복직을’”, 『제주신문』 1992년 10월 13일자(제주교육02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교육개혁과 해직교사복직 제주지역 교사선언**

A2[사건 일시] 1992.11.0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교사 46명이 1992년 11월6일 교육개혁과 해직교사복직, 전교조인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이영길제주도의원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여기에 참여한 도내 교사 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교사들은 「우리의 입장」을 통해 “해직교사의 원상복직, 전교조의 합법화, 교육개혁에 대한 각 정당과 대통령후보들의 정책대안 제시요구, 교육당국의 교육개혁의지, 서명교사에 대

한 보호” 등을 요구했다. 제주지역 교사선언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영석 김광렬 김석운(신성여고) 김학준(대기고) 홍향표 김영보(제주여상) 고영민 진순효(제주여고) 고연정(중앙중) 이경화(제주서중) 고영철(인화교) 강순문(신제주교) 정혜연(봉개교) 김경자(제주동교) 김정희(도리교) 양공원(함덕중고) 송문석(세화교) 강은숙(함덕중) 김상진(저청중) 홍죽희(세화중) 이성철(한림공고) 김수훈(서귀중) 강원봉 고덕만(서귀농고) 김오진(중문중) 한기정(삼성여고) 장은심(서귀중앙여중) 양민철 강승민(효돈중) 고익숙(보목교) 김영대 김희정(토평교) 현정임(서귀포교) △남제주군 : 고성화 송경희(대정중) 김승립(대정고) 이금미 김성룡(신산중) 이승희(남원중) 김영민(의귀교) 유복희(위미교) 이향순(토산교) 김정임(하천교) 송여옥(성산교) 한직옥 강정렬(동남교)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현직교사들 교육개혁 요구”, 『제주신문』 1992년 11월 7일자(제주교육029)

A9[관련 사건]

9. 학술운동

A1[사건명] **제주대총장퇴진요구 교수 삭발단식농성**

A2[사건 일시] 1988.10.28~1988.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교수협의회는 1988년 10월 28일 성명을 발표, 김두희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제주대교수협의회는 이 성명을 통해 “작금의 학내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여, 제주대의 발전을 위해 김총장이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하고 문교당국에 대해 “지금까지의 학내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총장의 거취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학원안정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석지교수(사회교육과)는 총장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약속을 지켜 교권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며 10월 28일 삭발하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A6[관계 인물] 한석지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김총장 퇴진요구, 제대교수협 성명 한석지교수 단식”, 『제주신문』 1988년 10월 29일자(제주학술00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탐동문제해결을 위한 제주도내 교수성명**

A2[사건 일시] 1989.11.1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 제주교대 등 제주도내 2개 대학 교수 83명은 1989년 11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탐동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탐동문제해결을 위한 도민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제주대 조문부교수(행정학) 등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지사와 시장이 병문천 복개공사로 개발이익환수문제를 매듭짓기로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이러한 결정은 매듭을 풀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이밖에 △면허발급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 △도지사 사과 및 범양건영 의사확인, 정당한 이익환수를 건설부에 요청할 것 △건설부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해결책 제시, 민심을 수습할 것 등을 요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대, 교대 교수 83명 탑동 성명, 문제해결 위한 도민 위원회 구성 촉구”, 『제주신문』 1989년 11월 18일자(제주학술00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대학교 교수시국선언**

A2[사건 일시] 1991.05.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학교 교수 22명은 5월 9일 상오 시국선언문을 발표, “현정권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열망을 일시적인 통치술로 무마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수렴해 난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서명 교수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강경대군의 피살은 민주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폭력에 의존하는 공안통치의 강화에서 비롯되었음은 자명하다.”고 전제, ‘국민인권보장’ 등을 촉구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교수 22명 시국선언”, 『제주신문』 1991년 5월 10일자(제주학술003)

A9[관련 사건]

10. 문화 · 예술운동

4·3 이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제주사회에 기존 질서와는 다른 시각의 저항적 성격으로 나타난 최초의 경험은 문화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 8월 문화운동의 전위에 서서 마당극 운동을 시작한 주체는 극단 ‘수놓음’이었다. 극단 ‘수놓음’은 마당극을 통하여 사회의 모순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제주도 토지문제나 제주 역사속의 민란을 주로 다룬 ‘수놓음’의 공연 내용을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수놓음’의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진 학생과 시민들로서 공연장에 모이는 것으로 ‘동지애’를 느꼈으며 공연 관람 자체가 일종의 시위였다. 그러나 ‘수놓음’은 1983년 제주대학생들의 자유항 반대 시위와 연계된 ‘태손땅’ 공연을 마지막으로 당국의 탄압을 받아 강제 해체되었다. 이후 극단 ‘한올래’, ‘놀이’ 마당극 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주민을 선동할 우려’라는 명목으로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놓음’을 시발로 한 마당극 운동은 1987년 놀이패 ‘한라산’으로 연결되게 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의 지평이 확대되어 가는 속에서 1970년대의 민족문화론·민중문화운동의 흐름을 부활·계승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제주에서도 여러 개의 문화운동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제주청년문학회, 우리노래연구회, 놀이패 ‘한라산’, 그림패 ‘부름코지’ 등이 그것이었다.

곧이어 이들 세 단체는 1987년 8월에 협의체적 연대조직으로서 ‘제주문화운동협의회(제문협)’을 결성했다. 전체 조직구성원이 70여 명이던 반공개조직으로, 제문협은 민족민주운동과 보조를 같이 하는, 또는 그 일환으로서의 문화운동이 안고 있던 여러 과제들을 소화해내려 하였다. 특히 “제주인의 눈으로 제주 역사를 바라보자”는 각오로 4·3의 복원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른 여러 단체들과 함께 4·3 추모제의 거행을 꾀하여 4·3공존위 참가단체의 일원이 된 것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였다.

‘제문협’은 1989년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산하 문화패 별로 탈춤, 풍물, 문학, 판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제1기 문화교실’을 열었다. ‘제문협’은 문화운동을 지역운동에 결합시켜 ‘제주국민운동본부’, ‘제민협’ 등 연대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제문협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림패 부름코지는 사진패 ‘시각인식’과 함께 1989년에 시각매체운동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문화운동 노선을 추구하였고, 1991년 3월에는 숨비소리(노래패), 새날(풍물패), 움직거리(영화·사진작가 그룹), 들메(문학인 그룹)와 제휴하여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제문연)을 결성하였다.

제문협과는 별도의 연대체 조직으로 분립한 제문연은 1994년 2월 민족예술의 발흥에 뜻을 같이 하는 도내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결속체로 제주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이 조직될 때 흡수되었다. 제문협의 각 가맹단체는 개별적으로 제주민예총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결합했다가 1996년에 전체 조직이 민예총으로 해소되었다.

A1[사건명]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창립 및 제1회 우리문화한마당**

A2[사건 일시] 1987.08.22~1987.08.2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문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주지역 젊은 층들이 주축이 된 소집단 문화운동 움직임들을 결집시킨 제주문화운동협의회(대표 정공철)가 창립됐다. 놀이패한라산, 우리노래연구회, 제주청년문학회 등을 하나로 모아 탄생한 제주문화운동협의회는 창립기획으로 「제1회 우리문화한마당」을 마련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YMCA소극장에서 열린 우리문화한마당은 이야기마당과 노래마당, 마당극공연 등으로 엮어졌다.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22일 '제주사람과 제주문화'(현길언, 작가) / 노래극 '이 땅의 함성으로'(우리노래연구회), 8월 23일 '제주문화운동의 실천과제'(문무병, 무속연구가) / 마당극 '그날이후'(놀이패한라산), 시화전

A6[관계 인물] 정공철

A7[관계 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놀이패한라산, 우리노래연구회, 제주청년문학회)

A8[관계 자료]

"도내젊은층 주축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창립", 『제주신문』 1987년 8월 20일자(제주문화예술00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2회 우리문화한마당**

A2[사건 일시] 1988.08.21~1988.09.0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주제 : 「한라여, 삶의 공동체여!」로 행사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8.20~8.24 : <그림패 보름코지> 판화전 '나의 칼, 우리노래'(세종미술관), 8.21 : <제주청년문학회> 문학간담회 "분단극복의 문학"(세종미술관), 8.22~8.23 : <놀이패 한라산>, <우리노래연구회> 공동창작 마당극 "요 노릇을 어떻허코" 공연(가톨릭회관), 8.22~8.24 : <제주청년문학회> 공동창작시화전(가톨릭회관), 8.23~8.24 : "영상이야기" 개최('나의 반쪽은 지금', '우리는 떡고물이나 받아먹는 노동자가 아니다' 상영, 9.1~9.4 : <그림패 보름코지> 판화전 '나의 칼, 우리노래'(서귀포 원앙다실), 9.3~9.4 : <놀이패 한라산>, <우리노래연구회> 공동창작 마당극 "요 노릇을 어떻허코" 공연(서귀포시민회관), 9.3~9.4 : <제주청년문학회> 공동창작시화전(서귀포시민회관)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놀이패 한라산·우리노래연구회·제주청년문학회), 사

진패 시각인식, 그림패 보름코지

A8[관계 자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21일부터", 『제주신문』 1988년 8월 20일자(제주문화예술002)

"마당극·노래구성진 한마당", 『제주신문』 1988년 8월 23일자(제주문화예술00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송악산군사기지철회와 주민주체결정권 쟁취를 위한 시민학생문화
한마당**

A2[사건 일시] 1989.01.21~1989.01.24

A3[사건 배경] 제주출신 재경제주학우회는 지역 현안에 침묵할 수 없다며, 당시 제주사회의 이슈였던 송악산군사기지철회투쟁과 주민생존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로 '시민학생문화한마당' 개최함.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행사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 제주시민회관에서 노래극 '잠들지 않는 남도' 공연, '송악산군사기지 철회 대정읍 3차 결의대회' 비디오 상영, 1.22: 대정국민학교에서 전날 제주시민회관에서 가졌던 공연을 재연. 제주문화운동협의회가 굿, 제주대학교씨클연합회가 사물놀이로 공동 참여함., 1.23: 마당극 '함께 만들 우리 제주도' 공연, 1.24: 마당극 '타올라라 남도여' 공연

A6[관계 인물] 오권홍(서울대), 송문석(제주대)

A7[관계 단체] 재경제주학우회협의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대학교동아리연합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A8[관계 자료]

편집부, 1989 「송악산군사기지철회와 주민주체개발결정권 쟁취를 위한 시민학생문화한
마당」 『월간제주』 (2·3월 합번호: 102)

A9[관련 사건] 송악산군사기지 철폐 투쟁

A1[사건명] **41주기 4·3추모제 예술작품 탄압사건**

A2[사건 일시] 1989.04.26~1989.05.2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의 문화예술공연단체가 지난 「4·3추모제」 행사로 벌였던 행사내용에 대해 뒤늦게 경찰이 제동을 걸고있어 4·3주제 창작예술계에 한차례 논란의 회오리가 일고있다. 제주경찰서는 최근 제주문화운동협의회소속 놀이패 「한라산」(대표 김경훈)이 지난 4월1일부터 2일까지 제주시민회관에서 「41주기 4·3추모

제」의 일환으로 올렸던, 마당굿 「4월굿 한라산」에 대해 공연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뒤늦은 수사에 나섰다. 시비가 일고 있는 마당굿의 내용은 셋째·넷째마당에 나오는 「빨치산가」와 ‘4·3무장대선언문’ 부분으로 이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올린 것은 입산공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문제가 된 「빨치산가」(혹은 「적기가」)는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 그 밑에 전사는 용감한 전사 / 더운피 흘리며 말하던 동무 / 쟁쟁히 가슴에 울리어 온다 / 동무야 잘 가거라 원한의 길을…”이라는 가사로 당시 전국적으로 불리웠던 노래. 또 「무장대선언문」은 “시민 동포들에게! 경애하는 부모형제들이여! 「4·3」오늘은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은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네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꺾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서 셋째마당 첫 부분에서 인용됐다. 이 글은 4월3일 무장대가 행동을 개시하면서 뿌린 「빠라」의 일절로 좌익활동을 하다 4·3무렵 일본으로 피신한 김봉현·김민주가 쓴 「제주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슬로건은 무장투쟁지도부의 상징적인 구호로 여러 책자에 인용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공연내용을 올린 동기와 경위를 파헤치기 위해 공연 2개월이 지나 부랴부랴 관련 대표 3명을 소환 연행 조사했고, 이어 지난 9일에는 다른 회원 모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나 제문협은 당국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 공연을 한 것인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제문협은 이에 대해 “제주경찰서(대공과)에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공연신고·공연자등록·대본제출 등)를 치른 합법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하는 저의와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다. 「한라산」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서울서 열린 제2회 민족극한마당에 참가, “4·3의 실체와 진상에 접근해보려는 시발점으로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작품”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4·3행사 시비는 이보다 앞서 같은 기간 제문협 소속 제주청년문학회가 만든 공동창작시와 4·3을 다룬 개별창작품들을 전시했던 「4·3문학제」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4월26일 청년문학회 대표 오승국씨가 임의 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27일과 30일에는 또다시 회원들이 연이어 연행돼가는 등 5월20일까지 조사가 있었다. 청년문학회는 여기서 조사받았던 내용들은 “4·3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산주의 찬양·동조의 내용이 아니냐? 시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등이었다고 하고 4·3시와 관련 자행된 탄압으로서 이는 사상과 문학예술에 대한 창작행위를 억압·위협하는 것이며 역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A6[관계 인물] 김수열, 오승국, 김경훈, 장윤식, 한경임
A7[관계 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놀이패한라산, 제주청년문학회
A8[관계 자료]

"4·3 추모제 단체에 뒤늦은 서리 ", 『제주신문』 1989년 6월 14일자(제주문화예술005)

A9[관련 사건] 41주기 4·3추모제

A1[사건명] **영화 ‘오! 꿈의 나라’ 상영**

A2[사건 일시] 1989.05.14~1989.05.16

A3[사건 배경] <장산곶매>가 광주항쟁을 내용으로 한 16mm 장편영화 ‘오! 꿈의 나라’를 대중에게 선보임으로써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고자 함.

A4[사건 전개과정]

1989.05.14. 서귀포시 YMCA회관에서 상영

1989.05.15-16. 제주시 광양성당 상영

A5[사건 내용] 제주문화운동협의회와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는 영화 ‘오! 꿈의 나라’를 초청하여 제주에서 상영하기로 결정하고 공연장소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나누어 하기로 했다. 이미 문화공보부로부터 치안본부에 고발당한 영화작품이지만,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입장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 영화는 8회 상영에 1,3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상황리에 종료됐다.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었던 당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공연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영화법과 공연법위반혐의로 각각 제주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 <제주문화운동협의회>와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를 고발했다. 서귀포시가 먼저 고발조치했고 제주시는 5월 13일 이들에게 영화상영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상영을 강행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주최측은 영화상영을 강행했다. 제주경찰서는 1990년 5월 14일, ‘오! 꿈의 나라’ 상영과 관련 수배됐던 김석운씨(27세) 이재홍씨(29)를 영화법 및 공연법 위반혐의로 조사했다.

A6[관계 인물] 정공철

A7[관계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장산곶매, 서귀포YMCA

A8[관계 자료]

"오 꿈의 나라 상영 제주에서 첫 고발", 『제주신문』 1989년 5월 15일자(제주문화예술 006)

"경찰, 영화법 등 위반 혐의 「오 꿈의 나라」 상영 수배자 조사", 『제주신문』 1990년 6월 15일자(제주문화예술008)

편집부, 1989 「‘오! 꿈의 나라’ 시비」 『월간제주』 (6월호: 21-2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A2[사건 일시] 1989.11.08~1989.11.1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9.11.08. 전야제 '한판잔치 열어보세'(세종미술관 / 열림굿, 노래, 집체시낭송)

1989.11.09~12. 민족문학제(청년문학회 주관 / 세종미술관 / 시판화전, 초청강연, 문학이야기마당)

1989.11.09~12. 사진전 '89 외침전'(사진패 시각인식 주관 / 세종미술관)

1989.11.09~12. 그림전 '관광 땅, 제주사람'展(그림패 보름코지 기획 / 가톨릭회관 / 전시, '제주지역미술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세미나, 판화장터)

1989.11.09~11. 마당극 '설운 땅,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놀이패 한라산 주관 / YMCA회관)

1989.11.09. 1인극 '상황 · 4' 공연(극단 무 주관 / 세종미술관)

1989.11.08~11. 영화상영 '코스타가브라스 정치영화'(YWCA회관)

1989.11.12. 대동제 '제주사람 맺힌 원한 절로설랑 일어나지라'(길놀이, 노래발표, 풍물 굿, 시낭송)

A5[사건 내용] 제주문화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동기획위원회(위원장 김경훈,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우리노래연구회, 청년문학회, 놀이패 한라산, 그림패 보름코지, 사진패 시각인식, 극단 무, 노래모임 숨비소리)를 구성하여 개최함. 부제는 「제주사람 맺힌 원한 절로설랑 일어나지라」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우리노래연구회, 청년문학회, 놀이패 한라산, 그림패 보름코지, 사진패 시각인식, 극단 무, 노래모임 숨비소리

A8[관계 자료]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동기획위원회, 1989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팜플렛

"「우리문화 한마당」 4일간 펼쳐. 도내 7개 청년문화 단체 참여", 『제주신문』 1989년 11월 2일자(제주문화예술01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4회 우리문화한마당

A2[사건 일시] 1990.10.00~1990.1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 「우알바람 특조바람」이 오는 1990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내 서강문화센터 하늘극장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 공연은 지난 87년8월에 창립된 제주문화운동협의회에서 건강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마련한 「제4회 우리문화한마당」 행사 중 하나로 놀이패 「한라산」의 여덟번째 마당판이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A8[관계 자료]

"숨어서 쓴 섬나라이야기 4·3사건등 민초들의 희생다뤘", 『제주신문』 1990년 10월 10
일자(제주문화예술01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전태일열사 20주기 추모와 UR협상 및 특조법 저지를 위한 집체극
「이제, 우리가 건설하리라」 공연

A2[사건 일시] 1990.11.30~1990.12.0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전태일열사 20주기 추모와 UR협상 및 특조법 저지를 위한 집체극 「이제,
우리가 건설하리라」가 1990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두 차례 제주대체육관에
서 공연됐다. 이 집체극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소리패 신명, 그림패 보름코지, 영
상사진패 움직거리와 동아리로 구성된 제주대 놀이패 수리, 탈춤연구회, 노래패
흔소리, 노래패 소리얼 등 문화패가 공동기획했다. 이 작품은 「결사저지, UR 협
상, 특조법」이라는 슬로건아래 극 전체를 통해 제주민중의 현재적 고통의 모습
과 UR, 특조법으로 인해 더욱 좌절하면서도 끝내 투쟁해 나가며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제주민중의 모습을 형상화 시키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개발투쟁 과정에서 생
겨난 제반 오류들과 한계를 제시하고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탐
동투쟁을 통해 표출해내고 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민중의 한 한마당 극으로 표출", 『제주신문』 1990년 11월 30일자(제주문화예술
01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주열사 추모와 구속자석방을 위한 노래한마당 「일어나라 열
사여」 공연

A2[사건 일시] 1991.06.09~1991.06.1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민주열사 추모와 구속자석방을 위한 노래한마당 「일어나라 열사여」가

1990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제주 YMCA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우리노래연구회, 제주여민회문화부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노래사랑, 기청제주연합회문화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모두 2부로 나뉘어 함께 노래부르기 등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제민협은 공연에 앞서 “8차례의 도민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폭력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의해 2명의 학생이 강제추락당했고, 농민 한 사람이 백골단의 방패에 머리를 찍혀 뇌부상을 당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다. 구속자들의 석방과 부상사건 진상을 규명하는데 힘이 되고자 노래공연을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우리노래연구회, 제주여민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기청제주연합회

A8[관계 자료]

"5·6월투쟁 사진전 제주지역대책 회의", 『제주신문』 1991년 6월 6일자(제주문화예술 01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5·6월 투쟁사진전**

A2[사건 일시] 1991.07.00~1991.07.2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가 주최하는 5·6월 투쟁사진전 ‘민주 아! 너를 부르마!’가 세종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7월21일까지 계속된 사진전에서는 지난 두 달간 제주시내 곳곳에서 개최됐던 가두시위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 20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시각매체운동연구회가 창립전에서 선보였던 작품 20여점도 함께 전시됐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시국사건관련 구속자의 옥바라지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 시각매체운동연구회

A8[관계 자료]

"특별법 극 「새날을 향하여」 대관 논란", 『제주신문』 1991년 7월 21일자(제주문화예술01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도개발특별법저지를 위한 연합공연 「새날을 향하여」 공연**

A2[사건 일시] 1991.09.16~1991.09.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1.08.29. 노래패 「숨비소리」의 이름으로 문예회관대극장 대관신청

1991.09.12.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대관 취소 /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
성명 발표

1991.09.16~17.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새날을 향하여」 공연

A5[사건 내용] 1991년 9월 16, 17일 양일간 공연예정 된 제주도개발특별법저지를 위한 연합공연 「새날을 향하여」 공연은 공연장소 대관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는 이 공연을 주최하면서 노래패 「숨비소리」의 이름으로 1991년 8월 29일 문예회관대극장 대관을 신청했으나 9월 12일 제주도문예회관이 대관신청인과 공연주최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극장 대관취소방침을 노래패 「숨비소리」측에 통보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범도민회」측은 제주도문예회관측의 이 같은 취소통보는 납득할 수 없다며 「공연강행」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문예회관측에서는 “대극장대관신청인과 공연내용이 현재 시내곳곳에 부착되어있는 포스터의 공연주최자와 공연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검인도 받지 않은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대극장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도민회 측에서는 “공연자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에서만 공연이 가능해 범도민회 산하단체인 숨비소리의 이름으로 대극장대관 신청을 했다. 이번 대극장대관 취소는 사소한 규정으로 범도민회의 활동을 저지하겠다는 일종의 ‘행정탄압’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범도민회는 9월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만일 공연강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주도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연장소를 제주대학교 체육관으로 옮겨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앞, 뒤풀이 외에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새날을 향하여」는 극·노래·풍물·춤·미술·영상이 한데 어우러진 대형 집체극으로 <놀이패한라산>등 모두 14개 문예단체가 참가하고 참여인원도 기획, 연출진을 포함해 1백여 명에 이르러 이제까지 도내에서 공연되었던 어느 공연보다도 가장 규모가 방대한 대형집체극이다. 극은 공연시작을 알리는 앞풀이에 이어 폭죽, 최루탄, 급한 군화발소리가 어지럽게 섞이면서 야트막하게 깔리는 「지리산」반주와 함께 무대를 가득채운 춤꾼들의 휘몰아치는 듯한 춤으로 이제까지의 고립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싸움의 한계와 극복을 암시하면서 시작된다. 주로 「극」중심으로 진행되는 2, 3장에서는 「하와이형 개발」이란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개발의 문제점과 재벌의 이윤획득을 위한 「특별법」의 본질이 폭로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대형걸개그림이 무대배경으로 자리잡고 골포장에 무너지는 마을, 분신사진 등이 영상화되면서 힘찬 북춤, 맨손춤이 「연대투쟁」을 다짐하는 힘찬

결의로 극이 마무리 된다. 「새날을 향하여」의 연출을 맡은 정공철씨(32)는 “이번 극은 각 장르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결, 주요장면마다 그 장르의 독특성을 살아낼 수 있게 한 대형 집체극이며, 하나의 장르공연이 갖고 있는 단조로움을 극복, 특별법저지투쟁의 정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려나갔다.”고 말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준)

A8[관계 자료]

"특별법 극 「새날을 …」 제대체육관서 무대올려", 『제주신문』 1991년 9월 14일자(제주문화예술01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도개발특별법저지를 위한 마당굿 「개발바람 오름너머」 공연

A2[사건 일시] 1991.11.09~1991.11.1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놀이패한라산>이 열번째 정기공연 작품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투쟁의 범도민적 확산을 위해 기획된 작품이다. 됐다. 11월9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제주YMCA 3층 강당에서 공연됐다. 공연내용은 현실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의 현안들을 들추어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싸움에 동참해 나가는 것이 기동줄거리이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놀이패한라산

A8[관계 자료]

"「특별법 반대」 마당굿 무대에 놀이패 「한라산」의 「개발바람 오름너머」", 『제주신문』 1991년 11월 8일자(제주문화예술01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강요배의 역사그림 「제주민중항쟁사」 전시회

A2[사건 일시] 1992.04.21~1992.04.2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제주세종미술관에서 강요배의 역사그림

「제주민중항쟁사」가 전시되었다. 제주출신 서양화가 강요배씨는 이 작품전을 통해 고려시대의 삼별로 항쟁, 프랑스 함대와 대치했던 1901년 이재수의 난, 1932년 잡녀 반일항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항쟁의 뿌리에서부터 해방, 탄압, 항쟁으로 이어지는 4·3항쟁을 연대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 전시작품들은 4·3항쟁을 경험하지 못한 화가가 자료를 수집한 후 4·3항쟁의 유적지를 일일이 찾아 생존자의 증언을 듣고 3년간의 고투 끝에 화폭에 옮겨진 것이다. 제민일보사가 주최한 이 그림전은 연일 500여명 내외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4·3진상규명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전시기간 중인 5월 26일 미술평론가 이영욱씨를 초청해 「미술과 역사인식」이라는 주제의 강연도 있었다.

A6[관계 인물] 강요배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세종갤러리, 『세종갤러리-뒤돌아본 14년』

"강요배 역사그림전", 『제주신문』 1992년 3월 27일자(제주문화예술01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통일맞이 제주공연-‘한라에서 백두까지’

A2[사건 일시] 1992.08.09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8월 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준) 주최로 「겨레의 하나됨을 앞당기는 시와 노래 한마당 통일맞이 제주공연-한라에서 백두까지」 공연이 제주 대학교에서 펼쳐졌다. 「문익환선생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후원회」 주관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순회 공연되고 있는 「통일맞이」 공연은 제문협 노래패 「섬 하나하나», 제총협 「통일문예선봉대」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청년진군가」, 「갈거야」 등 노래와 함께 울동을 곁들여 한마당무대를 열었다. 본행사는 모두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 「4·3 그리고 분단」에서는 노래패 「섬 하나하나」가 「불타는 섬」을 노래하고 놀이패 「한라산」의 정공철씨가 4·3곳시 「넋은 넋반에 담고, 혼은 혼반에 담아 저승 상마늘로 도올리저협네다」를 낭송했다. 그리고 안치환이 「조국」, 「진혼곡」을 노래하고 시인 김남주가 「자유」, 「전사2」 등의 시를 낭독하며 4·3항쟁에서 통일의 기원을 찾고 분단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조명했다. 제2부 「민중들의 삶과 투쟁」에선 류금신이 「누가 나에게 이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김영남이 「동지여 굳세게」등을 노래하고 박용길 장로가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읊으며 통일의 주체인 민중들의 민주화·통일투쟁 과정을 그렸다. 제3부 「통일은 투쟁으로 이루어지리니」에서는 영상사진패 「보편적 언어」가 남북이 화해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영상응로 보여주

며 「남북합의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제문협 민요패 「소리왓」, 노래패 「섬 하나산하나」가 「하나되는 땅」, 「통일행진곡」 등을 불렀다. 뒤풀이는 전출연진의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 「새하늘 새 땅」을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통일맞이」 시와 노래 한마당", 『제주신문』 1992년 8월 7일자(제주문화예술02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고 양용찬열사 추모 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6회 우리문화한마당**

A2[사건 일시] 1992.11.12~1992.11.2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림굿, 판굿, 그림전 등으로 구성된 「고 양용찬열사 추모 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6회 우리문화한마당」이 펼쳐졌다. 11월 12일 하오6시 세종미술관에서 열린 「열림굿」은 길트기, 기념식,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이어 14, 15일 양일간 제주대 체육관에서 판굿 「살맛나는 세상」이 공연됐다. 양용찬열사를 추모하고 민주정부 수립의 염원을 담은 「살맛나는 세상」은 1장 「무리대권」에서 87년대선을 무림의 대권을 장악하려는 무사들의 혈전으로 빗대어 그려나가고, 2장 「5월투쟁」에서는 3당 통합과 강경대치사건을 담어나간다. 또 3장 「특별법반대투쟁」에서는 도민들이 결사적으로 특별법저지반대투쟁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4장 「대선 D-30」에서는 14대 대선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한 뒤 우리가 바라는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풍자와 해학으로 엮어가고, 5장 「살맛나는 세상」에서 영감놀이, 꽃놀이 등을 통해 살맛나는 세상을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다. 한편 11월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노인대학전시실에서 <그림패 터>(가칭)가 「일」을 주제로 창립전시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회장 김수열)와 제주대총학생회(회장 윤철수)가 공동주최하고 놀이패 한라산, 노래패 섬하나산하나, 제주청년문학회, 민요패 소리왓, 그림패 「터」 등이 공동주관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놀이패 한라산, 노래패 섬하나산하나, 제주청년문학회, 민요패 소리왓, 그림패 터

A8[관계 자료]

"「살맛나는 세상」 대형 판굿", 『제주신문』 1992년 11월 12일자(제주문화예술022)
A9[관련 사건]

11. 통일운동

A1[사건명] **6.10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추진 범도민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88.06.1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8년 6월 10일 하오2시 제주대학교 야외음악당에서 「6.10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추진 범도민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결의문채택, 재야단체의 성명서낭독, 통일마당극공연 등이 있었고, 학생대표 10여명이 "민족통일"이란 혈서를 쓰기도 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하오3시 30분께 교문 밖 교수아파트 앞까지 진출하여 진압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다 하오7시30분 대학으로 철수하고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생 시위", 『제주신문』 1988년 6월 11일자(제주통일00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식 시위**

A2[사건 일시] 1988.06.1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생 1천여 명은 1988년 6월 14일 하오1시 교내민주광장에서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발족식에 이어 백기완 씨의 "공동올림픽과 민족통일"이란 주제 강연을 들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학생 2백여 명은 교외로 진출, 하오4시20분부터 제주대입구 제1횡단도로 상에서 "조국통일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이다 하오5시30분께 교내로 들어와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생 시위", 『제주신문』 1988년 6월 15일자(제주통일00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민족화해를 위한 탐라순례대행진**

A2[사건 일시] 1988.08.04~1988.08.0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민족화해를 위한 탐라순례대행진」이 1988년 8월 4일 하오1시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시민학생 등 3백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3박4일간의 장정에 올랐다. 제주지역 청년학생협의회(본부장 김명진)가 “지역순례를 통해 국토애·조국애를 고취, 민족통일애의 의지를 함양”키 위해 주최한 탐라순례대행진은 참여자들이 백두, 한라 등 2개 대대로 나뉘어 도내 동서회선 일주도로를 따라 도보순례를 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탐라순례 대행진 3백50여명 참여", 『제주신문』 1988년 8월 5일자(제주통일00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8·15 남북학생회담성사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88.08.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청년학생협의회는 8·15 남북학생회담성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전대협 국토종단 선봉대 한라산 등정 출정식 개최", 『제주신문』 1988년 8월 9일자(제주통일00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8·15 남북학생회담성사를 위한 범도민 촉구대회**

A2[사건 일시] 1988.08.1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청년학생협의회는 1988년 8월 15일 하오2시 제주시중양로 종합시장입구에서 「8·15 남북학생회담성사를 위한 범도민 촉구대회」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회가 무산되자 대학생 1백30여명은 이날 하오3시30분께부터 제주시내 중양로·동문로·탑동등지를 돌며 경찰의 원천봉쇄를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가두시위에서 청년학생협의회는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남북통일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경찰서는 이 시위와 관련 연행한 6명중 고창균군(제주교대학생회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8·15남북학생회담 봉쇄 항의 가두시위 벌여", 『제주신문』 1988년 8월 16일자(제주통일005)

"학생회담 촉구관련 2명 구속· 5명 입건", 『제주신문』 1988년 8월 18일자(제주통일00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평양축전참가성사를 위한 제주대학교비상학생총회**

A2[사건 일시] 1989.06.2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평양축전(7월1일~8일)참가문제가 전국 대학가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총학생회에서는 1989년 6월 20일 7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모든 학사일정을 7월 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미 시화전·그림전등의 평양축전참가성사를 위한 모의축전을 열고 있는 총학생회에서는 앞으로도 참가대표단발족식·범도민진군대회 출정식 등의 행사를 계획해 놓고 있다. 학생들은 평양축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조국통일의 민족적 확산을 이루어 마침내 북한과 허심탄회한 논의와 공동실천 속에 통일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캠퍼스 곳곳에는 「인민학습장」, 「만수대예술극장」, 「고려호텔」 등으로 명명, 평양축전 참가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총학생회에서는 “자신들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6월 20일의 비상학생총회에서는 총장선출에 학생들의 참여와 이승수군(통신공·4)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도 결의됐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대에 평양바람", 『제주신문』 1989년 6월 21일자(제주통일00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평양축전참가성사를 위한 통일대장정 한라산 출정식**

A2[사건 일시] 1989.06.2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전대협 소속 대학생 등 1백여 명은 1989년 6월 24일 상오 제주대 본관1층에서 「세계청년학생평양축전 참가성사를 위한 통일대장정 한라산출정식」을 갖고 선봉대대원들이 한라산 등정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관음사·어리목·영실 등 한라산등반코스 6개소에 3백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 대학생들의 한라산입산을 통제하는 원천봉쇄로 맞섰는데 전남대 박형수군 등 10명을 연행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평축참가」 통일 대장정 한라산 등정 10명 연행", 『제주신문』 1989년 6월 26일자 (제주통일008)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통일운동탄압분쇄와 평양축전참가성사를 위한 출정식**

A2[사건 일시] 1989.06.3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제주도내 4개 대학 학생 1백50여 명은 1989년 6월 30일 하오 3시 제주대에서 「통일운동탄압분쇄와 평양축전참가성사를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어 하오 4시께부터 "평양축전참가보장", "구속학생석방", "노태우정권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진출을 시도했으나 교문 앞 부근에서 경찰의 원천봉쇄에 막혀 좌절됐다. 학생들은 이때부터 진압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맞섰고, 경찰도 이에 맞서 가스탄 등을 투척했다. 학생들은 가두진출이 좌절되자 하오 6시 30분께 자진 해산했다. 이어 학생들은 하오 7시께부터 하오 11시까지 제주시내 동문로터리.광양로터리.남문로터리.중앙로터리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모여 「영구분단 획책하는 미국 및 노태우정권 음모분쇄결의대회」를 가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시위현장에서 강수민양(간보대간호과3년) 등 대학생 12명을 연행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평양출정 격렬 시위", 『제주신문』 1989년 7월 1일자(제주통일009)

A9[관련 사건]

A1[사건명] **8.15범민족축전제주도민대회 출정식 및 우리 땅 밟기 대행진**

A2[사건 일시] 1989.08.1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9.07.28. <8.15통일염원범민족축전 제주도추진본부> 결성

1989.08.13. 8.15범민족축전제주도민대회 출정식 및 우리 땅 밟기 대행진

A5[사건 내용] 제민협·제총협은 1989년 8월 13일 제주대학교 내에서 학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15 범민족축전제주도민대회’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을 마친 학생 등은 이날 대회의 일환인 ‘우리 땅 밟기 대행진’에 들어갔으나 경찰의 원천 봉쇄로 막혀 아라국교 부근에서 저지당했다. 이에 학생 등은 경찰과 맞서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 등 22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경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 경찰은 이를 불허, 집회 금지를 요청했었다. 한편 제주경찰서는 이와 관련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조국통일평화위원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시법위반 혐의로 8월 15일 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10월 27일 하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대 총학생회장, 제주대총학생회부회장, 제민협조국통일평화위원장 등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8.15통일염원범민족축전 제주도추진본부

A8[관계 자료]

"제민협, 제총협 8·15 출정식,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 『제주신문』 1989년 8월 14일자(제주통일010)

"평양 축전 관련 시위 주도 제대생 4명 집행유예", 『제주신문』 1989년 10월 28일자(제주통일01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주지역범민족대회**

A2[사건 일시] 1990.08.07~1990.08.15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 1990.07.26. 제주대총여학생회 · 동아리연합회 · 인문대 · 경상대 · 공과대 · 자연과학대 · 사범대학 학생회 등이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반쪽잇기 「탐라순례대행진」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래정) 발족
- 1990.08.01. <제주민족민주운동협회>, <8·15통일염원 우리땅밟기동지회연합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반쪽잇기 '탐라순례대행진' 학생준비위> 등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제주도추진본부」 결성
- 1990.08.02. 전대협 국토순례대행진 한라출정식 대표단(단장 홍화신·전남대 총여학생회 회장) 제주 도착
- 1990.08.03. 전대협 주관의 남북한전면개방 자유왕래실현과 범민족대회성사를 위한 국토종단통일대장정 한라선봉대원 및 제주지역 통일선봉대원 20여명 제주 시내에서 평화대행진
- 1990.08.04. 전대협, 남북한전면개방 자유왕래실현과 범민족대회성사를 위한 국토종단 통일대장정 한라산출정식(한라산 백록담 정상) 개최
- 1990.08.07. 제주도추진본부 기자회견. 「제주지역범민족대회」 행사방침 등 공개
- 1990.08.10~13.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반쪽잇기 탐라순례대행진 개최
- 1990.08.15.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주지역범민족대회」 개최(제주시민회관)

A5[사건 내용]

1990년 7월 26일, 제주대총여학생회 · 동아리연합회 · 인문대 · 경상대 · 공과대 · 자연과학대 · 사범대학 학생회 등이 연합하여 구성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반쪽잇기 「탐라순례대행진」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래정)가 제주대학교에서 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했다. 준비위원회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민족통일의 불길을 지피기 위해, 통일의 열의를 애국도민과 같이 느끼기 위해”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고 밝히면서 차곡차곡 통일행진을 준비, 자주 · 민주 · 통일의 함성으로 통일의 그날까지 나가자”고 주장했다. 발족식을 마친 후 준비위는 제주대학생을 상대로 탐라순례대행진 참여 촉구와 함께 4천만 민중이 주제가 되어 북한전면개방 자유왕래실현투쟁으로 미국 · 노태우의 유엔 단독 가입, 장기집권음모를 저지하자는 내용의 편지보내기운동을 전개했다. 8월 1일, 제주민족민주운동협회, 8·15통일염원 우리땅밟기동지회연합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반쪽잇기탐라순례대행진 학생준비위는 제민협 사무실에서 각 단체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제주도추진본부」를 결성했다. 한편 전대협 국토순례대행진 한라출정식 대표단(단장 홍화신·전남대 총여학생회회장) 18명이 8월 2일 하오6시30분 목포발 안성호편으로 제주항에 도착했다. 이날 「탐라순례대행진준비위원회」에서는 여객선터미널에서 대표단을 맞는 환영식을 가졌는데, 흥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의 열망을 안고 한라산에서 물과 흙을 채취해 8월15일 범민족대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이들 대표단과 제주지역 통일선봉대원 20여명은 3일 하오 제주 시내에서 평화대행진을 벌였다. 이날 평화대행진은 제주시 중앙로에서 시청 앞까지 인도를 따라 약 1km 구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에 앞서 한라선봉대는 제주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8월 4일 오전 6시 30분, 남북한 전면 개방 자유왕래 실현과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국토종단통일대장정 한라선봉대와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한라산 정상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서 선봉대원들은 한라산의 물·돌·흙을 채취하고 출정선언문을 대신해 자작시 「한라산출정문」을 낭독했다. <범민족대회 제주도 추진본부>(공동의장 양영수 신부 외 4인)는 8월 7일 상오 10시 제민협사 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5일 범민족대회에 고상호 공동의장을 대표로 30여명의 참가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7일부터 15일까지를 ‘통일주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반쪽잇기 탐라순례대행진」, 극단 아리랑의 「점아점아 콩점아」 초청공연, 「제주지역 범민족대회」 등의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민족대회 제주도 추진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민중의 자주적 참여에 의해서만 통일은 가능하다고 하며 “제주지역에서의 통일 의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초석이 되고자 제주지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범민족대회 제주도 추진본부는 “통일애국 인사 즉각 석방,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인, 평화협정 수립,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등을 주장했다. 탐라순례대행진은 8월 10일 하오 2시 제주대생을 비롯, 도내 대학생과 시민 등 3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귀여중에서 발대식 가진 후 동·서부로 나눠 각각 도보행진을 벌이며 행진을 시작했다. 백두대대와 한라대대 두 팀으로 나눠 ‘탐라순례대행진’에 나섰던 참가자들은 13일 하오 5시 30분 중앙로터리에서 합류, 광양국민학교까지 시가행진을 가졌다. 시가행진 과정에서 학생들은 도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정보주도하의 창구단일화 정책이 아니라 남북의 7천만 겨레가 주인이 되는 평화통일 이루어내자”고 주장했다. 시가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하오 6시 15분 광양국민학교에 도착, 도내 재야단체 회원 등과 더불어 순례대행진 보고대회를 갖고 대동놀이를 벌인 후 자진해산했다. 8월 15일, <범민족대회 제주도 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주지역 범민족대회」가 하오 4시 시민학생 등 7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대회의 1부는 추진본부 공동의장 단 소개, 한석 공동의장의 대회사, 전교조 제주지부 이영길 지부장의 격려사, 청년문학단이 공동창작 한 통일염원시 낭독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1부에 이어 2부 대회에서는 도내 문화패 80여명이 한데 모여 꾸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판극 「통일의 나라로 가자」 공연이 있었다. 하오 6시 45분께 대회를 끝낸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장소인 시민회관을 출발, 인도를 따라 「전면 개방 자유왕래 실현하여 조국통일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탐동까지 평화적인 시가행진을 벌인 후 자진해산했다. 시가행진 과정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도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전면 개방 자주교류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등을 주장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회, 8·15통일염원 우리땅밟기동지회연합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반쪽잇기 ‘탐라순례대행진’ 학생준비위

A8[관계 자료]

- "「탐라순례대행진」 준비위원회 발족", 『제주신문』 1990년 7월 27일자(제주통일013)
- "평화와 통일도본부 제민협등 단체 결성", 『제주신문』 1990년 8월 3일자(제주통일014)
- "국토종단대장정 어제 평화대행진 한라선봉대원", 『제주신문』 1990년 8월 4일자(제주통일015)
- "한라산서 출정식 국토종단 대장정", 『제주신문』 1990년 8월 5일자(제주통일016)
- "통일주간 설정 지역대회 개최 범민족대회 도본부 회견", 『제주신문』 1990년 8월 8일자(제주통일017)
- "탐라순례대행진 서귀여중서 발대", 『제주신문』 1990년 8월 11일자(제주통일018)
- "탐라순례대행진 참가 대학생 시가행진", 『제주신문』 1990년 8월 14일자(제주통일019)
- "평화통일 제주범민족대회 시민회관서 7백여명 참가 시가행진도 벌여", 『제주신문』 1990년 8월 16일자(제주통일02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북한영화 「소금」 상영

A2[사건 일시] 1990.11.0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 학생들은 1990년 11월 1일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영화 「소금」의 상영을 강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교내로 진입한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제주대총여학생회·경상대·자연과학대학학생회는 이날 하오2시 경상대 세미나실에서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1시간 소요되는 「소금」을 상영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위반혐의로 사전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페퍼포그 차량 1대와 병력 1천여 명을 교내로 진입시켜 하오2시55분께 영화상영을 중단시켰으나 테이프 압수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이날 하오2시40분께 정문과 산천단방면 교내진입로를 통해 최루탄을 쏘며 병력을 투입, 학생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넘어 교내 본관 앞과 경상대 건물에 진출해 영화상영을 중단시켰다. 학교 정문 등을 통해 수백발의 최루탄을 쏘며 경찰이 교내로 들어오자 학생 1천여 명은 이에 맞서 학원침탈을 규탄하는 구호와 함께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본관 앞 경상대 건물 앞 등 교내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하오3시20분께 제주대 진입로까지 물러나자 2천5백여 명까지 불어난 학생들은 다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이날 하

오5시께 민주광장에서 경찰의 교내 진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후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북한영화 상영농고 공방", 『제주신문』 1990년 11월 2일자(제주통일02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통일방안합의와 조국의 평화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 통일대축전선봉대발대식**

A2[사건 일시] 1991.08.0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통일대축전준비위원회(위원장 김보선·제주대 총여학생회회장)는 1991년 8월 1일 하오3시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학생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방안합의와 조국의 평화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선봉대 발대식을 가졌다. 제총협 통일대축전준비위는 이날 선봉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14~16일 경희대에서 열리는 통일대축전 기간까지 탐라순례대행진 등의 행사를 주관했다.

A6[관계 인물] 김보선

A7[관계 단체]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통일대축전 발대식", 『제주신문』 1991년 8월 2일자(제주통일02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91년 탐라순례대행진**

A2[사건 일시] 1991.08.08~1991.08.11

A3[사건 배경] 91년 통일투쟁의 일환으로 <통일방안합의와 조국의 평화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제총협준비위>가 주관했다.

A4[사건 전개과정]

1991.07.23.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상임의장 위성곤) 「통일방안합의와 조국의 평화·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축전 제총협준비위발대식」 개최

1991.08.08-11. 탐라순례대행진

A5[사건 내용]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를 일주하는 ‘탐라순례대행진’은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탐라순례대행진’의 첫째 날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공청회’가 열려, 발대식을 마친 참가자들이 조직적으로 공청회에 참가하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제주신문』 1991년 7월 24일자(제주통일023)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1 『제주의 소리』 (8월호: 4)(제주통일02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북한 량강도학생위원회와 서신교류 성공발표**

A2[사건 일시] 1992.05.0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상임의장 윤철수)는 1992년 5월 4일 상오11시 제주대총학생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최북단에 있는 북한 량강도학생위원회와 서신교류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북측학생위원회에서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발신일이 1992년 4월 25일로 돼있는 이 서신은 「남조선 전대협 산하 제주지역 총학생회협의회 앞」 이라고 수신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통일의 당위성 등을 담고 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북한학생 서신교류 제총협서 성공발표", 『제주신문』 1992년 5월 5일자(제주통일02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통일대축전민족제대준비위발족 및 국가보안법철폐·양심수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A2[사건 일시] 1992.07.1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대총학생회(회장 윤철수)는 7월 16일 하오3시 법정대중강당에서 학생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대축전민족제대준비위발족 및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한 만큼 국가보안법 존립의 명분이 사라졌다. 이러한 남북합의서를 손에 들고 통일조국으로 진군하기 위해 축준위의 깃발을 올린다.”고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통일대축전준비위 제주대총학생회결의대회", 『제주신문』 1992년 7월 17일자(제주통일02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92년 제주지역 통일운동**

A2[사건 일시] 1992.07.13~1992.08.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2.07.13-24.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통일강좌’ 서귀포, 대정, 제주시 3개 지역에서 개설

1992.07.18. 제총협 축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수한 한라전문대총학생회장) 발족

1992.08.02. 제총협(건) 주관 ‘백조일손지지 벌초 및 비석 재건립 기금 마련운동’

1992.08.03.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92제주지역 자주통일실천기간’ 선포 기자회견

1992.08.03-04.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주관 ‘통일대축전’ 개최

1992.08.05-08.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주관 ‘탐라순례대행진’

1992.08.09.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맞이’ 제주공연(<문익환목사 노벨상 수상을 위한 후원회>와 제문협 등 제주지역 문화패 공동 주관)

A5[사건 내용] 1992년 7월 16일, 제주대총학생회(회장 윤철수)는 「통일대축전 민족제대준비위 발족 및 국가보안법철폐·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한 만큼 국가보안법 존립의 명분이 사라졌다. 이러한 남북합의서를 손에 들고 통일조국으로 진군하기 위해 축준위의 깃발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7월 18일 ‘조국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동포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제총협준비위발족식’이 제총협 주관으로 한라전문대 대강당에서 학생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생들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반미비핵군축 투쟁을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 제총협은 7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합의서 이행은 국가보안법철폐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단의 아픔 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비전향장기수는 조속히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편 김수한 통일대축전준비위원장과 이영심 제주대총여학생회장은 이날부터 7월 27일까지 시한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통일대축전 제총협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제5기 탐라순례대행진'이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8월 5일 상오10시 제주대에서 발대식을 갖고 하오2시 20분께 서귀포에서 동서로 나누어 출발한 대원들은 8월 8일 하오 5시께 제주시 탐동광장에 집결하여 탐라순례대행진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통일대축전 제총협준비위원장 김수한씨(22·한라전문대)는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8월 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준) 주최로 「겨레의 하나됨을 앞당기는 시와 노래 한마당 통일맞이 제주공연-한라에서 백두까지」 공연이 제주대학교에서 펼쳐졌다. 한편 <범민련한라산통일선봉대(대장 김민보·제주대자연대학생회장)는 10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범민련통일선봉대와 결합해 국토순례대행진을 계속 이뤄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한라산통일선봉대원 10여명은 한라산백록담에서 물, 돌 등을 채취한 후 대전지역에서 국토순례대행진을 하고 있는 범민련통일선봉대와 이미 결합한 상태"라고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통일대축전준비위 제주대총학생회결의대회", 『제주신문』 1992년 7월 17일자(제주통일027)

"통일대축전 제총협 발족", 『제주신문』 1992년 7월 19일자(제주통일028)

"제총협간부 단식농성", 『제주신문』 1992년 7월 24일자(제주통일029)

"「통일맞이」 시와 노래 한마당", 『제주신문』 1992년 8월 7일자(제주통일030)

"탐라대행진 모두 마쳐", 『제주신문』 1992년 8월 9일자(제주통일031)

현혜숙, 1992 「8월, 제주지역 통일운동」 『월간제주』 (9월호: 18-19)

A9[관련 사건]

12. 여성운동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여성운동 조직은 1980년대 초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를 시발로 본다. 서울에서 진보적 여성운동 조직이 1980년대 초에 나타난 것과 달리, 지역에서는 대부분 1987년 6월 항쟁 이후 태동하여 현재의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 대부분이 1987~1988년 사이에 결성되었다.

제주지역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제주여민회' 역시 1987년에 창립되었다. 1987년 11월 29일 제주YMCA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연 제주여민회는 '여성의 인간화와 사회의 민주화 및 평화적 민족통일을 실현하고 제주지역 제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주여민회는 창립 초기에는 '제주국민운동본부' 및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에 적극 결합하는 등 '민주화 운동의 부문으로서의 여성운동'으로 위상을 정해 민주화운동과 지역주민운동에 결합하는 형태를 보였다.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독자성이 강조되어, 1992년의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 결성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창립 초기에는 제주도 기생관광 문제, 제주지역 사무직 여성실태조사,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등에 주력하며 제주지역의 여성문제와 전국적인 여성 이슈를 공동으로 다뤄나갔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 호주제 폐지운동 등 전국적으로 여성운동이 함께 했던 법·제도 개선운동을 제주지역에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전국 여성운동과의 연대는 1987년 2월 창립하여 전국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여성영화 상영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주여성축제 등 여성문화운동, 제주도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감시 활동,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운동, 지역공동체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였다.

제주여민회는 진보적 여성운동을 표방한 제주지역 유일의 여성운동단체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여성관련 이슈를 모두 포괄해야 하는 동시에 지역 연대운동에서도 유일한 여성운동으로 모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왔다.

A1[사건명]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항의시위**

A2[사건 일시] 1989.03.0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9.03.08.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요정대표 및 포주에 대한 2차 공판

A5[사건 내용]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요정대표 및 포주에 대한 2차 공판이 3월 8일 하오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광옥(청원각 대표) 박재택(송림각 대표) 김길웅(버드나무집 대표) 김정수(탐라성 대표) 피고인과 김미자 피고인에 각각 징역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끝나고 피고인들이 법정을 빠져나가는 동안 제주여민회 회원 등 10여명이 『악덕 관광업자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치다가 피고인들이 법원을 떠나자 자진해산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여민회

A8[관계 자료]

"관광요정 대표등 징역1년 구형", 『제주신문』 1989년 3월 9일자(제주여성00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2회 3·8제주여성대회**

A2[사건 일시] 1989.03.1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9.03.11. <제주여민회>, '제2회 3·8제주여성대회' 개최

A5[사건 내용] 제주여민회가 주최한 「제2회 3·8제주여성대회」가 3월 11일 제주가톨릭회관 지하강당에서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3·8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대회는 전효성물산 노조위원장이며 현재 서울지역노동조합쟁의부장 김영미씨가 13살 봉제공장의 미싱사로부터 출발한 자신의 노동운동체험기를 1시간동안 역설하면서 진행됐다. 김씨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만이 여성 근로자들도 제값·제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인간적으로 사는 일이 중요하다.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스스로 갖고 노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제2부에서는 제주시내 병원·기업체 등의 노조회원들이 참여한 공동체놀이 및 노래경연이 열띠게 펼쳐졌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여민회

A8[관계 자료]

"제 2회 3·8 제주 여성대회 열려 ", 『제주신문』 1989년 3월 14일자(제주여성00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매춘관광규탄 서명운동**

A2[사건 일시] 1989.04.01~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여민회와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는 1989년 3월 31일 제주여민회 사무실에서 「요정업주 재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성의 상품화와 매매춘을 뿌리 뽑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요정업주에 대한 처벌이 실행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미미한 선에 그쳤다고 전제, “민족자존의 입장에서, 현재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매춘관광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등 4개항의 입장을 밝히고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여민회, 제주대학교총여학생회

A8[관계 자료]

"제주여민회등 매춘관광규탄", 『제주신문』 1989년 4월 1일자(제주여성00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1회 「여성영화제」**

A2[사건 일시] 1990.10.06~1990.10.0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여성들의 공동노력으로 형상화한 여성영화를 한데 엮어 여성문제를 제시해 보는 「여성영화제」가 제주여민회·제대총여학생회 주최로 1990년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시내 하늘극장에서 열렸다. 영상매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 여성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되는 「여성영화제」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아야 하는 차별과 억압, 모든 굴레 등 여성에 관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해 주는 사회성 짙은 3편의 영

화가 상영되었다. 상영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 : 총3백장의 슬라이드를 사용해 전북민주여성회가 제작한 슬라이드 영화. 「우리 여성의 수난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의 「정신대」부터 시작, 오늘날이 기지촌, 기생관광으로 이어지는 여성수난의 역사를 비롯하여 향락산업의 실태들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극으로 꾸며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지어 여성문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영화다. △ 작은 풀에도 이름이 있으니 : 한국여성민우회와 바리터가 공동제작 한 작품으로 모두 1,2부의 드라마로 구성된 영화. 1부는 기혼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문제, 2부는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정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참여와 단결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네 아이들 : 지난5월 연탄가스 질식으로 죽어간 「용철·혜영 남매의 죽음」을 통해 가슴아픈 탁아문제의 절박성을 심층 분석한 작품. 지역탁아소연합 제작.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여성의 굴레·차별 등 재조명 6~7일 하늘극장 「여성영화제」", 『제주신문』 1990년 10월 6일자(제주여성004)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여성 한마당**

A2[사건 일시] 1992.09.19~1992.09.2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2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제주여민회(대표 김경희)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권영자)의 후원을 얻어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여성 한마당」이라는 주제의 여성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조화순)이 주관하는 92년 여성주간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9월 19일 제민신협강당에서 하오4시 신혜수 여성의전화부 대표의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주제 강연이 있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제주여민회 측은 “어린아이에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생기는 성폭력의 두려움 속에서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전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붓물을 트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자", 『제주신문』 1992년 9월 18일자(제주여성005)
A9[관련 사건]

13. 4·3 해결운동

4·3 발발 이후 반세기 가까이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위령하고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4·3 해결운동에 주력하여 왔다. 하지만 4·3에 대한 논의는 금기의 대상이었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거론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로 여겨지는 암울한 시대를 겪어왔다. 그러기에 4·3 진실 찾기 운동은 숨겨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운동이며, 인권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제주4·3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960년 5월 제주대학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 진상조사 작업에 나섰다. 1960년 5월 23일 국회에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구성되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4·3사건의 진상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발의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비로소 시작된 4·3사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해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고초를 겪었다. 1963년 국내에서의 논의가 금기시된 가운데 제주출신 재일동포 김봉현·김민주는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일본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제주도민이 '무장투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 진전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4·3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민학살의 지역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이후 현장 증언 조사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4·3에 대한 재인식은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그 진상과 상처의 일부를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4·3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이후 4·3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젊은이들, 특히 제주출신 대학생들에게 4·3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민족모순의 역사적 근원을 해방공간에서 찾던 이들은 변방 외딴 섬 제주에서 것처럼 국가권력과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들 운동의 중요한 자산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특히 이런 중요한 항쟁수난사가 세상에 잘못 알려지거나 그 실상이 완전히 은폐되었던 사실에 더욱 놀랐다. 결국 1980년대 후반의 격렬한 사회운동의 분위기는 4·3 연구에도 곧바로 반영되었다. 제주지역에서 4·3에 대한 공개화·대중화는 민주화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4·3 관련 강연회·추모제가 시작되었고, 4·3이라는 단일 사안으로 출발한 '제주4·3연구소'가 발족한 것은 1989년 5월 10일이었다. '제주4·3연구소'는 제주 4·3을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하여 4·3의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역사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창립한 순수 민간연구단체이다. '제주4·3연구소'는 창립준비위원회 형태로 최초의 4·3 공개적인 추모행사인 1989년 4월의 제41주기 4·3추모제에 참여하였고, 이후 4·3 추모 행사 및 4·3 관련 행사를 주도하였으며, 2000년 1월 '4·3 특별법'이 제정되

기 까지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2년 4월에 구좌읍 세화리 다랑쉬굴에서 4·3 희생자 유해 11구를 발견하여 4·3의 실상을 전국적으로 알렸고, 창립 초기부터 증언채록 및 4·3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증언채록 자료집으로 『이제사 말함수다』 I·II, 『4·3장정』 등의 단행본을 발간했다. 증언채록집 뿐만 아니라 ‘4·3 유적지 발굴과 4·3 홍보’, ‘4·3연구서’, ‘4·3 기행’, ‘미군정 보고서’, ‘제주신보 발굴’, ‘4·3 인물찾기’, ‘4·3유물 발굴·보관’ 등 4·3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진실 규명에 나섰다.

‘제주4·3연구소’는 4·3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억압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묻혀버릴 뻔한 4·3의 기억과 역사, 자료들을 발굴하는 동시에 4·3을 출발로 하여 국제 평화와 인권으로 접근하는 발전적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 제주여민회·제주문화운동협의회·제주청년연합 등 12개 단체가 ‘4·3민중항쟁 기념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어서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6월 항쟁 이후에도 4·3은 여전히 금기의 주제여서 시인 이산하가 4·3을 다룬 장편연작시 「한라산」으로 1987년 11월 구속되어 필화사건을 겪었다. 그럼에도 6월 항쟁이후 4·3에 대한 공개적인 목소리가 제주 사회운동 진영에서 나오기 시작하여 4·3 바로알기, 강연회 등이 산발적으로 있어 왔다.

4·3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9년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치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는 당시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부터 8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4·3발발 4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가졌다. 한편 ‘4·3추모 및 범도민 진상 규명 촉구대회’가 열렸으며 학생들 역시 각 대학에서 추모집회를 열었다.

처음 치러진 4·3 추모행사는 곳곳에서 경찰과 반공단체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1989년의 추모제 이후 해마다 제주지역 사회운동단체들은 공동으로 ‘사월제 공동준비위’로 구성, 4·3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다. 4·3추모행사의 내용은 다양한 문화행사로 접근하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었다.

한편 1993년 ‘사월제 공동준비위’와 ‘제주4·3유족회’는 각각 치르고 있던 4·3추모제(위령제)를 함께 치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당시까지 4·3을 민중항쟁으로 보는 ‘사월제 공동준비위’와 4·3을 폭동으로 보는 ‘제주4·3유족회’의 시각차가 워낙 커 매해 4월 3일에 각각의 추모제(위령제)가 치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의 협의는 무산되었고, 다음해인 1994년에 양쪽이 합의한 합동 위령제가 처음으로 봉행되었고 이후 합동위령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월제 공동준비위’는 4·3이 제주도민 전체의 이슈임을 반영하듯 사회운동 진영 대부분이 참여하는 연대기구로 해마다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반공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던 시

각에서 나아가 4·3을 민중항쟁으로 재평가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A1[사건명] **4.3위령제 및 진상규명축구·계승대회**

A2[사건 일시] 1988.04.04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88년 4월 4일 제주대생 2백여 명은 하오1시 교내 사슴상 앞 광장에서 제주대총학생회주최로 「4·3위령제 및 진상규명축구·계승대회」를 갖고 “정부는 4.3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4·3사건의 진행과정과 인명피해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학생들은 “4·3사건은 민족사의 불행이며 커다란 아픔”이라고 지적하고 “4·3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 당시 숨진 수많은 영령의 넋을 위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생들은 토론회와 함께 교내에서 횃불행진을 펼쳤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대총학생회

A8[관계 자료]

"4·3위령제 및 진상규명대회", 『제주신문』 1988년 4월 5일자(제주4·3해결00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3강연회**

A2[사건 일시] 1988.07.22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7월 22일 오후6시 제주YMCA강당에서 "4.3강연회"가 열렸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숙명여대·중앙대 등 재경6개대학제주학우회 주최로 열린 이 강연회에는 학생시민 등 7백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제1부에서 고창훈(제주대 교수) '4·3민중운동사의 연구방향과 과제', 오성찬(소설가) '4·3의 증언', 김명식(아라리연구소장) '4·3사건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적과제' 등의 강연이 있었고, 제2부에서는 '한라여 말하라'라는 주제의 노래공연, 제3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재경 제주 학우회주최, 4·3 강연회 열려", 『제주신문』 1988년 7월 23일자(제주4·3해결002)

제주국본, 1988<제주의 소리> (9월호: 5)(제주4·3해결00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1주기 4·3추모제**

A2[사건 일시] 1989.04.01~1989.04.03

A3[사건 배경] 제주도민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으로 남아있는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묻힌 역사를 복원하고자 함.

A4[사건 전개과정]

1989.04.01. 제주시민회관에서 초감제 진행, 우리노래연구회 ‘4·3노래공연’ 공연, 슬라이드 상영, 놀이패한라산 마당굿 ‘사월굿 한라산’ 공연. 세종미술관에서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청년문학회 주관으로 ‘4·3민족문학제’ 개최. / 1989.4.2. 제주시민회관에서 놀이패한라산 마당굿 ‘사월굿 한라산’ 공연, 김명식(아라리연구소장)의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4·3강연회’ 개최. / 1989.4.3. 제주시민회관에서 ‘4·3추모 및 범도민진상규명추구대회’, ‘증언 및 토론회’ 개최. / 1989.4.1-3. 세종미술관에서 그림패보름코지가 주관한 ‘4월미술전’ 개최.

A5[사건 내용] 4월 1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진행된 초감제는 정공철(놀이패 한라산 회원,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대표)의 집전으로 이루어졌다. 초감제는 제주도의 전통무속의 도입부분으로 추모제 행사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주도의 1만 8천 신과 4·3사건 때 희생된 영혼들을 청해 들이는 순서였다. 이어 제주4·3연구소 설립준비위가 주관한 ‘말할만한 사람은 문밖 죽어부러서’라는 부제의 슬라이드상영은 일제강점기 하 조천만세운동, 항일투쟁, 공출, 징용, 강제노역, 징병 등 일제강점기 제주사회상을 조명하고, 해방 직후부터 제주도과 한반도 상황을 보여주며 4·3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보여줬다. 이어서 우리노래연구회가 ‘그해 4월, 그리고...’ 4·3노래공연을 했고, 놀이패 한라산은 오후 7시부터 마당굿 ‘사월굿 한라산’을 공연했다. 이 공연은 ‘제주여민회 문화부’와 제주대 ‘노래패 소리얼’이 찬조하여 공연됐다. 한편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청년문학회는 세종미술관에서 ‘4·3민족문학제’를 개최하고 4·3관련 문학작품 토론회를 가졌고, 김명식 시인으로부터 ‘4·3문학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열었다. 청년문학회는 또, 4·3추모제가 개최되는 제주시민회관 앞마당에서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광목시전’을 개최했다. 그림패 보름코지는 세종미술관에서 ‘4월미술전’을 열어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민족미술 심포지엄’을 가졌다. 4월 2일,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굿 ‘사월

곳 한라산'이 제주시민회관에서 공연됐다. 또, 제주사회문제협의회가 주관한 '4·3강연회'에서는 김명식(아라리연구소장)의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4월 3일, 이 날은 '4·3추모 및 범도민 진상규명추구대회'가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미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주최로 오후 1시부터 '41주기 4·3항쟁 추모집회'를 열고 교문 밖에서 약 3시간 동안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전개했던 대학생들도 속속 제주시민회관으로 모여들었다. 대회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준비위원회의 이지훈의 사회로 고창훈(제주대 교수), 문무병(교사, 곳 연구가), 강찰일(한국사연구가), 김명식(시인), 김용해(제주도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약 1천 명이 참석한 이날 '4·3추모 및 범도민 진상규명추구대회'에서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는 첫째, 정부당국은 41년간 은폐돼왔던 4·3의 진상을 밝혀라. 이를 위해 정부보관자료(4·3당시 계엄일지, 경찰의 출전기록)를 공개하고 억울하게 학살당한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연좌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라! 둘째, 미국은 미군정하에서 시작된 4·3대학살의 책임을 지고 공개사죄 및 이에 대한 응분의 노력을 다하라! 셋째,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여 4·3진상을 조사하고 제주도민들의 요구인 4·3청문회를 개최하라! 넷째, 50만 도민들은 그 동안의 피해의식을 청산하고 진상규명은 우리들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4·3진상규명에 동참합시다! 등의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에서도 '4·3항쟁 41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4·3추모제 행사장에서 발표했다. 제민협의 주장은 첫째, 억울하게 죽은 제주민중들의 한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4·3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해야 할 것, 둘째,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당국은 최상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셋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전도민과 4천만 민족이 하나 되어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빈민족적·반민중적인 외세와 국내외 매관세력에 대하여 간단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 등이다.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도 4월 1일 '4·3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이 성명서에서 "4·3은 좌우익 대립이 아니라 폭압에 항거한 30만 도민의 의로운 투쟁이었다. 현 시기 또한 좌우익의 대립이 아닌 애국과 매국, 민주와 독재의 대결이다. 근자에 자행되는 4·3왜곡 은폐 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3의 진실을 밝히자고 4·3의 의미와 당시 상황을 규정했다. 이 성명서에서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는 우리의 주장을 밝혔는데 4·3진상규명하여 민족통일 앞당기자! 4·3 추모제 행사의 파괴, 탄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4월 제주 학살원흉 미국놈들 몰아내자! 5공비리, 학살원흉, 4·3진상 은폐 조작 노태우정권 끝장내자! 50만 도민은 4·3추모제에 적극 동참합시다!" 등이었다. 41주기 4·3추모제는 서귀포시에서도 행사가 있었는데, 놀이패한라산이 서귀포시민회관에서 4월 8일 마당굿 공연을 가졌고, 상미전시공

간에서는 그림·판화전이 열렸다. 한편 4·3추모제 기간 중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의 움직임도 극에 달했다. 초감제를 맡았던 수심방(굿을 집전하는 무당) 안사인 이 행사 이틀 전 잠적해버려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정공철 대표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4월 2일 추모강연을 할 예정이었던 소설가 현기영도 당국의 압력으로 제주도에 내려오지 못했다. 토론회 참가자 문무병 등도 매일 협박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민회관 앞에 주최측이 내걸었던 ‘근조 41주기 4·3추모제’라는 현수막은 1일 오후 <제주도 4·3사건 반공유족회> 명의의 ‘분열을 조작하는 4·3 논리 반대한다’라는 현수막으로 바뀌어졌다. 주최측은 이를 원래의 것으로 되돌렸으나 4월 3일 아침에는 <제주시 재향군인회> 명의의 ‘민족반역자 문의환을 타도하자’는 현수막으로 바뀌기도 했다. 또, 시내 곳곳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반공유족회, 재향군인회 명의의 ‘4·3을 바로 알고 외설에 속지말자’, ‘내 주장 소중하면 남의 의견도 소중하다’, ‘국민생활 위협하는 폭력시위 몰아내자’는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특히 반공유족회는 4·3 당시 뿌려졌다는 ‘면민에게 호소함’, ‘포고문’, ‘3·1사건 대책 지령서’ 등을 담은 ‘이것이 4·3의 실체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시내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공권력의 탄압도 이어졌다. 제주청년문학회가 전시한 시들이 4월 1일부터 제주시민회관 앞마당에 전시되었지만 이틀 뒤 경찰에 의해 철거됐으며, 청년문학회 대표 오승국은 작품 내용에 용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4월 26일 제주경찰서 대공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5월 20일까지 회원들이 줄줄이 소환도사 받았다. 기도 했다. 또, 마당굿 ‘4월굿 한라산’을 공연한 놀이패 한라산 단원 한경임, 김경훈, 장윤식은 제주경찰서 대공과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5월 9일 전 회원들에게 출두명령서가 발부되었다.

A6[관계 인물] 김명식, 강창일, 김석범, 고창훈, 문무병, 김용해, 정공철, 현기영, 안사인, 오승국, 김경훈, 한경임, 장윤식

A7[관계 단체]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사회연구소준비위원회, 제주교사협의회, 제주4·3연구소설립준비위원회, 그림패 부림코지, 제주YWCA대학부·청년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 후원-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A8[관계 자료]

「41주기 4·3추모제」 팜플렛

고대경, 1989 「4·3'진상 촉구하고 희생자 한 달래」 『제주신문』 1989년 4월 3일자

허영선, 1989 「4·3추모제' 단체에 뒤늦은 서리」 『제주신문』 1989년 6월 14일자

고대경, 1989 「4·3'진상 촉구하고 희생자 한 달래」 『제주신문』 1989년 6월 14일자

고종석, 「비극 뿌리' 드러낸 제주의 두 얼굴」 『한겨레신문』 1989년 4월 7일자

편집실, 1989 「4·3추모제」 『월간제주』 (5월호: 13-16)

제주4·3연구소, 1989 『4·3자료집』 (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3자주항쟁계승 및 구국선열추모제**

A2[사건 일시] 1989.04.03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9.04.03. 오후 1시 제주대민주광장에서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주관으로 '4·3자주항쟁계승 및 구국선열추모제' 개최함.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는 노태우, 부시 화형식을 갖고 마침. 오후 3시 가두진출 시도. 경찰의 봉쇄로 제주대 교수아파트 입구에서 격렬 시위. 오후 5시 자진해산

A5[사건 내용] 1989년 4월 3일 오후 1시,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는 제주대민주광장 및 옴팡밭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3자주항쟁계승 및 구국선열추모제'를 개최했다. '미제축출', '군부독재정권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인 학생들은 노태우·부시 화형식을 끝으로 학내시위를 마쳤다. 오후 3시 경, 학생들은 "4·3진상규명하여 민족통일 앞당기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날 오후 5시부터 제주시내 관덕정 광장에서 예정된 <41주기4·3추모제 준비위원회> 주관의 '4·3추모 및 진상규명촉구대회' 현장까지 가두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제주대 교수아파트 입구에서 봉쇄하자 "4·3추모행사 파괴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가까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오후 4시 45분 경 자진해산하고 버스 등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았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2명이 연행됐으나 훈방됐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A8[관계 자료]

"구국선열 추모 가두진출 봉쇄", 『제주신문』 1989년 4월 4일자(제주4·3해결01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1회 4·3 사적지순례 및 한길역사기행**

A2[사건 일시] 1989.08.14~1989.08.17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4.3연구소(소장 현기영)와 서울의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장 정운형 홍익대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4·3 사적지순례" 는 8월 14, 15일 이틀간 4.3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계·일반인·학생 등 약 25명의 연구자들이 참가, 조천중학원터, 만세동산, 그리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함덕국교터, 북촌국교, 와흘, 선흘, 물장울 등의 답사와 현지 주민의 증언 청취 등 빽빽한 일정 속에 강행군을 했다. 행선지가 말해주듯 참가자 들은 일제하 제주인들이 보여준 민족 해방 투쟁의 전통과 8.15 이 후 이른바 "해방 공간" 에서 도민들이 겪었던 역동적인 현장, 그리고 그 와중에서 무수히 죽어갔던 흔적들을 편린이나마 두루 보고 느끼면서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와흘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소개령이 내려지고 마을의 집들이 모두 불탄 뒤 굴을 찾아 숨었다가, 선무공작 때 자진해 해안가로 내려간 젊은이들이 무더기로 죽게되는" 마을의 아픈 역사를 듣기도 했다. 행사를 주관한 현기영씨(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뒤에 숨겨져있는 비극의 현장을 순례하고픈 소박한 마음에서 길을 나섰다" 고 행사 취지를 밝히고 "또한 4.3 논의의 대중화와 저변화를 도모하고 8.15를 맞아 현재의 분단상황을 아울러 조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항쟁으로서의 4.3의미" "항쟁을 압도할 만한 큰 수난" "4.3주체는 누구인가" 등을 주제로 4.3역사 복원을 모색하는 논쟁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매달 한차례씩 "역사의 현장" 을 찾아 나서는 "한길역사기행" 의 제41회 기획으로 4.3 현장답사를 위해 제주를 찾은 60여명의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입도, 17일까지 한라산, 마라도, 송악산 등을 돌아봤다. 15일 한라산 등반을 끝내고 돌아와 자정이 가깝도록 계속 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김익렬-김달삼의 이른바"4.28 평화협상", 4.3을 전후한 제주 사회의 분위기와 사상, 4.3과 미국의 관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벌이면서 4.3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는 "책상에서 관념적으로 이뤄지는 역사를 극복, 현장 답사를 통해 가슴으로 느끼고 민족사의 현장을 실천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고 밝히고 "4.3연구는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초보적 단계이긴 하지만, 분단 조국의 모순 속에서 통일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현대 사회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연구의 활성화는 시대적 당위" 라고 말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광복절 맞아 제주 4·3 연구소, 한길사서 마련 4·3 유적지 순례", 『제주신문』 1989년 8월 16일자(제주4·3해결01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3 42주기 4월제

A2[사건 일시] 1990.04.01~1990.04.0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0.04.01. 제주교대 교정에서 '4·3추모제' 개최. / 가톨릭회관에서 <4·3연구소> 주관의 '민족사 속에서의 4·3'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 개최. / 제주청년문학회 주관의 '4·3문학이야기한마당' 개최.

1990.04.02. 제주교대총학생회 '4·3민중항쟁정신계승 및 반민중 야합분쇄투쟁결의대회' 개최

1990.04.03. 제총협 주관의 '4·3진상규명과 민자당분쇄를 위한 청년학도결의대회'가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됐고, 집회 후 교문 밖 진출 시도. / 전교조제주지부 '온나라 걷기대회'의 일환으로 한라산 등반 및 정상에서 추모제를 계획했으나 악천후로 취소.

1990.04.03-05. 제주청년문학회가 주관한 '4·3시화전' 개최.

1990.04.05. 우리노래연구회, 노래모임 숨비소리가 공동주관한 '4월 노래발표회' 공연

1990.04.06-07. 놀이패 한라산 마당극 '사월굿 백조일손' 공연

1990.04.08. 8·15범민족축전 참가동지회,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추모등반대회 개최

A5[사건 내용] '4·3 42주기 4월제'는 1990년 4월 1일 제주교육대학 교정에서 개최된 '42주기 4·3추모제'의 '초감제'(정공철 제문협대표 집전)로 시작되었다. 이어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제안서」와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4·3추모제'는 2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집회에서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는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제안서」를 통해 '4·3정사편찬을 위한 범도민연구위원회'와 '4·3특별법 제정위원회' 발족을 제안하면서 "4·3정사는 연구위원회가 증언과 분단시대의 시각으로 쓰여져야 하고 4·3특별법은 범도민적인 4·3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2주기 4월제는 경찰과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방해와 탄압 속에서 진행됐다. 공개적인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4·3추모제 장소를 제주교육대학 교정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공동준비위원회는 '제주도민의 연례행사가 되어야 할 4·3추모제를 올리기 위한 장소가 옥내외를 막론하고 장소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 대학교정으로 옮겨 치러야 하는 현실은 4·3영령들의 진혼을 가로막는 세력이 엄존해 있음을 실감케 한다.'고 규탄했다. 공준위는 4월 1일 4·3추모제에서 발표한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자랑스런 4·3항쟁의 후예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절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상설적인 범도민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연좌제폐지,

4·3진상규명, 4·3특별법 제정, 민자당 해체, 미국의 4·3진상자료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4월제공동준비위원회는 4월제 기간동안 도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검소한 복장에 검은 리본 착용, 4·3유족들에게 행사참여 권유, 4·3에 대한 체험자의 증언과 기록, 경건하고 질서 있는 참여 부탁” 등이었다. 4월 1일 ‘42주기 4·3추모제’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와 집회가 이어졌다. 4월 1일 하오3시 제주카톨릭회관 지하강당에서는 <제주4·3연구소> 주관으로 ‘42주기 4·3추모 학술세미나’ 「민족사속에서의 4·3」이 열렸다. 조성윤교수(제주대 사회학)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창훈(제주대 행정학) 「민족사 속에서의 4·3의 의미」, 안종철(전남대 정외과) 「점령공간에서의 타지역 민중운동-전남지역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영철(자유기고가) 「4·3항쟁과 오늘의 현실」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학술세미나에 이어 제주청년문학회 주관의 ‘4·3문학간담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이 간담회에서는 청년문학회 회원 함승보의 「4·3문학의 흐름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현길언, 오성찬, 문무병, 한림화, 임헌영 등 작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4월 2일 제주교대총학생회는 정오에 1백여 명이 야외마당에 모여 4·3항쟁에 대한 주제 강연과 ‘4·3민중항쟁 정신계승 및 반민중 야합분쇄투쟁결의대회’ 개최했다. 또, 4월 3일 제주대학교에서는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가 주관한 ‘4·3진상규명과 민자당분쇄를 위한 청년학도결의대회’가 열렸다. 한편 제주대학생회, 제주전문대학생회, 제주간호전문대학생회는 이날 4·3추모제를 열었다 한편 4월 3일 전교조가 주관하는 ‘참교육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대회 한라산출정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정된 성판악로의 등반이 폭우와 안개 등의 기상악화로 힘들게 되자 주최 측은 산천단에서 한라산출정식을 갖기로 하고 성판악을 출발, 산천단으로 행진하다 출발 5분 만에 전경과 사복경찰에 의해 전교조기본대원 5명과 제주도지부조합원 등 22명 전원이 연행됐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청년문학회의 공동창작 4·3시화전 「용강마을 그 피어린 세월」이 세종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960행의 장시인 이 작품은 용강마을을 소재로 1948년 가을 중산간 부락이 군경토벌대에 의해 소개, 방화, 집단학살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4월 5일 우리노래연구회, 노래패 숨비소리가 공동주관한 ‘4월 노래발표회’ 「잠들지 않는 남도」가 하늘극장에서 공연됐다. 또,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동안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 ‘사월굿 백조 일손’이 하늘극장에서 공연됐다. <8·15범민족축전 참가동지회>와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는 4월 8일 추모등반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국의 대학가에서도 4·3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으며, 4월 1일 하오4시 서울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에서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주최로 ‘4·3추모제’가 열렸다. 또 4월 3일 예술극장 마당에서는 제사협, 민족문학작가회의 청년문학위원회 공동주최로 「4·3민족문학제」가 개최되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4·3연구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전교조 제주지부, 노래모임 숨비소리, 8·15범민족축전 참가동지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 재경제주사회문제협의회) 후원-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A8[관계 자료]

『한라일보』 1990년 3월 30일자

"「4·3 추모제」 전국서 열려", 『제주신문』 1990년 4월 1일자(제주4·3해결015)

『한겨레신문』 1990년 4월 3일자

『제주신문』 1990년 4월 8일자

강덕환, 1990 「4·3은 언제까지 저질러진 역사로 방치할 것인가」 『월간제주』 (5월호: 23-2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원동마을 4·3무흔굿

A2[사건 일시] 1990.09.22~1990.09.24

A3[사건 배경] .제주4·3사건당시 토벌대는 1948년 11월 13일, 16가호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애월읍 원동마을을 포위하고 마을주민들과 마침 원동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무차별 체포했다. 그리고 체포한 50~60명을 마을 중심인 속칭 ‘주막번데기’에 모아 놓고 집단총살하고 휘발유를 뿌려 불질러버렸다. 그 후 원동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어린이들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등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살아남은 유족들이 1990년 9월 22일부터 이틀 간 옛 원동마을 터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무흔굿’을 준비했다. 이때 유족들은 유인물을 통해 “무자년 음력 10월 13일 군인들에게 희생당하고 어린아이들 몇 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해변가나 고아원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순식간에 부모를 비명에 보낸 아이들은 냉대와 굶주림 속에서 모진 목숨을 부지하며 원통함과 그리운 마음을 가슴속에 꼭꼭 묻고 이제 어언 40대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나 깨나 비명에 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드리지 못함을 자식 된 도리로서 항상 뼈저리게 안타까워 몸부림치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돌아가신 분들의 영전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자 위령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위령제를 지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이때 유족들은 유인물을 통해 위령제를 지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몇 년 전 확인한 조상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법정투쟁을 벌일 것을 공표했다. 이는 조상들

의 토지를 일부 사람들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빌미로 명의 이전했다며 제기한 것이었다. 유족들은 몇 년 소송으로 일부 조상들의 터전을 되찾기도 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제주4·3유적 I』, 도서출판 각; 660-662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3제주민중항쟁 43주기 사월제**

A2[사건 일시] 1991.04.01~1991.04.1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1.04.02. 제2회 4·3학술세미나 「민족사 속에서의 제주민중항쟁」(제주4·3연구소)

1991.04.03. 43주기 4·3추모제(공준위)

1991.04.05. 4·3유적지순례(공준위)

1991.04.06~07. 마당굿 「헛묘-시신도 어성 헛산이라」(놀이패 한라산)

1991.04.01~10. 「4월 시화전」(제주지역문학유관단체 대표자회의)

A5[사건 내용] 4월 3일의 「43주기 4·3추모제」는 경찰의 원천봉쇄에 따라 장소를 제주 시내 중앙성당으로 옮겨 「43주기 4·3추모제원천봉쇄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는 “4·3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밝히고 “추모제 행사는 5일 개최되는 유적지순례와 함께 치를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일부 시민학생들은 원천봉쇄에 항의하며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43주기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

A8[관계 자료]

『제민일보』 1991년 3월 29일자

『한라일보』 1991년 4월 4일자

A9[관련 사건]

A1[사건명] **4·3유적지 순례**

A2[사건 일시] 1991.07.27~1991.07.2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제주4·3연구소는 1991년 7월 27, 28일 양일간 다섯번째 「4·3유적지 순례」를 개최했다. 이 순례는 일제하 민족해방을 위해 1932년 잠녀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구좌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순례를 통해 이 지역의 항일운동과 1948년 4·3항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제주4·3연구소

A8[관계 자료]

『제주신문』 1991년 7월 26일자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4·3 44주기 ‘사월제’

A2[사건 일시] 1992.04.01~1992.04.08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4·3제주민중항쟁 44주기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는 4월1일부터 5일까지를 「4·3영령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추모제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4월2일 : 「4·3집체극」(제주대 단대문화패협의회, 제주대체육관), 4월3일 : 「4·3추모제」(공동준비위) 1부 분향과 열림굿 2부 추모노래공연(노래패섬하나산하나) 3부 범도민진상규명촉구대회, 4월4일 : 「4·3슬라이드상영」(4·3연구소, 가톨릭회관), 4월5일 : 「4·3유적지순례」(공동준비위, 안덕면 동광리 일대), 4월6~8일 : 「사월청년토론회」‘해방직후 제주지역 청년운동의 흐름 고찰과 현대사적 의미’(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건설준비위원회). 위와 같은 계획 속에 44주기 4월제는 준비되었다. 4월 3일의 추모대회는 각 대학과 탐동에서 개최됐다. 4월 3일 하오4시30분 제주시 탐동매립광장에서 시민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4·3추모대회’에서 대회참석자들은 “4·3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도민명예회복을 위해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중앙로를 거쳐 관덕정까지 평화대행진을 한 후 마무리 집회를 갖고 자진해산했다. 또 민주당제주시지구당과 제주대총학생회는 이날 각각 성명을 발표, 4·3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하오2시 제주대학생 7백여 명은 제주대 민주광장에서 「민주정부수립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44주기 4·3자주항쟁 계승대회」를 마친 후 5·16도로까지 행진하며 4·3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제주교대·제주전문대·한라전문대 학생들도 이날 교내에서 ‘4·3항쟁계승대회’

를 가졌다. 학생들의 집회는 4일에도 이어졌다.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들은 4월4일 제주시 중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진출을 시도, 진압경찰과 마찰이 예상됐으나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인도를 따라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 2백여 명은 이날 하오 5시20분께 중앙성당 앞 도로를 점거, 「4·3제주항쟁 계승 및 남북합의서 이행·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를 15분 동안 약식으로 가졌다. 학생들은 이어 곧바로 가두진출을 시도, 구 고려병원 앞길에서 진압경찰과 20여분동안 맞섰으나 인도평화시위 요구가 허용됨에 따라 중앙로를 경유 광양로터리까지 평화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다량쉬굴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공개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제주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구성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단순히 좌익세력의 자살로 규정짓는 경찰의 발표는 왜곡된 것”이라며 전면적인 공개 재수사를 경찰 측에 촉구 했다. 한편 추모기간중인 4월4일 홍익대 세미나실에서도 「한국현대사와 제주민중항쟁」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역사문제연구소와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제주4·3연구소가 주최하고 학술단체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운형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광식씨의 사회로 박찬식·강정구·서중석·박명림(지정토론), 고창훈·김명식·허상수·이완범(자유토론)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일제하 제주도의 민족해방운동과 운동조직 : 염인호(구로역사연구소 연구원,) 미·일의 태평양전쟁 전략과 제주도 : 강창일(배재대 교수), 미군정기의 중앙정국과 제주도 : 심지연(경남대 교수), 미군정하 제주도민의 동향과 4·3 : 김창후(제주4·3연구소 사무국장)”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4·3제주민중항쟁 44주기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건), 제주4·3연구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여민회)

A8[관계 자료]

"제주·서울서 「4·3」 추모행사 활발", 『제주신문』 1992년 3월 29일자(제주4·3해결023)

"「4·3추모제공준위」 정부·미·UN에 메시지", 『제주신문』 1992년 4월 1일자(제주4·3해결024)

"「4·3」 진상규명·배상 촉구", 『제주신문』 1992년 4월 4일자(제주4·3해결025)

"「4·3」 44周 평화적 가두시위", 『제주신문』 1992년 4월 5일자(제주4·3해결026)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다량취굴 4·3희생자 유해발굴**

A2[사건 일시] 1992.04.01~1992.05.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1.12.00. 제주4·3연구소에 의해 다량취굴 4·3희생자 유해 발굴

1992.04.01. 다량취굴 4·3희생자 유해 발굴 공개

1992.04.21. 「다량취굴 4·3희생자 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A5[사건 내용] 1992년 4월 1일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산간에 위치한 다량취굴에서 4·3사건 당시 희생된 희생자의 유골 11구가 공개되었다. 이 유골은 4·3사건 당시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제주4·3연구소> 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었으나, 당시 엄중한 사회현실을 감안 공개치 않다가 전문학자 및 언론사, 의사, 법률가들의 자문을 얻어 4월 1일 공개한 것이다. 유해 공개는 당시 충격적인 파장을 몰고 오면서 4·3 희생의 무모함과 참혹함을 세상에 알렸다. 특히 현장 공개 후 채정옥씨 등에 의해 희생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그 충격은 더했다. 즉, 강태용(남, 34세), 박봉관(남, 27세), 고순환(남, 27세), 고순경(남, 25세), 고태원(남, 25세), 고두만(남, 21세), 함명립(남, 21세), 김진생(여, 51세), 부성만(여, 24세), 이성란(여, 24세), 이재수(남, 9세) 등의 희생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자는 물론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무분별한 희생이었다. 더군다나 굴 속 현장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향아리, 가마솥, 질그릇, 물허벅, 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 연장류들이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피난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증언 등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파헤쳐졌다. 즉, 1948년 12월 18일, 하도리, 종달리 주민 11명이 피신해 살다가 굴이 발각되어 집단희생 당한 것이었다. 이 날 군경민 합동 토벌대는 다량취오름 일대를 수색하다가 이 굴을 발견했다. 토벌대는 수류탄 등을 굴속에 던지며 나올 것을 종용했으나, 나가도 죽을 것을 우려한 주민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었고 굴 입구를 봉쇄했고, 굴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사되어 하나 둘 죽어갔다. 한 때 이들과 같이 다량취굴에 은신해 있었던 채정옥(남, 03년 81세)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굴속에 들어가 흩어진 시신들을 나란히 눕혔다. 굴 안에는 그때까지도 연기가 가득 차있었다. 희생자들은 고통을 참지 못한 듯 돌틈이나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죽어 있었고 코나 귀로 피가 나 있는 시신도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 종달리 출신으로 당시 민보단 간부를 역임했던故오지봉 씨는 생전에 “그날 작전은 함덕에 주둔했던 대대본부가 지휘한 군경민 합동작전이었다. 다량취굴을 발견, 군경은 처음에 수류탄을 던졌으나 그래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입구에서 짚에다 불을 지피 질식사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도한 자료에서 채정옥 씨는 “희생자들이 왜 그 굴속

에 있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종달리는 47년 6·6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4·3사건이 나자 더욱 군경과 서청의 주목을 받아 일부 젊은이들이 산으로 피신하게 됐다.”고 밝히고 굴 안에 총기류는 없었고 희생자들이 무장대도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들은 민보단원들로부터 가족들의 희생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당시의 상황은 사체를 수습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세월이 흐르다보니 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일부 유족들은 음력 11월 18일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전날인 음력 11월 17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희생자 유해 발굴 및 공개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1992년 4월 21일, 제주도내 사회·종교·재야단체는 「다랑쉬굴 4·3희생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고창훈 제주대학교수(제주 4·3연구소장) 등 공동대표 8명은 기자회견문에서 “4·3은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바르게 규명돼야할 구체적 현실이다. 다랑쉬굴 4·3희생자에 대한 범도민적 추도식,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도의회의 노력, 4·3특별법제정, 4·3을 포함한 현대사 진실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공개, 미국정부의 당시작전 상황과 자료공개”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공개 45일 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변해 바다에 뿌려졌다. 이날 새벽 다랑쉬굴 현장에서는 구좌읍과 유족들의 주관 아래 유해인도와 조출한 장례식이 거행됐다. 장례식 직후인 새벽 7시 현장을 떠난 유해는 제주시 화장장으로 옮겨져 화장된 후, 다시 희생자들의 고향인 종달리 앞바다 등지에 뿌려졌다. 이는 유해 발굴의 파장을 차단하려는 정보기관과 행정당국이 서둘러 유족들을 회유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또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를 다시 커다란 돌로 봉쇄하고 말았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다랑쉬굴 4·3희생자 대책위원회」(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4·3연구소, 정의구현사제단, 민주당제주시지구당, 제주대학교박물관)

A8[관계 자료]

『제민일보』 1992년 4월 4일자

"「다랑쉬굴 4·3희생자 대책위」결성 진실규명자료공개 촉구", 『제주신문』 1992년 4월 22일자(제주4·3해결028)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제주4·3유적 I』(제주4·3해결029)

A9[관련 사건]

제주4·3사건

14. 주민운동

지역 주민운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을 개발하도록 주민들이 정부나 자치단체, 투자 자본가 등의 정책 또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압력을 가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이다.

1955년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제주 지역의 주민 운동은 결코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4·3 당시 좌·우익 어느 한쪽에 섰다가 가족들이 희생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은 곧 공권력의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가족들이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것을 꺼렸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가가 인정하고 주도하는 운동에는 적극 참여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따지는 사회운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지형이 변화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주민운동의 발생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197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소외된 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이 나타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의 주민운동은 관광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 주민운동 가운데는 1983년 안덕 감산리의 이른바 ‘코오롱 사건’과 1987년의 안덕 서광리의 수해 보상 요구 운동 등이 있었지만,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소규모 운동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주민운동이 봇물 터지듯 발생하였으며, 조직 규모나 저항의 양상도 점차 달라졌다.

제주지역에서는 1988년부터 시작된 탐동매립반대운동, 1988년의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운동, 1991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운동, 그리고 여러 마을에서 잇달아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운동,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등 수많은 주민운동이 발생하였다.

A1[사건명] **조천 유원지조성사업 반대운동**

A2[사건 일시] 1988.07.18~000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8.05.00. 북제주군 (주)해양개발에 조천유원지조성사업 허가

1988.07.18. 조천읍 신촌리 주민총회를 열고 유원지조성사업 반대 결정

A5[사건 내용] 북제주군이 1988년 5월 (주)해양개발 측에 허가한 조천유원지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조천읍 신촌리 주민1백20여명은 7월 18일 하오9시 30분 신촌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조천유원지조성 개발사업이 현재 계획되고있는 내용대로 추진된다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들은 이 유원지조성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개발소득이 지역주민에 환원되기능커녕 외부로 유출될 뿐이며 개발에 따른 사회문제와 퇴폐풍조만연 등을 우려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조천유원지 지역에 이익없다”, 『제주신문』 1988년 7월 20일자(제주주민001)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서귀포시 대포동 내 고장 지키기 주민운동**

A2[사건 일시] 1989.08.23-000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9.08.23. <서귀포시대포동 내땅지키기 대책위원회> 결성(위원장 이종태). 이날 이종태 위원장 등 위원 7명 서귀포시 방문, ‘중문도시계획유원지(2단계) 조성사업 토지수매에 따른 동부지역주민의 소리’라는 호소문 전달

1989.11.25. ‘내 고장 지키기 주민 다짐 결의대회’ 개최

A5[사건 내용] 1989년 8월 23일 상오, <서귀포시대포동 내땅지키기 대책위원회> 이종태 위원장 등 위원 7명은 서귀포시를 방문, ‘중문도시계획유원지(2단계) 조성사업 토지수매에 따른 동부지역주민의 소리’ 라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도록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 호소문에서 "한국 관광 공사가 이번에 중문 도시계획 유원지조성사업을 위해 사들이려는 중문 대포동 일대 3백52필지 15만 3천여 평의 땅에는 논과 감귤과수원, 비닐하우스 등이 10만여 평에 이르러 연간 24억여 원의 수입을 올려주고 있다"고 전제, "이처럼 비옥한 땅에다 골프장을 시

설, 이곳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매대상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대포동 전주민은 땅이 팔리게 되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관광공사 측에 개발사업을 축소변경하거나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수용상 당면적의 땅을 부락에서부터 2~3km 안에 대토로 확보해줄 것 △수용예상 토지 매입가격을 실거래수준의 두 배로 해주고 수용토지에서 생산되는 수익을 앞으로 30년간 산출, 일시불로 보상해 줌은 물론 이 일대 1종공동어장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1989년 11월 25일 서귀포시 대포동 주민들은 남녀노소 300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대포동 현지에서 한국관광공사제주개발본부 앞마당까지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개발본부 마당에 이른 주민들은 '내 고장 지키기 주민 다짐 결의대회'를 열고 "주민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관광공사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다. 정문에서 대치를 하는 사이 주민들의 성화에 쫓기듯 밀려나온 임주환 제주개발본부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며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땅 잃고 쫓겨날 수 없다' 서귀포 대포동 주민 내땅지키기 대책위 유원지 조성 반대”, 『제주신문』 1989년 8월 24일자(제주주민002)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0 『제주의 소리』 (신년호: 45)

A9[관련 사건]

A1[사건명] **금악리 한라레저골프장 건설 반대투쟁**

A2[사건 일시] 1990.12.30~1991.01.3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89.12.30. (주)한라레저관광 제주도로부터 골프장 건설인가 받음
 1990.05.00. '의견조회'라는 형식으로 속칭 '알곶' 일대 개발계획이 첨부된 문서 금악리에 대두됨.
 1990.07.00. '협의사항'이라는 문서가 나돌면서 골프장 개발 소문이 나뉨.
 1990.07.31. 금악청년회에서 <검은오름>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존경하는 금악리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골프장건설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
 1990.08.03. 금악리 마을총회에서 금악공동목장 매각과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측으로

부터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1990.08.10. 금악청년회 <검은오름>2호 발간.

1990.10.01. 금악리청년회(회장 양영근) 금악리 일대에 골프장건설반대 대자보 부착

1990.10.00. (주)한라레저골프장 건설반대 금악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근선) 발족

1990.10.08. 해당지역 묘주, 금악리·상명리 청년들 제주도청 항의방문

1990.10.26. 제주도청과 (주)한라레저에 공개질의서 제출

1990.11.25. 금악리 주민총회. (주)한라레저골프장 건설반대 금악주민대책위원회 집행부
개선, 위원장 양영근 선출

1990.12.10. 금악리 주민 40여명 제주도청 항의방문

1990.12.24. 금악리 주민 150여명이 안덕면 동광리에서 골프장 건설현장까지 도보시위

1990.12.25. <골프장건설 결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양영근) 소속 주민 200여명
이 한라골프장 건설 현장사무소를 점거하고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1991.01.03. 주민대표, 행정관청, 사업자 간 3자회의가 한림읍사무소에서 열림

1991.01.11. 주민대표, 행정관청, 사업자 간 3자회의가 한림읍사무소에서 재차 열림

1991.01.30. 경찰 현장사무소 급습 강제 해산

A5[사건 내용] 1989년 12월 30일, (주)한라레저관광은 제주도로부터 골프장 건설인가를 받았다. 애초에는 안덕면 광평리 산 150번지 일대 30여만 평의 부지에 건설하기로 계획했으나, 인가 당시에는 이를 확대해 한림읍 금악리 산 41번지 일대 7만여 평을 추가함으로써 주민반발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1990년 5월 중순, ‘의견조화’라는 형식으로 속칭 ‘알곶’ 일대 개발계획이 첨부된 문서가 금악리에 대두되고, 이어 7월 중순에는 ‘협의사항’이라는 문서가 나돌면서 골프장 개발 소문이 금악리 일대에 나돌기 시작했다. 이를 간파한 금악리청년회에서는 7월 31일 <검은오름>이라는 소식지에 ‘존경하는 금악리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골프장건설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금악공동목장 매각과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측은 금악리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1990년 8월 3일 열린 금악리 마을총회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본격적인 주민투쟁이 벌어졌다. 10월 들어 금악리청년회(회장 양영근)가 마을 일대에 골프장건설반대 대자보를 부착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대자보에는 “애초 부지매입 목적은 골프장 건설이 아닌 축산용이기 때문에 축산업에 부지를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의 활동에 마을 주민들이 점점 골프장 건설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여 곧 <(주)한라레저골프장 건설반대 금악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근선)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옆 마을인 한림읍 상명리와 해당 토지 내에 조상의 묘가 있는 묘주에게도 이어졌다. 10월 8일 해당지역 묘주, 금악리·상명리 청년들이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자료공개’ 등을 요구하고 골프장 건설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나 관계당국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들은 10월 26일, △주민동의 없는 골프장건설 반대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업승인조건서 공개 △공개토론회 개최 △묘주에게 행해지는 회유와 협박 중단 △공사중단 등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제주도청과 (주)한라레저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대책은 여전했다. 제주도 당국은 토론회는 자기들과는 무관하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11월 25일 금악리 주민들은 총회를 갖고 <(주)한라레저골프장 건설반대 금악주민대책위원회> 집행부를 개선하고 위원장에 청년회장 양영근을 선출했다. 새로운 집행부는 주민 40여명을 이끌고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 요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전경을 동원해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주민들은 12월 24일 150여명이 안덕면 동광리에서 골프장 건설현장까지 도보시위를 전개했다. 그리고 다음날 <골프장건설 결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양영근) 소속 주민 200여명이 한라골프장 건설 현장사무소를 점거하고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했다. 점거농성 11일째인 1991년 1월 3일 사태해결을 위한 3자회의가 주민대책위원회 요청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행정당국은 사업자 측과 유착이 없었음을 강변했고, 사업자 측은 주민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사중단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철야농성 중이던 주민들이 3시간 동안 이루어진 회담시간 내내 한림읍사무소 광장에서 ‘골프장건설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지만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1월 11일 주민대표, 행정관청, 사업자 간 3자회담이 한림읍사무소에서 재차 열렸다. 이날 주민대표는 (주)한라레저 측에 △골프장 승인조건 및 관리규정위배 △산림훼손 및 골프장 건설 착공 △상수원 근원지를 도외시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제반 내용을 상기시키며 불법공사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당국은 사업자 측과 유착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주)한라레저는 불이익과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해 당사자간 협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1월 30일, 경찰이 주민들이 철야농성 중이던 현장사무소를 급습하여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날 7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농성현장으로 가던 주민들이 서부산업도로상의 동광리와 이시돌목장을 잇는 로터리에 진을 치고 있던 전경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 당했던 것이다. 경찰은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연행했는데 제주경찰서에 19명, 서귀포경찰서에 107명이 연행됐다. 그들 중 금악리 골프장반대대책 위원장 양영근과 총무 김충의 등 주민 수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주민들은 그날 저녁 모두 ‘앞으로 데모를 하지 않는다’라는 시말서를 쓰고 훈방조치 되었지만, 연행과정에서 뇌진탕 증세로 강순아(여, 56세, 한림읍 금악리 1099번지)씨가 한국병원에 입원하는 피해를 당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5월 9일 양영근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총무 김충의 등 5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6[관계 인물] 양영근, 김충의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문복희, 1991 「당국과 (주)한라레저관광, ‘관경유착의 음습한 덩어리를 움켜쥐고 있다」 『월간제주』 (2월호: 32-38)

양동윤, 1991 「꿈과 희망의 검은 오름에 뺨치는 시커먼 마수」 『월간제주』 (9월호: 25-29)

편집부, 1991 「내 몸 하나 희생해서 마을주민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월간제주』 (3월호: 70-71)

“금악골프장 농성 양씨 등 2명 집유”, 『제주신문』 1991년 5월 10일자(제주주민007)

A9[관련 사건]

A1[사건명] **북촌리 신성골프장 건설 반대투쟁**

A2[사건 일시] 1991.06.04~1992.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검토-날짜가 뒤섞임)

1990.05.01. 북촌리 리민총회. 대부분의 참석 주민들 (주)신성 측의 사업설명회를 듣기도 전에 대부분 퇴장. 남아있는 주민들만 찬반투표(찬성 2명, 반대 33명)

1990.06.28. 제주도 사업승인

1990.09.00. 골프장 건설의 당위성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을 서술한 ‘마을을 걱정하는 청년 일동’이라는 서신이 나뉘

1991.06.04. 리민총회, 골프장건설 반대 결의. <골프장유치반대투쟁위원회> 결성(위원장 이재후)

1991.06.10. ‘신성골프장 건설과 관련, 북촌리청년회(회장 이정국) 회원 32명이 골프장 건설 찬성’ 취지의 진정서 제주도에 제출(제주지역 일간지 6.11 보도)

1991.06.12. 대책위 위원장 등 10여명 제주도청 방문, 도지사 면담 요구. 도는 거부.

1991.06.14. 도지사 명의의 협조요청서한 대책위원장에게 발송

1991.06.18. 청년회의 공식사과문을 마을 게시판에 부착했으나 함덕지서 순경이 뜯어내다 적발

1991.06.25. 제주도가 골프장 착공연장시한을 1년 연장한 날, 북촌리민 150명 마을복지회관에서 주민결의대회를 갖고 제주도 당국에 항의방문 시도. 경찰에 의해 좌절

1991.07.19. 임시리민총회 개최. 이장, 개발위원,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 찬성 199, 반대

8, 기권 17, 무효 1표로 가결.

1991.12.20. (주)신성 사업착공신고서 접수

1991.12.23. 북촌리민 ‘(주)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서 제주도의회 제출

1991.01.08. 청원서 제주도의회 회부 결정

1991.06.25. 함덕지서 앞 도로에서 골프장허가취소, 도지사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농성

1992.01.29. 제주도의회 특위 구성

1992.03.09. (주)신성골프장 설치반대청원 주민대표 김상종 제주도의회 출석 “사업자측이 주장하는 골프장 유치 찬성동의자 152세대가 정당한 것인지를 밝혀주면 마을 화합 차원에서 과반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그만큼 주민동의서에 의혹이 많이 제기됨.

1992.04.14. 제주도의회에서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특별위원회 개최.

A5[사건 내용] (주)신성의 북촌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 북촌리 주민들은 1991년 6월 4일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총회를 갖고 골프장건설에 따른 표결을 벌여 2백97명이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그런데 6월 8일 청년회장 이정국씨 등 31명이 골프장 착공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도에 제출한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주민들은 “업자측이 마을내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 마을 청년회장 등 주민 31명은 6월 8일 제주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골프장건설을 반대한 마을총회의 결의는 부당하다. 다수의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원하고 있으니 도에서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 마을 이장 등 10여명의 주민들은 6월 12일 주민총회회의록을 도에 제출하는 한편 진정서의 내용이 마을 주민전체의 의사를 무시한 소수 주민들의 왜곡된 처사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마을주민 및 청년 회원들은 정식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청년회장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해 청년회장의 해명과 청년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시설업자인 신성측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주민동의를 받기위해 주민들을 갈라놓는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진정사건의 파문이 거세지자 북촌리장 및 개발위원들은 6월 12일 하오8시 리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골프장건설을 반대한 주민총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마을주민 간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6월 14일 도지사 명의로 대책위원장에게 협조요청 서한이 전달됐는데, 그 내용은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지역에 환경오염, 농약피해 등 우려하는 바는 이해되나 골프장 시설이 될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확보 등 본도가 세계적인 국제관광지를 지향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제주관광의 실태와 전망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 사용 농약문제 -자연환

경 보전과 골프장 시설 -토지이용 계획과 골프장 시설 -수질오염과 지하수고갈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 것이었다. 한편 마을청년들은 6월 16일 청년회 전체회의를 소집, 6월 8일 진정서내용이 사실과 다름은 물론 청년회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청년회장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청년회장 불신임안을 가결, 신임 청년회장으로 김상종씨(31)를 선출했다. 신임 김회장은 “지난 6월8일 신성골프장 유치에 지지하며 도지사 앞으로 보낸 진정서의 날조 건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 진정서가 몇몇 사람에게 의해 날조된 서류임을 밝혀내고 「새로이 출범한 임원진 및 청년회원들은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대해 이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백배 사죄한다」는 사과의 글을 6월17일 저녁 마을게시판에 게시했다. 그런데 이 사과의 글을 함덕지서 소속 정모순경이 6월18일 상오7시30분께 북촌리 순찰 중 1부를 뜯어내다 주민들에게 발각됐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주민 김모씨(50)에 따르면 이날 아침 밭에 나가다 게시물을 떼는 광경을 목격하고 “왜 게시물을 떼는 것이냐?”고 묻자 정순경이 “한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어서 조사하려고 떼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씨가 “청년회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마을 주민들이 듣고 나와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시인서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마을청년회의 결의에 따라 게시한 게시물을 경찰관이 뜯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시물을 뜯어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함덕지서는 “주민신고를 받고 조사하기 위해서 뜯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6월 25일 1백50여명의 주민들이 함덕지서 앞 도로에서 “골프장허가취소”, “도지사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항의농성을 벌였다. 북촌리 주민들은 이날 상오9시 리사무소에서 “도지사는 신성골프장 불법승인을 즉각 철회하라!”는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도보로 함덕리까지 항의시위를 벌인 후 버스 편을 이용해 도청을 방문하고 도지사와 면담을 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함덕지서 앞에서 좌석버스 3대에 나눠 타고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결의문에서 리민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에서 두차례 건설허가 연기를 자행하는 등 사업자측인 (주)신성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찰서는 대책위원회 회장인 이재후씨와 북촌리 잠수회장 이성인씨등 2명을 9월 18일 연행, 조사를 벌인 뒤 이날 하오 일반교통방해혐의로 전격구속 했다. 이유는 3개월 전 마을총회를 통해 결의한 ‘농로차단’을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북촌리 주민 50여명은 9월 18일 하오7시30분께부터 제주경찰서 현관에서 “마을전체가 결의한 3개월 전의 일을 문제삼아 이씨 등을 구속한 것은 특별법 제정반대 등에 대한 탄압”이라고 전제하고 이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9월 19일 새벽1시30분께 경찰에 의해 강제귀가 조치되는데 이어 19일에도 제주경찰서를 찾아 농성을 벌였다. 한편 (주)신성이 골프장건설과 관련, 제주도의 골프장 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승

소하자 북촌리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김상종 북촌리 청년회장 등 마을주민 2백61명은 12월23일 제주도에 탄원서를 내고 “(주)신성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1백52명의 주민동의서는 변칙수법으로, 이권개입에 나선 주민 몇 사람을 하수인으로 포섭, 야음을 틈타 개인별로 동의서를 비합법적으로 받은 왜곡날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일개 기업인 신성이 도당국은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한 행정심판 등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도당국이 먼저 반성해 신성의 이러한 태도에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골프장 착공허가를 내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A6[관계 인물] 이재후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문복희, 1991 「골프장건설과 마을공동체 파괴음모에 성난 북촌주민들」 『월간제주』 (9월호: 38-43)

강덕환, 1992 「신성골프장 착공승인 ‘행정특혜’ 규정」 『월간제주』 (2월호: 34)

편집실, 1992 「제주는 이런 형편」 『월간제주』 (6월호: 53-55)

“「골프장착공 진정서」 놓고 반발 북촌리주민 청년회 해명 요구등 강력 대응”, 『제주신문』 1991년 6월 14일자(제주주민011)

“경찰관계시물 뜯어 말썽 북촌골프장 관련 청년회 사과문”, 『제주신문』 1991년 6월 19일자(제주주민012)

“골프장취소 요구 북촌주민등 농성”, 『제주신문』 1991년 6월 26일자(제주주민013)

“특별법반대 지역대표등 2명 대회하루전 전격구속...큰반발 북촌리주민 50여명, 경찰서 농성”, 『제주신문』 1991년 9월 20일자(제주주민014)

“신성골프장 새불씨 조짐 "행정심판 부당하다" 반발 북촌주민 "허가 내주지말라"호소도”, 『제주신문』 1991년 12월 24일자(제주주민015)

문복희, 1991 「골프장건설과 마을공동체 파괴음모에 성난 북촌주민들」 『월간제주』 (9월호: 38-43)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제주리조트골프장 건설반대운동**

A2[사건 일시] 1991.06.13~000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1.06.13. 성읍1리 마을총회 제주리조트골프장 건설반대결의

A5[사건 내용] 표선면 성읍1리 주민들은 1991년 6월 13일 하오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성읍1리 3196번지 일원 남영목장 내에 시설예정인 (주)제주리조트골프장 건설을 반대키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남영목장 내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농약에 따른 오염피해가 우려돼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주민입장을 담은 소견서를 제주도 등 행정당국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천미천의 범람과 지하수의 오염, 주민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를 들어 골프장 조성을 반대했다. 한편 표선면 가시리 주민들도 제주리조트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게 될 남영목장이 마을 공동목장에 인접해 있어 골프장 조성에 따른 축산환경파괴의 우려가 높다고 골프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다. 가시리 주민들은 제주리조트가 남영목장 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공사과정에서의 비산분진과 소음공해로 공동목장 내에 있는 방목가축이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뿌려지는 맹독성 농약으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주민과 이용객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게 된다고 남영목장 내 골프장 건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시리 주민들은 8월 31일 하오 9시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골프장건설반대 주민대책위를 구성, 위원장에게 청년회장인 현인철씨를 선출했다. 주민반대는 점차 확산되어 표선면 청년연합회에서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였다. 9월 16일 청년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표선면관내 각 마을청년회장 및 회원들도 남영목장내 골프장 조성반대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하며 오는 9월 20일께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위를 구성, 범면민적으로 골프장건설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표선면 하천리 주민들도 남영목장이 천미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골프장 건설 시에는 부락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천미천의 범람과 해안생태계 파괴우려가 높다고 주장, 적극적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성읍리 제주리조트 골프장 주민들 총회 열고 반대결의”, 『제주신문』 1991년 6월 15일자(제주주민017)

“가시리 주민들 ‘축산환경 파괴우려 높아 골프장 건설에 적극 반대’”, 『제주신문』 1991년 8월 13일자(제주주민018)

“가리시 주민 남영목장 골프장 계획 반대 주민대책위 구성”, 『제주신문』 1991년 9월 3일자(제주주민019)

“「남영목장」 골프장 건설 주민반대 점차 확산 표선청년聯등 가세”, 『제주신문』 1991년 9월 17일자(제주주민020)

A9[관련 사건]

A1[사건명] **안덕지역 골프장건설 반대운동**

A2[사건 일시] 1991.07.13~0000.00.00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1991.07.10. 안덕면 상천리, 광평리 등 두 곳 골프장신설지역 내정

1991.07.13. 안덕면 상천리 주민 골프장건설반대 서명운동시작

1991.07.20. 광평리 주민들 「광평리 골프장건설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1991.07.21. 「안덕지역 골프장설치반대 공동대책위」 구성

1991.12.18. 반대서명운동을 마무리

A5[사건 내용] 안덕면 상천리 산62번지 안덕목장 일대와 안덕면 광평리 산13번지(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 산12번지포함)일대 30만평규모에 골프장건설허가가 나가자 안덕면 주민들이 이를 적극 저지키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1991년 7월 10일 도내 4군데의 골프장건설을 허가해줬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안덕면 상천리 주민들은 7월 13일 골프장건설반대 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안덕면 각 마을 이장단에 골프장건설반대협조공문을 보냄으로써 안덕면 전 지역에서도 골프장문제가 쟁점화 되었다. 더욱이 상천리 주민들은 “안덕목장 사장이 전주민의 동의가 없을 때는 골프장건설허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격분했다. 따라서 이 마을주민들은 「골프장건설반대 마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덕면 각 마을과 연계해 골프장 건설을 적극 저지키로 했다. 이에 안덕면 관내 각 마을 이장들은 7월16일 회동을 갖고 오는 7월 21일 각 마을 이장들과 청년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화순리 사무소에서 앞으로 골프장건설반대를 위한 안덕면 대책위를 구성하고 행동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안덕면 대책위구성에 앞서 7월 20일 광평리 주민들은 「광평리 골프장건설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골프장건설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현수막을 내걸어 골프장건설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7월21일 하오6시 남제주군 안덕면 지역 각 마을이장과 청년회장들은 화순리사무소에서 골프장설치반대에 따른 회의를 갖고 「안덕지역 골프장설치반대 공동대책위」를 구성, 적극 반대투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책위구성에 앞서 상천·광평리장으로부터 골프장건설 현황과 그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을 벌여온 경과를 들었다. 이날 「안덕지역 골프장설치반대 공동대책위」(위원장 김용건)는 골프장설치반대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식수오염 등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 주창하며 골프장건설을 적극 반대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18일 골프장건설에 따른 반대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남제주군, 남제주군의회 등에 골프장설치반대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안덕지역 전가구를 대상으로 골프장설치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호주들의 서명을 받아왔는데 현재까지 서명가구 수는 1천6백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골프장건설 조직적 반대 상천리주민 마을대책위원회 구성”, 『제주신문』 1991년 7월 18일자(제주주민021)

“골프장 결사반대 주민들 투쟁선언 안덕면내 이장등 공동대책위 구성”, 『제주신문』 1991년 7월 23일자(제주주민022)

A9[관련 사건]

15. 기타

A1[사건명] **최창윤수경 탈영 후 양심선언**

A2[사건 일시] 1991.06.06

A3[사건 배경]

A4[사건 전개과정]

A5[사건 내용] 1991년 6월 6일, 제주경찰서소속 최창윤수경(24·영남대불문과 2년 휴학)이 탈영, 최근 잇따른 긴장시국사태에 따른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수경은 7일 하오1시 제주대학교 여학생휴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경대열사 폭행치사 사건과 잇따른 분신소식을 접해 들으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던 중 경찰국 상급자로부터 원치 않는 전경정훈지 편집을 지시받자 이에 불응할 것을 결심, 6일 경찰국 공보계발령을 계기로 탈영한 뒤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수경은 이날 발표한 양심선언문에서 “자살로 조작된 산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의문사에 이르러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애를 금할 길 없어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다.”며 “단순히 부당한 발령에 항의하기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창윤수경은 탈영 35일만인 7월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최수경을 전투경찰설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6[관계 인물]

A7[관계 단체]

A8[관계 자료]

“시국에 분노 탈영 경찰탈영 최수경, 「양심선언」”, 『제주신문』 1991년 6월 8일자(제주기타001)

“양심선언 탈영전경 35일만에 자수”, 『제주신문』 1991년 7월 12일자(제주기타002)

A9[관련 사건]

II. 단체 항목 기초조사

1. 연합운동

- O1 [단체명]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O2 [약칭 및 이칭] 공대위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 O5 [존속 기간] 1987.07.20~1987.07.26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1987년 7월 11일, 제주대학생들이 ‘고(故) 이한열열사 추도 및 살인정권종식을 위한 규탄대회’를 제주시내에서 개최하고 평화행진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폭력진압으로 일관했다. 이에 학생들이 장소를 바꿔가며 집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던진 보도블럭에 김운삼(제주대 4)이 안면부를 맞고 실신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제주대학교추진위원회>,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학생대책협의회> 등 학생대책기구와 학외 민주인사들이 <폭력추방을 위한 애국도민협의회>를 구성해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투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O11 [주요 활동] 연동교회에서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하고 농성투쟁 출정식(1987.07.18), 농성장인 연동교회에서 공동기자회견(1987.07.19), ‘제1차 폭력추방을 위한 규탄대회’ 개최 / 소식지 「민주제주」 창간호 발간, 이후 7월 26일까지 7호 발간(1987.07.20), ‘제2차 폭력추방을 위한 규탄대회’ 개최(1987.07.21), ‘제3차 폭력추방을 위한 규탄대회’ 개최 / 중앙성당 앞에 ‘공동대책위 지정벽보판’ 설치(1987.07.22),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경찰서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농성 해제(1987.07.26),
- O12 [주요 활동가] 이지훈, 박성룡, 송형관, 김태원
- O13 [관계 단체]
- O14 [관계 자료]
폭력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87 「민주제주」 (창간호 7호)

O1 [단체명] **민주쟁취국민운동 제주본부**

O2 [약칭 및 이칭] 제주국본, 국본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제주국본 동제주지부, 제주국본 서귀포지부, 제주국본 서제주지부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O5 [존속 기간] 1987.09.06~1989.03.17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7년 6월 항쟁은 4·3항쟁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젖어있던 제주지역에도 대중투쟁에 의한 민주화실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서울에서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주도하에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6월 항쟁을 이끌어갈 특정한 사회운동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6월 항쟁을 목도한 제주지역의 양심적 민주세력은 대중운동단체 결성의 시급함에 뜻을 같이 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이 확산되고 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의 제주본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1987년 8월 31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9월 6일 제주시내 제주YMCA 강당에서 <민주쟁취국민운동 제주본부>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어 제주국본은 1987년 9월 26일 성산포에 동제주지부를(성산포 천주교회), 10월 17일에는 서귀포지부를(서귀포 복자 천주교회), 10월 24일에는 대정에 서제주지부(모슬포 천주교회)를 결성한다. 제주국본의 결성 의의는 1)고립분산적이었던 운동 역량을 한 데 모아 체계적인 조직을 만든 점, 2)양심적 차원의 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의 만남 속에서 과학성·이념성이 고조되었다는 점, 3)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에 대한 지원·연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 4)소수의 관념적 운동이 아니라 애국적 차원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연합이 결성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제민협)> 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국본은 제민협 결성을 주도하고 1989년 3월 제민협이 결성과 더불어 발전적으로 해체하였다.

O11 [주요 활동] 주요활동으로는 공정선거감시 운동, 탐동 불법매립 반대운동, 새한병원 투쟁, 제주MBC 개표조작 사건, 모슬포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 운동, <제주지역 주민주체 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 결성 주도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반대운동, 골프장 반대운동, '「한라시민학교」 개설 -시민의식의 일상적인 향상과 지역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기관지 「제주의 소리」 발행하였다. 주요 활동일지는 다음과 같다.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발기인대회(동문성당)(1987.08.31), 민주쟁취국민운동제

주본부 결성대회(YMCA)(1987.09.06), 동제주지부 결성대회(성산포천주교회)(1987.09.06), 서귀포지부 결성대회(서귀포 복자천주교회)(1987.10.17), 부정선거 고발센터 운영(1987.10.18), 서제주지부 결성대회(모슬포천주교회)(1987.10.24), ‘거국중립내각수립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범도민대회’ 개최(YMCA)(1987.10.31), 전국본부 2차 정기총회 참석(1987.11.05), 제주본부 선거체제로 전환, 반독재 반노태우 선거투쟁본부, 공정선거 감시본부로 전환(1987.11.10), 공정선거감시제주본부 발대식(제주대학교)(1987.11.25), 공정선거감시 홍보(유세장 및 제주 전지역 홍보, 연인원 2,000여명)(1987.11.28-12.14), 투표통지표교부 입회인 활동(250명)(1987.12.10-12), 공정선거감시활동 보고대회(광양성당)(1987.12.20), <새한병원 노동조합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참여(1988.02.09), 제주도내 제민주단체 정책간담회(1박2일) 주관(1988.02.14), 故박종철열사 추모기념식 및 비디오사진전(중앙성당)(1988.02.25~26), 민족자주화기간선포(1988.03.01~15), 3·1절 기념강연회(광양성당)(1988.03.06), 탐동불법매립 반대투쟁 참여(1988.03.08), 새한병원 위장폐업철회촉구대회(중앙성당)(1988.03.12), 제주본부 총선체제 전환(반민정당 총선투쟁 제주지역민주연합)(1988.04.01), 제주MBC 개표조작 항의투쟁 전개(1988.04.25~26), 제주MBC 개표조작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제주본부사무실)(1988.04.28), 제주MBC 개표조작 진상규명 및 구속·수배자 석방·해제를 위한 평민당 점거농성(1988.05.06~12), 한라시민학교 개설 운영(제1기)(1988.05.11~08.20), <제주지역 민주단체공동실행위원회> 결성(1988.05.25), (가칭)제주지역 민중생존권 쟁취 특별위원회 준비(1988.07.22), 공동대표·집행위원 연석회의(1988.08.16), <제주지역 주민주체개발결정권쟁취 공동대책위원회>(개대위) 결성 참여, 농성투쟁 돌입(1988.08.19), ‘한라시민학교’ 제1기 졸업식(33명)(1988.08.20), 특별기자회견, ‘모슬포 송악산군사기지 설치반대 공개질의서’ 송부(1988.08.29), ‘제주지역민주단체 체력단련대회’ 주최. (제교협, 제문협, 여민회, 제주기청, 서귀포YMCA, 모슬포 빌레왓, 한라시민학교학우회 등 10여명 참여)(1988.10.02), ‘한라시민학교’ 제2기 강좌개설(1988.10.03~12.05)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O14 [관계 자료]

민주쟁취국민운동 제주본부, 1988 『제주의 소리』 (9월호: 17-18)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 제주지역추진위원회, 1997 『제주지역 6월 민주항쟁 기념 자료집』

O1 [단체명] 제주지역주민주체개발결정권쟁취공동대책위원회

- O2 [약칭 및 이칭] 개대위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한림잠수회, 서귀포잠수회, 조천유원지개발저지추진대책
위원회, 국민운동제주본부,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대학교지역조사
위원회
-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 O5 [존속 기간] 1988.08.19~1988.00.00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1988년 초부터 북제주군 한림읍, 서귀포시,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조천리
등지에서 지역주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던 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피해’라
는 공통인식 하에 “그간 지역적으로 산발적이고 고립적인 투쟁을 전개해오던 열
악한 소규모적 투쟁형태를 청산하고, 대동단결·대동투쟁의 기치아래 공동투쟁으
로 개발결정권을 쟁취한다”는 의의를 갖고 1988년 8월 19일, 지역주민, 사회단
체, 학생 등이 결합하여 결성하였다.
- O11 [주요 활동] 14일간 ‘주민주체개발결정권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광양성당, 제주대학교,
연동교회 등을 전전하며 전개(1988.08.19-09.01)
- O12 [주요 활동가]
- O13 [관계 단체]
- O14 [관계 자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 『제주의 소리』 (10월호: 35-36)

- O1 [단체명] **송악산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 O2 [약칭 및 이칭] 송대위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 O5 [존속 기간] 1988.10.30~1989.00.00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송악산 일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송악산관광지구’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주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이 계획은 1987년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88년 5월 6일부로 돌연 송악산이 ‘국가주요시설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계획자체가 백지화되었다. 이때부터 송악산이 있는 대정읍 일대는 물론 제주도내에 “송악산 일대가 필리핀의 클라크 미공군기지의 대체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제주대학교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한 인하대 문정인 교수도 “제주도가 필리핀 클라크 미공군기지의 대체지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는 말을 서울의 모 장성으로부터 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욱이 미국상원이 ‘만일 미국과 필리핀이 필리핀 내 미군기지협정을 갱신하는데 실패할 경우 필리핀 주둔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1988.8.7)도 있었다. 이에 대정읍민과 제주도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저속퇴폐문화의 유입, 소음피해 등 지역주민의 생존권은 물론 미공군기지의 핵 배치로 한반도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에 처한다는 인식 아래 범도민적인 송악산군사기지 반대 투쟁을 벌였다. 먼저 대정읍에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재경제주도민들이 대책위를 꾸렸다. 이에 범도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려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제주도내 제민주단체와 뜻있는 인사들을 모아 <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O11 [주요 활동] ‘송악산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규탄대회’ 개최(제주북초등학교). 집회 후 참가자 2,000여명이 평화대행진을 벌임.(1988.10.30), ‘송악산군사기지계획철회를 위한 평화대회’ 개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송악산군사기지방대투쟁을 하나로 결집하고, 투쟁을 단지 지역생존권 차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평화주간’을 선포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하고 각종 사업을 벌임.(1988.11.19-23), 평화대회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1988.11.17), 개막식. 초청강연 ‘군사기지철폐와 한반도평화를 위하여’(김재훈). 평화한마당(1988.11.19), ‘4·3의 밤’ 기조강연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재일소설가). 토론(고창훈, 문무병) / 서울지역대책위, ‘송악산군사기지결사반대 시민대회’ 개최(1988.11.20), ‘반전반핵결의대회’ 개최. 강연(최열), 원폭피해증언(한부상)(1988.11.21), 제주여인회 주최, ‘에이즈추방 시민대회’ 개최(1988.11.22), ‘군사기지철폐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범도민결의대회 및 평화대회 폐막식’ 개최. 통일기원굿, 촛불행진 전개.(1988.11.23), ‘송악산 미핵기지 철회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 운영(1988.12.24), 6개 대책위 공동성명(1989.01.18), 6개 대책위 합동기자회견(1989.01.24), 반핵비디오 상영(‘그 날, 그 날 이후’, ‘당신의 성천국 코리아’)(1989.01.25-27), 6개 대책위 공동명의로 ‘철회요구서’와 ‘청원서’를 청와대, 국방부, 국회에 공식 발송하고 3월 20일까지 명확한 답변 요구(1989.02.22), 강영훈 국무총리, “송악산군사기지 전면 백지화” 통보

(1989.03.03)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O2 [약칭 및 이칭] 제민협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 제주여민회,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준비위원회, 제주지역노점상연합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O5 [존속 기간] 1989.03.18~1992.01.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총회-의장-집행위원회-사무국

O9 [강령]

O10 [결성 과정]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새로운 전선운동 움직임에 따라 전민련 결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때 제주지역은 이와 궤를 같이 하면서 새로운 연대조직 결성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가 1989년 2월 구성되었고, 1989년 3월 18일 카톨릭회관에서 제민협 결성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하였다. 제민협의 결성 배경은 1)6월항쟁 이후 조직화되기 시작한 부분별 조직들이 성숙하면서 지역문제를 풀어나갈 연대의 구심이 필요하고, 2)지역내에서 제기되는 투쟁을 담보할 상설적 공투체의 필요성, 3)전국적 조직 건설(전민련)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국적 관점에서 지역운동을 풀어나가고 담보해 나갈 지역단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었다. 제민협 참여단체는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준비위원회, 제주지역노점상연합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등 7개 단체였다. 제민협은 결성선언문에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결의문을 통해 ‘제국주의 반대, 민족자주권 옹호, 분단독재권력인 매국집단 단죄와 민주사회 건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 원칙에 따른 조국통일운동, 제주지역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 등을 전국의 모든 민주세력 및 각계각층과 단결연대하여 힘있게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했다. 제민협은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제주국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 온 지역주민운동과 결합하는 형태의

활동을 벌였다. 제주지역 특성상 지속적으로 대두된 개발에 따른 주민 생존권 문제는 제민협이 주요한 활동영역이 되었다. 제주국본에 이어 제민협에서도 같은 제호로 발간된 기관지 『제주의 소리』 13호~27호에는 송악산 군사기지 투쟁, 탐동매립 반대투쟁, 외지인 토지 소유, 농정파탄, 지하수 문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 제주도 개발과 관련된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분석·비판하고 있다. 제민협은 1990년 3당 합당 반대운동과 명지대생 강경대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1991년 5월 투쟁을 주도했다. 제주지역에서 1991년 5월 투쟁은 제민협(제주여민회,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과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민주청년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문예운동연합(건)이 참여한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라는 일시적 연대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민협을 뛰어 넘는 상설연대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논의는 제민협 해소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O11 [주요 활동] ‘현대그룹폭력테러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1989.03.11), <41주기 4·3추모제준비위원회> 참가, ‘41주기 4·3추모제’ 공동개최(1989.04.01-03), ‘4·3항쟁 41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 성명 발표(1989.04.05),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발표 / 오만식 상임집행위원장 연행(1989.04.19), ‘이철규열사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1차 도민대회’ 개최(관덕정 광장, 제총협과 공동 개최)(1989.05.18), ‘이철규열사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2차 도민대회’ 개최(관덕정 광장)(1989.05.20), ‘이철규열사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3차 도민대회’ 개최(탐동광장)(1989.05.27), 「제주의 소리」 창간 두돌 기념 및 제주지역민주단체 단합대회 개최(1989.10.08),

O12 [주요 활동가] 제1기의 주요활동가는 다음과 같다. : 공동의장-고창훈, 임문철, 양영수, 김순희, 박상률, 중앙상임위원장-오만식, 정책실장-오욱만, 사무국장-이재홍, 민중생존권대책위원장-양영운, 조국통일평화위원장-이영일, 민주쟁취위원장-김정렬, 대변인-고상호

O13 [관계 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O14 [관계 자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 『제주의 소리』 (4월호: 3)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를 점검한다」 1991 『제주의 소리』 (10월호)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 『제주의 소리』 (4월호)

O1 [단체명]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

O2 [약칭 및 이칭] 제신도민협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 O5 [존속 기간] 1990.01.06~1990.01.25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상임위원회-회장-부회장-사무처 / 사무처에는 기획, 조직, 섭외, 총무, 홍보 등 5개국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제주신문 투쟁이 지속되고 도민사회여론이 들끓자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는 1989년 12월 19일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12월 29일 ‘제주신문 폐업의결 철회촉구 도민회 준비모임’이 이루어졌다. 1990년 1월 5일, 제주신문사측이 제주세무서에 신문제조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자 다음날인 1월 6일 제주도내 학계·법조계·종교계·문화계·실업계·사회단체·지역인사 등 각계를 망라한 102명을 위원으로 한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도민협의회>가 결성되었다.
- O11 [주요 활동] 제주신문 정상화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15일 만에 6만 명 서명, 홍보활동-제주신문 폐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제주도민의 힘을 동원하기 위한 것. 소자보 부착, 「제신도민협 소식」 발간(2호), 대중집회-제주신문 폐업철회 촉구 도민대회(1990.1.13) 개최, 대 정치권활동-민주당, 평민당의 조사반 내도, 사법대응-제주신문노동조합 등과 공동대응, 기타 재정확보사업, 조직확대 및 섭외
- O12 [주요 활동가] 조문부(제주대교수, 회장), 양승부(변호사, 부회장), 오성찬(소설가, 부회장), 김병택(제주대교수, 사무처장)
- O13 [관계 단체]
- O14 [관계 자료] 함승보, 1990 「제주신문사태,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월간제주』 (2·3월 합본호: 38-48)

- O1 [단체명] **특조법 및 UR협상저지 범도민운동본부 결성을 위한 대책위원회**
- O2 [약칭 및 이칭] 특조법 및 UR 대책위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등 12개 단체
-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 O5 [존속 기간] 1990.11.16~0000.00.00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 O7 [법적 상태] 비합법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 O11 [주요 활동]
- O12 [주요 활동가]
- O13 [관계 단체]
- O14 [관계 자료]

이영길의원 정책연구실, 1991 『제주개발과 쟁점 I』

O1 [단체명]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

O2 [약칭 혹은 이칭] 제주지역대책회의, 대책회의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O5 [존속 기] 1991.06.07~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91.06.07.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 결성 기자회견 (제주대학교) “광역의회선거에서 반민자당 전선을 강화”,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투쟁 전개” 등을 밝힘.

O11 [주요 활동] 제9차 도민대회 개최(1991.06.08)

O12 [주요 활동가] 고상호, 위성곤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O2 [약칭 및 이칭] 범도민회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91.09.07~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정부와 민자당정권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의도가 알려지자 제주도민들은 삶의 터전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결의와 함께 자신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굳센 의지가 움터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물줄기는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생존권투쟁의 현장에서 뻗어 나와 민주화투쟁의 물줄기와 결합되면서 통합되었다. 1991년 제주도민이 입법저지를 위해 떨쳐 일어섰던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반대 투쟁의 결집체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는 '4·3 이후 최대의 지역현안'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에 걸맞게 제주도내 재야 및 지역의 대표급 인사와 지역조직, 부문의 단체 등 32개 단체가 결집되어 1991년 8월 5일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1월 7일 결성하게 되었다.

O11 [주요 활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결성.(1991.08.05), '제주도개발특별법 공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 발표.(1991.08.06), '제주도개발특별법 공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도내 일간지 광고.(1991.08.07), '8월 8일 제주도개발특별법 도민공청회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 발표.(1991.08.13), '민자당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강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발표.(1991.08.19), 민자당 제주도지부 항의 방문.(1991.08.20), '제주도개발특별법 강행방침 철회를 위한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1991.08.23), '특별법 제정 반대 10만인 서명운동 출정식' 및 가두 서명운동 돌입.(1991.08.26), '제주도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즉각 실시하라!' 성명 발표.(1991.08.30), 제주도의회 무소속동우회장 면담. 9월 4일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무소속동우회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1991.08.31), 제주도의회 의장 면담. 특별법에 대한 도의회의 올바른 입장표명 요구.(1991.09.0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범도민회) 결성대회(1991.09.07), 초청강연 개최(1991.09.15-16),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제1차 범도민 궐기대회 선포' 기자회견.(1991.09.17), 공동대표 이재후 씨 구속. '특별법 저지투쟁을 탄압하는 폭력경찰을 규탄한다' 성명 발표.(1991.09.18),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제1차 범도민 궐기대회' 개최.(1991.09.19), '9월 25일 반상회 때 도지사가 만들어 뿌린 제주도개발특별악법 찬양홍보물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제하의 성명 발표.(1991.09.27), '제주도개발특별악법 제정반대 제2차 범도민 궐기대회' 개최.(1991.10.22), 2차 상경투쟁.(1991.11.02-07), 양용찬열사 분신. <고 양용찬열사 분신 비상대책회의> 구성.(1991.11.07), '고 양용찬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명 발표. / <비상대책회의> 해소, <특별법 반대 고 양용찬열사 장례위원회> 구성(1991.11.08), '특별법 반대 고 양용찬열사 추모대회' 개최.(1991.11.11), '특별법 저지를 위한 범도민회 공동대표 단식농성' 돌입.(1991.11.15), '특별법 제정 강행 민자당정권과 우근민지사 규탄' 기자회견.(1991.11.18), '특별악법 제정반대 제3차

범도민궐기대회 및 고 양용찬열사 정신계승대회' 개최.(1991.11.20), '특별법 제정
 반대를 위한 서울지역 제2차 궐기대회' 서울 탑골공원에서 개최.(1991.11.24), 특
 별법 제정 의도 철회 기자회견(1991.11.26), "민자당정권 규탄" 성명발표. 제2차
 상경투쟁에 돌입.(1991.11.27), 민자당 제주도지부 앞 항의시위 전개.(1991.11.28),
 '특별악법 날치기 통과 규탄, 민자당 타도 범도민대회' 개최.(1991.11.30), '13대
 국회에 보내는 범도민회의 긴급제안서' 제출. 유인물 배포.(1991.12.03), 특별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범도민회 3차 상경투쟁 돌입.(1991.12.10), 범도민회 상경
 투쟁단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 제주지역에서는 '특별법규탄대회' 개최 후 대표
 단 12명 단식농성 돌입.(1991.12.14), 범도민회 · 서울지역공대위 · 경기지역공대위
 소속 인사들 서울 여의도에서 '특별법 제정반대 및 법안 날치기통과 규탄 결의대
 회' 개최.(1991.12.17), 제주도개발특별법 국회 본회의 민자당 단독 변칙처
 리.(1991.12.18), 날치기통과 비난 성명. 제14대 총선서 심판결의(1991.12.19), 민
 주당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특별대책위원장 박영숙 등과 간담회(1991.12.23), 제
 주교대 체육관 앞 광장에서 '양용찬열사 49재 추모대회' 개최.(1991.12.25), 대표
 자, 집행위, 실무자연석회의. '범도민회 추대 범민주단일후보'를 내세워 민자당 심
 판결의(1991.12.27), '범도민회 총선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민주당과의 상경교섭
 단(단장 모갑경 외 2인) 파견.(1992.01.06), 14대 총선투쟁에 따른 범도민회 기자
 회견(1992.02.01),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의 조직명칭을 <제주도
 개발특별법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로 개칭(1992.02.13), '범도민회 추대 범
 민주단일후보' 추대 결정. 강영지(범도민회 공동대표 겸 대변인) 선생 추
 대.(1992.02.14), 범도민회 후보 사퇴에 따른 기자회견(1992.03.07), '한라일보 파
 업투쟁을 지지하며' 제하의 성명 발표(1992.04.15), 제주도농민회, 이영길의원 정
 책연구실팀과 양파파동에 따른 지역조사 실시(1992.04.18), '참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라일보 노동조합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소자보 인쇄 부착(1992.05.09),
 한라일보 노조 창립 1주년 집회 참석(1992.05.14), 「제주지역 제14대 총선투쟁
 평가」 자료집 발행(1992.05.20), 「도민의 함성」 제4호 발행(1992.05.30), '한라
 일보 사측의 폭력만행과 노조사무실 봉쇄를 규탄하며' 제하의 성명 발표
 (1992.06.09), 한림빌리지 현장조사(1992.07.04), 「도민의 함성」 제5호 발행
 (1992.07.10), 제주지역 노동문제 민주당조사단(단장 김말룡의원)과 결합하여 한
 라일보, 오리엔탈호텔,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노동실태 조사(1992.07.23), 제주도
 당국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하여 마치 '그린벨트해제법'인 양 호도
 하자 '시행령안을 접하며' 제하의 유인물 제작 배포(1992.07.29), 경학우회 동아리
 '오름'과 함께 성산지역 지하수 공동조사(1992.08.01), 범도민회 결성 1주년 기념
 행사. 「도민의 함성」 특집호 발행(1992.09.07), 「도민의 함성」 제7호 발행
 (1992.11.06), 범도민회와 민주단체 주축으로 구성된 <고 양용찬열사 1주기 추모

공동행사위원회>에서 주최한 추모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1992.11.07), 범도민회 재정마련을 위한 일일차집(1992.11.08), 조천, 대정, 서귀포 지역 감귤실태조사(1992.11.22-27), 국민회의제주본부와 공동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날치기 1주년에 따른 1천인 서명운동 돌입(1992.12.12), 제주도개발특별법 날치기통과 1주년에 즈음한 특별회견. '제주지역 현안 10대과제' 천명(1992.12.15), 제주도개발특별법 날치기 1주년에 따른 1천인 서명운동 결과 도내 일간지에 게재(1992.12.17), 특별법 도조례 심의와 관련한 '제주도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전달(1993.01.18), 제주신문사 주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지상토론회' 참석(1993.01.29), 제1차 정기총회, 제2차 임시총회(1993.02.27)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제주도개발특별법 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 1992 『제주지역 제14대 총선거자료집』
 제주도개발특별법 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 1993 『도민의 함성』 (특집호: 89)7
 제주도개발특별법 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 1993 『도민의 함성』 (특집호: 95-98)7

O1 [단체명]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제주본부**

O2 [약칭 및 이칭] 국민회의제주본부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제주도농민회, 특별법철폐 범도민회,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이영길제주도의원 정책 연구실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92.11.12~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92년 9월 4일 중앙에서 국민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연합, 제주도농민회, 전교조제주지부 등 단체 대표자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범민주진영의 단결과 지역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는 결속을 다지면서 연말 대통령선거에서의 공동대응에 의견을 모아나갔다. 그러던 것이 10월 9일 전국연합의 대통령 후보전술이 확정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준비모임을 운영하면서 '정권 교체투쟁을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적이고 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민회의제주본부 건설에 합의하고 11월 12일 결성대회를 갖기에 이른다.

O11 [주요 활동]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국민주체성 확립, 민주개혁 추진, 공정선거 추진, 지역분열주의 극복, 민주세력연합 실현 등 5대 중점사업 선정, 제주지역의 현안인 탐동불법매립 및 제주도개발특별법 문제,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계획, 감귤 가격 불안정, 4·3진상규명 등과 더불어 민생문제를 대통령선거 공간에서 부각시켜나감, 11월 14일 공명선거실천운동제주본부 공정선거감시단 발족, 중앙로 등지에서 가두서명과 유인물을 통한 선전전을 펼침. 공정선거감시단은 부정불법선거 감시 및 저지활동, 투표참여운동, 불공정언론 감시반 운영,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활동 등을 전개함.

O12 [주요 활동가] 김상근, 모갑경, 이재후, 현상보, 이야성, 이영길(이상 상임공동대표), 고상호(대변인)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편집실, 1992 「국민회의제주본부 결성」 『월간제주』 (12월호: 18-19)

O1 [단체명]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

O2 [약칭 및 이칭] 제주연합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서귀포 나라사랑청년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제주연합회),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대정나라사랑청년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제주민주청년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교육대학총학생회, 제주간회보건전문대학총학생회, 제주전문대학총학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 제주문화운동협의회(참관)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O5 [존속 기간] 1992.10.09~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공동대표-대내외적 업무에 대표로서의 지위와 역할 수행 대표자회의-최고의결기구이며 제주연합 사업전반에 대한 기획, 수렴, 집행 사무국-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민생·정책·재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준비위의 모든 사무를 담당

O9 [강령] -우리는 민중생존권을 수호하고 사회 전영역의 민주개혁을 실현한다. -우리는 반독재민주역량을 총집결시켜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자주적 민족통일을 이룩한다. -우리는 모든 민족민주세력의 통일단결을 실현한다.

O10 [결성 과정]1989년 3월 제민협이 태동하여 각종 정치투쟁과 민생민권투쟁에 대한 지지

원 등의 연대활동을 해왔으나, 대중조직의 역량으로 이탈하는 단체도 발생하고 학생운동조직의 미포괄, 또 새로이 결성된 청년조직과 전교조 등을 포괄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하반기 이후 제주도 전역을 휩쓸었던 UR과 특별법반대투쟁, 지자체 문제 등은 공동연대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였다. 이러한 상설공동투쟁체 건설 논의가 본격화 된 직접적인 계기는 강경대열사 타살정국에서 비롯된 제주대생 고규형 추락사건 등 당시의 긴박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위원회’ 결성이었다. 이 대책회의를 통해 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서 대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극복하자는 합의와 함께 대책회의를 상설적인 연대기구로 발전시키자는데 합의를 이루면서 제주연합 건설 논의가 구체화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주지역에서의 논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상설연합체’ 건설 논의와 맞물리면서 더욱 활성화됐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의 진로와 맞물리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92년 1월 31일, “제주지역민족민주운동 세력의 투쟁 구심체이자 정치적 대표체이며, 민족민주전선으로서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건설사업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제주연합건설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월 31일 오후5시 제주대학교 중강당에서 시민·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비위원회 발족대회에서 발표한 결성선언문을 통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와 지난해 상반기 결성된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의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을 해나가기 위해 「제주연합건준위」를 발족한다.』고 결성배경을 밝혔다. 이어 「제주연합건준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가칭)특별법철폐범도민회와 연대, 도민생존권쟁취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자치단체장 선거연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천명했다. 또 이날 대회에서 성풍교회의 김상근 목사, 고상호·양영운 제민협공동의장, 한석 제주민주청년회장, 윤철수 제총협상임의장 등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계속적인 당면투쟁사업을 전개하면서 8월말 제주연합건준위 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라 제주연합창립일을 확정했다.

O11 [주요 활동] 총선투쟁본부 발족대회(1992.03.11), 제1기 제1차 중앙위원회 및 간부수련회(제주대학교)(1992.10.24-25), <故 양용찬열사 1주기추모공동행사위원회> 참가(1992.11.00),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제주본부>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가(1992.11.12)

O12 [주요 활동가]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 김상근, 고상호, 양영운, 한 석, 윤철수, 제1기 의장단 : 현상보, 임문철, 양영수, 남승택, 한 석, 고상호, 김상근, 김재호, 윤철수 자문위원 : 이영길, 모갑경 양영운(집행위원장, 민생위원장), 김상근(인권

위원장), 진희종(정책위원장), 오근수(재정위원장), 김정열(사무처장)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제주연합건준위 발족”, 『제주신문』 1992년 2월 1일자(제주연합147)
편집실, 1992 「제주는 이런 형편」 『월간제주』 (2·3월 합본호: 20-22)
현혜숙, 1992 「제주는 이런 형편」 『월간제주』 (10월호: 22-23)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1992 『제주의 소리』 (복간호: 3,7,13)

2. 청년 · 학생운동

01 [단체명] **대정나라사랑청년회**

02 [약칭 및 이칭] 대정나사청

0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0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05 [존속 기간] 1988.00.00~0000.00.00

06 [주요 활동지역] 대정읍

07 [법적 상태]

08 [조직 체계]

09 [강령]

010 [결성 과정]

011 [주요 활동] ‘청년의 하나 된 전진을 위한 시국토론회’ 개최(<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와 공동 주최)(1991.05.00), 구속자 석방과 현정권 퇴진을 위한 무기한 철야농성(대정나라사랑청년회사무실)(1991.05.22), 노태우대통령의 송악산에 대한 대선공약이행 촉구 성명 발표(1992.09.24), 「송악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서 발표(1992.12.30)

012 [주요 활동가]

013 [관계 단체]

014 [관계 자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1 『제주의 소리』

“구속자석방요구 나사청, 철야농성 전교조지부도”, 『제주신문』 1991년 5월 24일자(제주청년학생128)

01 [단체명] **안덕민주청년회**

02 [약칭 및 이칭]

0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0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05 [존속 기간] 1988.07.02~0000.00.00

06 [주요 활동지역] 남제주군 안덕면

07 [법적 상태]

08 [조직 체계]

09 [강령]

010 [결성 과정] “안덕지역의 공동체적 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의 제반문제를 주

체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비민주적 요소의 척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앞장설 것” 등을 실천[강령]으로 1988년 7월 2일 출범했다.

O11 [주요 활동] 안덕민주청년회 교양강좌 개설. 교육, 정치, 언론, 지역, 일반상식, 청년 등 6개 부문에 대한 강좌에 연인원 200여명 참가.(1988.09.05-20), 연례체육대회 후 화순리 청년회원 등 150여명, 화순공동목장 반환을 요구하며 안덕국민학교에서 화순리4거리까지 시가행진(1988.09.26)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분부, 『제주의 소리』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 『제주의 소리』 (10월호: 10)

O1 [단체명]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O2 [약칭 혹은 이칭] 제총협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한총련, 제민협

O5 [존속 기간] 1989.03.30~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교육대학총학생회, 제주간호보건대학총학생회, 제주전문대학총학생회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1989년 3월 30일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전문대 체육관에서 결성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O11 [주요 활동]

O12 [주요 활동가] 홍명환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제주지역 4개대학 총학생협의회 결성, 결성식서 투쟁 결의문 채택”, 『제주신문』 1989년 3월 31일자(제주청년학생129)

O1 [단체명]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 O2 [약칭 및 이칭] 서귀포나사청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 O5 [존속 기간] 1989.10.29~0000.00.00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서귀포시
- O7 [법적 상태] 비합법
- O8 [조직 체계] 사랑방모임 : 조국사랑, 노동사랑, 농민사랑(수놓음), 노래사랑(열린소리), 여성모임, 글사랑, 물뱅이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1989년 3월 11일 준비위 결성을 위한 총회를 갖고, 애국·애족·애향의 시대적 책무를 자각한 서귀포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3월 17일,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준비위원회'를 꾸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쳤다.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제민협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준비위원회 이영일 사무국장은 8월 통일투쟁 기간에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준비위원회 발족 당시 20명이던 회원이 9월 현재 70명이며 창립시기에는 100명을 목표로 회원확보운동을 펼치는 등 내실 있는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29일 창립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 O11 [주요 활동] 20여명 회원으로 준비위 발족(1989.03.17),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중앙상임위원회 참가(1989.04.02), 4·3추모제(1989.04.03), 초청문화공연(1989.04.08), 「나라사랑」 창간준비 1호 발간(1989.04.12), 5·18추모행사(사진전시회 및 구로항쟁 비디오 상영)(1989.05.18), 신입회원을 위한 사랑방교실 신설(1989.06.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참가(1989.08.07), 전교조 설명회 및 비디오상영(1989.09.17), 농민사랑 '수놓음' 발족(1989.10.19), 여성참사랑 발족(1989.10.23), 이웃참사랑 발족(1989.10.24),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창립(1989.10.29), 창립기념 제1회 청년문화제(전시회, 노래발표회, 강연회, 마당극 등)(1989.12.09-23), 제1차 정기총회 / 민중노래사랑 열린소리 발족식(1990.02.18), 42주기 4·3항쟁 추모기간 선포 및 추모제(1990.04.02-08), 신입회원 모집 발대식(1990.04.16), 산사랑 한백회 발족식(1990.05.02), 광주항쟁 계승기간(1990.05.17-27), 노가바 경연대회(1990.05.18), 회원야유회(1990.05.27), 회원의 날(1990.07.01), 회원 하계수련회(1990.07.28), 여름학교 개설(이웃참사랑)(1990.08.05), 제1회 서귀포문화교실 개설(1990.08.08-14), 해방절 45주기 기념 및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원결의대회(1990.08.15), 지역문제대책위 발족식(1990.08.20), 제2회 청년강좌 개설(1990.08.25), 임원수련회(1990.09.08), 임시총회(1990.09.20), 제2회 청년문화제(청년가요제, 마당극, 지역문제세미나, 산악장비 및 사진전시회, 지점토 공예품 판매)(1990.11.17-19), '청년의 하나 된 전진을 위

한 시국토론회' 개최(<대정나라사랑청년회 준비위원회>와 공동 주최)(1991.05.00),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모의공청회' 개최(지역사랑·민속문화 사랑 공동주관)(1991.06.26)

O12 [주요 활동가] 윤춘광, 김영근, 이영일, 김창수, 강방수, 고창후, 오영근, 김경하, 박정일, 김춘희, 강원호, 오미영, 양용찬, 김정순, 오경희,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 『제주의 소리』 (10월호: 8))

『제주신문』 1989년 12월 15일자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1990 『서귀포청년』 (10월호: 8-9)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1 『제주의 소리』

O1 [단체명] **제주민주청년회**

O2 [약칭 및 이칭] 제민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90.00~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9년 초부터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조국과 민족·지역의 참 주인으로 자라나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청년운동단체 건설에 공감하는 몇몇 인사들이 꾸준한 모임을 가져왔다. 1990년 2월 (가칭)한라청년열린회 준비위원회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이 결성되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위원회 발족에 박차를 가하여 9월 9일 제주민주청년회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O11 [주요 활동] 제주민주청년회준비위원회 발족(1990.09.09), 제1기 청년강좌 (1990.11.20~12.24), 「청년이 나아갈 길」(한석)(1990.11.20), 「90년대 통일운동」(김희선)(1990.11.23),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채민수)(1990.11.27), 「현정권의 장기집권음모와 민족민주운동의 대응 방안」(김정렬)(1990.11.30), 「특조법·UR과 제주지역의 미래」(양영운)(1990.12.04), 「우리문화의 올바른 이해」(김수열)(1990.12.07), 「제주지역 노동운동의 실태와 현실적 과제」(김계완)(1990.12.11), 「어떻게 살 것인가?」(오옥만)(1990.12.14)

O12 [주요 활동가] 한석, 김정렬, 문승준, 김철헌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1990 『서귀포청년』 (10월호: 15)(제주청년학생)

“제주민주청년회 준비위 「청년강좌」 20~다음달24일 준비위 사무실”, 『제주신문』
1990년 11월 17일자(제주청년학생)

O1 [단체명]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

O2 [약칭 및 이칭] 제민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제주민주청년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대정나라사랑청
년회(이상 참가), (가칭)청년아카데미(참관)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한국민주청년단체연합

O5 [존속 기간] 1992.09.06~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제청협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창립총회에 이른다. 즉, 제주지역청년단체
대표자회의(1991.4-1992.2)를 통해 기본적인 연대의 틀을 갖춘 후, 제주민주청년
단체협의회 건설 준비위원회(1992.2-1992.9)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1992년 9월
6일 창립한 것이다.

O11 [주요 활동] ‘故양용찬열사 1주기 추모제 및 추모의 밤’ 개최(서귀포매일시장 옆 공
터)(1991.11.04), 대선투쟁방침 마련을 위한 ‘제2차 중앙위원회 및 회원 수련회’
개최(1991.11.14-15), 「청년강좌」 개설(1991.11.26~12.20),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김정열)(1991.11.26~27), 「92~93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김수
열)(1991.11.29~30), 「수입개방이 민중생존에 미치는 영향」 (이인
영)(1991.12.03~04), 역사순례 ‘송악산을 찾아서’(1991.12.08), 「4·3민중항쟁을 통
일원년으로!」 (이천재)(1991.12.10~11), 「정권의 노동법 개정의도와 노동운동의
대응」 (양승조)(1991.12.17~18), 「건강한 생활문화의 실현을 위하여」 (정공
철)(1991.12.20~21), “통일강좌” 개설(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1992.07.13~24),
1강좌(미국과 통일) : 애국과 매국이 격돌한 한반도 현대사(이재화, 남서울민청의
장), 2강좌(통일운동사) :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의 노력(김창후, 4·3연구소부소장),
3강좌(통일정세) : 최근의 통일정세에 대한 이해와 92년 통일운동의 과제(김남식,
북한문제연구가), 4강좌(통일운동의 대중화) : 조국통일운동과 남한 변혁운동의
관계와 대중화방안(류기흥, 민주청년연합회의장), 민주정부수립투쟁에 임하는 특

별결의문 발표(1992.09.08)

O12 [주요 활동가] 한석, 김정열, 김철헌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현혜숙, 1992 「제주는 이런 형편」 『월간제주』 (10월호: 22-23

“11월26일부터 「청년강좌」 실시 제주지역청년단체대표자 회의”, 『제주신문』 1991년
11월 15일자(제주청년학생130)

“제주민청 통일강좌 - 7월13일부터 서귀포·대정등서”, 『제주신문』 1992년 7월 9일자
(제주청년학생131)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1992 『제주의 소리』 (복간호: 40)

3. 노동운동

O1 [단체명] **제주지역노동상담소 돌소리**

O2 [약칭 및 이칭] 돌소리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89.04.21~1999.04.21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이사회 -소장-사무국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9.04.21 개소

1997.00.00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결성의 산실

1999.04.21 해소

O11 [주요 활동] 노동조합 활동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노동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주지역 노동상담소(제주시 삼도2동)는 지역적으로 소외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노동자들의 아늑한 보금자리다. 현재 제주지역의 노조는 분회를 포함해 1백67개 조직에 1만2천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있으나 공단이나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육지와 달리 규모가 작고 활동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이 지난 87년 7월 이후 설립된 이 지역 노조의 조합원 수는 10~2백명 정도로 30~80명 규모의 조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조합비만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 노조위원장과 일부 노조간부들의 개인 비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노동상담소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이해나 실무 능력이 없이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노조와해 기도 등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노동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상설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89년 4월 21일 1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열었다. 상담소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할과 올바른 노동관 확립에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 권리 찾기에도 힘쓰고 있다. 그동안 상담소를 통해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이나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도록 해준 것만도 3억7천2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상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상담소는 지난 90년 제주시내 한 시내버스회사 노조원의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변호사 선임없이 승소로 이끌었고 전세버스업체인 제주교통이 운전기사들에게 거두던 세차비의 철폐등도 관철했다. 특히 시내버스회사에 복직시킨 노조원이 나중에 노조

위원장이 되어 월 18일 만근제를 15일 만근제로 바꾸는 운동을 벌이자 이를 적극 지원해 버스업계의 부당노동 관행을 바로 잡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 “제주지역의 노동조합은 가입률이 높으나 대부분 노조위원장 개인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교육사업 또는 일상활동을 통해 노조원의 의식을 높이거나 단결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드문 편입니다. 이 때문에 노조원과 집행부 사이에 불신이 생겨 노조원은 노조활동에 소극적인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소를 이끌고 있는 소장 강남규씨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노조관을 심어주기 위해 1회성 교육에서 벗어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에 나섰다. 상담소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3시간씩 12주 동안 노동관계법 해설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방안, 단체협약 교섭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 노동자 출신인 소장 강씨는 최근 제주시 한라병원의 간호사 2명, 제주의료원 3명, 오리엔탈호텔9명 등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량해고 및 노조사무실 폐쇄 등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탄압사태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더위도 잊고 자료수집 등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상담활동을 하다 보니 경제 및 법률 전문가가 없어 늘 아쉽습니다. 또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도 무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라고 상담소 운영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소장 강씨는 “최근 악화된 일련의 제주지역 노동상황이 오히려 노조원들을 단결시키고 업종을 넘어 비공식으로나마 협의구조를 갖게 했다”고 평가한다.

O12 [주요 활동가] 강남규, 김영기, 고승남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열악한 노조활동에 ‘한줄기 빛’ -설립·운영 체계적 교육...부당노동행위 감시 앞장”, 『한겨레신문』 1992년 8월21일자

O1 [단체명] **제주노동상담소 일하는 사람들**

O2 [약칭 및 이칭] 일사람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91.03.23~1994.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011 [주요 활동] 노동상담, 「노동교실」 운영, 『제주경제와 지역노동실태』 발간, 노동열사 추모제, 토론회, 초청강연, 「제주지역 노동운동의 방향과 과제」, 「총선이후 한국노동운동 정세」와 「제주지역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1992.04.20), 기관지 「일하는 사람들」 발간

012 [주요 활동가] 고한권, 김원범, 김동식

013 [관계 단체]

014 [관계 자료]

“제주노동상담소 「일사람」 개소 1주”, 『제주신문』 1992년 3월 28일자(제주노동021)

“장명국씨 초청간담회 4월20일, 제주노동상담소”, 『제주신문』 1992년 4월 19일자(제주노동022)

제주노동상담소 일하는 사람들, 1992 『제주경제와 지역노동실태』 새길

4. 농민운동

- O1 [단체명] **안덕면농민회**
- O2 [약칭 혹은 이칭] 안덕농민회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제주도농민회
- O5 [존속 기간] 1989.07.29~0000.00.00
- O6 [주요 활동지역] 안덕면 일원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1989.07.29. 창립
- O11 [주요 활동]
- O12 [주요 활동가] 문창국
- O13 [관계 단체]
- O14 [관계 자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89 『제주의 소리』 (8월호: 7)

- O1 [단체명] **제주도농민회**
- O2 [약칭 및 이칭]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 O5 [존속 기간] 1991.04.30~현재
- O6 [주요 활동지역]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제주에서 농민운동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 사건은 안덕면 서광리 태풍 재해사건이다. 안덕면 서광리 사건은 87년 여름 서부산업도로 부실공사로 집과 농토를 침수당한 서광리 농민 14가구가 제주도를 상대로 치열한 보상요구를 한 싸움으로 이 과정에서 농민 박상률씨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결국 농민들은 피해보상금 등 요구사항을 관철시켰고 이러한 승리의 경험은

이후 제주도 농민운동을 전개시켜나가는 데 귀중한 힘이 되었다. 제주도 농민운동의 첫 지역 조직은 <대정읍 농민회>로, 1989년 1월 31일 모슬포 이화예식장에서 결성대회를 가졌다. 1988년 8월 <대정읍 농민회 준비위원회>로 발족하였는데, 대정에서 먼저 농민회가 출발하게 된 것은 이 지역 기독교나 가톨릭 등의 종교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었고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운동이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9년 7월에 <안덕면 농민회>가 결성되고 1990년에는 한경면, 성산읍, 조천읍, 조천읍에서 농민회 준비위원회가 차례로 결성되었다. <제주도 농민회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각 지역 읍·면 농민회를 기반으로 90년 4월, '수입개방 저지 및 UR 협상 저지를 위한 제주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준비위원회 산하에 <제주도 개발특별조치법 및 UR 협상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준비활동 끝에 1991년 4월 30일 제주YMCA 강당에서 <제주도농민회>를 창립하였다. <제주도농민회>는 준비위 시절부터 당시 제주지역의 가장 큰 이슈였던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투쟁에 매진했으며,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농가부채 해결, 농협개혁, 운동, 감귤 문제 해결 등 농민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제주도농민회>는 청년학생들과 농활을 통한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제주지역 통일축전 등 민족문제와 관련한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제주도농민회>는 1993년에 <전국농민회총연맹>에 가입,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O11 [주요 활동] 대정읍농민회 창립(1989.01.31), 1차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위원장 박상률) 구성 : 대정읍농민회, 안덕면농민회(준) 및 개별인사 참여(1989.03.13), 성명서 '피땀 흘려 가꾼 농산물생산비 우리 손으로 보상받자' 신문 삼지 배포(1989.04.17), '애월·한림·구좌지역 양파전량수매 및 제값받기 농민대회' 개최(1989.04.19), 안덕면농민회 창립(1989.07.29), 2차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허태준, 사무국장 이아성) : 기존 구성에서 한경면농민회(준) 결합(1990.04.00), 안덕면농민회 농촌활동(1990.05.26-29), 읍면농민회 간부교육, UR협상 저지 및 9·7대회 결의(1990.08.28-30),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주관 '수입개방 및 UR협상저지 제주농민대회' 개최(1990.09.07),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회의 : 성산읍농민회(준), 조천읍농민회(준) 결합, 지역농민회 회장단 및 지역준비위 대표로 최고의결기구 구성(1990.09.20), 한경면농민회-간호보건전문대 농촌활동(1990.09.29-10.01), 제주도농민회 소식지 발간(1990.10.01), 'UR협상저지 및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반대를 위한 대정읍 농민대회' 개최(1990.10.04), 성산읍농민회 준비위원회 발족(1990.11.00), 제주도농민회 소식지 발간(1990.11.01),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산하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및 UR협상저지 투쟁위원회' 구성(1990.11.10), 'UR 거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1990.11.19), 제1회 제주농민 추수대동제(1990.11.25), 조천읍농민회 준비위원회 발족(1990.12.00), 제주도농

민회준비위원회 실무자와 각 지역 사무국장 연석회의 : 1990년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평가를 통해 통일적 단일대오 형성이 시급함을 공유하고 지역성의 탈피와 농민문제의 신속한 대응과 조직력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위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함을 공유함.(1991.01.08), 성산읍농민회 창립(1991.01.15), 제주도농민회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1991.02.19), 조천읍농민회 창립(1991.03.09), 수련대회를 통해 제주도농민회 창립에 대하여 결의를 모아냄(1991.03.19), 제주도농민회 창립 대의원대회(농어촌개발원) 개최 : 상임의장 임경재(한경면농민회 회장) 선출(1991.04.27), 제주도농민회 창립대회(YMCA회관)(1991.04.30), 1차 집행위원회 : 사무국장 허태준 선임(1991.05.10), ‘광주항쟁 계승 및 학생추락사건 책임자 처벌과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제7차 도민대회’ 과정에서 조천읍농민회 전우홍 회원이 백골단의 폭력에 의한 뇌상사건 발생(1991.05.18), 2차 집행위원회 : <전우홍 회원 뇌상사건에 따른 제주도농민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경호 조천읍농민회장) 구성하여 항의방문. 진상규명 등 홍보활동(1991.05.21), <전우홍 회원 뇌상사건에 따른 제주도농민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1991.05.22), ‘노태우정권 퇴진과 폭력경찰 추방을 위한 제8차 도민대회’ 참가(1991.05.25), 폭력경찰에 의한 뇌상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농어촌개발원에서 철야농성(1991.05.29), 제주도농민회와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1991.06.00), ‘폭력경찰 규탄과 특별법 및 골프장 저지 제1차 제주농민대회’(1991.06.07), 4차 집행위원회 : <제주도농민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문창국, 부위원장 부대일) 구성(1991.06.18), 제5차 집행위원회 : 특별법 반대 지역 읍·면 대책위원회 구성 추진을 결의 / 제주도농민회 공동대표,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공동대표, 북촌리 신성골프장 대책위원장과 다수의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여 특별법 관련 간담회 개최, 특별법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와 연대투쟁을 결의함(1991.07.01), ‘북촌리민의 골프장 저지 싸움을 적극 지지한다’ 발표(1991.07.02), 특별법 교육자료집 『특별법과 우리의 대응방안』 발간 / 지역별 특별법반대 서명 작업과 함께 특별법 교육 실시(1991.07.05),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1991.07.22), 6차 집행위원회 :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확정(1991.07.27), ‘제주도개발특별법 도민공청회’ 참여. 공청회 과정에서 서경림교수의 망언에 따른 성명서 발표(1991.08.08), 제주경찰서장 항의방문-전우홍회원의 뇌상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사과와 치료비 약속을 받고 뇌상사건 일단락됨(1991.08.12), 제주도농민회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준비위원회> 민자당제주도지부와 서경림교수 항의방문(1991.08.20), 제주도농민회 ‘91 간부수련대회’(1991.08.27-28), 7차 집행위원회 : 특별법 사안에 대한 지역대책위원회 구성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

(1991.09.0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 결성대회 참여
 (1991.09.07), 조천읍농민회 이재후 고문 북촌리 신성골프장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연행, 북촌리민 60여명 제주경찰서 항의농성(1991.09.18), 조천읍농민회 이재후
 고문과 북촌리 잠수회장 이성인씨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 구성(1991.09.26), 기자
 회견.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차산업 보완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주도농민
 회 입장 / <제주도개발특별법 민자당안>에 대한 제주도농민회 입장(1991.10.15),
 ‘故양용찬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명서 발표(1991.11.08), 제주도농민회 송년한
 마당(1991.12.11), 제2기 제주도농민회 대의원대회(이야성 상임의장 선
 출)(1992.03.17), 1차 집행위원회(정원태 사무국장 인준)(1992.04.07), 창립 1주년
 기념식 개최, 『제주농민』 창간호 발간(1992.04.30), 조천읍, 대정읍, 성산읍 농
 촌활동 주체와 학생과의 농활에 따른 간담회(1992.05.11), 「제주도농민회 소식
 지」 1호 발간(1992.06.04), 전농 선전교육 일꾼 수련회 참가(1992.06.21-23), 군
 회장단 연수회 참가(1992.06.26-28), 92년 하계 농산물 직판장 개장식(신촌 진드
 르)(1992.07.04), 수입개방 저지와 제주도농민회 후원을 위한 일일주점 개최
 (1992.07.12), 전농 ‘경제협동사업 전문교육’ 참가(1992.07.13-15), 『제주농민』 2
 호 발간(1992.07.22), 하계 간부수련회(1992.09.03-05), ‘제주감귤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가공용 감귤수매가 결정을 보면서’ 성명서 발표(1992.09.28), 『제주농
 민』 3호 발간(1992.10.00), ‘문화방송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성명서 발표
 (1992.10.05), 92 제주농민 대동한마당(1992.10.11), 전농 가입절차에 따른 간담
 회(1992.10.21), 현경대 민자당 제주시지구당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채택
 (1992.11.17), 『제주농민』 특집호 발간(1992.12.17), 특별법 도조례 심의와 관련
 하여 제주도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전달(1993.01.18), 3기 대의원대회 : 전농 가
 입 결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회칙 개정(1993.01.20), 전농대의원대회
 참석(1993.01.27), 제1차 정책간담회(1993.02.13), ‘쌀 수입저지 전국농민대회’ 참
 가(1993.02.15), 특별법 도조례 관련 공개토론회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
 (1993.03.04), 1차 집행위원회(사무국장 김태완 인준) / ‘반도민적, 반의회적 공개
 토론회 규탄성명서’ 공동발표(1993.03.05), ‘농협의 중국산 용성인비수입과 관련한
 공개질의서’ 발송(1993.03.15), 토지소유실태공개 1차 성명 발표(1993.03.26)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2001 『전농제주도연맹 10년사』 (제주농민)

5. 빈민운동

O1 [단체명] **제주지역노점상연합회**

O2 [약칭 및 이칭] 노점상연합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88.08.09~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회장, 부회장, 고문, 재무, 총무, 운영위원

O9 [강령]

O10 [결성 과정] 88올림픽과 도시미화란 명분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일삼으려는 당
 국에 대저하려는 노점상들이 모여 결성했다.

O11 [주요 활동] 결성대회(회장 강명옥, 부회장 오세찬), 결성대회 마치고 제주시청 안 마당
 까지 행진, 현관 앞에서 노점단속 강력 규탄(1988.08.09), 제주시청의 노점단속
 방침에 따른 비상총회 개최(1989.06.30), 노점단속방침에 항의하는 노점상연합회
 간부 식발농성 돌입(1989.07.16), ‘대책없는 노점단속 탄압저지 실천대회’ 개최,
 연좌농성(1989.07.20), 전날 노점 강제철거에 대한 항의시위 전개(1989.07.22), 노
 점상연합회 대책회의(1989.07.23)

O12 [주요 활동가] 김명옥, 오세찬, 손영삼, 최봉출, 허홍식, 김해식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1988 『제주의 소리』

 강봉수, 1989 「더 이상 갈 곳 없고 떠밀릴 곳도 없는 노점상」 『월간제주』 (8월호:
 37-39)

6. 종교운동

- O1 [단체명]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제주연합회**
- O2 [약칭 및 이칭] 제주기청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제민협, 제주연합
- O5 [존속 기간]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 O11 [주요 활동] 제주동부교회청년회 ‘제1회 청년예수제’개최(1988.12.03),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기장청년 기도회’ 개최(1989.06.24~07.08), 농활(모슬포 서림)(1991.06.05~06), 각 교회청년회를 중심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순회 세미나 개최(1991.06.00), 기청여름대회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된 겨레를’(전북 전주) 참가(1991.08.07~10), 통일희년을 향한 제주기청 수련회(1992.10.02), ‘대선승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1992.11.01), 복음성가대회(제주시 남부교회)(1992.11.29)
- O12 [주요 활동가]
- O13 [관계 단체]
- O14 [관계 자료]
-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제주의 소리』
-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1 『제주의 소리』
-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2 『제주의 소리』 (복간호: 39)교)

7. 교육운동

O1 [단체명] **제주교사협의회**

O2 [약칭 혹은 이칭] 제교협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7.10.22~1988.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7.10.15. 이영길 등 99명의 발기인으로 <제주교사협의회준비위원회> 결성

1987.11.22. <제주교사협의회> 창립(회장 이영길)

O11 [주요 활동] 제주교사협의회 준비위원회 결성(1987.10.15), 제주교사협의회 창립(회장 이영길)(1987.11.22), 창립대회는 도교위의 행사장 원천봉쇄로 참석자들이 몸싸움을 전개 20여분 늦게 시작 / 창립대회는 제주도내 일선교사를 비롯해 발령대기자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오 2시20분께 제주시내 가톨릭회관 지하강당에서 개최. 이날 정관채택과 함께 창립선언문을 발표. 이영길교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원단체 건설’, ‘어용대한교련탈퇴와 교육회비 납부거부운동 추진’, ‘평교사협의회 결성’, ‘학교내 민주화추진’ 등 8개항의 실천방침으로 된 ‘제교협의 나아갈 길’ 발표, 제1회 교사의 날 선포식(1988.05.12),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초청공연(5.21 서귀포시민회관, 5.22~23 제주시민회관)(1988.05.21~23), ‘도(비교)학력고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발표(1988.09.28), ‘민주교육법쟁취결의대회’ 개최(제주YMCA회관, 100여명 참석)(1988.10.23), ‘민주교육쟁취 시민홍보대회’ 개최(1988.12.04), 민주교육쟁취를 위한 철야농성(1988.12.08), 제주교사협의회 창립1주년 ‘교육주체한마당’ 개최(광양성당)(1988.12.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역추진위원회 발대식(1989.04.27), 민주교사 부당징계규탄 농성(1989.05.25~27)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O14 [관계 자료]

“제주도내 일선교사 99명의 발기인으로 교육민주화를 위한 교사협의회 창립”, 『제주신문』 1987년 11월 23일자(제주교육030)

“제주 교사협의회주최 제 1회 교사의 날 선포식”, 『제주신문』 1988년 5월 12일자(제

주교육031)

“제주 교사협의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초청 공연”, 『제주신문』 1988년 5월 19일자(제주교육032)

“교사협 소속 20여명 징계조치규탄 농성”, 『제주신문』 1989년 5월 26일자(제주교육 008)

O1 [단체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O2 [약칭 및 이칭] 전교조제주지부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O5 [존속 기간] 1989.06.11~현재

O6 [주요 활동지역]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87년 11월 창립한 <제주교사협의회>가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교원노조 운동이 시작되면서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제주지부>는 6월 11일 결성대회를 가졌다. <전교조>는 결성되자마자 전국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제주지부> 역시 창립 3일 만인 6월 14일 사무국장 이용중 교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15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 1994년 3월 해직교사 15명 중 13명이 복직되었고, 1999년에는 1월 전교조가 합법화되었다.

O11 [주요 활동] 제주교사협의회 준비위원회 결성(1987.10.15), 제주교사협의회 창립(회장 이영길)(1987.11.22), ‘도(비교)학력고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발표(1988.09.28), ‘민주교육법쟁취결의대회’ 개최(제주YMCA회관, 100여명 참석)(1988.10.23), ‘민주교육쟁취 시민홍보대회’ 개최(1988.12.04), 민주교육쟁취를 위한 철야농성(1988.12.08), 제주교사협의회 창립1주년 ‘교육주체한마당’ 개최(광양성당)(1988.12.18), 제주초등교사협의회 창립(1989.04.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준비위원장 이용중)(1989.05.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1989.05.27), (제주지역에서는 공항, 부두의 원천봉쇄로 현직교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간사 1명만 참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위원장 윤영규)(1989.0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결성 (지부장 이영길, 사무국장 이용중)(1989.06.11), 결성식장인 제주대 입구 사전 봉쇄로 행사 전날 밤 미리 가서 밤을 새우거나 행사 당일 새벽에 숲길을 뚫고 행사장에 도착함, 이용중 사

무국장 구속(1989.06.14), 이용중 교사 석방 요구 경찰서 집단 항의함 (1989.06.15), 이용중 교사 파면을 시작으로, 10월 18일 김창후, 이석문 교사(오현고)가 직권면직되어 총 15명의 교사가 해직됨. 조합원명단 공개, 탈퇴무효화 선언, 징계위 출석 거부, 출근 투쟁 등이 이어짐.(1989.07.01),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제주교대)(1989.08.10),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학부모회> 결성(제주YWCA)(1989.08.26), 고희권 예비교사 신규 임용 제외 철회 투쟁(1989.08.28), 전교조 사수 및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한 범도민대회(1989.09.24), 도교위 국정 감사, 해직교사 항의 시위(1989.09.27), '전교조제주지부소식' 1호 발간(1989.10.10), 해직교사 학교 방문 시작(1989.10.17), 전교조 합법화 기원 정태춘 초청공연(1989.10.28), 참교육 원년의 밤(1989.12.29),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유치원 전임 강사 정식교사 채용 투쟁)(1990.03.16), '참교육 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 대회 한라출정식 및 4·3추모제'(1990.04.01~03), (성판악에서 23명 전원 연행), 사립학교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집행부 철야 농성(선전전. 현장방문. 토론회 등)(1990.04.16~19), 소년체전 매스게임 학생 과다 동원 철회 투쟁(선전전, 현장방문, 도교위 항의)(1990.05.01), 교육민주화 선언 4돌 기념식 및 최종순 교사 초청강연회(1990.05.10), 전교조 결성 1주년 전국교사대회 참여(7명 참여)(1990.05.27), 전교조제주지부 결성 1주년 기념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과 교육악법 저지 제주 지역교사 결의 대회(1990.06.09),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제주지역추진위원회' 결성 (원상복직 요구 서명, 광고 투쟁 전개)(1990.07.13), 우리 교육 정기구독자 400명 돌파(1990.08.20), 지부장단 지구 순방(1990.09.24 ~ 10.15), 참교육 강좌 (이상석 교사 : 민주적인 학급 운영)(1990.09.29), 운영규 위원장 지부 방문, 강연 (한국 교육민주화운동의 현황과 과제)(1990.10.21~23), 참교육 강좌 (김남선 교사 : 올바른 성교육과 이성교제 지도)(1990.10.27), '교육장악 음모 종합대책안 철회와 교육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제주지역 교육주체 공동투쟁위원회' 결성(1990.11.16), '서귀·남제주지회 결성'(1990.11.14), 임용고시 저지 투쟁 전개(1991.01.03~20), '제주시·북제주지회' 결성(1991.01.04), 제주교사 시국선언 (강경대 타살 정국-민주화를 바라는 제주교사시국에 관한 입장 발표 : 교사 88명 참가, 14명 명단 공개, 흥사단 사무실)(1991.05.24), 이영길 지부장 지방의회 선거에서 도의원 당선(1991.06.00), 교과전담제 실시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 초등교사 서명운동 전개(1991.09.00), 4·3역사 기행 시작(98년 12월까지 총 49회 실시, 1,200여 명 참여)(1991.12.00), 겨울방학 '교사학교' 개설 (1992.01.00), 김상진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1992.02.00), 제주역사바로알기 자료집 자료집 '장두 이재수' 발간. 이후 '세화리 잠녀항쟁', '4·3 항쟁'을 발간함.(1992.03.00), 제주시·북제주지회 참교육 강좌(황재숙 교사 : 개인상담, 집단

상담)(1992.04.00), 교육영화 '달힌 교문을 열며' 상영(제주대. 총 2,500여명 관람)(1992.05.15~17), 서귀·남제주지회 참교육 강좌(1992.05.25), (김남선 교사 : 교사와 학생의 참만남을 위한 집단 상담), 전교조 결성 3주년 대회 참가 (30여명 참여)(1992.05.31), 전교조제주지부 결성 3주년 기념 제주교사대회(1992.06.13), (제주대, 노래극 풍물 공연과 초청 강연),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제주추진위원회' 결성 (9월말까지 교사 500여명 포함 총 1만 2천여 명 서명, 국회청원)(1992.06.24), 서귀·남제주지회 참교육 강좌 (감수성 이론, 집단상담, 학급운영과 상담)(1992.08.25~26), 교육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전교조 합법화 촉구 교사 선언(1992.11.08), (전국 1만여 교사, 제주지역 36개교 46명 명단 공개), 지역사회를 급별(초등, 중등)지회 전환(1993.02.00)

O12 [주요 활동가] 제1기 지부장-이영길, 부지부장-김창후, 사무국장-이용중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전교조제주지부 홈페이지(2006년 10월 1일자 검색)

O1 [단체명]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O2 [약칭 및 이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89.08.10~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9년 6월 17일, '전교조전국공대위'가 꾸러졌다. 이에 제주지역에서도 공대위를 결성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전교조를 지지하는 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1989년 8월 10일 결성하였다. 이날 결성대회는 경찰이 원천봉쇄 속에 제주교육대학 학생회관에서 미리 학내에 들어가 있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결성선언문을 통해 '현정권은 식민지교육의 잔재를 척결하기는커녕 구속, 파면, 해임 등 온갖 물리력을 동원한 탄압행위는 참교육의 실현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참교육 실현은 비단 선생님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전국민이 함께 이루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임을 통감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결성경위를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5개항의 활동방향을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다. 전교조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 선전활동의 전개, 민주적인 학부모와 학생의 자주적인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조직적 역량으로 결집해 나갈 것, 전도민과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 전개, 책임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전교조를 실질적 교육 주체로 인정할 것, 공안통치정국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엄숙히 경고 등이다.

O11 [주요 활동] '전교조제주지역공대위 결성보고 및 원천봉쇄에 따른 입장' 발표.(1989.08.11)

O12 [주요 활동가] 공동대표 고창훈(제주대교수,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한석지(제주대학교 교수협의회), 김순희(제주여민회), 김학준(제주청년연합), 송시우(제주대학교 사범대학생회)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편집실, 1989 「뉴스와 화제」 『월간제주』 (9·10월 합본호: 29-31)(

O1 [단체명] **참교육실현을 위한 제주지역학부모회**

O2 [약칭 혹은 이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08.26~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9.07.23. 창립준비위원회 발족(YWCA회관, 위원장 오성찬)

1989.08.26. 창립대회 창립대회는 당초 YWCA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병력을 동원, 출입을 봉쇄하는 바람에 장소를 신제주 연동교회로 옮겨 학부모, 교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치러졌다. 이 날 학부모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교사들과 함께 진실을 추구하고, 평화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 제주지역 학부모들은 오늘의 참담한 교육현실에 무관심 했던 사실을 반성하며 참교육 실천을 위한 제주지역 학부모회 창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O11 [주요 활동]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더 이상 황폐해지는 것은 조국이 황폐의 길로 치

답는 것이며, 교육문제해결은 선생님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육의 엄연한 주체인 학부모들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해 무조건 지지보다 잘못된 일에 사정없이 비판도 가하는 학부모들의 순수한 자주적 단체임을 표방 준비위원회 창립대회에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모든 징계절차의 즉각 중단 △대회를 통한 문제해결 △전교조 가입 교사를 탄압하기 위해 가족·친지에게 가해지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다.

O12 [주요 활동가] : 오성찬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편집실, 1989 「뉴스와 화제」 『월간제주』 (8월호: 12-13)

“참교육 학부모회 경찰봉쇄속 결성”, 『제주신문』 1989년 8월 28일자(제주교육033)

8. 문화예술운동

O1 [단체명] 극단 수눔음

O2 [약칭 및 이칭] 수눔음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80.08.00~1983.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수눔음 문화선언 한반도의 맨 끝에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홀로 있는 탐라라는 아름다운 고장에서 우리는 태어났다. 이곳은 문화의 변방이며, 행적적 벽지이기 이전에 틀림없이 민족의 얼과 맥박이 살아뛰는 한국의 국토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변두리에 위치한 우리 고장에는 조상의 슬기로운 삶의 자취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에 비교하여 변방이 아니라 사실은 쓰러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할 전위의 자리인 것이다, 이제는 이곳에서 파문을 던져 외래문화가 범람하는 저 한복판에까지 전파시켜야만 할 것이다.

O10 [결성 과정] 유신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정부수립 열망이 총만했던 1980년, 제주지역은 문화운동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 초기에는 문학, 음악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논의가 있었으나 1980년 5월 광주학살 이후 냉엄한 현실 앞에 마당극운동을 준비하던 인사들이 ‘극단 수눔음’을 창립하였다. 극단 수눔음의 창단과 활동은 산업화의 물결 속에 냉대 받고 밀려나는 제주의 전통무속을 저항정신에 접목시킨 ‘마당굿’의 모범을 창출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O11 [주요 활동] 땀풀이(1980년 8월 공연) 육지 거대자본에 의한 제주도의 토지침탈 문제를 다룬 공연으로, 제주도 전통무속 중의 굿놀이인 ‘영감놀이’, ‘세경놀이’, ‘전상놀이’ 등을 차용하였고, 제주민요를 활용한 작품이다. 향파두리놀이(1980년 11월 공연)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파헤친 작품이다. 돌풀이(1981년 9월 공연) 임술민란으로 알려진 강제검의 난을 마당극화 한 작품이다. 좀녀풀이(1982년 12월 공연) 그동안 묻혀져 왔던 일제강점기 세화리 해녀항일투쟁을 마당극화 한 작품이다. 태손땅(1983년 10월) 제주도의 토지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 공연 이후 제주대학교에서 시위가 있었고, 공연 장소인 제주YMCA 주변에서도 시위 시도가 있다. 결국 ‘극단수눔음’은 이 작품 공연을 계기로 당국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O12 [주요 활동가] 문무병, 김수열, 정공철, 부숙희, 양성자, 김창후

O13 [관계 단체] ‘극단 한올래’ : ‘극단 수놓음’이 해산 당한 이후 꾸준히 문화운동 조직의 재건을 위해 애쓰던 ‘극단 수놓음’의 활동가 및 후배들에 의해 1985년 창단되었다. 하지만 제주무속의 원형을 다룬 ‘일식풀이’ 공연 이후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극단 놀’ : 한올래의 활동이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수놓음’ 및 ‘한올래’의 정통성을 잇고자 활동가들이 재건했다. 1986년 2월 한말 제주지역의 민란인 ‘방성철의 난’을 마당극으로 준비하고 공연하려 했으나, 당국의 탄압에 의해 공연이 저지되면서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O14 [관계 자료]

민중문화운동협의회, 1984 「현 단계 문화운동의 과제」 『민중문화』 제3호(문무병, 1989 「제주도의 문화운동」, 제주사회연구소편, 『제주사회연구-제주공동체를 위하여』 창간호, 역사비평사)

O1 [단체명] 노래패 숨비소리

O2 [약칭 및 이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

O5 [존속 기간] 1984.00.00~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숨비소리>는 1984년 서울의 모 카페에서 ‘같은 사람들’이라는 모임에서 출발한다. 이듬해 5월, ‘진달래 모임’을 제주에서 갖고, 11월에는 ‘동네북이야기’ 발표회를 가진 후, 1986년 3월 제주YMCA에서 그림자 노래 인형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발표를 시작으로 <숨비소리>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숨비소리>는 1990년을 전후로 운동성을 담보한 공연을 하고, 제문연 건설 준비위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O11 [주요 활동] 극단 무 ‘상황·4’ 창조공연(1989.11.09), 노래발표 ‘찬란한 새벽을 위하여’ 공연(<우리노래연구회>와 공동주관 /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의 일환)(1989.11.12), UR협상 및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저지를 위한 노래공연 「손모아 선언하나니」 공연(1990.12.01~02)

O12 [주요 활동가] 한재준, 오영민, 김형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동기획위원회, 1989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팸플릿
“특조법저지공연 노래패 숨비소리”, 『제주신문』 1990년 12월 2일자

O1 [단체명] **놀이패 한라산**

O2 [약칭 및 이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O5 [존속 기간] 1987.08.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 체계] 조직 체계는 시기별로 달리했으며, 2006년 현재는 대표-운영위원회 체계이며 운영위원회를 이루는 각 부서에는 기획부, 총무부, 교육부, 조직부, 편집부가 있다.

O9 [강령] 한라산 선언문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민족도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해 나가는 창조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억압하는 어떠한 형태의 제약도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주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한 민족에게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올바른 문화도 또한 민중적·민족적 자주성에 기초한 생산적 노동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단 이후 우리 민족의 상황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 정상적인 발전이 억제되고 침탈당하여, 이제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화적 예속 또한 가시적으로 이미 보여지고 있으며 우리의 호흡에 어느 새 침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문화운동의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개조해 나가고 동시에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을 극복하는 참된 민족·민중문화의 건설에 있다. 그것은 민중의 혼과 육체를 마비시키고 통증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는 아편의 문화가 아니라, 고통과 출혈이 따를지라도 곳곳이 인내하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독약의 처방이어야 한다. 제국주의적 아편문화에 맞서, 맹독으로 무장한 전투적 생산적 문화로 대항해 나가는 것, 그 토대는 생산대중의 창조적이고 건강한 삶과 노동에 있으며 새로운 사회로 향하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적대세력의 기반을 파괴하는 일인 동시에 민중적 민족적 역량을 발흥하고 조직해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그동안 우리들의 활동에서 드러난 서두름의 관념성과 기다림의 허구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을 바라지 않고, 작게는 한 사람의

억압된 삶을 풀어나가는 일에서부터 현단계 우리민족에게 누적되어 온 사회적인 해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까지 성실히 담보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우리 운동의 연구 및 실천적 과제로 삼아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삶의 문화를 아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당이고자 한다. 삶의 마당, 놀이마당, 싸움마당, 꿈의 마당 그리하여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한마당,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몸짓으로 풀어나가는 민중의, 민족의 마당이고자 한다. 노동과 놀이는 투쟁과 꿈이 하나로 통일되는 삶과 문화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징소리를 준엄하게 울린다. 자, 투쟁이다! 1987년 8월 놀이패 한라산 일동

O10 [결성 과정] ‘수놓음’과 ‘놀’, ‘한올래’ 등으로 이어져 오던 제주지역 마당극운동가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흩어져 있던 역량을 재결집하여 조직화와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제주지역 마당극운동의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하고자 했다. 하여 1987년 8월 「놀이패 한라산」을 창립하였다. 위 ‘한라산 선언문’은 창립 당시 엄중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놀이패 한라산」 문화운동 지침이었고, 변혁운동에서 지역문화운동이 나아갈 길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렇듯 제주지역 현안을 전통적 양식에 담아낸 ‘마당극’을 매개로 사회에 발언하는 문예집단이며, 투쟁의 전위로 놀이패 한라산은 출범하였다.

O11 [주요 활동] 1989년을 기점으로 놀이패 한라산은 ‘상반기 4·3, 하반기 제주지역 현안 문제’를 다루자는 내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 합의는 이후 지역현실과 내부조건에 의해 변화됐지만, 지역에 뿌리를 둔 문화운동집단으로서의 당연한 진로설정이었으며, 마당극을 무기로 사회변혁에 기여하겠다는 초기 활동가들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주지역에도 그동안 군부정권 하에서 억눌려 왔던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투쟁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투쟁을 지역 민중들과 함께 하고자 제주지역 현안문제를 마당극화 하여 현장으로 달려갔다. 관광개발 국면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이익의 분배에도 철저히 소외당하는 도민의 현실을 고발하고,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싸움에도 본격적인 투쟁국면 이전부터 작품을 만들어 여론화 작업을 시도했다. 또, 제주도개발특별법 투쟁과 골프장 반대투쟁에도 한라산의 마당극은 무기였다. 4·3공연은 더욱 힘들었다. 1989년 공연에 앞서 단원들은 1년 전부터 현장조사 등 준비를 했고, 연습에 앞서서는 고사를 지내며 ‘구속’도 불사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그만큼 4·3은 이때까지도 금기의 대상이었고, 끄꽂 얼어붙은 정국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4월곳 한라산 공연 이후 제주경찰서 대공과에서 소환장이 날아들고 몇몇 단원은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놀이패 한라산은 그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4·3공연을 준비했고 어느덧 16년

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월굿 공연을 하고 있다. 이후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절차적 민주화가 차츰 갖춰지고,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따라 놀이패 한라산의 활동은 점차 전문적인 연행집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전 운동부문이 분화되고 기층민중들의 조직화도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좀더 완성도 높은 작품생산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지역에 뿌리 둔 연행매체로서 제주전통연희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놀이패 한라산의 공연작품은 다음과 같다 (1987년~1993.2). 자체공연으로 1987년에는 「그 날 이후」 공연(8월, 제주YMCA) : 창립공연, 제1회 우리문화한마당 공연작, 1988년에는 「항파두리놀이」, 「요 노릇을 어떻허코」 기타 : 제2회 우리문화한마당 공연작, 1989년에는 「4월굿 한라산」 기타 : 제2회 민족극한마당 참가작, 「선생님 힘내세요」, 「설운 땅 일어서는 사람들」 기타 :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연작, 1990년에는 「4월굿 백조일손」, 「우알보름 특조보름」 기타 : 제4회 우리문화한마당 공연작, 1991년에는 「4월굿 헛묘」 기타 : 제4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참가작, 「개발바람 오름너머」 기타 : 제5회 우리문화한마당 공연작, 1992년에는 「4월굿 꽃놀림」 기타 : 제5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참가작(민족광대상 수상 / 정공철). 연합공연으로는 1987에는 「다시는 지지 않우리」(‘우리노래연구회’와 공동창작), 1991년에는 「새날을 향하여」(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민중문예운동연합(준) 연합공연), 1992년에는 「살맛나는 세상」(놀이패 한라산, 노래패 섬하나산하나, 제주대 동아리연합회 등). 초청공연으로는 제주도는 타지역 극단의 공연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열악한 문화환경을 대변하는데, 놀이패 한라산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민족극운동협회」를 중심으로 교류를 활성화했으며 타 지역 극단을 초청하여 제주도민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금수궁가」(김명곤 창작판소리), 「이바구세상」(극단 현장 / 1991. 5. 26~27), 「내 청춘 파도에 실고」(부산 극단 자갈치 / 1992). 대중문화사업의 핵심은 강습이다. 놀이패 한라산은 창립 이듬해부터 ‘풍물교실’을 열어 우리문화의 저변확대에 나섰다, 초창기 ‘풍물교실’은 매회마다 만원을 이루며 우리문화 보급의 주요한 창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사물놀이 공연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문화교실은 ‘탈춤교실’, ‘마당극교실’, ‘어린이 연극교실’ 등으로 확대하며 대중문화사업의 폭을 넓혔다. 이후 전문 연희패가 등장하면서 ‘풍물교실’ 등은 소규모 강습 형식으로 전환됐고, 마당극 전문집단으로 거듭나려는 내부결의에 따라 강습 등의 대중문화사업은 차츰 줄여가고 있다.

O12 [주요 활동가] 김수열, 정공철, 김경훈, 한경임, 김익현, 장윤식, 김석운, 이상철, 양근혁, 윤미란, 윤현숙, 고혜숙, 윤현숙, 김영진, 김기정, 부진희, 한송이, 여상익, 이정은, 이효춘, 강창훈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장윤식, 「놀이패한라산 15년사」 미발표원고
민주쟁취국민운동 제주본부 『제주의 소리』 제9호

O1 [단체명] **우리노래연구회**

O2 [약칭 및 이칭] 우노연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O5 [존속 기간] 1987.08.00~1991.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7년 6월 항쟁은 제주지역 문화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6월 항쟁 이후 노래로 변혁운동에 복무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1987년 8월 우리노래연구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우리노래연구회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의 창립과 더불어 창립되었으며 1987년 8월 창립공연을 가졌다.

O11 [주요 활동] 공연 및 민중가요 Tape제작 및 보급을 하였다. 노래테이프 1집 「이 땅의 함성으로」 제작(1988.02.27), 노래(민요)테이프 2집 「이어싸 어기야 처라」 제작(1988.03.00), 노래테이프 3집 「통일노래모음집」 제작(1988.08.00), 4월제 노래발표(1989.04.00), 노래테이프 4집 「그해 4월 그리고」 제작(1989.06.00), 제민협 문화교실의 노래교실 운영(1989.08.00), 민족문학제 찬조공연(1989.11.11), 노래발표 ‘찬란한 새벽을 위하여’ 공연(<노래모임 숨비소리>와 공동주관)(1989.11.12), ‘4월제’ 노래공연 「잠들지 않는 남도」(1990.04.00), 전교조제주지부 김원중 초청공연 찬조 발표(1990.06.00), 범민족대회 판굿 「통일의 나라로 가자」 참가(1990.08.00), 제민협 주최 안치환초청공연 찬조 출연(1990.12.00), 4.3노래테이프 「불의 섬」 제작(1991.04.00), 민주열사추모와 구속자석방을 위한 노래한마당 「일어나라 열사여」 공동참가(1991.06.00), 「5,6월투쟁사진전」 찬조출연(1991.08.00)

O12 [주요 활동가] 김민수, 박유미, 문광원

O13 [관계 단체] 우리노래연구회는 이후 ‘민요패소리왓’과 ‘노래패 섬하나산하나’로 분화되었다.

O14 [관계 자료]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동기획위원회, 1989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팸플릿

- O1 [단체명] **제주청년문학회**
- O2 [약칭 및 이칭] 청문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 O5 [존속 기간] 1987.08.00~1994.02.00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1980년대 초반부터 문학을 통해 현실참여를 주창했던 제주지역 문학동호인들이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의기투합 해 결성했다.
- O11 [주요 활동] 1987년 6월 항쟁 이후 격변기에 전단시, 벽시 등을 통해 문학작품을 현장으로 투입시켰다. 또한 매해 4월제(4·3항쟁을 다루는 비합법 행사)에 참여하여 4·3진상규명운동에 앞장섰다. ‘41주기 4·3추모제’ 참가, ‘4·3문학제’ 개최(1989.4.01-03), ‘4·3시전’ (제주시민회관 앞 광장)-이틀 만에 경찰에 의해 철거됨.(1989.04.01-03), ‘4·3문학이야기마당’(세종미술관)(1989.04.01), ‘4·3문학제’ 관련 오승국 대표 연행(1989.04.25), 민족문학제(‘우리문화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1989.11.09-12), 시판화전(세종미술관)(1989.11.09-12), 민족문학의 밤(세종미술관, 고은 초청강연 / 문학이야기마당)(1989.11.11), ‘4·3문학 이야기마당’(1990.04.01), 주제발표 : 「4·3문학의 흐름과 과제」 (함승보), 토론 : 현길언, 오성찬, 문무병, 한림화, 임현영, 공동창작 4·3시화전 「용강마을 그 피어린 세월」 (세종미술관)(1990.04.03~05), 제4회 민족문학제(1990.10.21-30), 제주문화운동협의회의 우리문화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 : 제4회 우리문화한마당 민족문학제 공동준비위원회가 개최하고, 제주청년문학회, 제주대국문학회, 대학문학동아리 신세대가 주관하고 주제는 ‘제주지역 민중생존권 문제’로 행사내용은 시화전(제주대 본관 앞마당(10.21~10.22), 제주시 세종미술관(10.23~10.25), 서귀포 상미전시실 (10.26~10.27), 제1회 제주사랑실천 글짓기대회(문학백일장 / 10.21 제주대 강당) 문학 이야기마당(‘제주지역 문학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10.28 YMCA강당
- O12 [주요 활동가] 강덕환, 오승국, 김경훈, 함승보, 강남훈
- O13 [관계 단체]
- O14 [관계 자료]
-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동기획위원회, 1989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팸플릿
 "4·3 진상 규명 촉구하고 넋 달래, 42주기 맞아 추모제 등 다양한 행사" , 『제주신문』 1990년 4월 8일자(제주문화예술)

O1 [단체명] **제주문화운동협의회**

O2 [약칭 및 이칭] 제문협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O5 [존속 기간] 1987.08.20~1995.12.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의장-집행위원회-사무국의 조직 체계이며 집행위원회에는 각 분과위원장 및 사무국장,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약간 명의 특위위원장이 참석한다. 매 시기별로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사무국에는 총무부, 편집부, 조직부 등을 두었다. 또한 제민협이 존속하는 동안 매년 1명씩 제민협 사무처에 실무자를 파견했다.

O9 [강령]

O10 [결성 과정] 제주문화운동협의회는 1980년 ‘극단 수놓음’ 이후 마당극 및 문화운동의 재건을 위해 애쓰던 인사들에 의해 1987년 8월 창립되었다. 제문협의 창립을 가져올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조직되었던 소그룹과 공개적인 대중운동을 지향하던 인사들이 대거 문화운동 진영에 합류했고, 6월 항쟁 이후 새롭게 사회변혁의 대의에 동의하던 신진세력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따라서 제문협의 가맹단체인 ‘제주청년문학회’, ‘놀이패 한라산’, ‘우리노래연구회’ 등도 또한 1987년 8월을 전후하여 창립되었다. ‘우리노래연구회’는 후에 ‘민요패 소리왓’과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로 분화하였고 그들은 각각 제문협의 가맹단체가 되었다.

O11 [주요 활동] 우리문화한마당, 문화교실 <제문협>은 89년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산하 문화패 별로 탈춤, 풍물, 문학, 판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제1기 문화교실’을 열었다. ‘문화교실’에는 그림패 <보름코지>, 사진패 <시각인식> 등 <제문협> 소속이 아닌 문화패들도 참여하였으며, ‘문화교실’은 이후 해마다 계속 이어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1회 우리문화한마당’ 개최(1987.08.22~25), 이애주 교수 초청 춤 ‘바람맞이’ 공연(제주대학교 체육관)(1987.08.31), 새한병원노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 참가(1988.02.09), 노동해방굿 공연(1988.05.09), 대정읍 통일리 농촌봉사활동(1988.05.26~31), ‘제2회 우리문화한마당’ 「한라여, 삶의 공동체여!」 개최(1988.08.20-09.04), <그림패 보름코지> 판화전 ‘나의 칼, 우리노래’(세종미술관)(1988.08.20~24), <제주청년문학회> 문학간담회 “분단극복의 문학”(세종미술관)(1988.08.21), <놀이패 한라산>, <우리노래연구회> 공동창작 마당굿 “요

노릇을 어떻허코” 공연(가톨릭회관)(1989.08.22~23), <제주청년문학회> 공동창작 시화전(가톨릭회관)(1989.08.22~24), “영상이야기” 개최(‘나의 반쪽은 지금’, ‘우리는 떡고물이나 받아먹는 노동자가 아니다’ 상영(1989.08.23~24), (1989.09.01~04), <그림패 보름코지> 판화전 ‘나의 칼, 우리노래’(서귀포 원앙다실), <놀이패 한라산>, <우리노래연구회> 공동창작 마당극 “요 노릇을 어떻허코” 공연(서귀포시민회관)(1989.09.03~04), <제주청년문학회> 공동창작시화전(서귀포 시민회관)(1989.09.03~04), 창작판소리 ‘금수궁가’ 초청공연(1988.12.03~04), ‘제1기 문화교실’(풍물, 탈춤, 판화, 문학) 개설. 140명 수료(1989.01.08~16), 회원 단합대회(1989.06.04),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제주사람 멋진 원한 절로설랑 일어나지라」 개최(1989.11.08~12), 제문협을 중심으로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동기획위원회(제주문화운동협의회, 우리노래연구회, 청년문학회, 놀이패 한라산, 그림패 보름코지, 사진패 시각인식, 극단 무, 노래모임 숨비소리)를 구성하여 개최함. 전야제 ‘한판잔치 열어보세’(세종미술관 / 열림굿, 노래, 집체시낭송)(1989.11.08), 민족문학제(청년문학회 주관 / 세종미술관 / 시판화전, 초청강연, 문학이야기마당)(1989.11.09~12), 사진전 ‘89 외침전’(사진패 시각인식 주관 / 세종미술관)(1989.11.09~12), 그림전 ‘관광 땅, 제주사람’展(그림패 보름코지 기획 / 가톨릭회관 / 전시, ‘제주지역미술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세미나, 판화장터)(1989.11.09-12), 마당극 ‘설운 땅,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놀이패 한라산 주관 / YMCA회관)(1989.11.09~11), 1인극 ‘상황·4’ 공연(극단 무 주관 / 세종미술관)(1989.11.09), 영화상영 ‘코스타가브라스 정치영화’(YWCA회관)(1989.11.08-11), 대동제 ‘제주사람 멋진 원한 절로설랑 일어나지라’(길놀이, 노래발표, 풍물굿, 시낭송)(1989.11.12), 정기총회(대표 김수열, 사무국장 장운식 선출)(1989.12.14)

O12 [주요 활동가] 정공철, 김수열, 현애자, 김석운, 오승국, 장운식, 고혜숙, 김정숙, 윤현숙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도내젊은층 주축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창립", 『제주신문』 1987년 8월 20일자(제주문화예술001)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주최로 이애주 교수 한판춤 바람맞이 펼쳐져", 『제주신문』 1987년 9월 1일자(제주문화예술023)

"제주 문화운동협의회 21일부터 우리문화 한마당 펼쳐", 『제주신문』 1988년 8월 20일자(제주문화예술002)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문화』 (제2호)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동기획위원회, 1989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팸플릿

O1 [단체명] **사진패 시각인식**

O2 [약칭 및 이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시각매체운동연구회,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

O5 [존속 기간] 1987.11.00~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시각을 통한 자의식 확립과 제주도내 전반적인 사건·활동을 기록함으로써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진상을 인식하고, 소비지향적이고 상업적인 기성 사진을 극복·탈피하여 건강한 민중문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려는 사진가들이 모여 결성했다.

O11 [주요 활동] 고문호 '87민주항쟁 사진전' 제주도내 4개 대학 전시(1988.04.00), 창립전(1988.06.00), 제주대학교 대동제 후원전시(1988.10.00), '송악산군사기지계획철회를 위한 평화대회' 행사장인 관덕정에서 '송악산투쟁사진전'(1988.11.19-23), 89 '외침전'(세종미술관,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의 일환)(1989.11.09-12), 집체극 「이제, 우리가 건설하리라」 공동기획(1990.11.30-12.01)

O12 [주요 활동가] 김남형

O13 [관계 단체] 영상사진패 움직거리

O14 [관계 자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1989 『제주문화』 (제4호: 12)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제주의 소리』 (제11호: 3)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동기획위원회, 1989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팸플릿(제주문화예술)

"제주현안다룬 문화행사 풍성", 『제주신문』 1990년 11월 30일자(제주문화예술025)

O1 [단체명] **그림패 보름코지**

O2 [약칭 및 이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시각매체운동연구회,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

O5 [존속 기간] 1988.03.00~0000.00.00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 O11 [주요 활동] 창립전(1988.03.00), 판화전 「나의 칼 우리 노래」(1988.07.00), 걸개그림 「통일해방 그 날이!」, 「통일해원도」 제작, 우리문화한마당 순회전 (1988.08.00~10.00), '통일염원 걸개 그림전' 개최(세종미술관)(1988.10.08~12), 「반전 반핵」 걸개그림 제작(1988.11.00), 한겨레강좌 걸개그림 전시, 판화교실 (1989.01.00), 서울 전시회(그림마당 민)(1989.04.22~27), '관광땅, 제주사람'展(가톨릭회관,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의 일환으로 전시 / 부대행사로 '제주지역미술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자체세미나 개최, 판화장터)(1989.11.09~12), 집체극 「이제, 우리가 건설하리라」 공동기획(1990.11.30~12.01)
- O12 [주요 활동가] 박경훈, 김유정, 고길천
- O13 [관계 단체]
- O14 [관계 자료]
 민주쟁취국민운동 제주본부, 1988 『제주의 소리』 제9호)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공동기획위원회, 1989 「제3회 우리문화한마당」 팸플렛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문화』(제3호)
 "제주민중의 한, 한마당 극으로 표출 소리패 신명등 7개문화패 공동기획 「이제, 우리가…」 집체극 공연", 『제주신문』 1990년 11월 30일자(제주문화예술026)

- O1 [단체명] 시각매체운동연구회
- O2 [약칭 혹은 이칭] 시매연
-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그림패 보름코지, 영상사진패 움직거리
-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 O5 [[존속 기간] 1990.09.00~0000.00.00
-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 O7 [법적 상태]
- O8 [조직 체계]
- O9 [강령]
- O10 [결성 과정]
- O11 [주요 활동] 특조법공청회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1990.09.12),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왜곡보도에 대해 항의하는 공개질의서 공동발표(1990.09.14), 창립전 「안됩니다, 이

제 더 이상!! 우리가 나서야합니다」 개최(1990.10.19~21), 「특조법 및 UR협상
저지 범도민운동본부 결성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가(1990.11.16), 집체극 「이
제, 우리가 건설하리라」 공동기획(1990.11.30~12.01)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특조법공청회 왜곡보도 항의 도내 모일간지에 공개질의서 9개사회단체", 『제주신문』
1990년 9월 15일자

"도민반대하는 특조법 강행의도 밝혀라", 『제주신문』 1990년 11월 17일자(제주문화예
술028)

"제주민중의 한, 한마당 극으로 표출 소리패 신명등 7개문화패 공동기획 「이제, 우리
가…」 집체극 공연", 『제주신문』 1990년 11월 30일자(제주문화예술
026)

O1 [단체명]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

O2 [약칭 및 이칭] 문연건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91.00.00~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그림패 <보름코지>, 사진패 <시각인식>, 노래패 <숨비소리> 등을 가맹단
체로 창립준비를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창립하지 못하고 해소되었다.

O11 [주요 활동] 노래분과 「숨비소리」와 풍물춤분과 「새날」의 정기 창작곡발표회 「합
성」 공연(제주도문예회관소극장)(1991.06.14~15), 5·6월투쟁사진전 「민주 애
너를 부르마!」 전시(<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주지역대책회의>
주최, 세종미술관)(1991.07.00~21)

O12 [주요 활동가] 박경훈, 김유정, 김남형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제주문예연건설준비위 창작곡발표회 열려", 『제주신문』 1991년 6월 13일자(제주문화
예술029)

O1 [단체명]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O2 [약칭 혹은 이칭] 섬산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O5 [존속 기간] 1991.12.21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7년 8월 창립한 <우리노래연구회>의 가요분과와 민요분과 분리하면서
가요분과가 창립한 노래패

O11 [주요 활동] 창립공연(제주대학교)(1991.12.21~22), 4·3추모 노래공연(1992.04.03)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우리노래연구회

O14 [관계 자료]

“놀이패 「한라산」 4·3굿 「꽃놀림」 공연 (제5회 민족극한마당, 4월6~7일 부산민족극
터 신명천지 - 북촌리 학살사건 통해 4·3진상 규명)”, 『제주신문』 1992
년 3월 29일자(제주문화예술030)

O1 [단체명] 민요패 소리왓

O2 [약칭 혹은 이칭] 소리왓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O5 [존속 기간] 1992.01.06~현재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7년 8월 창립한 <우리노래연구회>의 가요분과와 민요분과 분리하면서
민요분과가 창립한 민요패 80년대의 암울하고 복잡했던 시대상황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민요연구회의 민요를 접한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것과
같았다. 당시 우리에게 민요는 구비문학의 한 분야로서 연구해야 할 대상, 또는

늘 화려한 무대매너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무대를 장식하지만 어딘가 생동감이 없어보이는 통속민요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창작민요, 구전가요 등 또 다른 민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배우고 익혀보니 그게 모두 우리의 가까운 과거와 현재 얘기다. 옛 것으로만 보이던 민요가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즐기고 향유하는 민요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의 관심을 민요로 이끌었다. 충남대 민요패의 제주전수에 통역 겸해 공동전수형태로 참여한 것도 활동에 탄력을 가한다. 87년도에 제주문화운동협의회(제문협)가 창립되고, 학생신분으로서 그 창립을 감격과 함께 바라보았다. 제문협의 한 조직이었던 우리노래연구회는 당초에는 노래패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90년, 우노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문협 선배들의 의도와, 졸업 후 활동 진로를 고민하고 있던 제주대 국문학과 민요분과 '섬비나리' 출신 세 명(안민희, 문애선, 안희정)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가요분과와 민요분과로 우노연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연결은 쉽지 않았다. 민요의 창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픈 민요 익히기는 곧 한계를 드러냈고, 봉건시대의 민요를 오늘 이곳에 끌어내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중이었다. 잠깐의 침체기가 있었다. 90년 말에서 91년 초 사이에 안동민요연구회 소모임 활동을 하던 권오동, 사학과 노래패 '노래마을' 출신 현희순이 차례로 민요분과에 합류하면서 전망은 조금씩 구체화되어가기 시작한다. 91년 상반기에 우리노래연구회는 4.3제주민중항쟁 43주기 '사월제'에서 보급하기 위해 '불타는 섬'이란 노래테이프를 제작했다. 자체제작 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제작여건상 음질이 떨어져서 많이 보급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 남은 자료 테이프를 들을 때마다 그 시절이 다시 생각나곤 한다. 각 분과의 회원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7월 즈음해서 분가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창법도 다르고 커리큘럼도 다른 두 분과의 한집살림은 사실상 한 지붕 두 살림과 매한가지였다. 하반기 동안 각기 독자적 형식의 패로 독립하기 위한 전망들을 내오고, 91년 12월 21,22일 노래패가 먼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 중강당에서 창립공연을 하는 것으로 '섬하나 산하나'의 시대를 열었다. 민요분과는 그해를 넘겨 92년 1월6일부터 열흘간 제1회 민요교실을 여는 것으로 '민요연구회(준비위)'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92년 7월에 '민요연구회(준비위)'는 민요패 소리wart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이 시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안민희, 안희정, 현희순, 문용철, 이상오, 변향자, 고경녀, 조기두 등이다.

1992.01.06. 민요연구회준비위원회 발족

1992.07.00. 민요패 소리wart으로 명칭 변경

O11 [주요 활동] '소리wart'이란 '진정한 이 시대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이란 뜻이다. 이때 '발'은 '재생산의 장'을 의미한다. 이 명칭에 걸맞게 소리wart의 활동은 민중의 삶과 정서에 맞는 진정한 이 시대의 소리를 찾고 이를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92년 독립선언후부터 첫 정기공연이 올려진 95년까지 소리왓 초기 활동은 보급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나누어 열리는 민요교실이 소리왓의 중심사업이 되었는데, 이때 민요교실의 목적은 '민요의 대중적 확산'과 '삶의 노래로서의 민요라는 인식정착', 그리고, '내부역량 강화' 등에 두었다. 이 외에는 노동현장 등 '현장지원활동'과 방송대 설화민요연구회, 서귀포 디딜팡등 '다른 문예단체 지원활동', 상설민요교실의 형태였던 '월요모임' 같은 사업들로 채워진다. 이 중 '월요모임'은 수료생들로 소모임이 꾸려지고, 이는 다시 회원활동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소리왓 회원들의 주된 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른 일상활동 역시 현지조사라든가 민요전수, 자료수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오은경, 강은영, 박승영 등이 합류한다.

O12 [주요 활동가] 안민희, 문애선, 안희정, 현희순, 문용철, 이상오, 변향자, 고경녀, 조기두,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안희정, 「소리왓의 역사」, 민요패소리왓 카페(<http://cafe.daum.net/soriwat>)(2006.10.12. 검색)

O1 [단체명] 노래빛 사월

O2 [약칭 혹은 이칭] 사월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92.04.03~현재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O11 [주요 활동] 첫번째 노래한마당 - "사월은, 오월은"(1992.05.23~24), 제주사랑 고 양용찬 열사 1주기 - 추모연합공연 "산불"(1992.11.06), 서귀포 오석중.고등학교 돕기 - '93 그 곳으로(1993.02.14~15)

O12 [주요 활동가] 최상돈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노래빛사월 <http://4wol.0za.to> 2006.11.9 검색(제주문화예술)

9. 통일운동

01 [단체명] **8.15통일염원범민족축전 제주도추진본부**

02 [약칭 혹은 이칭]

0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0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05 [존속 기간] 1989.07.28~1987.00.00

0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07 [법적 상태]

08 [조직 체계]

09 [강령]

010 [결성 과정] 제민협, 제총협은 1989년 7월 28일 <8.15통일염원범민족축전 제주도추진본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의 방북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물꼬를 트고자 하는 민족사적 쾌거" 라고 전제, "이같은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투쟁을 하나로 모으고 반통일 세력을 분쇄, 분단 후 최초로 남과 북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8.15 범민족 대회' 를 치르기 위해 제주도추진 본부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011 [주요 활동] 8.15범민족축전제주도민대회 출정식 및 우리 땅 밟기 대행진(1989.08.13)

012 [주요 활동가] 제주도추진본부장 고창훈(제민협 공동의장), 김명륜(제총협 공동의장)

013 [관계 단체]

014 [관계 자료]

01 [단체명]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제주도추진본부**

02 [약칭 혹은 이칭]

0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0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05 [[존속 기간]] 1990.08.01~0000.00.00

0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07 [법적 상태]

08 [조직 체계]

09 [강령]

010 [결성 과정]

1990.07.26. 제주대총여학생회 · 동아리연합회 · 인문대 · 경상대 · 공과대 · 자연과학대 · 사범대학 학생회 등이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반쪽잇기

「탐라순례대행진」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래정) 발족식 개최

1990.08.01. <제주민족민주운동협회>, <8·15통일염원 우리땅밟기동지회연합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반쪽잇기 ‘탐라순례대행진’ 학생준비위> 등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제주도추진본부」 결성

O11 [주요 활동] 통일주간 설정(1990.08.07~15),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주지역범민족대회」 개최(1990.08.15)

O12 [주요 활동가] 양영수, 한석, 김래정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탐라순례대행진」 준비위원회 발족”, 『제주신문』 1990년 7월 27일자(제주통일013)

“평화와 통일도본부 제민협등 단체 결성”, 『제주신문』 1990년 8월 3일자(제주통일014)

“전대협 한라출정 어제 대표단내도”, 『제주신문』 1990년 8월 3일자(제주통일032)

“평화통일 제주범민족대회 시민회관서 7백여명 참가 시가행진도 벌여”, 『제주신문』 1990년 8월 16일자(제주통일020)

10. 시민운동

O1 [단체명] **한라시민학교**

O2 [약칭 및 이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88.5.11~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한라시민학교’는 민족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들의 삶속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와 한라시민학교이사회가 개설한 대중강좌과정이며, ‘한라시민학교학우회’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O11 [주요 활동] 제1기 강좌 개설(제주YMCA)(1988.05.11-08.20), 5월광주항쟁의 역사적 의의(김광식) 박현채, 박영상, 한석지, 장상환, 이승희, 김금수, 임문철, 양승부, 이재오, 고창훈, 이상철, 조성윤, 오성찬 등의 강의(1988.05.14), 제2기 강좌 개설(1988.10.03-12.05), 한국경제의 민주화와 전망(정운형)(1988.10.03), 노동자와 노동조합(김금수)(1988.10.10),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촌현실(유영훈)(1988.10.17), 한국교육의 현실정과 민족교육의 방향(문재삼)(1988.10.24), 한국언론민주화의 과제(송상일)(1988.10.31),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전망(김낙중)(1988.11.07), 제주도개발의 현실과 과제(고창훈, 조성윤, 한석지)(1988.11.13), 민중신학이란 무엇인가(남승택)(1988.11.21), 문학을 통해 본 4·3(김명식)(1988.11.29), ‘청솔서고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찻집’(양기다방)(1988.11.20), 제2기 학우회 결성(1988.11.21), 제3기 강좌 개설(제주시, 서귀포시)(1989.03.06-05.23), 이재오 : 자주·민주·통일의 과제, 한석지 : 북방정책과 한반도 주변정세, 오옥만 : 기생관광의 실태와 해결방안, 김금수 : 한국노동문제의 구조와 현실, 방기중 : 일제하 민족해방운동, 김규중 : 참교육을 실현하려면, 이아성 : 제주지역 농민운동의 현실정과 과제 △ 최 열 : 반전반핵평화운동, 양영수 : 대중매체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 조성윤 : 지방자치시대의 제주사회 문제와 과제, 정밝이 : 한국민주화운동의 과제, 한라시민학교 1주년 기념식(제주대학교)(1989.05.14), 여름특강(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 등)(1989.08.07-09.04)

O12 [주요 활동가] 한석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제주 YWCA,서 한라시민학교 개설”, 『제주신문』 1988년 5월 16일자(제주시민001)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1988 『제주의 소리』 (제10호: 9)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1988 『제주의 소리』 (제11호)
“한라시민학교 3기 수강생 모집”, 『제주신문』 1989년 2월 23일자(제주시민002)

O1 [단체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O2 [약칭 및 이칭] 제주경실련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91.02.08~현재

O6 [주요 활동지역]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총회, 대표, 감사, 고문, 상임집행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에 <민원처리
위원회>, <재정관리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정책위원회>, <향토시장활성화
위원회>를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 <평생교육아카데미>를 두고 있다.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90.12.23. 제주경실련 발기인대회

1991.02.08. 제주경실련 창립

O11 [주요 활동] 정책대안 제시, 예산감시운동, 대중교통운동, 경제아카데미 운영 제주경실
련 발기인대회(1990.12.23), 제주경실련 창립(1991.02.08),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령안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기자회견/건설부에 발송(1992.08.00)

O12 [주요 활동가] 고충석, 장성철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제주경실련 <http://jejungo.or.kr> (2006.11.9 검색)(제주시민)

교실」개설(1992.04.18~05.23), 「남과 여, 그 차이에서 차별까지」(오숙희, 방송인)(1992.04.18), 「가족법과 여성」(오옥화, 가정법률상담소)(1992.04.25), 「치솟는 물가, 무너진 살림」(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원장)(1992.05.02), 「올바른 성, 건강한 여성」(김영순, .대흥보건진료소 소장)(1992.05.09), 「죽음의 환경을 살리는 여성」(안정선, 공해추방운동연합)(1992.05.16), 「너와 나의 참된 만남을 위하여」(김남선, 참교육상담소장)(1992.05.23),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여성 한마당(제민신협)(1992.09.19~20),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우리들의 요구」제하의 성명서 발표(1992.09.28)

O12 [주요 활동가] 김순희, 이은주, 김영순, 김경희, 오옥만, 김효선, 허오영숙, 홍경숙, 김영란, 홍리리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제주여민회 여성연극 꽃다운 이내청춘 공연”, 『제주신문』 1988년 8월 1일자(제주여성 006)

“윤락행위방지법관련 제주여민회 구속하라 시위”, 『제주신문』 1989년 3월 9일자

“제주여민회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매춘 관광을 규탄하며 서명운동 전개”, 『제주신문』 1989년 4월 1일자(제주여성003)

“대정읍 동일리 사무소에 제주여민회 농번기 농촌 탁아소 열어”, 『제주신문』 1989년 5월 30일자(제주여성007)

“제주여민회 제2기 여성교실”, 『제주신문』 1992년 4월 12일자(제주여성008)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0 『제주의 소리』 (제22호: 10)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1991 『제주의 소리』 (제26호: 18)

12. 4·3 운동

O1 [단체명]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

O2 [약칭 혹은 이칭]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사회연구소준비위원회, 제주교사협의회, 제주4·3연구소설립준비위원회, 그림패 부림코지, 제주YWCA대학부·청년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

O4 [상급단체 또는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00.00~1989.00.00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제주지역 사회운동에서 4·3을 빼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4·3은 오랫동안 침묵과 금기의 주제였다. 이러한 강요된 침묵과 금기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이다. 6월 항쟁이후 4·3에 대한 공개적인 목소리가 제주 사회운동진영에서 나오기 시작하여 4·3 바로알기, 강연회 등이 산발적으로 있어 왔다. 물론 공안기관의 감시와 탄압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4·3 진상규명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4·3발발 4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적인 4·3추모제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사회연구소준비위원회, 제주교사협의회, 제주4·3연구소설립준비위원회, 그림패 부림코지, 제주YWCA대학부·청년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 등이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O11 [주요 활동] 41주기 4·3추모제 개최(1989.04.01~1989.04.03)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

O14 [관계 자료]

「41주기 4·3추모제」 팜플렛

O1 [단체명] **제주4·3연구소**

O2 [약칭 및 이칭] 4·3연구소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89.05.10~현재

O6 [주요 활동지역] 제주도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이사장-소장-연구실장-사무처장의 직제가 있다. 이밖에 집행체계로 편집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의결기구는 회원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와 상임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8년 현기영, 정운형 등 제주출신 재경 인사와 김명식, 강창일 등 제일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비공식적인 4·3추모제를 서울과 동경에서 열기로 하였으나 서울에선 열리지 못하고 일본 동경에서만 열렸다. 이후 이들은 제주도에 4·3연구소를 만들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제주출신 인사들이 주도되어 결성준비를 하였다. 공안기관의 감시가 끊이지 않았으나 1989년 5월 10일 제주시 용담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O11 [주요 활동]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순수민간연구단체로, 제주4·3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 역사발전에 올바르게 기여하고자 창립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민족분단해소의 실마리로써 4·3문제를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세계 속의 '평화와 인권의 땅'으로 만드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증언채록 및 피해조사 창립 이후 꾸준히 도내외 증언채록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4·3진상규명의 토대를 다졌다. △학술연구 및 발표 1990년 제1회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매해 1회 이상 학술대회를 열어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출판활동 조사와 학술연구의 성과를 담아낸 출판활동으로 연구 성과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창립 이후 정기 간행물 4종, 단행본 17권, 자료집 수십 권을 발행했고, 영상자료 및 홍보용 슬라이드 3편을 제작했다. △4·3유적지 발굴 및 기행 항쟁과 고난의 역사를 침묵으로 증언하는 유적을 발굴하여, 4·3을 대중화 시키고 있다. 특히 1992년 다량취굴 유해발굴로 4·3진상규명운동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유적 및 유적지 기행 안내를 통해 4·3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자료발굴 <제주신보>(1947년 1월~1948년 4월), 남로당 문건, 미군정자료 등을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4·3 당시 사진과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을 미군이 입체 촬영한 '제주도메이데이' 필름을 발굴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1차 사료를 제공했다.

O12 [주요 활동가] 역대 소장 : 현기영(1989~1990), 고창훈(1990~1993)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4·3연구소 홈페이지

O1 [단체명]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O2 [약칭 및 이칭] 4월제 공준위

O3 [산하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제주4·3연구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
지역총학생회협의회

O4 [상급 단체 또는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90.00.00~0000.00.00

O6 [주요 활동지역]

O7 [법적 상태]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9년의 '41주기 4·3추모제' 이후 해마다 제주지역 사회운동단체들은 공
동으로 <사월제 공동준비위>로 구성, 4·3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다. 4·3추모행사의
내용은 다양한 문화행사로 접근하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규모는 해
마다 확대되었다.

O11 [주요 활동] 4·3추모제, 사월제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 참고문헌

-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 제주지역추진위원회(1997), 『제주지역 6월 민주항쟁 기념 자료집』
- 강남규(1985), 「제주도 토지 투기 실태」, 『현장 3 -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돌베개.
- 강종우·이지훈(1997), 「제주도 개발과 시민운동의 전개」, 『황해문화』 1999년 가을호.
- 강창일(2001), 「'제주 4·3' 진상규명운동과 한국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 5·18 연구소.
- 고유기(2000), 「제주법도민회 9년, 그 평가와 과제」, 『지방의정』 제7호.
- 김석준 외(1998),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현황과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김영범(2004), 「기억 투쟁으로의 4·3문화운동 서설」,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민주쟁취 국민운동 제주본부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1989~1997), 『제주의 소리』 1호~34호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1992),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 결성대회 자료집』.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1992),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건) 결성대회 자료집』.
- 박찬식(1999), 「4·3 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2, 실천문학사.
- 부만근(1997), 『제주지역주민운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 송악산 녹색연대(2004), 『송악산아, 송악산아 : 송악산 보전운동 백서』
- 양동운(1990), 「정든 삶의 터전 빼앗는 골프장이 웬 말 : 끝내 마을공동목장 지켜낸 청수리 주민들」, 『제주화보』 9월호.
- 이상철(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주사회론』, 한울 아카데미.
- 이상철(1998),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 이상철(2006), 「노동조합·노동운동」, 『제주도지』 제5권.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2001), 『전농제주도연맹 10년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1997),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창립 대의원대회 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1998~1999),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2년차, 3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 제주노동상담소 일하는 사람들(1991~1992), 『일하는 사람들』 창간호~제6호.
- 제주노동상담소 일하는 사람들(1992), 『제주경제와 지역노동실태』, 새길.
- 제주문화방송(1998), 『제주문화방송 삼십년사』.
-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1990), 『제민협 임시 대의원 대회 자료집』.
-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1992),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자료집』.
-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1993~1996),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제2기~5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 제주민주청년회(1990~1993), 『제주청년 소식지 준비』 1호~6호.

- 제주민주청년회(1991), 『제주민주청년회 창립대회 자료집』.
- 제주사회연구소 편(1989), 『제주사회연구, 제주공동체를 위하여』 창간호, 역사비평사.
- 제주여민회(1988~1990), 『제주여성』 창간호~11호.
- 제주여민회(1997), 『제주여성』 40호 10주년 특집호.
- 제주여민회(2002), 『틈 - 제주여성』 제주여민회 창립 15주년 기념 특집호.
- 제주인권지기, 『제주인권지기』 1호~15호.
- 제주청년문학회(1993), 『남도에 피는 꽃』, 오름.
- 조성운(1995), 「개발과 환경,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붕괴 - 제주도의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 조성운(1995),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 조성운(1998),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 제주시 탑동 개발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 조성운(1998),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 조성운(2003), 「제주도지역 개발정책과 주민운동의 전망」,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정책의 성찰과 방향』, 도서출판 각.
- 조성운(2005), 『제주시의 사회운동』, 『제주시 50년사』.
- 조성운(2006), 「사회운동」, 『제주도지』 제5권.
- 조성운·문형만(1998),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운동 - 제주종합사격장건설 반대운동의 사례 분석」, 『제주도연구』 15집.
- 조성운·문형만(2000), 「제주 모슬포지역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사회발전 연구』 제16집.
- 한석지(1994), 「제주 개발갈등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과제 -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과정의 갈등과 논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 39집.
- 한석지(2001),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조직적 역량과 활동분석 -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를 중심으로」, 『참세상 만드는 사람들』 2001년 8·9월 합본호.
- 허오영숙(2000), 「제주, 제주여민회,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방의정』 제7호.
- 허오영숙(2006), 「1980~1990년대 제주지역사회운동조직의 흐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졸업논문(미간행)

<사이트>

- 놀이패 한라산 <http://www.hallasan.or.kr/>
- 민주노총 제주본부 <http://jeju.nodong.org/>
-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 <http://minjak.or.kr/jeju/jeju-index.htm>
- 전교조 제주지부 <http://jeju.eduhope.net/>
- 제주경실련 <http://www.jejungo.or.kr/>
- 제주4·3연구소 <http://www.jeju43.org/>
- 제주여민회 <http://www.jejuwomen.org/>
- 제주주민자치연대 <http://jejumin.net/>
- 제주참여환경연대 <http://www.jejungo.net/>
- 제주환경운동연합 <http://cheju.kfem.or.kr/>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제주

발행일: 2006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